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노 현 중

1970년대 이후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 비교연구

-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명 규

이 논문을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노 현 중

노현중의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김 홍 중

부 위 원 장 정 근 식

위 원 박 종 철

위 원 김 병 로

위 원 박 명 규



본 박사학위논문은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지원에 힘입어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독, 베트남, 북한의 체제변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세 국가는 사회과학자, 정치인, 언론인들에 의해 ‘동일한 유형’의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세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실제 경제제도 역시 매우 유사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던 세 국가는 각자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붕괴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일당독재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세습을 통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재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독재정권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3대 세습이라는 초유의 독재체제로 변한 것은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하여 각국의 체제변동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 국가의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이 각국의 경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거대한 국가조직을 지칭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량을 세분화하여 계획경제를 통해 주민의 통제를 실시하는 ‘물리적 통제능력’, 실질적인 재화를 제공하는 ‘자원제공능력’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비전과 집단주의 원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징적 동원능력’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반면 ‘사회’는 당과 국가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 신념, 가치등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자발적인 영역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관계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며, 이를 발생시킨 여러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비교역사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문헌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수집한 다양한 1차 자료를 검토하여 활용하였다.

동독에서는 1971년 호네커 서기장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

시되었다. 기존의 분권화적인 ‘신경제정책’이 중단되고 재국유화가 추진되어 중앙계획경제와 ‘물리적 통제능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통합정책’을 실시하여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복지를 확충하였다. 이 시기에 확립된 정책의 골격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1970년대 전-지구적인 데탕트 상황이 전개된 가운데 동독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의 경제지원 및 서구권 수출 시장의 접근권을 얻을 수 있었다. 향상된 ‘자원제공능력’ 덕분에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독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상징적 동원능력’의 감퇴를 용인해야만 했다. 문화정책과 종교정책이 완화되어 동독의 예술가들은 일정 수준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교회는 서독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힘을 비축하여 다양한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예술가, 종교인 그리고 주민들은 동독의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적 질서를 상상하면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침식시켰다. 당시 동독 지도부도 서독과의 관계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급진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였다. 하지만 사회영역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맞물려 더욱 고조되었다. 축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급기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위가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통일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통일된 베트남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청사진으로 삼았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근대적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 합작사에 속해 있었지만, 이 제도는 주민들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생산성도 매우 낮았다. 실제로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도 매우 적었다.

통일 이후 당 지도부는 남과 북의 경제제도 차이를 우려하여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자 ‘해외투자법’을 제정하여 잠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베트남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기 보다는 국익을 극대

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전쟁배상금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1978년 3월 남부의 급진적인 국유화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화하였다. 즉 시장이 아닌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미 1975년 협동농장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유화로 인해 상공업 부문의 생산까지 급감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는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게다가 1978년부터 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부터 분권화 정책이 실시되어 농민들과 기업들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있었다. 당시 분권화 정책을 이끌었던 개혁파들의 입지는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완고한 지도자 레 주언 서기장의 사망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덕분에 1986년 제 6차 당 대회를 통해 ‘도이머이 정책’이 실시될 수 있었다.

더구나 베트남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사조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베트남 작가들과 개혁적인 관료들의 조심스러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으며, 소련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자유롭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영화와 소설의 창작이 가능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 사회영역의 반발은 강력하지 않았다. 남부에 위치한 가톨릭, 불교, 까오다이교, 호아하오 불교 등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가와 대립하였지만 예술가와 종교인들은 요구는 제한적이었으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여 전-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사회의 반발이 심각하지 않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베트남 지도부는 ‘자원제공능력’을 향상하여 새롭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 1970년대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였다. ‘주체사상’을 통한 유일체계가 완성되었으며 후계자 김정일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북한 경제는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탈린 방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사상동원’을 통해 가까스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

과 영향력이 축소되는 조짐을 틈타서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쳐 민족관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침체를 맞아 위기를 발현시킨 모순들이 서서히 축적된 시기였다. 1984년 합영법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1970년대의 골격이 199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1989년대 말부터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북한은 ‘조선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면서 ‘상징적 동원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개혁의 논의를 물리치고 계획경제를 고수하여 ‘물리적 통제능력’을 지속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석유와 원자재의 수입 차질로 인해 계획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자원제공능력’ 역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업, 무역, 경공업을 강조하는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인 제도개혁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보려 하였지만 이 역시 북핵 문제와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 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실상 작동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수용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정일은 군부의 이권을 보장하고 군인을 우대하는 ‘선군정치’를 통해 가까스로 ‘물리적 통제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자원제공능력’은 고갈되었으며 사실상 국민들은 방치되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업들과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와 경영을 이어나갔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지만 현존하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을 찾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철저한 감시체제로 인해 대규모 사회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까스로 고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역시 통제력의 약화, 계획경제의 이완, 비사회주의적인 문화의 등장을 용인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 국가의 상이한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이 각국의 경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주요어: 북한, 동독, 베트남, 체제전환, 체제개혁, 비교역사분석, 사회주의
학번: 2014-21183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4
1)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4
2) 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7
3) 체제고수와 체제변동	9
3 이론적 논의 · 연구범위 · 분석틀	10
1)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	11
2) 연구범위 및 사회주의 체제 유형의 세분화	19
3) 연구의 분석단위와 분석틀	25
4. 연구방법론	29
1) 비교역사분석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30
2) 왜 비교역사분석인가? : ‘역사적 제도주의’ 와의 차이점	32
3) 분석자료	34
II. 동독: 체제전환의 경로	36
제1절 197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정책 방향	38
1. 새로운 정치지도부의 형성과 경제정책의 수정 움직임	38
1) 울브리히트의 축출	38
2) 사회경제 통합정책과 재집중화	41
2. 데탕트의 영향과 동방정책의 호응	49
1) 데탕트와 동방정책	49
2) 동독의 동방정책 수용과 통제의 완화	53

제2절 사회 영역의 성장과 갈등57

- 1. 동독에서 보장되었던 다양한 주민의 권리58
 - 1) 사회주의 체제의 법과 인권58
 - 2) 성 평등과 섹슈얼리티64
 - 3) 합리적 소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갈등71
- 2. 교회와 사회주의의 갈등과 대립82
 - 1) 기독교 박해82
 - 2) 타협과 공존86
 - 3) 사회주의 체제의 침식과 사회운동의 모체로서의 교회90
- 3.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약화94
 - 1) 문학과 미술94
 - 2) 영화 및 음악103

제3절 시민사회의 붕괴와 통일로의 전환117

- 1.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117
 - 1) 경제적 위기와 전망의 부재117
 - 2) 고르바초프의 상징적인 효과120
 - 3) 전국적 시위와 탈스탈린적 사회주의의 종말124
- 2. 사회주의 체제 개혁시도와 민족의 부흥130
 - 1) 한스 모드로의 개혁시도131
 - 2) 시민운동진영의 주도권 상실139
 - 3) 민족의 부흥과 독일의 통일145

III. 베트남: 체제개혁의 경로161

제1절 1970년대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정책 방향163

1. 북부에서의 미완의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	164
1) 북부에서 중단되었던 사회주의 건설	164
2) 통일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	170
2. 스탈린체제의 전국적 수립시도	172
1) 1975년 제4차 당 대회와 전국적 사회주의 건설	172
2) 협동농장의 확대와 신설	176
3) 대외관계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끼친 영향	182
4) 남부에서의 무리한 기업 국유화 시도	186
제2절 사회주의 개혁시도와 한계	192
1. 지도부의 부분적 정책 수정과 한계	192
1) 지도부의 정책 수정 움직임	192
2) 생산물 계약제의 도입과 한계	196
3) 기업의 부분적 자율화의 승인	202
2. 완화된 사회문화정책	209
1)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변모	210
2) 통일 이후 종교정책과 갈등	224
제3절 도이머이 개혁과 적용	229
1. 제6차 당 대회와 도이머이	229
1) 경제상황의 악화	229
2) 제6차 당 대회: 도이머이와 내부혁신	231
2. 제6차 당 대회 이후의 정책변화	235
1) 사회주의 개혁의 본격화	236
2) 대외관계의 변화: CMEA와의 협력좌절과 개방의 다각화	250
3) 호치민 사상의 재해석과 사회주의로부터의 사실상 이탈	257

IV. 북한: 체제고수의 경로265

제1절 1970-80년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방향267

- 1. 1970-1980년대 계획경제의 유지와 부분적 변화268
 - 1) 1970년대 외자도입과 대중동원의 재등장268
 - 2) 1980년대 경제제도의 부분적 변화와 침체의 본격화277
- 2. 김일성 유일사상체제와 초(超)스탈린체제의 완성285
 - 1) 주체사상의 확립과 정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이탈285
 - 2) 주체예술과 주술적 프로파간다를 통한 초스탈린화288
 - 3) 1970-1980년대 북한의 제한적인 사회주의적 근대성304
- 3. ‘남조선 혁명론’에 기반한 대외전략과 그 한계311
 - 1) 1970년대 북한의 대화 공세312
 - 2) 1980년대 무원칙적인 대외전략318

제2절 탈냉전시기 북한의 대응327

- 1. 개방의 모색과 계획경제 유지의 동시 추진327
 - 1) 위기의 인식과 남북관계개선의 움직임328
 - 2) 체제 고수와 경제발전노선의 부분적 변화336
- 2. 사상통제를 통한 외부영향 차단343
 -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343
 - 2) 수령형상문학과 주체예술의 고수348

제3절 위기의 전사회화와 돌파전략353

- 1. 통치구조의 변화354
 - 1) 김일성의 사망과 유훈통치354

2) 선군정치를 통한 새로운 지배연합의 구축	358
2. 계획경제의 와해와 시장의 태동	366
1) 경제상황의 악화와 국영부문의 변화	366
2) 자생적 시장의 태동: 이탈자의 시장	368
3) 국가기관의 시장화	372
3. 고난의 행군의 후유증과 민간신앙의 활성화	375
1)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에 만연된 죽음	376
2) 민간신앙의 재활성화	378
V. 결론	386
1. 비교의 내용과 결과	387
2. 비교를 통한 이해의 확장	394
참고문헌	398
Abstract	424

- 표 목차 -

<표 2-1: 동독에서 인구 100명당 소비재의 변화량>	42
<표 2-2: 197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56
<표 2-3: 198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124
<표 2-4: 라이프치히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53
<표 3-1: 1980-1989 기간 일반거래 및 식량 거래 현황>	189
<표 3-2: 1975-1979년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191
<표 3-3: 베트남의 작물 총생산 및 재배 경작지 규모 1976-1985>	199
<표 3-4: 제3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 주요부분 목표와 생산량>	209
<표 3-5: 1980-1986년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228
<표 3-6: 국영부문의 산업노동자 인원현황 1977-1985>	249
<표 3-7: 베트남의 수입현황 1986-1991>	255
<표 3-8: 수입재의 부문별 구분 1986-1991>	255
<표 3-9: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특성>	262
<표 4-1: 1970-80년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변화>	326
<표 4-2: 탈냉전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352
<표 4-3: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384

-그림 목차-

<그림 1-1: 1970년대 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과 체제변동>	24
<그림 1-2: ‘국가’ ‘사회’ 동학의 분석틀>	27
<그림 2-1: 콤비나트 제도 도입을 통한 동독의 경영구조 변화>	45
<그림 2-2: 콧부스의 누드비치 1985년>	67
<그림 2-3: 동독의 10마르크 화폐,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	69
<그림 2-4: 동독의 소비문화와 패션>	79
<그림 2-5: 칼을 보습으로, 평화주간에서 활용된 뱃지>	93
<그림 2-6: 동독의 회화>	102
<그림 2-7: (좌) Solo Suuny 포스터, (우) 돌들의 흔적 포스터>	108
<그림 2-8: 호네커 서기장에게 기타를 선물하는 우도 린덴베르크>	115
<그림 2-9: 콜의 드레스덴 방문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주민들>	147
<그림 2-10: 1990년 동독 총선 포스터>	156
<그림 3-1: Đặng Thị Khuê, Giặc Mỹ (미국의 공격)>	223
<그림 3-2: Lương Xuân Đoàn, Hà Nội Của Tôi (하노이 나의 도시)>	223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모양이 저마다 다르다”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라는 유형으로 간주되었던 동독·베트남·북한 체제가 각기 다른 경로 (붕괴, 시장 사회주의로의 전환, 스탈린체제의 장기지속)를 견계 된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은 20세기 세계사의 가장 핵심적인 균열 축이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본주의가 생성하는 불평등을 타파하고,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회주의 기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소련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해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유럽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봉기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은 몰락하였고 냉전은 종식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89-1990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체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유럽적인 관점이다. 화해 불가능한 이념에 따른 전-지구적인 갈등은 사라졌지만, 사회주의 정당 혹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 갈등과 글로벌 주도권 다툼, 북한의 핵 문제와 3대 세습,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부상 등은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체제는 매우 자본주의적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구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변화과정의 연구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동독, 베트남, 북한 세 국가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국가는 사회과학자, 정치인, 언론인들에 의해 ‘동일한 유형’의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정치체제, 독재체제, 전체정치라는 용어로 종종 묘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은 냉전 시기 서구권 학자들에 의해 일종의 스

티그마로 고안되었던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이 국가들은 분명 동일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각국의 상이한 지성사적(정신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은 사상적·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세 국가 모두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지향하였고 실제 경제 제도(기업의 국유화, 협동농장 구축, 중앙 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역시 매우 유사하였다. 시기 별로 변화는 있었지만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의 승리와 사회주의 통일국가건설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세 나라는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자들은 이들 세 국가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 국가들을 같은 유형의 정치체제(사회주의 체제와 전체주의)로 분류하였다.

둘째, 이 세 국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서로 다른 경로를 대표한다. 이 세 국가는 동일한 유형이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먼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붕괴하였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였다.¹⁾ 반면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였던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현재까지도 공산당 일당독재가 진행 중이다. 일당독재라는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누리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의 체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베트남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중국의 체제전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그 존재 자체가 연구자의 흥미를 끈다. 북한은 세습을 통해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재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는 거의 모든 기관의 연구에서 최하위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독재정권의 사상적 바탕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3대 세습이라는 초유의 독재체제로 변한 것은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특수성이

1) 물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수립된, 즉 새뮤얼 헌팅턴이 언급한 것처럼 ‘제3의 물결’을 타고 형성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 역량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행되었던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분단되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 독재자를 처단하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혼란이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그 뿐 아니라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몽고, 불가리아 등에서는 약간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정한 선거에 의한 민주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용했기 때문이었다.²⁾

본 연구는 이 세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하여 어떤 요인이 각국의 체제 변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작업은 유럽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고자 했던 여러 지적인 시도들과 큰 맥을 같이한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정치학자들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역사학자들이 이데올로기적 설명 탈피, 실증적인 사료 활용, 그리고 사회사에 주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보다 풍부하게 분석하였다.³⁾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하면서, 기존의 역사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교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검토

지난 기간 많은 학자들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 수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함께 새로운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고, 연구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대결 경향도 완화되어 냉전 시기보다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크렘린놀로지(Kremlinology) 및

2) 상당히 광범위한 해방구를 형성하였거나, 사회주의정당이 단순하게 정권만을 장악한 경우 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였으나 그에 알맞은 조직적 역량을 애초부터 결여한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 없다. 이들 국가와 집단은 스티븐 색슨버그가 지칭한바 ‘실패한 전체주의(Failed totalitarianism)’에 해당한다. 아프리카에서 건설된 사회주의 국가들, 땡기스투의 에티오피아는 사회주의 이념을 제시하였고 사회주의 정책패키지를 실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제3세계 군부독재에 가까웠다. 사회주의 이념을 차용한 인도네시아도 공산당을 통한 안정적인 중앙집권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국가는 석유자원에 의존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과 의료·복지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자본주의적인 기업관리 방식, 개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 재산권 보호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3) 유럽 중심의 냉전 개념을 비판하고 냉전의 다양한 경험과 전개 방식을 강조하는 연구가 일군의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의미 있는 지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의 다음 단계로 역사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과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냉전의 상이한 전개 방식을 출현시킨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물론 냉전은 양 진영의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권에 권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다. 다양한 냉전에 관한 논의는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Heonik Kwon,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참조.

동유럽 지역연구자, 아시아 지역연구자 등이 각각의 전공과 관심국가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높였다. 하지만 동구권과 아시아권의 차이도 컸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개념과 용어사용에 일치를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권을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사용하는 ‘전환’ 과 ‘개혁’ 은 베트남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의 분석 국가와 학문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학문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변동 연구를 편의상 ‘체제전환’, ‘체제개혁’ 으로 분류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기존의 ‘계획경제’ 와 ‘일당독재’ 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를 수용하는 것을 분석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연구라고 지칭한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던 국가의 정치영역에서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등장한다. 구체제 엘리트는 주로 처벌받지만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볍거나 체제 내 개혁을 강조했던 인사들은 살아남아 민주적인 정치구조에 합법적인 행위자로 참여한다. 경제영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이 이루어지며 금융과 무역 부문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통제가 사라져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격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⁴⁾ 이처럼 ‘체제전환’ 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새로운

4) 경제부문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Arye L. Hillma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n Overview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 Issue 1 (1994). 전반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Janos Kornai and Susan Rose-Ackerman, *Building a Trustworthy State in Post-Socialist Trans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을 참조. 동유럽에서 체제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무작정 시장화와 사유화 노선을 따르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케네스 에로우는 국영부문을 인수할 수 있는 민간자본과 해외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영부문’ 과 ‘자주관리제’ 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Kenneth J. Arrow, “Transition from Socialism” *Estudios Economicos* Vol. 6 No. 1 (1991) 참조.

민주주의적 정치구조와 시장경제 제도 수립과정과 여기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민족문제와 국민국가건설을 논의한다.⁵⁾

사실 ‘체제전환’ 연구는 명칭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이 변화의 길로 접어든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을 탐구한 것은 아니었다. 비교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가 “남유럽과 남미의 민주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몰락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어떤 사람도, 바로 변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주의로 이름지워진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평화스럽게 붕괴되리라고는 예기치 못하였다.”⁶⁾라고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공산권의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 가운데 사회과학자들은 역사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보다는 다급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따라서 ‘체제전환’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미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탈사회주의 전환(Post-socialist transition)’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구자의 접근방식과 방법론도 변했다. 독일의 정치학자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는 1989년 탈사회주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크렘린놀로지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변동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이론과 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유발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이 거론된다. ① 경제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침체 (석유 가격폭락으로 인한 소련의 경제난 및 연쇄효과)⁸⁾ ②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태생적

5) 가령 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는 1) 국민국가의 틀은 유지하면서 헌법과 경제구조가 변화한 경로 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함께 국민국가를 새롭게 건설 혹은 재건설 하는 경우 3) 체제전환과 더불어 국가의 정치성을 상실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Claus Offe, “Prosperity, Nation, Republic: Aspects of the Unique German Journey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German Politics & Society* No. 22 (1991), p.19.

6) 아담 쉐보르스키, 임혁백·윤성학 역, 『민주주의와 시장』(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p.17.

7) 클라우스 폰 바이메, 이규영 역,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0), p.53.

8) 비교경제체제 분석가 에이브람 버그슨(Abram Bergson)은 1975년 데이터를 통해 4개의 사회주의 국가(소련,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 7개의 서구자본주의 국가(미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스페인)를 비교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

결함⁹⁾ ③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시민사회의 붕괴¹⁰⁾ ④ 고르바초프의 노선 변화와 냉전의 해체¹¹⁾이다. 이러한 요인의 타당성은 본론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기 위하여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노동과 자본 투입의 양을 통제할 후 순수하게 ‘체제’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냉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권의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버그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25-34% 정도 낮다고 주장하였다. Abram Bergson,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1987), pp.342-357.

- 9) 경제학자인 야노스 코르나이(Janos Kornai)는 보다 선명한 제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방식과 이 체제의 문제점을 그의 저서『사회주의 체제론』을 통해서 명료하게 밝혔다. 그가 보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붕괴시킨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기업은 이윤을 낼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며,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른바 경영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관료적 조정기제’를 통해 운영되는 까닭이다. 저품질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납품 기간을 지키지 않아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어도, 간략한 문책만 당할 뿐 법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는다. 특히 관료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가 운영되며 이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을 사회가 감당하게 된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가장 흥미로운 개념은 바로 ‘부족의 경제(Economics of Shortage)’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개입을 통해 가격 변동을 억제한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부족하게 된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이 아니라 수입을 통해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므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비효율성이 누적된 결과 경제체제가 붕괴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만성적인 경제난을 공산당 지도부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기업의 자율성과 물질적 인센티브를 고무하기 위한 분권화 조치 등 일련의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개혁만으로는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 10)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준 5가지 핵심적인 요소 1) 민주적 가치가 수용되는 세계에서 약화된 정권의 정통성 2) 도시의 중간계급을 확대시킨 경제성장 3) 개혁의 옹호자로 변한 교회 4) 소련 정책의 극적인 변화 5) 최초 이행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끼친 일종의 ‘눈덩이 효과’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63.
- 11) Archie Brown, *The Human Factor: Gorbachev, Reagan, and Thatcher and the End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p.218-309. Robert Service, *The End of The Cold War 1985-1991* (New York: Public Affairs, 2015) 4부 참조.

2) 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체제개혁’은 기존 통치 집단의 주도적 위치는 유지하되 경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주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를 바라보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의 관점과 접근방식이 다르다 보니 개념과 용어 사용에서 충돌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정치학자들은 베트남이 ‘체제전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라고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정치학자인 스티븐 색슨버그(Steven Saxonberg)를 들 수 있다. 그는 체코, 헝가리, 동독, 폴란드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비교 연구하여 ‘스테인 로칸(Stein Rokkan)’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동유럽 전문가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중국, 쿠바,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 연구하였다. 정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교회, 작가, 언론인, 음악가, 대학생들의 지하조직 등)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는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존속을 근거로 베트남과 중국을 비전환 사회주의 국가라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공산당이 정당성을 확보한 덕분에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으나 만일 경제난이 발생한다면 혁명적인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¹²⁾ 마틴 드미트로브의 연구 역시 색슨버그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정권의 탄력성(regime resilience)’을 핵심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이들은 중국, 쿠바, 북한, 라오스, 베트남이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일당독재를 근거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라고 판단하였다.¹³⁾

12)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탈식민, 독립 성취가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색슨 버그가 체제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국, 쿠바, 북한 베트남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문제점이 있다. Steven Saxonberg,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13) Martin K.Dimitrov ed,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14.

하지만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탈하였으며 이미 전환을 완료했다는 의견도 있다. 야노스 코르나이는 유머를 곁들여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에는 특허가 없으므로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록 일당제가 유지되고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슬로건, 의례, 상징들도 남아 있지만 사회주의의 네 가지 핵심적인 원칙에서 이미 이탈하였다고 보았다. 그것은 ① 전체 경제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며 사적 소유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졌음 ② ‘시장사회주의’를 주장하였던 오스카 랑케(Oscar Lange)는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시장 활동을 주장하였으나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음 ③ 비록 일당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만 강조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모택동과 호치민 사상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실용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음 ④ 이들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근거로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정치체제라고 보았다.¹⁴⁾

덧붙이자면 이들 국가에서는 ‘시장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모호하며 사실상 시장경제¹⁵⁾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기업의 운영방식, 조직원리, 국영은행의 정책 등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다만 베트남을 연구하였던 경제학자들은 정치학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체제전환’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적 전환 (Economic transi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¹⁶⁾ 그리고 이들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경

14) Janos Kornai, “Socialism and the Market: Conceptual Clarification” In Janos Kornai and Yingyi Qian eds, *Market and Socialism: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of China and Vietna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22.

15) 물론 자신들의 ‘시장사회주의’ 경제운영 방식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가령 도이머이 개혁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팜밍학 교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와 비슷하다. 다만 사회발전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주민들과 사회집단에게 평등한 법적권리를 허가하며 특히 교육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팜밍학 교수가 언급한 것 이상의 사회보장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Pham Minh Hac, “Concept and Contents of ‘Doi Moi’ Policy and Process of Vietnamese Reform” In KINU ed., *Korea-Vietnam International Conference Report: Economic and Social Reform of Vietnam and its Lessons for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5), p.18.

16) Melanie Beresford and Dang Phong,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Trade and Aid*

제난이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수용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로를 ‘체제개혁’으로 판단하고 현재의 베트남을 ‘개혁사회주의’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환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매우 경직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통치구조, 법률은 민주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도 증가하였다. 현재 베트남 사회는 고르바초프 개혁 시기의 소련이나 동독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베트남의 개혁을 유도한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체제고수와 체제변동

앞에서 언급한 ‘체제전환’과 ‘체제개혁’을 경험한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와는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의 개념과 접근방식은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환’ 그리고 ‘개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건사’에 집중하여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체제의 일련의 제도적 변화나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공산당 일당 통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에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은 분명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붕괴하였지만, 사회주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저항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 1986년 제 6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경제학자와 역사가들의 ‘중론(衆論)’이다. 하지만 체제 개혁이 태동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가령 아담포드는 베트남의 경제적 전환이 1986년에 이루어졌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곧바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개혁의 움직임이

in the Demise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0). Adam Fforde and Stefan De Vylder,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참조.

1986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유럽의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해 잘 조명되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베트남은 분명 1980년대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 약화,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의 약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¹⁷⁾ 둘째, 기존의 ‘전환’ 과 ‘개혁’ 이라는 개념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는 물론 아직까지 절대적인 최고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다. 이는 물론 북한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다. 논문의 본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북한의 경로는 분명 ‘체제고수’ 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북한에서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일련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체제변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체제변동’ 은 ‘체제전환(동독)’, ‘체제개혁(베트남)’, ‘체제고수(북한)’ 를 모두 포괄한다.

3. 이론적 논의 · 연구범위 ·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경로를 걷게된 핵심적인 원인을 ‘국가-사회’ 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냉전의 급작스러운 완화 혹은 고르바초프의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동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변동은 어떠한 하나의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국가-사회’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대외관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7)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내부 변동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9), pp.29-43을 참조.

1)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

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가’ : 사회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관심은 ‘생산관계’였다. 따라서 국가조직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다. 그의 ‘도구주의적 국가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자본가에게 종속된 도구에 불과하다. 물론 국가가 단기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¹⁸⁾라고 평가하였으며, 만국의 노동자가 연대하여 혁명을 달성한 후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했던 정치지도자 레닌은 사회주의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관료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국가와 혁명』에서 “기존 착취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작업에 있어서, 농민과 뿌띠 부르조아지와 반(半)프롤레타리아트 등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중앙집권화된 권력·폭력의 조직화 등을 필요로 한다.”¹⁹⁾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레닌이 계획했던 미래는 거대한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전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다만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시대에도 국가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필요하나, 새로운 세상에서의 관료는 부르주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레닌이 기획하고 설계한 사회주의 체제는 볼셰비키 정당의 지도를 받는 거대하고 합리적인 국가조직이었다.

서구권의 학자들도 사회주의 체제를 일종의 독특한 국가조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평생 국가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일반적으로 현대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과 분배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그렇지만 지난

18)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강유원 역, 『공산당 선언』(서울: 이론과 실천, 2008), p.11.

19) 블라드미르 레닌, 김영철 옮김, 『국가와 혁명』(서울:논장, 1988), p.40.

천년 동안 유럽에 존재했었던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와 확실히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역시 ‘국민국가’이다.”²⁰⁾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성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자인 앨빈 굴드너(Alvin Gouldner)는 ‘내부 식민지’ 론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노동자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식민화한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내부 식민지’란 구체적으로 국가의 한 부분(중앙정부 혹은 컨트롤 센터)이 생태적으로 상이한 국가의 다른 부분(예컨대 변방)을 강제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본 축적, 투자, 가격 통제, 인력배치, 교육정책 등은 모두 중앙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이다.²¹⁾ 이같이 굴드너는 볼셰비키와 스탈린주의 정책의 본질은 열정적인 혁명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집중화’는 뒤르켐, 파슨스, 미헬스의 모델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다.²²⁾ 제임스 스캇 역시 레닌주의를 기술과 합리성을 토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거대한 국가권력을 동원한 ‘하이모더니즘’의 일부라고 평가하였다.²³⁾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기구를 통해서 사회를 동원하고 조직하는 강제적인 조직체였다.

②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회’: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국가’는 ‘시장’과 ‘사회’영역을 대부분 포괄한다. 이처럼 ‘국가’의 범위가 넓은 경우 ‘사회’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연구자는 사

20)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990-1992* (Oxford: Blackwell, 1992), p.31.

21) Alvin W. Gouldner, “Stalinism: A study of internal colonialism” *Telos* No. 34 (1978), p.13.

22) 이처럼 굴드너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와 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내부 식민지’를 논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철학적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조직연구와 사회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이 글의 중반부는 소련공산당의 과별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소련과 중국에서 집단농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23) 구체적으로 ‘하이모더니즘’은 자연과 사회의 질서화에 대한 갈망,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무제한적인 근대국가의 권력, 이에 저항할 수 없는 허약한 시민사회가 결합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파괴적이다. James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p.88-89.

회주의 체제의 ‘사회’ 영역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할 때 등장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없애려 하지는 않았다. 또한 냉전 시기의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치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란 당과 국가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이해관계·신념·가치 등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연구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회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사실상 국가조직에 해당한다. 이 조직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는 국가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일에 집중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원들이 국가의 노선과 상반되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회 영역’에 속한다.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과 ‘사회 영역’은 국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영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변혁의 추동력이 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 영향이 크지 않았다.

‘사회’가 국가의 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이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유무형적으로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제도적으로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레닌이 계획하였던 거대하고 합리적인 국가조직을 통해 ‘사회’를 동원하고 장악하고자 하였던 것은 희망 사항이었을 뿐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클랩팸은 “세계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정치체제의 운영자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그 사회구성원들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오히려 국가는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려는 사람들과 현실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힘들게 관리하는 불안정한 관리자에 가깝다.”²⁴⁾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

24) Christopher Clapham, “The Global-Local Politics of State Decay” In Robert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관료제를 통해서 전체 사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일부분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로 인해서 사회주의자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예컨대 일정 수준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의 끊임없는 반발은 공식적 제도를 약하게 만들거나 무력화시킨다.

전체주의를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한 칼 프리드리히와 즈브기뉴 브레진스키는 ‘고립된 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주의 안에 남아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독립적인 영역을 파괴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체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몇몇 영역과 단체가 존재한다. 가족, 교회, 대학, 전문 기술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공간, 작가, 예술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전체주의의 요구에 저항한다. 이들은 전체주의의 거대한 바다 위에 고독하게 남아있는 ‘고립된 섬’과 같다.” 25)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한키스(Hankiss)는 사회주의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성된 모든 영역을 ‘제1사회(First Society)’로 명명하였다. 이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제, 공적 담론, 하위문화, 사회의식을 총칭하여 ‘제2사회(Second Society)’로 개념화하였다. 그가 제1사회로 지칭했던 영역을 ‘국가’로 대체하여도 논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26) 앞서 언급한 색슨버그 역시 사회주의 체제에 남아있는

Press, 2004), p.83.

25)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279.

26)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접근법은 국가-시민사회로 양분하는 이분법과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삼분법이 있다. 이분법에서는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시민사회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반면에 삼분법에서 시장의 활동자체는 시민사회의 특징인 공공성과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적 특성상 국가가 공식적 경제영역(시장)을 관리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공식적 영역 밖에서 ‘비공식적 시장경제(Informal Market Economy)’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민사회 역시 독자적인 담론과 의제를 가지고 국가와 대립하였다. Elemer Hankiss, “The “Second Society” : Is there an Alternative Social Model Emerging in Contemporary

이 영역을 ‘준-시민사회(Semi-civil society)’ 라고 명명하였다. 그가 ‘준-시민사회’ 라고 명명한 까닭은 시민권을 제약하는 사회주의 구조 속에서는 온전한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지닌 ‘사회 영역’ 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현상을 개념화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와 독립된 이 영역을 ‘사회’ 혹은 ‘사회 영역’ 이라고 지칭하겠다. 하지만 이 자율적인 영역이 국가와 항상 같등하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사회가 항상 ‘시민성’ 과 ‘공공성’ 을 창출한 것도 아니었다. 사회가 정치적 기능 없이 단순히 경제적 기능만을 행하기도 하였다.

③ 사회주의 체제와 ‘대외관계’ : 대외적인 환경은 개별 국가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한다. 국가는 국내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국제정치에 참여하며, 반대로 국제정치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내정책을 실행하기도 한다. 가령 국가가 안보의 위협을 받을 때는 경제력을 소모하여 군사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반면 안보의 위협이 크지 않는 경우, 국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기관을 활용한 ‘내부동원’ 을 실시하며, 국제적으로 힘이 강력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자원의 추출’ 을 단행하기도 한다.²⁷⁾

사회주의 국가는 백지 위에 건설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적인 혁명을 도모하였던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구조가 확립되었다. 동독의 베를린 장벽,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과 DMZ가 상징하듯이 이들 국가는 전-지구적인 냉전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대외환경, 대외압박, 분단구조)’ 는 사회주의 국가의 행동을 제약 및 촉진하였다. 특히 동독, 베트남, 북한에서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극심한 체제 경쟁의 역사 가운데서 대외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 세 국가의 대외관계 또한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Hungary?” *Social Research* Vol. 55 No. 1-2 (1988), pp.13-42 참조.

27) 일군의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구조적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국내적 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행동에 관한 연구는 Michael Mastanduno, David A.Lake and John Ikenberry,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No. 4 (1989)을 참조.

④ ‘국가-사회’ 관계의 동학: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할 경우, 과거의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폭정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전체주의가 권력을 잡으면 새로운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사회적, 법적, 정치적 전통을 모두 파괴한다. 국가 전통이 아무리 특별하고 그 이데올로기의 정신적 근원이 특수하다 해도, 전체주의 정권은 항상 계급을 대중으로 전환시키고, 정당 체제를 일당 독재가 아닌 대중 운동으로 대체하며, 권력의 심장부를 군대에서 경찰로 이전하고, 공개적으로 세계 지배를 지향하는 대외 정책을 확립한다.”²⁸⁾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이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제도와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공유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건설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도의 합리성을 위한 중앙계획경제, 사유재산의 폐지, 반기독교, 반주술적 무신론적 세계관, 봉건적 제도의 철폐 등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본가의 축출을 통한 중앙계획경제의 실시와 헤게모니를 장악한 독재 정당의 구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작업이었다. 이러한 원리 위에서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시민성과 자율성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아렌트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극단적인 ‘제도적 동형화’를 지향하면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의 행정 능력, 개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구조, 대외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강도와 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예를 들면 자본가 세력이나 농촌촌락 조직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의 유·무형적인 저항으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확립이 지연되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전통이 강력하게 남아있던 곳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³⁰⁾ 정치사회학자 댄 슬레이터(Dan Slater)가 지적한 바

28)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p.255.
 29) 폴란드의 경우 1945-1960년 동안 농경지의 사적 소유가 70% 이상 유지되었는데, 이는 농민협동조합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으로 인한 것이었다.
 30)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비록 당시에는 이 세 국가 모두 체제변환에는 실패했지만, 진압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된 사회의 저항은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켰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기도 하였다. Grzegorz Ekiert, *The State Against Society: Political Crises and Their Aftermath in East Central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와 같이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정부는 관료, 군대, 경찰, 재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부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반독재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재정 자원도 빈약하다. 하지만 반대세력 혹은 ‘사회’는 ‘상징적 권력(symbolic power)’을 통해 확보한 정당성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권을 압박한다.³¹⁾ 이 과정에서 사회는 민족주의³²⁾·전통·종교 등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체제와 대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권력’의 강도는 체제 수립 이전의 규범과 전통,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민주적 요소의 성장, 외부의 변화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국가보다 강하거나, 국가가 사회주의를 실시할 만큼의 조직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사회주의 건설 자체가 좌절되기도 한다.³³⁾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정부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좌절시켰다.³⁴⁾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의

31) Dan Slater, “Revolutions, Crackdowns, and Quiescence: Communal Elites and Democratic Mobilization in South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5 No. 1 (2009), p.208.

32)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이러한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곳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다. 알바니아계와 무슬림이 인구의 90% 가량을 차지하였던 코소보 지역에서는 티토 통치 당시부터 민족주의적 요구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티토는 1968년과 1974년 두 차례 헌법을 개정하여 코소보의 자치권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티토 사후인 1981년부터 코소보에서는 프리슈티나 대학(University of Pristina)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본격적인 분리주의 운동이 진행되었다. 당시의 학생들을 반공주의자나 서구식 민주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당시의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졌다. 종교와 민족의식이 이들의 불만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33) 미그달은 제3세계에서 강한 국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국가별로 다양한 자본가 계급, 전통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사회와 반대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경우 이들은 저항한다. 특별히 사회 영역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국가는 약해진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에 따른 국가건설이 불가능해지며,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는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Joel S. Migdal,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 26 9. 관련 내용은 이 책의 1장과 6장을 참조.

34) 중동 연구자인 아민 사이칼에 따르면, 당시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은 자신들의 영토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무신론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질성, 역사적 배경, 정치적 정당성, 허약한 조직력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무리한 토지개혁의 실시로 전통사회의 막강한 저항에 직면했고, 결과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이 중심이 된 무자헤딘에 의해 큰 공격을 받았다. 소련의 개입을 통해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소련의 퇴각 이후에 이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한 전체주의’ 라고 명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애초부터 전체주의를 확립시킬 만한 정치적·조직적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와 국영기업을 통한 계획경제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대외 관계(대외적 환경, 대외적 압박 등)는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의 ‘국가-사회’ 관계에 영향을 준다. 가령 1950년대에 이미 동독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자 하였지만,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동독은 또한 서독과의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간의 대탕트가 시작되고 서독이 소련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소련은 동독이 회담에 응하도록 압박하였다. 그리고 헬싱키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동독은 폭력으로 사회를 통제하던 방식을 예전보다 완화해야 했다. 이 덕분에 ‘사회’는 보다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집권은 동독 주민들의 결집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베트남에서도 고르바초프의 노선에 자신감을 얻은 당내 개혁적인 인사들이 최고지도자에게 개혁 정책을 건의할 수 있었다. 물론 대외관계가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 초반 동독의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진지하게 실행하였지만, 소련의 반대로 인해 실각하고 말았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을 위하여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었다. 동독은 1974년 미국과 수교하였기 때문에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미국과 서독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동독의 기업들이 서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개혁과 함께 카터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핵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북한 내부의 개혁동력이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사회’ 관계를 기본적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영향을 준 대외 관계 요인을 검토하도록 하

붕괴되었다. Amin Saikal, “Islamism,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127.

졌다.

2) 연구범위 및 사회주의 체제 유형의 세분화

① 연구범위: 본 논문은 동독, 베트남, 북한의 1970년대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시점을 세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국된 1945년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동독, 베트남,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토지개혁, 2차 대전이후의 독일문제, 독립문제, 통일문제, 한국전쟁 등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개별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사회주의 체제 변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경우 분명 사회주의 이념을 표명하였지만 오랜 기간 전쟁³⁵⁾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지체되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 이후인 197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1970년대 세 국가는 비록 역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핵심적인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에 동일한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 해당한다. 즉 세 국가의 접합점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물론 이 시기부터 세 국가 사이의 차이점이 점증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다른 경로를 밟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 시기는 다음과 같다. 동독의 경우, 호네커 서기장이 취임한 1971년 8차 당 대회를 시작으로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23조에 따른 통일이 핵심쟁점이었던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민주적 선거 기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호네커는 전임자의 ‘신경제정책’을 폐지하고 ‘경제사회통합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양독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구조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수립이 논의

35)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고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남베트남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치렀다.

되었던 1975년을 시작점으로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체제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1986년 제 6차 당 대회가 개최된 시기의 정치, 사회적인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도이머이 개혁 이후 실제로 변화된 정책과 그 결과들도 다루도록 하겠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 과 ‘7.4 남북공동성명’ 이 발표된 1972년을 시점으로 하여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잡았다. 1972년부터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권과는 분명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에 대한 강력한 우상화와 후계체계의 구축이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난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물리치고 독재체제의 유지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전-지구적인 데탕트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지구적인 탈냉전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는 왜 제한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전-사회적 위기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분석할 것이다.

② 사회주의 체제 유형: 동독, 베트남,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탈스탈린적 사회주의’, ‘초스탈린적 사회주의’ 라는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시장사회주의’ 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하겠다.

① 스탈린적 사회주의(Stalinist socialism): 스탈린적 사회주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최고지도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며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레닌이 주장하였던 민주적 중앙집권화의 원칙을 표면적으로 고수하지만, 공개적인 토론은 사라지며, 강력한 국가기관은 개인의 삶까지 제약한다. 하지만 강력한 독재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과 원칙이 부정되지 않는다. 경제영역에서는 중앙계획경제·중공업화·대규모 협동농장 수립 등을 특징으로 하며,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경공업과 소비재생산은 후 순위로 밀려난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노동조합이 독자성을 상실하여 당에 종속된 거수기 역할만을 한다.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자율성을 주기도 하지

만 종교적 신념이 사회로 전파되지 않고 개인 수준에 머물도록 통제한다. 문화 영역에서는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적인 삶의 지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칙이 고수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스탈린적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개념과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동독의 경우는 1948년에서 1953년 동안에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부터 1978년 대규모 국유화를 실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속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 유형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② 탈스탈린적 사회주의(Post-Stalinist socialism): 최고지도부에서 민주적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공산당 서기장이 일정 수준 다른 정치국원의 견제를 받는다. 또한 자의적인 테러가 아니라 정교한 법률을 동원하여 체제의 반대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라이벌도 법의 보호 하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개별 국영기업의 독자성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당이 계획한다. 또한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가 여전히 중시되며, 노동 인센티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시대와 비교할 때, 사회문화적으로 주민들은 더 많은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 예술가들 역시 스탈린체제에 비교하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탈스탈린적 사회주의는 린츠와 스테판의 후기 전체주의, 린츠의 제한된 다원성(limited pluralism)의 권위주의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전체주의론에서는 계획경제의 분권화와 변동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획경제의 분권화를 포괄하는 탈스탈린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동독, 1979년 이후의 베트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초(超)스탈린적 사회주의(Ultra-Stalinist socialism): 이는 스탈린체제의 기본 골격에 지도자에 대한 극단적인 우상화와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제는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운영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경제 운영방식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탈스탈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일성 유일사상이 선포된 1972년 이후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북한³⁶⁾ 그리고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초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초스탈린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대체하거나, 그 속에 내포된 근대성마저도 부정하는 독재체제이다. 문화 영역에서는 매우 경직된 즈다노프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고수된다.

호치민에 대한 이상화와 베트남 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애정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통치 시기의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초스탈린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없다.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신을 두 사상가 보다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통치는 또한 민주적 중앙집권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상당히 이른 시점에 실권을 그의 후임자들과 공유하였다. 1956년 반-자이펄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관련자를 처형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 응우옌 만 뜨엥(Nguyễn Mạnh Tường)이 베트남 노동당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지만,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④ 시장 사회주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연구하였던 경제학자와 베트남·중국을 연구하였던 학자들 모두 ‘시장 사회주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시장 사회주의는 1936년 경제학자 오스카 랑케의 이론과 폰 미세스와의 논쟁을 지칭한다.³⁷⁾ 시장 사회주의는 중앙에서 전체 경제를 계획하여 통제하기보다는 시장을 수용하되 이를 중앙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수용하였고 이 원칙에 따라 기업 관리자들에게 이윤극대화를 허락하였다.³⁸⁾ 1930년대 당시 소련은 시장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965년 소련의 ‘코시긴 개혁’, 동독의 ‘신경제정책’,

36) 1972년 유일사상체제를 선포하고 후계체제를 확립한 북한은 초스탈린적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5.25 교시가 선포된 1967년 이후 혹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의 북한을 초스탈린체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37) Oskar Lang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Part On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 No. 1 (1936), pp.5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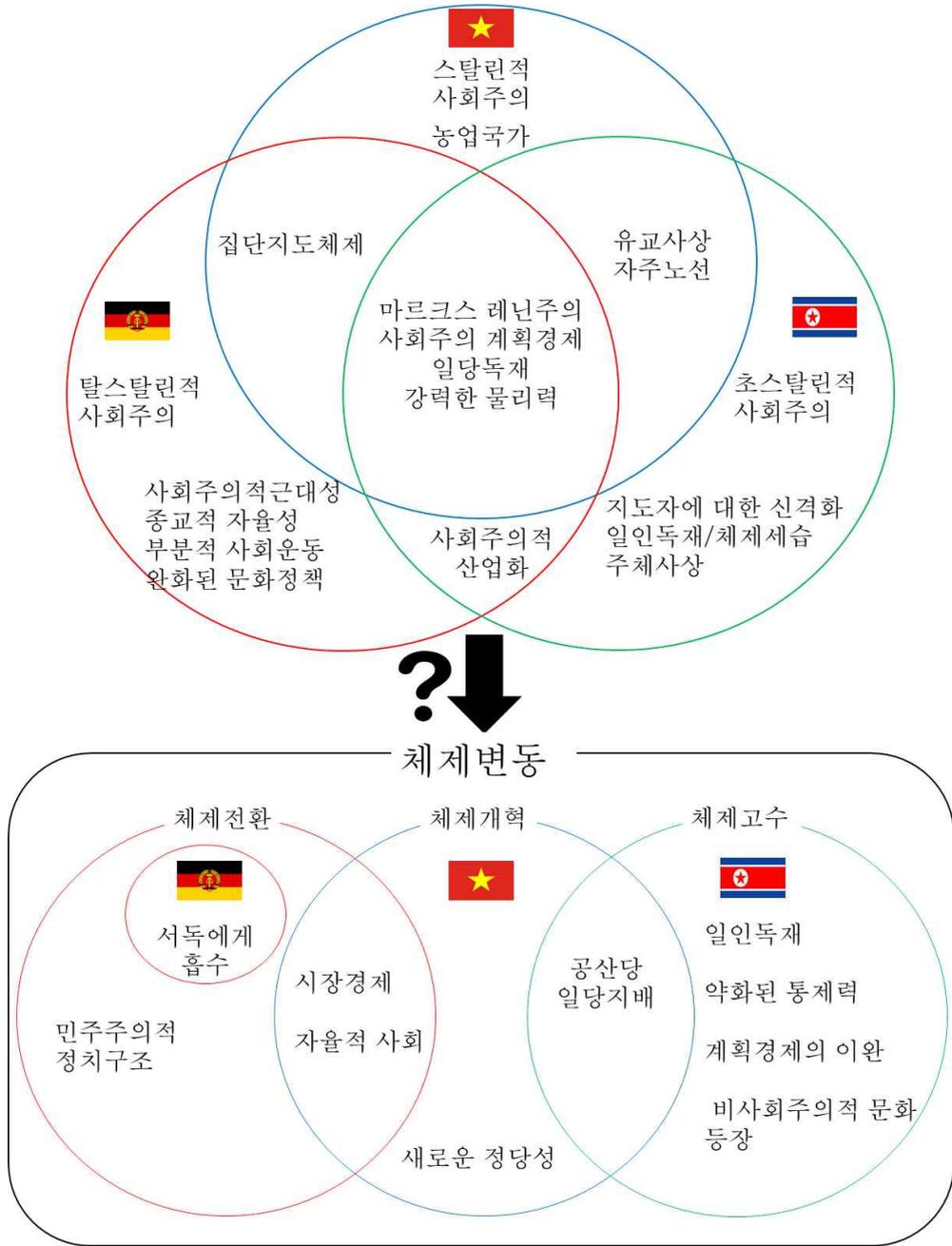
38)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서울: 나남, 1994), pp.204-205.

헝가리의 ‘분권화조치’,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³⁹⁾는 자유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주의 틀 안에서 시장적 요소를 수용한 것이었다. 즉 랑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시장 사회주의는 개혁개방 이후의 베트남과 중국을 지칭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산당의 일당독재는 유지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사적 소유권(점유, 처분, 상속)도 인정하고 보호한다. 공산당은 주요한 국가경제계획을 수립하지만, 기업의 개별적인 사안(고용, 임금분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공산당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구 예술작품이나 영화 등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종교의 공개적 포교는 당국의 비공식적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개인은 충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권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를 촉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 사회주의’가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와 개념들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은 <그림 1-1>로 나타낼 수 있다.

39) 알렉 노브, 대안체제연구회 역,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서울: 백의, 2001), pp.257-301.



<그림 1-1: 1970년대 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과 체제변동>

3) 연구의 분석단위와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관료조직을 통해 전 사회의 동원과 통제를 모색한다. 이처럼 국가의 영역이 매우 방대하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사회주의 국가의 물리적 통제능력: 개별 사회주의 국가가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영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통제력’을 분석하기 위해 비밀경찰, 군대, 주민 통제 기구 등이 아닌 경제 제도를 분석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비밀경찰과 군대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기관은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억압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활동을 유도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장이 아니라 당에 의해 통제되는 핵심적인 정치 공간이다. 대부분의 기업에 당원들이 배치되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행정과 활동을 감시한다. 기업의 관리자들도 노동자들에게 업무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임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향후 진로, 다양한 사회복지(여행 및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⁴⁰⁾ 심지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지도부가 계획경제를 고수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만일 시장경제로 전환될 경우 국가가 더 이상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물질적 이익을 ‘당근’, 감시와 처벌을 ‘채찍’에 비유한다면 계획경제는 당근과 채찍을 붙잡고 있는 ‘양팔’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사회주의 국가의 자원 제공능력: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경제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즉 생산 활동을 통해서 경제 전반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활 소비품을 제공해야만 한다. 만일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체제의 정당성이 훼손될

40) Andrew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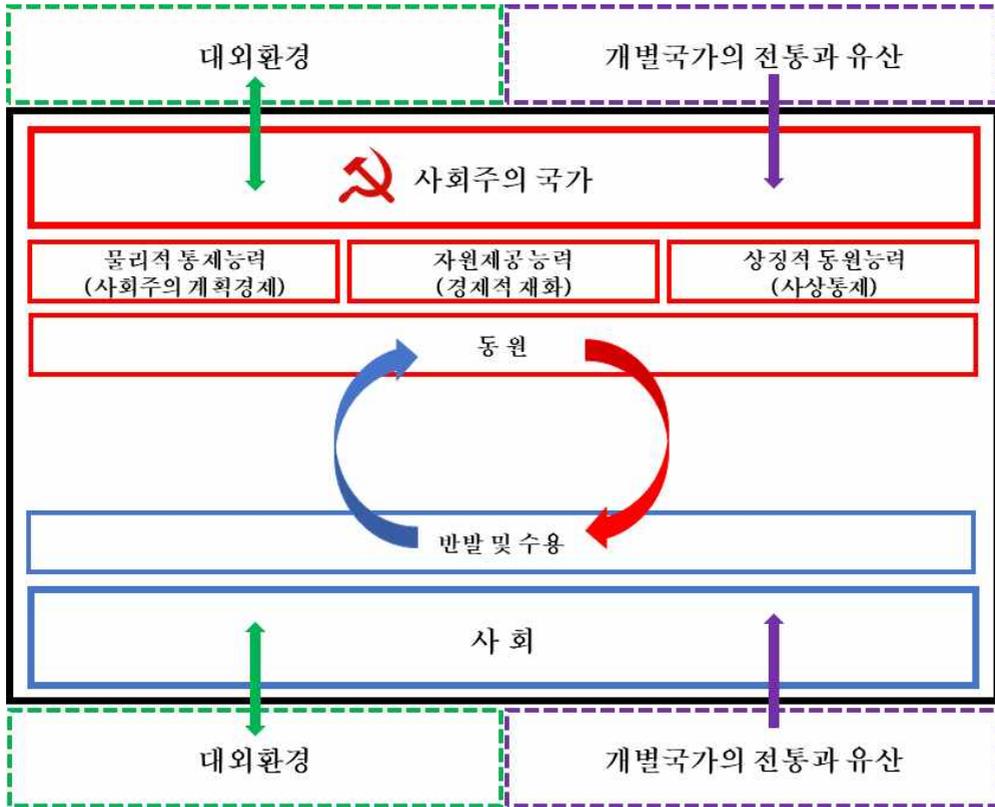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가가 항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방식만을 통해서 주민에게 자원제공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외로부터 차관을 들여 오고 기술을 수입하여 경쟁력을 증진할 수도 있으며, 소비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강대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를 개선(정치적인 개입을 줄여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③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적 동원능력: 사회주의 국가는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하며 정당성을 확보한다.⁴¹⁾ 특히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문화, 예술, 교육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비판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 원칙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고안되었으며, 소비·오락·개인과 작가의 내면세계 등에 초점을 맞춘 예술작품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당의 문화예술 노선은 부분적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회주의는 비과학적인 종교에 적대적이었다. 특히 신자들의 초월적인 믿음은 또 다른 절대성을 지닌 사회주의 이념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개인들의 내면세계까지 완전하게 장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교가 사회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종교와의 관계 역시 사회주의의 상징적 동원능력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그림 1-2>로 표현할 수 있다.

41)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 ‘독사(doxa)’ 는 사회세계의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정당성을 용인한다. 왜냐하면 ‘독사(doxa)’ 가 자의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정당성을 소유코자 하였던 집단 간의 투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민들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선전하였다. Pierre Bourdieu, Richard Nice 역,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68.



〈그림 1-2: ‘국가’ ‘사회’ 동학의 분석틀〉

위의 분석단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대외관계의 영향 등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장 중요한 ‘정치’를 다루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산당이 공적인 영역의 사실상 유일한 행위자이며 국가의 개입범위도 매우 넓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분석단위는 이미 ‘정치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당 최고엘리트층의 파벌과 갈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동독, 베트남, 북한에서는 체제 변동의 조짐이 명확해지기 이전에는 엘리트 균열이 가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겠다.⁴²⁾

42) 세 국가의 경우 체제의 본격적인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최고 엘리트들 사이에서 변화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엘리트 집단 안에서 이견과 토론이 없었던 것은

본 연구는 중요한 당의 결정은 분석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고찰하면서 공식적인 정치영역의 분석을 통해서만 조명할 경우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공산당은 도이머이 개혁을 통해 성과를 얻은 후 5년이 지난 1991년 개최된 7차 당 대회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였으며, 이 원칙에 대한 수정과 왜곡을 반대한다고 표명하였다.⁴³⁾ 하지만 이런 경직된 언사는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실제로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동독의 집권당은 1989년 5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북한 역시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주체사상’을 수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문헌인 『경제연구』는 ‘고난의 행군’ 시절,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물리적 통제력’, ‘자원제공능력’, ‘상징적 동원능력’을 분석하면 체제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각 사례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나 주요

아니며 처벌과 숙청도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엘리트 사이의 응집력이 훨씬 컸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핵심요직은 특정 인사들이 장기간 담당하고 있었다. 가령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1971년부터 1989년 10월 18일까지 사회주의 통합당의 서기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슈타치의 수장이었던 에리히 밀케 (Erich Mielke)는 1957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계획위원장이었던 게르하르트 슈러(Gerhard Schürer)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였다. 빌리 슈토프(Willi Stoph)는 1964-1973년, 1976-1989년까지 동독의 수상 직에 있었다. 당의 경제 비서였던 귄터 미탁 (Günter Mittag)은 1962년에 임명되어 1973년까지 활동하다가 1976년 경제 비서에 재임명되어 1989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도 동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레 주언(Lê Duẩn)은 호치민 생전인 1960년에 공산당 서기장에 임명되어 1986년 7월 사망할 때까지 최고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팜반동 (Phạm Văn Đồng) 수상은 1955년 임명되어 1987년까지 활동하였다. 쩌영진(Trương Chinh)은 1940년부터 1956년까지 공산당 서기장을 담당하였으나 토지개혁의 실패로 물러났다. 하지만 1960년 국회의장에 선출되어 1987년까지 활동하였다. 레 주언 사후 임시 서기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건국 영웅인 보응우옌 지압(Võ Nguyên Giáp) 장군은 1948년부터 1980년까지 국방부장관직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1955년부터 1991년까지 부총리직을 유지하였다. 비록 1982년 레 주언과의 갈등으로 정치국 위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보다 공식적인 직급은 조금 낮았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을 거부하였던 레득토(Lê Đức Thọ)는 정치국 위원 자리를 30년 이상 유지하였다. 북한은 잘 알려진 것처럼 김일성과 빨치산 파의 권력이 장기간 대를 이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43) CPV, “To continue taking the cause of renovation forward along the socialist path: Report of the 6th Central Committee on the documents of the 7th Congress” Communist Party of Vietnam,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30-2015)*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15), p.743.

한 행위자에 서술 방식과 분량도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이 세 국가를 최대한 동일한 분석 틀에 따라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먼저 각 국가의 분석 단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변화를 추동하였던 행위자들은 어떠한 집단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체제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겠다.

4. 연구방법론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중심적 시각과 엘리트 중심 시각을 벗어나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전-지구적인 냉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부터 개별국가의 사회사 전공자, 지역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은 국제정치나 엘리트중심의 시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냉전과 사회주의 체제 안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공산당치하에서의 종교인, 예술인, 패션, 소비형태, 록 밴드, 재즈 등).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으며 나름의 지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복원하는 작업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개별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와 운명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또한 개별 국가와 사례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즉 냉전과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 이론 및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경로를 걷게 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겠다.

1) 비교역사분석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비교역사분석(혹은 비교역사사회학)은 실제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며, 이를 발생시킨 여러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사회학이다. 사회학자뿐 아니라 정치학자들도 이 방법론을 활용하기도 한다. 비교역사분석은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편적인 이론의 확립을 모색하기도 한다. 고전 사회학 연구들은 명시적으로 이 방법론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저자의 문제의식과 지적 배경 속에 이 방법론이 내재하였다. 예컨대 막스 베

버가 ‘자본주의가 왜 서구에서만 등장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속에는 이미 서구-비서구에 대한 비교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사회학에서 가장 선호되고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대규모 사례연구이다. 이 연구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통해 ‘법칙 정립’ 과 ‘일반화’ 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규모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역사분석을 하면서 제시하는 일치법과 차이법은 그 방법론 자체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법칙 정립과 일반화의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소규모 사례 비교를 확장하여 10-15 개의 사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울방정식도 동일한 이유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방법론에 비해 비교역사분석은 구체적인 ‘사례’ 44)를 분석하여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45) 다만 연구자의 철학이나 관심사에 따라 비교 방식은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다.46)

통계적 방법론은 X가 Y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반면 비교역사분석은 ‘X’ 가 작동하는 맥락을 설명하여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44) 사례연구는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다. 연구자는 각 사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요인들을 제거한다. 최종 연구결과물이 잘 정돈된 형태로 나오면, 독자들의 눈에 연구자가 결정론에 빠진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핵심적인 요인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며,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5) 대다수 연구자는 터무니없거나 무작위적으로 사례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대개 학술적으로 ‘동일한 유형’ 으로 간주되는 범주 내에서 사례를 선정한다. 혹은 ‘동일한 사건’ 이 ‘상이한 사례’ 에서 발생한 것을 포착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46) 스카치 폴과 마가렛 서머스는 비교역사분석이 연구자의 관심 사항, 사례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론을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의 유사증명의 비교사(Comparative History as Parallel Demonstration of Theory)’, 개별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일반적인 사회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맥락대조의 비교사(Comparative History as Contrast of Contexts)’ 가 있다. 세 번째로 ‘거시인과분석의 비교사(Comparative History as Macro-causal Analysis)’ 는 거시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한다. 스카치 폴과 서머스는 비교전략의 다양성을 위해서 ‘맥락대조’ 와 ‘거시인과분석’ 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 두 접근방식은 질적인 차이보다는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탐구하는 사례의 차이에 대한 섬세한 서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거나, 아니면 일반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Theda Skocpol and Margaret Somers,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2 No. 2 (1980), pp.176-187.

구체화한다. 이는 X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요인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이 효과를 가져오는 배경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⁴⁷⁾ 이처럼 비교역사분석(혹은 Small-N 연구)의 장점은 실존하는 경험적 사례를 직접 탐구하여,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역사분석은 또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기도 하지만 주로 비교 가능한 사례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⁴⁸⁾ 비교역사분석은 논증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앤드류 애보트(Andrew Abbott)는 비교역사분석이 다른 연구방법과 달리 독특한 연구지향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이 방법론의 장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방법론은 민족지나 역사적 사료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구조적 접근과 개인주의적 접근 모두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례의 특정한 맥락을 강조하기도 하며, 일반적 법칙의 정립을 시도한다.”⁴⁹⁾고 말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맥락대조’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1970년대 동독·베트남·북한, 이 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과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 체제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이 비교를 통해서 향후 사회주의 체제변동을 이해하는 이론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 소규모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으면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면 ‘맥락대조’를 통한 이론의 확립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동아시아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복지 자본주의 국가(Welfare State Capitalism), 사회주의 국가 등은 애초에 그 사례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일반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맥락대조’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하겠다.

47) Kathleen Thelen and James Mahoney,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n James Mahoney and Kathleen Thelen eds, *Advances i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7.

48) Matthew Lange, *Comparative Historical Methods* (London & Washington DC: Sage, 2013), pp.95-96.

49) Andrew Abbott, *Methods of Discovery* (New York & London: Norton & Company, 2004), pp.58-59.

2) 왜 비교역사분석인가? : 역사적 제도주의' 와의 차이점

앞 절에서는 비교역사분석이 다른 연구방법론과 비교하여 지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최근들어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일군의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매우 친밀한 유대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각 대학의 정치학과와 사회학과에 함께 적(籍)을 두기도 한다. 정치학자로 분류되며 이 분과를 선도하고 있는 캐서린 텔렌(Kathleen Thelen)은 2015년에, 제임스 마호니(James Mahoney)는 2001년에 각각 미국사회학회 비교역사사회학 분과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 사회학과 정치학이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 를 견지하면서 '비교역사분석' 을 하는 학자의 연구는 사회주의의 사회학적 연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점을 잠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제도를 매개로 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 '수확 체증(Increasing Return)', '고정 완료(Lock on)' 등과 같은 개념들은 확립된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전제 위에 수립된 것이다. 실제로 정치학자들이 주도하는 비교역사분석은 주로 민주주의 선진국 혹은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를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즉 마이클 만(Michael Mann)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국가가 일정 수준의 '인프라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 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제3세계 신생국가들은 정권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국가의 '인프라적 권력' 이 낮았다. 정치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마리아 뮤릴로(Maria Murillo)는 제3세계 국가에서 제도의 안정성이 낮은 4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② 독재국가이거나 민주주의와 혼합된 정치체제가 수립되어 공식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③ 관료적 능력이 낮아 행정력이 국가 전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 정치제도가 특정 계급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⁵⁰⁾ 그리고 독재국가의 경우 '전환적 국면(Critical Juncture)' 이 외부적 개입·제도적 변화·사회변동 등과 상관없이 독재자의 변덕과 권력의

지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엘 미그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재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홀어버리기(Big Shuffle)’를 실시한다. 이 개념은 국가기관이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의 수장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재자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강등 혹은 이직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단순하고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에 가깝다. 그는 이를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라고 명명하였다.⁵¹⁾ 물론 최고 지도부의 인사 몇몇이 교체되거나 강등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제도가 붕괴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제도의 안정성은 하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제도의 불안정성은 본 연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그 자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관료와 당원들이 공식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회주의는 전 사회를 동원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전 국토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어도, 전국의 모든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세 나라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의도적으로 통치체제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통치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3세계와 독재국가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정적인 재생산을 가정하고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행위자 중심적이고, 이해관계 중심적인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와 조직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사회’에 확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치학자인 마크 블리스(Mark Blyth)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사상·아이덴티티와 제도의 상호관계를 포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초기의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사상과 이념을 그들의 분석틀에 포함하였지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대결하는 가운데,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을 제외했다고 평가하였다.⁵²⁾ 사회학적 접근이 블리스가 제시한 지향점

50) Steven Levitsky and Maria Victoria Murillo, “Variation in Institutional Strength” *Th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2 (2009), p. 124.

51) Joel Migdal,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72-74.

52) 그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된 논문들의 피인용도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학자의 제도주의는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종교는 인간에게 매우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인간이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초월성을 일단 받아들이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연대는 매우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여 현실정치사회제도를 매우 심각하게 제약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와 같은 현실 정치제도가 변화한다고 해서 그 사회구성원들이 그 제도에 조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도가 종교적 가치관과 상이할 경우 평화적 혹은 물리적 저항을 하기도 한다.⁵³⁾ 물론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회와 항상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상황이 종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한다.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은 새로운 제도의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비교역사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 방식의 의의를 인정하되,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문헌을 기초로 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1차 자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동독 부분에서는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의 냉전 프로젝트 (Cold War Project)에서 공개된 외교문서, 워싱턴에 소재한 독일역사연구원 (German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의 ‘문서와 사진 속의 독일 역사 프로젝트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의 자료들, 사회주의 통합당(SED)의 중요 법령 및 외교문서, SED의 공식기관지 노이

실시한 바 있다. 가장 집중도가 높은 다섯 명 중 (Peter Hall, Paul Pierson, Theda Skocpol, Douglass North, Kathleen Thelen) 가운데서 ‘사상’을 제도와 연계시킨 학자는 없었다. Mark Blyth, Oddny Helgadottir and William Kring, “Ideas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Orfeo Fioretos, Tulia G.Falletti and Adam Sheingate ed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142-162.

53) Anna Grzymala-Busse, “Why Comparative Politics Should Take Religion (More) Seriously” *Th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5 (2012), pp.422-426.

에스 도이칠란드(Neues Deutschland), SED의 영문출판물, 동독의 잡지·영화·예술정책 문서 등을 검토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공산당(CPV)의 공식 문헌, CPV 당 대회 문서, 베트남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출판한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⁵⁴⁾ 최고지도자 혹은 정치적인 거물의 실명으로 출판된 연설집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베트남 통계청 자료, 공산당의 영문 학술지(Vietnamese Studies)를 검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 북한의 경우는 『로동신문』,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저작집』, 『경제연구』 등과 같은 1차 문헌을 사용할 것이다.

54) 1930년도 인도차이나 공산당 시기부터 최근까지 당의 주요 안건, 당 중앙위원회 등, 일부 기밀문서를 제외한, 풍성한 자료들이 이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성격과 기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uong Vu, “Van Kien Dang Toan Tap: The Regime’s Gamble and Researcher’s Gains”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5 Issue 2 (2010), p.183-194 참조.

II. 동독: 체제전환의 경로

저명한 비교정치학자인 후안 린츠와 알프레드 스테판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변동과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기 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후기 전체주의’는 체코의 대통령을 지냈고 77헌장을 작성한 바츨라프 하벨이 처음으로 고안하였다. 그가 “테러는 종료되었지만 모든 것이 얼어 붙어버린 공간” 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두 학자가 사회과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은 확실히 변화하였다. 독재자의 우상화의 정도도 훨씬 낮아졌으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숙청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비전과 제도적인 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상황이었다.⁵⁵⁾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별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전체주의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이를 촉발시킨 것은 분명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사회 영역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은 보다 진실보 한 것이라 하겠다.

1970년대 동독 역시 제도적으로는 탈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유형 분류만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국가-사회’ 관계 그리고 대외적 요인이 어떻게 맞물려 ‘사회의 영역’ 이 확장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을 통치하였던 울브리히트 서기장이 내부 반발과 소련의 승인으로 인해 축출되었다. 후임자인 호네커 서기장은 기존의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경제운영 방식을 종식시키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무리한 공업화와 서독을 추격하는 전략에서 한 발짝 후퇴하여 소비증진과 복지를 확충하는 노선을 수립하였

55) Juan Linz and Alfred Stephe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42-49.

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리한 산업화의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며 가장 모범적인 사회국가로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노선의 변경을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⁵⁶⁾ 또한 동독 주민들은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리기를 원했고 서독을 준거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주민들을 자각시키는 매개적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서방 진영과의 데탕트가 이루어졌다. 1970년 서독과 소련의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조약은 데탕트의 형성에 크게 일조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서독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정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나토 회원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1975년 헬싱키 조약을 체결하여 보편적인 세계질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물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SS-20 미사일 및 퍼싱-2 미사일 배치로 인한 부분적인 관계 경색이 있었지만 동·서독 및 동구권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았다. 동방정책을 수용하는 것 역시 동독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환영했던 사항은 아니었다. 서독과의 관계개선은 단기적으로 동독 지도부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담보해주었지만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서독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헬싱키 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더라도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 수준 보장해야 했다. 1970년대부터 새롭게 형성된 구조는 동독 붕괴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동독의 경우 다른 동구권과 마찬가지로, 1989년 시민사회의 붕괴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고르바초프 효과와 서독의 동방정책)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독일적 전통, 즉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자체적인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등장한 것이었다.

56)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동독은 1980년대에는 컴퓨터 산업에 투자하여 서구권과의 경쟁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많은 국가예산이 기간산업이 아닌 소비품 보조에 사용되었고 이는 동독의 경제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했다. 물론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제1절 197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정책 방향

1. 새로운 정치지도부의 형성과 경제정책의 수정 움직임

1) 울브리히트의 축출

1971년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1893-1973) 서기장이 퇴임하고 호네커 서기장(Erich Honecker, 1912-1994)이 취임한 것은 평화로운 세대교체가 아니었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통합당 내부에서 이 두 인사는 종종 갈등을 표출하였다. 물론 이를 단순하게 개인적 야심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동독의 사회주의 방향을 둘러싼 비전과 각 계파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발터 울브리히트는 1920년대부터 이미 독일공산당에서 활동하였으며 1922년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접견하고 악수를 하였는데 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동독 건국 이후 소련의 외교단을 맞이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레닌을 만났다는 점을 과시하였다. 히틀러 집권 이후에는 소련으로 망명하였고, 2차 대전 이후부터 사실상 동독의 일인자로 군림하였다. 울브리히트는 1952년 무리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동독 주민을 이탈하게(자국 영토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으며, 1953년 베를린 봉기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었다. 또한 그는 소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베를린 장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1961년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그는 소(小) 스탈린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던 울브리히트는 1960년대 ‘신경제체제’ (Neues Ökonomisches System, NES)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당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도대체 그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50년대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개혁의 목소리, 1962년 소련에서 소개되기 시작한 ‘리베르만 방식’ 과 ‘코시긴 개혁안’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논의된 새로운 경영방식 등이 ‘신경제체제’의 도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1960년대 초중반에 등장한 동독의 개

혁안은 당의 개입 약화와 기업의 독립성 보장, 차등입금을 통한 노동 인센티브 고취, 시장 경제적 요소의 유지 및 잔존을 골자로 하였다. 특히 울브리히트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해서 서독을 넘어서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포부를 밝혔다.

당시 CIA는 1960년대 중반부터 동독의 계획경제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특별히 기존에 수동적이었던 은행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은행의 이윤추구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황과 투자 계획안을 검토하여 대출을 해주고 연간 1.8%-12%에 달하는 이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계획위원회’ 사업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하였다. 또한 은행은 기업들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존의 입출금 제도를 변경하였다. 납품업체 A와 발주업체 B의 거래를 예로 든다면, 구 제도에서는 납품업체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원은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의 계좌로부터 납품업체로 즉각 송금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양 기업 모두 국영기업이며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이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구매자가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상 제공받은 물품을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입금과 거래가 이루어진다.⁵⁷⁾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현상의 일부인 ‘연성대부(soft-credit)’ 현상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시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혼재된 ‘신경제체제’는 다른 정치국원들, 소련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제체제’를 기획하고 집행했던 집단은 사회주의 통합당이 아닌 테크노크라트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공산당과 기술관료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이 둘 다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시장적인 국가 주도 경제발전계획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를 자유민주주의 상황에 비유해 보자면 사회복지와 균형성장을 기조로 하는 진보정당이 정치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수반과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정

57)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Report: The East German Financial System” 문서번호: CIA/RR ER 66-28, December, 1966. pp.19-20.

책을 실시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독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50년대만큼 절대적으로 신봉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신경제체제’가 실행되면서 정치국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호네커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국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을 마치 ‘수정주의’ 처럼 간주하였다.⁵⁸⁾ 특히 당의 정치국원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이권을 테크노크라트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당 조직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용이한 사회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동일한 이유로 소련의 코시긴 개혁 역시 도중에 중단되었다.

둘째, ‘신경제체제’는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련보다는 서구권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신경제체제’의 실질적인 기획자였으며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에리히 아펠(Erich Apel)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해야 합니다. 만일 소련이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독이나 일본이 그러한 성과를 보인다면 그들의 모델을 본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학공장 건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릴 필요 없이 그것을 잘 유지 및 발전시키면 됩니다.”⁵⁹⁾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것이 당의 공식 기관지에 실렸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의 노선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울브리히트 역시 시장과 계획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련은 동독이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하여 자신의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서독이나 서구권과 결탁하여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들도 ‘신경제체제’를 환영하지 않았다. 이 발전노선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 예산을 산업 부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58) Peter Grieder, *The East German leadership 1946-1973: Conflict and Crisi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167

59) “Die Beratungen des 5. Plenums Grundlage für die Durchführung der ökonomischen Politik im Planjahr 1964: Aus dem Schlußwort von Dr. Erich Apel, Kandidat des Politbüros, zum ersten Tagesordnungspunkt” *Neues Deutschland* 1964년 2월 12일 8면.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울브리히트는 성과 없는 기업들의 파산을 주장하였기에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⁶⁰⁾ 또한 일부 경제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틀 안에서의 혁신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네커를 중심으로 반대파가 구축되었으며 이들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허가를 얻어서 울브리히트 서기장을 사임시켰다. 울브리히트는 정치국원과 인민회의의장직은 유지하였지만 실권을 잃게 되었다.

2) 사회경제 통합정책과 재집중화

호네커의 집권 이후 정책의 변화가 생겨났다.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을 보장했던 방식에서 당과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집단화’를 실시하여 일원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 운영방식만 보고 이 체제의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과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졌지만 동시에 사회 복지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더 큰 자율화 조치가 실행되었다.

① 사회경제 통합정책의 실시: 1971년 6월 15일-19일 동안 제8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당 대회 기간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방문하였는데, 이는 동독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신임 호네커 서기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제8차 당 대회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사회경제정책의 통합(Einheit von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안이었다. 호네커의 신-지도부는 기존의 무리한 발전노선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증진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한 배경에는 동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위기라는 요인이 있었다. 1968년의 프라하의 봄과 1970년 폴란드 시위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70년 12월, 폴란드의 대규모 시위는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보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소비재 가격을 인상하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울브리히트의

60) Gareth Dale, *Between State Capitalism and Globalisation: The Collapse of the East German Economy* (Bern: Peter Lang, 2004), p.115.

신경제정책은 시장적이고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생산성의 증대에만 주목하였고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은 소홀히 하였다.

호네커 서기장은 1971년-1975년 기간 동안 임금을 21%에서 23%, 매년 약 4%의 임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다.⁶¹⁾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혁도 이루어졌다. 연금을 인상하였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국가에 지불하는 주택 임대료도 인하하였고 다양한 데이케어, 아동지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사회보험 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복지지출은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에 38.2%에서 48.3%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⁶²⁾ 그리고 <표 2-1> 에서처럼 소비품 보급이 실질적으로 증대되었다.

년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TV
1960	3.2	6.1	6.2	16.7
1970	15.6	56.4	53.6	73.6
1980	38.1	108.8	84.4	105.0
1983	43.7	125.0	94.0	114.1

<표 2-1: 동독에서 인구 100명당 소비재의 변화량>

출처: Helmut Koziolk, “Über das Wachstum unseres Nationalreichtums” *Einheit*, 39 9-10 (1984), p.877, Thomas A. Baylis, “Explaining the GDR’s Economic Strate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2 (1986), p.390에서 재인용.

물론 이처럼 복지를 확충할 경우, 정부의 산업 부문 투자액이 감소하여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동독 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통합당은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노동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여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였다. 복지 증진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실제로 8차 당 대회에서 호네커는

61) “Bericht des Zentralkomitees an den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Neues Deutschland* 1971년 6월 15일 11면.

62) 정재훈·박수지, 『동독 사회보장제도 : 역사와 변화』(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81-93.

기존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내부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극복한다면 전체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최고지도부는 복지와 생산성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희망적 사고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독의 경제 침체와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② 경제의 재집중화와 재조직화: 호네커의 신-지도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경제체제의 분권화 정책,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별 기업에게 더 많은 권한(고용, 임금설정, 이윤확보)을 주었던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를 다시 집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위의 방침에 따라 1972년부터 민간-국가 합작기업의 전면적인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11,000여 개의 사기업이 활동 중이었으며 전체 노동력의 11.3%인 약 47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국가와의 합작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인 까닭은 합작기업 허가가 있어야만 대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업들은 국영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고품질의 제품(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 수출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합작기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가장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영기업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였다. 동독 정부는 생산성 높은 민간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허락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 기업을 국영기업과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발전된 민간 부문의 노하우가 전수되어 전반적인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국유화 시켰다.

1970년대부터 콤비나트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합병하여 생산의 일원화와 중앙정부의 통제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이 소수의 콤비나트에 의해 전개되었다. 1984년 총 277개의 콤비나트가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153개 기업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124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였다. 개별 콤비나트에 평균적으로 약 2만 7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콤비나트는 평균 1500-2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중앙 직할 콤비나

트 중 128개는 산업담당 10개 부처가, 21개는 건설성의 지시를 받았다. 1980년 기준으로 콤비나트는 전체 고용의 91%,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⁶³⁾

기존의 신경제체제에서는 개별기업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중요한 경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정책지도를 할 수도 없었다. 당연한 현상이지만 기업의 수익을 국가와 나누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났다.⁶⁴⁾ 기존의 기업연합은 사실상 행정부가 지시한 명령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능만 담당하였고 그 외의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연합을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혁 이후 콤비나트가 전체 공정과 특정 산업 전반을 관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콤비나트 대표와 위원회는 소속 기업의 내부정보 및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⁶⁵⁾ 따라서 1980년대부터는 기존의 내각-기업연합(Vereinigung Volkseigener Betriebe, VVB)-기업(Volkseigener Betrieb; VEB) 3단계 명령체계를, 내각-콤비나트(Combine)로 단순화시키는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중복 사업을 막고 일원적인 계획경제를 수립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그림 <2-1>로 표현할 수 있다.⁶⁶⁾ 코르나이는 이러한 형태를 정부 부처 재편, 기업 합병, 직접적인 개입으로 특징되는 ‘통제의 완벽화’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개혁만으로는 지도부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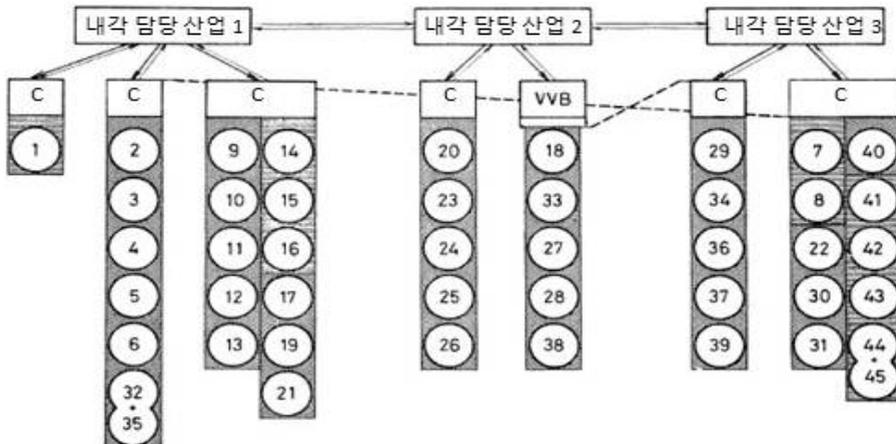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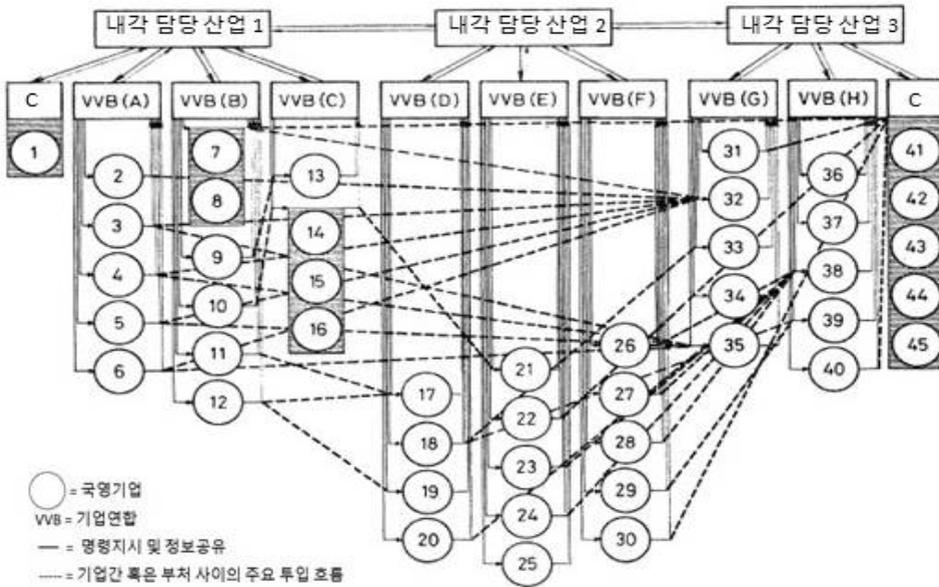
63) Arthur Stahnke, “Kombinate as the Key Structural Element in the GDR Intensification Proces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0 Issue 1 (1987), p.28.

64) Jeffrey Kopstein, p.78.

65) Manfred Melzer, “Combine Formation in the GDR” *Soviet Studies* Vol. 33 No. 1 (1981), pp.91-94.

66) *Ibid*, p.96.

6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p.396-408.



<그림 2-1: 콤비나트 제도 도입을 통한 동독의 경영구조 변화>

출처: Manfred Melzer, "Combine Formation in the GDR" *Soviet Studies* Vol. 33, No. 1 (1981), p.92

이러한 정책을 집중화라고 분류해야 할지 분권화라고 봐야 할지는 조금 애매하다. 비록 중앙에 의한 통제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콤비나트의 관리자들은 상당한 독자성을 지닐 수 있었다. 물론 당 지도부의 계획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동시에 고용, 수출판로 확보, 임금 지급 등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콤비나트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경영은 여전히 잘 보장되지 못했으며 특히 당의 허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신규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⁶⁸⁾

위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동독경제가 뒤쳐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서구권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동독의 수출품은 경쟁력을 잃어갔다. 동독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계 설비를 동구 사회주의 진영에 수출하였지만, 서독이나 스웨덴, 미국 제품들이 훨씬 싸고 성능이 좋았다. 물론 서독의 동방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조를 받았지만 이를 자본으로 삼아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삼지는 못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여 세계 시장에서 서구와 경쟁하려는 장대한 계획도 세웠지만, 이는 투자금의 손실만 초래하였다. 가령 서구권에 수출하였던 기계설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단순한 원자재와 농업품의 수출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성 하락은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다. 소련으로부터 원유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서구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소련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외화수입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재정을 투입한 복지 확충, 기술수입을 통한 경제성장, 수출증가, 건전재정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루었다면 동독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비민주성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목표와 이상과는 달랐다.

③ 부채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한계: 당시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었던 동독은 서구로부터 차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70년대 미국과 서방세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68)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9), pp.31-32.

이룩하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탕트와 저금리 덕분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서구의 은행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권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선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경향 즉 코르나이가 ‘수입에 대한 굶주림(Import Hunger)’ 이라고 명명한 현상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독일의 부채는 당시 동독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 20억, 1975년 100억, 1980년 279억 도이치 마르크로 증가하였다. 통일 후 서독의 자료에 따르면 1975년 88억 도이치 마르크에서, 1980년 236억 도이치 마르크로 급증하였다.⁶⁹⁾ 당시 당의 내부에서도 외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부채 그 자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호네커 서기장도 이와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네커는 청년 시절 독일 공산당에서 활동하였고 1937년 나치에게 10년 형을 선고받아 세계 2차 대전 종료 시까지 투옥되었던 정치적 자산 덕분에 그의 서방 수용정책은 수정주의라는 비판이나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⁷⁰⁾

부채를 통해서 몇 가지 기술과 소비재가 유입되었지만, 동독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는 이룩하지 못했다. 복지 확충과 콤비나트를 통한 제도개선만으로는 ‘관료적 조정 기제(Bureaucratic Coordination)’로 작동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었다. 단축된 노동시간을 효율적인 재조직화로 극복한다는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7년 동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90%의 노동자가 하루에 60-90분을 원자재 공급 문제, 기계 수리 문제, 각 부처 사이의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조율, 근로자들의 시간 준수 태도 결여 등으로 인하여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⁷¹⁾ 1971년 현재,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복지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했던 동독 정부는 소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동독의 지도부도 이러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69) Jonathan Zatin, *The Currency of Socialism: Money and Political Culture in East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70.

70) *Ibid*, p.63.

71) Mark Allinson, “More form Less: Ideological Gambling with the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Honecker’s GDR” *Central European History* 45 (2012), pp.115-116.

있었다. 호네커는 “1973년 20억 마르크의 부채는 현재 추세로 진행된다면 1980년 2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동독의 최고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 신호를 묵살하였다. 호네커 정부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담당하였던 귄터 미탁(Günter Mittag)은 자신이 여러 차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호네커 서기장에게 제시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 특히 1970년대 냉전이 진행 중이고 체코와 폴란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복지의 축소는 정권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1989년이 아닌 1970년대에 체제가 붕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²⁾

정리하면 동독 정부는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급진적 추격 전략을 모색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복지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두 정책 모두 지도자의 몽상에 근거하였으며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비록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체제 보다는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하였지만, 최고지도자의 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았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동독 지도부의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한 동독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부채주도 성장’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시기에 확립된 경제 노선과 사회복지정책은 세부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할 때까지 그 큰 틀은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

72) Günter Mittag, *Um jeden Preis. Im Spannungsfeld zweier Systeme* (Berlin:Aufbau-Verlag 1991),pp.58-64. http://ghdi.ghi-dc.org/docpage.cfm?docpage_id=1770 에서 재인용.

2. 데탕트의 영향과 동방정책의 호응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전-지구적인 데탕트 분위기와 이와 맞물려서 진행되었던 서독의 동방정책은 동독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동방정책은 동독이 붕괴하는 시점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독일을 둘러싼 국제정치 전반을 논하기보다는 향후 동독의 정책변화와 내부의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였던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1) 데탕트와 동방정책

서독의 동방정책은 서독과 동독 사이의 화해와 협력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양독간의 협력 이전에 미소관계와 서독과 소련의 관계에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신호는 닉슨 독트린이었다. 베트남전에 개입하여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였던 미국은 공산권과의 대결보다는 평화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은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1970년 모스크바 조약,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75년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 조약으로 연결되었다.

닉슨독트린 이후 서독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민첩하게 포착하였다. 1969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브란트와 그의 특별보좌관 에곤 바르(Egon Karl-Heinz Bahr)는 동서독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의 승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1969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소련 측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 에곤 바르는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방문하여 서독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하였으며 소련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1969년 크리스마스에 소련 측이 밀사를 파견하여 서독과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에곤 바르가 1970년 1월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불가침 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조율하였다. 당시 소련 측은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서독은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하였다. 소련은 서독의 루르 가스(Ruhr-gas)사와 향후 20년간 52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1970년 기준 25억 서독 마르크 상당의 금액이었다. 서독까지 파이프 연결을 위해서 소련에 12억 서독 마르크의 차관을 승인하였고 본(Bonn) 정부가 이를 보증하였다.⁷³⁾ 소련과의 협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빌리 브란트와 빌리 슈토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동독은 자신들을 독립된 별도의 국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서독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건이었다.

비록 동독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독과 소련의 관계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① 양국이 국제적 평화와 데탕트를 유지하며 유럽의 발전을 도모할 것 ② UN 헌장에 따라 무력사용을 지양할 것 ③ 현재의 국경선이 유지되어야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오데르-나이세 선을 유지) ④ 본 조약은 다른 양자/다자간의 조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 현재의 조약은 승인의 대상이며 본에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발효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모스크바 조약은 서독의 의회로부터 곧바로 비준 받지는 못했지만, 유럽 데탕트의 큰 돌과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빌리 브란트는 이러한 동력을 보다 가속하여 본격적으로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서독의 에곤 바르와 동독의 미하엘 콜이 양국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1971년 9월 승전국은 동서독 정부의 동서베를린 및 양국의 교통·인적교류에 대한 협상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향후 두 독일 사이의 관계 개선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동서독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소련이 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의 작성과 검토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하였다.⁷⁴⁾ 소련의 개입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 독일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동독 측은 지난번처럼 통일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물리치기 위하

73) 테니스 바크·데이빗 그레스, 서지원 역, 『도이치현대사3』 (서울: 비봉출판사, 2004), pp.41-42.

74) M.E. Sarotte, *Dealing with the devil: East Germany Detente, and Ostpolitik, 1969-1973* (Chapel Hill &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140.

여 자신들을 서독과 관계없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서독측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소련이 개입하여 동독의 양보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4조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권력이 각자의 영토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라는 6조의 절충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소련이 양독 관계에 개입한 까닭은 국제정세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소 분쟁이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1972년 2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맺고 불가침조약을 선언하자 소련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다. 따라서 서독의 의회에서 모스크바 조약을 통과시켜 서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시 소련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였다. 이 상황 가운데서 소련은 동독이 서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계속 주장하여 회담 자체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불협화음을 봉합하였던 두 독일은 기본합의서 7조(“경제·학문·기술·통행·법률부문의 교류, 우편·전화·보건·문화·스포츠·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에 따라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동독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73년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독일 사이의 관계 개선은 단순히 동·서독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 서독, 소련, 미국이 큰 틀에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데탕트가 진행될 수 있었다.

동서독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냉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은 바로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이루어진 헬싱키 조약이었다. 사실 이는 소련이 예전부터 계획하였던 사안이었다. 1972년 3월 닉슨-브레즈네프 정상회담에서 소련과 동유럽이 상호균형군비감축(MBFR)협정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NATO 회원국들이 CSCE에 참여하는 것을 합의하였다.⁷⁵⁾ 소련이 이처럼 CSCE를 적극적으로 조직한 까닭은 2차 대전을 통해 획득한 동유럽 국가권에 대한 헤게모니를 공식적으로 승

인받고, 장기적으로 소련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구축하며,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함이었다.⁷⁶⁾ 최종적으로 총 35개의 국가가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시 동독은 소련의 지지뿐만 아니라 자신들 나름의 정치적 아젠다가 있었다. 이 회의를 활용하여 서독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독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받는 것을 저지하고 자신들이 독립적인 주권국임을 홍보하고자 하였다.⁷⁷⁾

정치·군사 이슈는 바스켓 I, 경제·환경 이슈는 바스켓 II로 분류하여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 측은 인권 관련 이슈인 바스켓 III를 최대한 축소시켜 개별 국가의 법과 관습에 종속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를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 그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했다. 구체적으로 ‘신념(belief)’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조(faith)’를 고집하였다. 하지만 서방권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소련은 UN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한다는 타협안을 수용하였다.⁷⁸⁾ 당시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지도자들은 군사·경제적인 요인을 보다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또한, 서구의 요구대로 사회의 부분적인 자유화는 허용하였지만, 시민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⁷⁹⁾ 하지만 장기적으로 헬싱키 조약은 시민사회에 대한 공산정권의 개입을 약화하였으며 자유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였다. 이 조약은 또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자유화와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변화를 위한 역동적인 힘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⁰⁾

75) 우평균, “CSCE참여국의 전략적 이익과 협상 경과: 소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3권 제2호 (2008), p.79.

76) *Ibid.*, p.81.

77) Federica Caciagli, “The GDR in the early CSCE process” In Andreas Wenger ed., *Origins of the European Security System: The Helsinki process revisited, 1965-75* (New York: Routledge, 2008), pp.114-115.

78) 김수암,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의의와 특징” 『평화연구』 제 17권 1호 (2009), pp.47-48.

79) 서구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졌다. 1974년 6월 헨리 키신저는 헬싱키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 의제를 가지고 소련에게 지나치게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안보협력을 통해서 서방의 가치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였지만, 소련에서 서방신문이 판매된다고 해서 소련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약 50년은 더 지속할 것”이라며 이들을 설득하였다. 김수암, 앞의 글 p.42.

80) 김진호, “1969-74년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CSCE” 『평화

2) 동독의 동방정책 수용과 통제의 완화

동독이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응했던 까닭은 그들의 선의에 기댄 것이 아니라 대독관계 개선을 통한 내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소련의 압박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호네커와 동독 지도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즉 ‘접근을 통한 변화’ 라는 슬로건에 숨겨져 있었던 사회적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독이 내세우는 화해와 평화라는 것은 사실 슬로건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독 지도부는 경제 협력을 통해 소비재 공급을 개선하여 체제를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길과 교류의 확산으로 체제가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 사이에서 고민하였다.⁸¹⁾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서독의 손을 잡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서독과의 관계 개선이 동독의 국내정책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안보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핵무기가 이미 배치된 상황이었다. 서독에 배치된 NATO군의 무기 체계보다는 약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1953년 베를린,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 프라하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소련은 무력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였고 이를 계기로 ‘브레즈네프 독트린’ 을 선언한 상태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강화하면 서구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헬싱키 선언과 문화적 자율화는 서독과의 관계 개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슈타지와 경찰 병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이탈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품을 수입하여 주민들을 달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서구의 차관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고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 있었

연구』 제17권 1호 (2009), p.237.

81) Merrylin Thomas, “ ‘Aggression in Felt Slippers’ : Normalisation and the Ideological Struggle in the Context of Detente and Ostpolitik” In Mary Fulbrook ed., *Power and Society in the GDR 1961-1979: The Normalisation of Rule?*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09), pp.42-43.

다. 당시 동독 지도부는 서독의 손을 잡은 결과물로 여러 서방세계와 교류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1973년 기본합의서가 서독의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부터 동독은 세계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을 수 있었다. 이것은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서독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할슈타인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수용은 해외의 차관 및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이라는 외부의 승인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희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동독 주민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호전적인 것은 아니었다. 전쟁의 경험과 서베를린을 둘러싼 여러 갈등은 동독 주민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였다. 물론 서독 및 서구와의 교류 확대에 인하여 동독 정부는 이들을 예전처럼 적으로 부를 수 없었다. 또한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을 허락하여 이산가족의 마음을 달래 주기도 하였다. 냉전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기도 하였다.

물론 동독 측도 국내외적으로 점증하는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권터 기욤 간첩 사건이었다. 브란트의 비서였던 권터 기욤이 사실은 동독 슈타지의 첩보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골자였다. 물론 당시 국내정책의 미흡함, 사회민주당의 내부갈등, 기민연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 브란트의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권터 기욤이 간첩일 수 있다는 첩보가 브란트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브란트 수상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결국 대형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74년 5월 6일 빌리 브란트는 수상직을 사임하였다. 윌리엄 스마이저는 “호네커의 입장에서 브란트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브란트의 사임은 호네커 자신의 인민들과 모스크바에게 호네커가 갖고 있던 일부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어떤 다른 서독인도 브란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고, 호네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브레즈네프에게 브란트만큼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⁸²⁾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스마이저는 동독 내부뿐만 아니라 소련에까지 증대되는 브란트의 영향력을 호네커

82) 윌리엄 스마이저, 김남섭 역, 『알타에서 베를린까지: 독일은 어떻게 분단되고 통일되었는가』 (서울: 동녘, 2019), p.523.

가 매우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작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독의 브란트 사임 공작은 소련과의 갈등을 감내하면서 진행한 것이었다. 에곤 바르는 브란트의 사임이 소련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에곤 바르와의 통화에서 “호네커가 크렘린과 본의 관계가 개선된 후에 스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개인적으로 거의 모욕으로 받아들였다며 호네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브란트의 퇴진은 브레즈네프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그의 유럽 정책을 힘들게 하겠지만 신뢰로 쌓은 자산을 간단히 팽개쳐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⁸³⁾라고 회고하였다. 이처럼 동독의 입장에서 빌리 브란트라는 인물이 여러모로 큰 선물을 가져다주었지만, 그가 미국이나 소련, 동독 내부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동방정책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정책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정책의 명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먼저 동독 지도부에게는 서독의 손을 잡아 효율성 낮은 사회주의 체제와 까다로운 주민들을 1989년까지 통제하여 가까스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이전까지 1953년과 같은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폴란드의 민주화 바람을 가까스로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독 지도부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서독과의 교류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되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던 사회 영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⁸⁴⁾ 또한,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많은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주민들은 서구의 소비자의 삶을 더욱 동경하고 정부에게 이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동독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라면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 과업에 실패하였으며 눈이 높아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소비재 수입을 위해서 서독과

83) 에곤 바, 박경서, 오영옥 역,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서울: 북로그컴퍼니, 2014), p.178.

84) David Childs, “The SED Faces the Challenges of Ostpolitik and Glasnost” David Childs ed, *East Germany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1989), p.9.

서구권에 대한 부채만 증가하게 되었다.

서독에게 동방정책의 득과 실은 다음과 같다. 동독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공산당과 억지 주장을 수용하느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민들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물론 경제적 이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동서독 기본조약과 헬싱키 협약을 통해서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동독 내부의 시민사회가 예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당시 동독의 전반적인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다음 절에서는 서독의 동방정책, 지구적 데탕트, 동독의 경제발전 전략 등이 결합됨으로 생성된 작은 틈새에서 동독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960년대	1970년대
물리적통제능력	중 (약화추세) 국영기업의 분권화 -	중 (강화추세) 국영기업의 집중화 +
자원제공능력	중 (약화추세) 자체 해결 -	중 (강화추세) 서독의 지원 +
상징적동원능력	중 탈스탈린적 사회주의 -	중 (약화추세) 탈스탈린적 사회주의 - 부분적 개방 - 평화추구 이미지 +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한 탈주방지/엄격한 냉전구조	동서독기본합의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헬싱키 협약

<표 2-2: 197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제2절 사회 영역의 성장과 갈등

앞 절에서는 1970년대 동독의 경제정책과 대외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부터 동독의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호네커의 경제사회통합정책, 동서독 기본조약과 헬싱키 조약이 동독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동독과 소련이 외부의 개입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들의 행동을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조약 체결 이전부터 동독 내부에는 사회주의 틀 안에서였지만 자유·권리·민주화를 요구하는 분산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동독은 다른 동구 사회주의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며 인권상황도 좋은 편이었다. 1970년대 이전부터 노조, 예술가, 지식인, 종교인 등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비록 그 세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탈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나름대로 국가와 갈등하고 있었다. 대내외적 정책의 변화는 동독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증폭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본 절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독에서 다양한 사회적 영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성장했으며 국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첫째, 동독의 사회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었던 다양한 주민의 권리는 무엇이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헬싱키 조약의 원칙과 호응하고 갈등하였는지, 또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었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정부정책과 대립하였고, 어떻게 국가의 정당성을 침식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둘째, 동독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동독의 교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장받아 활동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민주적 가치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셋째, 동독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당의 공식 노선이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어떻게 갈등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어떠한 매체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동독에서 보장되었던 다양한 주민의 권리

1) 사회주의 체제의 법과 인권

사회주의 국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주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스탈린체제의 가장 악랄한 특징은 공식적인 사법적 절차 없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국가기관이 구금 및 체포하며 심지어는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탈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산당이 무차별적인 폭력의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와 규율을 통해서 통치한다. 물론 동독의 사법제도에서는 개인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⁸⁵⁾ 하지만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동독 지도부는 독자적인 억압기구 설치를 통하여 소련으로부터 주민 통제권을 찾아오기를 희망하였다. 가령 국가안전부가 설치되기 이전 내무부의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K-5의 여러 활동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 당시 K-5는 소련 군정부의 명령서 201/47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용의자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나치 부역자들을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소련군 그리고 그 밑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국가기관에 의한 영장 없는 구금과 체포는 동독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 당시 부르주아적인 변호사들 심지어 사회주의 통합당에 우호적인 판사와 검사들 역시 이러한 명령안이 ‘법의 정신’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이 명령서에 반발하였다.⁸⁶⁾

85) 분명 동독의 정치제도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성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가령 사회주의 통합당이 법관의 선출과 법원조직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법관들이 사회주의 통합당의 당원이었다. 동독의 검찰은 ‘단일지휘의 원칙(Prinzip der Einzelleitung)’의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부처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즉 일선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여도 여기에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형사소추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구, 경제 기구, 노동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사회주의 통합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의회에서 임명하였다. 박원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예의 시사점”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2019), pp.31-34.

86) Jens Gieseke, *The History of the Stasi: East Germany's Secret Police, 1945-1990*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2014), p.27.

동독의 대통령인 빌헬름 파이크는 1952년 4월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동독의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물론 그는 스탈린에게 사회주의 건설이 창출해 놓은 민주적 공간에 적들이 침투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도(사실 서독에서도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암묵적으로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개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소련 군정의 경범죄 판결과 집행 방식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동독 감옥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스탈린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몰로토프 외상도 동독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⁸⁷⁾ 이 대화를 유추해본다면 동독 지도부는 정권 초기부터 법과 재판에 근거한 통제 체제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K5가 슈타지로 전환되면서부터 사회주의 통합당에 의한 통제가 본격화되었다. 스탈린의 대숙청 혹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최고지도자의 목인 하에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분출시켰다면, 동독에서는 대부분의 기간 슈타지를 통해 통제되고 제도화된 폭력을 사용하였다.⁸⁸⁾

동독 정부는 무조건적인 통제와 강압 정책을 취하면서도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였다. 가령 작업장 내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Konflikt-kommissionen)’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기관은 새로운 ‘사회주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2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는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시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 경영진 대표로 구성된 분쟁

87) “Record of Conversation of Leaders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W.Pieck, W.Ulbricht, and O.Grotewohl with J.V. Stalin” In Christian F. Ostermann and Malcolm Byrne eds, *Uprising in East Germany 1953: The Cold War, the German Question, and the First Major Upheaval Behind the Iron Curtain* (Budapest: Central European Press, 2001), pp.4-5.

88) 동독의 악명 높은 슈타지는 주민을 감시하는 억압적인 통치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조직 역시 자의적인 폭력을 남용하기 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하였다. 예컨대 2006년 개봉하여 많은 수상과 영예를 차지한 독일 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의 주인공인 비즐러(Wiesler)는 극중에서 냉혹한 슈타지 요원으로 등장한다. 당시 슈타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영화에서 비즐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고문하는 가운데에서도 비속한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관료적이고 상투적인 경어체를 사용한다. 물론 도청,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이 발생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독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개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노동분쟁을 주로 다루었지만, 1960년대부터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과거 지방법원에서 다루었던 사안들도 직접 다루기 시작하였다. 1963년과 1968년 사이 몇몇 실무적인 사안이 조율된 이후에, 이 위원회는 공식적인 사법제도로 통합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농촌 지역의 ‘중재 재판소(Schiedsgerichte)’와 함께 ‘사회법원(Gesellschaftlichegerichte)’으로 통합되었다. 기업의 법률 제도는 기업 속의 법률 제도로 변화하였고, 이 덕분에 동독의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사법기구의 행위자로 직접 참가할 수 있었다.⁸⁹⁾ 이러한 정책은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할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시키고 훈육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사회법원이 설치되어 단순 절도, 재물 손괴, 고성방가, 주택 월세, 이혼, 재산분할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1967년 약 5,700여의 사회법원이 운영 중이었으며, 1989년까지 총인원 56,917명이 전국 6,000여 법원에서 활동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한 달에 평균 3-5건의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하였다. 동독 정부는 이를 주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사법제도라고 선전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주민은 통일 이후 이 옛 제도를 그리워하였다.⁹⁰⁾ 주민들은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법치를 직접 실행하고 주권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민법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 특히 개인소유가 일정부분 허용되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영기업 사이의 갈등도 발생하였다. 다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법 조문을 기초로 하되 법원의 화해와 권고안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동독의 판례를 연구한 잉가 마고비츠의 연구에 따르면 본케(가명)라는 남성은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규에 따라 이 시설을 소비협동조합에 위탁하였다. 1960년 15만 마르크를 대출 받아 수리를 하였고 한달에 2400 마르크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협동조합에게 운영권을 넘겼다. 당시 양측은 협동조합측이 호텔의 시설의 관리 및 유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1963년부터 천장에서 비가 새고, 창

89) Sandrine Kott, *Communism Day-to-Day: State Enterprises in East German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4), p.71.

90) Paul Betts, “Private property and public culture: A forgotten chapter of East European communist life” *Histoire@Politique* Vol. 7 No. 1 (2009), p.5.

들이 뒤틀리며, 낡은 전선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협동조합측은 시설관리의 책임이 원 소유자인 본케에게 있다며 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이었다.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법률상으로는 본케의 승리가 확실하였지만 재판은 4년이나 지속되었다. 하지만 본케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본케는 협동조합이 제시하였던 금액의 2배를 받고 시설을 판매하였으며, 양도세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마고비츠는 본케의 친인척을 직접 인터뷰하였는데 당시 본케씨는 국가에 대한 원한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보상금을 가지고 택시를 구입하여 운택한 삶을 살았으며 사회주의 통합당 당원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⁹¹⁾ 1960년대부터 동독에서는 개인의 사적소유권을 초법적인 형태로 제약하지 않았으며, 분쟁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매개되었다.

심지어 동독은 자신들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인권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체제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철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실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 1960년대부터 동독의 지도부는 동독의 경제발전 수준이 서독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이 격차를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통해 서독의 주민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미 1946년 아직 분단체제가 견고해지기 이전부터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인권이 없이는 사회주의가 없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 색채를 지우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 통합당은 사민당의 구호를 뒤집어 더욱 더 강력한 ‘사회주의 없이는 인권이 없다!’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당시에는 사회주의 통합당이 빈번하게 유엔의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세계인권선언문과 유엔의 인권기구를 사회주의 진영의 동맹기구이며, 선언문 조항은 동독이 성취한 사회주의 속에 이미

91) Inga Markovits, *Justice in Lütitz: Experiencing Socialist Law in East German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38-39.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인권과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가와 대립하기 전까지, 동독 당국은 UN 세계인권선언이 동독의 사회주의 내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직후부터 동독이 무너지기 전까지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동독에서 개최되었다.⁹²⁾

1959년 동독은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반-제국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권을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서독에서 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된 것, 서독의 재무장화에 대한 반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제 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사회주의적 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사실 이러한 선전들이 국제사회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동독의 정치지도자와 지식인들은 동독이 진정으로 인권증진이라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⁹³⁾ 특히 동독은 세계인권선언문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의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홍보하였다. 특히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약의 11조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12조를 근거로 사회주의 체제가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⁴⁾

1972년 11월 8일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도 동독에서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서독 기

92) Ned Richardson-Littl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East German y: Socialist Appropriation and Dissident Contestation, 1948-1989” *Zeitgeschichte* 2018년 12월 7일.

93) Ned Richardson-Little, “Between Dictatorship and Dissent: Ideology, Legitimacy, and Human Rights in East Germany, 1945-1990” *Bulletin of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56 (2010), pp.70-75.

94) Paul Betts, “Socialism, Social Rights,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East Germany” *Humanity* Vol. 3. No. 3 (2012), p.412.

본조약의 제2조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목표와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 자주, 영토보존의 존중, 인권보호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을 지향한다.”며 인권보호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원칙이 확정된 상황 가운데 제7조에서 언급된 경제, 학문, 기술, 법률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동서독간의 기본적인 원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1975년 헬싱키 협정의 체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소련과 동독을 위시한 동구권 그리고 미국, 영국, 서독을 대표로 하는 서구권을 포함한 총 35개 국가가 서명한 헬싱키 협정의 제7조 ‘인간의 권리와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은 정치체제의 유형과 상관없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자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의 보장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과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헬싱키 협약의 전문은 당의 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칠란드에 실렸다.

동독 주민들은 정치사회의 변화를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1975년 개정된 동독민법 책자는 당시의 베스트셀러로 약 200만 부가 판매되었다. 당시 전체 인구가 1,670만 명이었던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숫자였다. 주민들은 민법의 내용들을 읽고 분석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도 하였다. 이 글의 후반부 소비자 사회주의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법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에게 탄원서를 보내 불편사항(주로 생활과 관련된 사항)과 고충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다.⁹⁵⁾

하지만 동독에서의 인권과 권리는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따라 수립된 서구 의회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담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과 친화적인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삼았고 이에 부합하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가령 동독의 어린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집단주의를 경험하였다. 집단적 배변 시간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에는 마지막 아이가

95) *Ibid.* pp.419-421.

불 일을 다 볼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일어날 수 없고 변기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동독의 집단주의는 봉건적이거나 전통적이지는 않았으며 뒤르켐이 전통사회를 묘사한 ‘기계적인 연대’라는 개념과 거리가 멀었다. 동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가장 깊은 개인주의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이를 해체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의 주권과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집단주의를 실시한 것이었다.

2) 성 평등과 섹슈얼리티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 여부와 그 사회의 민주성을 판독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여성과 섹슈얼리티(性)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야말로 인간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여성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이유와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섹슈얼리티의 향유를 개인주의의 절대적인 지표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성에 대해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의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형성되었다면 분명 개인주의의 건강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섹슈얼리티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정치·사회 구조는 개인주의와 분명 대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성’에 대한 담론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권위주의적인 독재국가에서 훨씬 억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동독에서의 성의 담론은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진보적이었으며 때로는 민주적인 모습도 보였다.

사회주의 통합당은 데탕트와 동방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자본주의적인 ‘여성미’가 아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여성미’를 실현하는 실험을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은 생산영역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남성과 평등하게 일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여성미를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을 성 평등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젊고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탈피하는 것이 인간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라고 믿었

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동독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반인들 보다는 통통하지만 완전히 비만은 아닌 중년여성들이 패션모델로 등장하였다. 1968년의 한 소녀는 “비록 나는 날씬하지는 않지만 (19살, 165cm, 73kg) 현대적인 의복을 입고 싶다.” 는 사연을 TV에 보내기도 하였다. 당 지도부도 일반적이거나 통통한 몸매를 가진 여성들도 세련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질 좋고 다양한 종류의 의류들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통합당과 여성들의 상당히 진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빅 사이즈 모델과 이들의 패션들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는 못했으며 날씬한 여성 모델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대체하지 못했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몸을 사회적으로 승인하여 여성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회주의 내에서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동독은 히틀러 통치 시기부터 사회에 만연하였던 섹슈얼리티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이를 지속시켰다. 동독에서는 인간의 육체에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혼전 성관계를 단순하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간주하였다. 다만 동독 측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착취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고유한 열망과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사회주의 동독이 더욱 더 적합한 체제라는 점도 강조하였다.⁹⁷⁾ 이와 같은 공적담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통합당의 지도부는 섹슈얼리티의 확산을 달가워하지는 않았다. 육체관계를 금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동시에 정신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육체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후반 동독에서는 이미 ‘나체주의(Freikörperkultur, FKK)’ 혹은 ‘자연주의’ 가 상당히 유행하였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정부는 해변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관을 배치하여 통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하위문화 혹은 일종의 대중적인 스포츠로 여겨지기도 하였다.⁹⁸⁾

96) Judd Stitzel, *Fashioning Socialism: Clothing, Politics, and Consumer Culture in East Germany* (Oxford and New York: Berg, 2005), pp.60-63.

97) Dagmar Herzog “East Germany’s Sexual Evolution” In Katherine Pence and Paul Betts eds, *Socialist Modern: East German Everyday Culture and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p.73.

동독에서 나타난 성의 개방성은 서구의 성 담론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는 포르노를 비롯한 서구의 성 문화가 지나치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동독에서도 육체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잡지를 제작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누드촬영은 실내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에서 촬영되었으며 나체를 자연과 연계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그리고 동독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을 당시 서독의 포르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동독 역시 이와 유사한 잡지인 ‘Sexclusiv’ 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잡지에서 조차 성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나체의 여성과 함께 나체의 남성도 같이 출연시키기도 하였다.⁹⁹⁾

이처럼 개방적인 성의 담론은 여성의 권리 증진과 여성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동독에서는 1972년 3월 9일 임신중절을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서독보다 더 빨리 입법화된 것이었다.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안은 동독 의회역사에서 최초로 만장일치가 아닌 형태로 통과되었다. 14명의 의원들은 반대를 8명의 의원들은 기권을 표명하였다. 동독에서 선포된 법안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 또한 흥미롭다. 역사학자 도나 하쉬(Donna Harsch)는 1960년대 임신중절 허가를 위해 여성들이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하였다. 탄원서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 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었다. 많은 미혼모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이타성과 호혜성에 호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인의 원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 낙태를 요구한 남성은 “나는 의사의 특권을 대신하여 보다 건강한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합니까?” 라고 탄원하기도 하였다.¹⁰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독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 역시 개

98) Mark Fenimore, *Sex, Thugs and Rock ‘N’ Roll: Teenage Rebels in Cold-War East Germany*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07), p.29.

99) Justinian Jampol, *Beyond the Wall: Art and artifacts from the GDR* (Cologne: Taschen, 2014), p.371.

100) Donna Harsch, “Society, the State, and Abortion in East Germany, 1950-1972”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2 No.1 (1997), pp.75-76.

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공적인 논의가 완전하게 장려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의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



Bundesarchiv, Bild 183-1985-0817-002
Foto: Weisflog, Rainer | August 1985

<그림 2-2: 콧부스의 누드비치 1985년>

출처: Deutsche Bundesarchiv Bild 183-1985-0817-002, Cottbus, FKK Strand am Schwielochsee by Rainer Weisflog

2020년 현재 한국에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낙태와 여성의 권리가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임신중절과 여성의 권리 주장은 이미 독일의 운동가들에 의해 논의된 적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일찍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 공산당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것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창시자인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1840-1913)의 기여를 들 수 있다. 그는 『여성과 사회주의』라는 저서에

서 여성해방운동을 사회주의운동과 연계시켰고, 사회주의제도와 노동해방 그리고 가사기구의 발전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의 지나친 계급적 접근법은 여성이 겪는 실질적 차별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여성운동의 지도자인 클라라 체트킨 (Clara Zetkin, 1857-1933)의 기여를 들 수 있다. 당시 사회민주당원이었던 체트킨은 독일이라는 영토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운동을 범-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세계 여성의 날’을 제정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그녀는 버지니아 울프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중산층 여성 중심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치가 집권한 1933년 박해를 피해 소련으로 피난을 갔으며 그해 소련에서 사망하였다. 동독 수립 이후 그녀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웅으로 칭해지기도 하였다. 동독 전역에 체트킨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녀의 초상은 동독의 10마르크 화폐에 등장하였다. 그녀를 기념한 목적은 단순히 한 인물을 영웅화 시키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다. 체트킨을 통해 여성해방과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¹⁰¹⁾ 이처럼 독일에서 장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유산은 당시 시점에서 동독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많은 이들에 의해 호명되었고, 이는 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였다.

101) 하지만 동독의 공식적 담론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성 차별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는 여성이 지고 있는 이중의 부담이었다. 여성들은 노동자의 역할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부담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져있었다.



〈그림 2-3: 동독의 10마르크 화폐,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

둘째, 독일 나침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들 수 있다. 소련군의 베를린 점령 과정에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 물론 독일의 소련 침공 시 독일군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학살과 성범죄를 자행하였다. 이처럼 폭력이 반복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다. 소련의 독일 점령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부는 군인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¹⁰²⁾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한 낙태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간 피해자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최소 1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베를린의 노이쾰른(Neukölln)구의 경우 1945년 6월부터 1946년 사이에 995건의 낙태시술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당시 형법 218조에 따라 낙태가 금지되었지만 2차 대전 막바지에는 소련군에 의한 강간 때문에 이 법률이 유명무실해졌다.¹⁰³⁾ 그리고 사회는

102) 유고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자행되는 여러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질라스의 답변에 대해서 스탈린은 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당신은 당연히 도스토옙스키를 읽어 보았겠죠? 그러면 아마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황폐해진 스탈린그라드부터에서 수 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오그라드에서 싸우는 군사들을 생각해 봐요! 그들은 동지와 전우의 시체를 넘어야 합니다. 한 공군소령이 여성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이때 의협심이 강한 엔지니어가 나타나 그녀를 보호하려고 하였다고 하더군요. 소령은 ‘후방의 두더지 같은 녀석!’ 이라고 외치며 그 예의바른 엔지니어를 총으로 쏘 죽였답니다. 그 소령은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어떤 영문인지 나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고 그 소령을 풀어주어 다시 전방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그 소령은 우리 군대의 영웅중의 한 명입니다. 누군가는 군인들을 이해해야만 해요. 붉은 군대는 결코 이상적인 존재들만은 아니죠.” Milovan Djilas, *Conversation with Stalin*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2), p.110.

103) Lucy Ash, “The Rape of Berlin” BBC. 1st May, 2015 출처: <https://www.bbc.com/ne>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동독은 ‘평등’에 대한 이상을 실천하려고 나름 진지한 시도들을 해왔다. 특히 여성의 평등과 개인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전쟁 이후 노동력이 부족했던 동독은 여성의 노동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미 나치시대의 전시동원을 거치면서 여성의 동원이 지속된 행태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되었다. 과거 나치 시기 열네 살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 및 과부들에게 매월 하루 ‘집안일의 날’로 선정하여 유급휴가를 주었던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동독에서는 이것이 과거의 낡은 유산이며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간주하여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를 초래하였으며, 국가에 실망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¹⁰⁴⁾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동독 노동법에 따라 1972년부터 출산 전 6주, 출산 후 12주 출산휴가를 보장받았다. 1977년부터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20주의 출산 휴가를 얻게 되었다. 제8차 당 대회 이후부터 1,000 동독마르크의 출산 지원비를 지급하였고, 모유수유자의 경우 별도로 월 10마르크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였다.¹⁰⁵⁾

다만 동독에서의 개방적인 성 문화가 수립된 요인은 사회주의가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독일의 전통과 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동독과 동일한 성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였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문화가 보다 강력하게 남아있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남성이 여성들과 잘 어울리는 것과 집안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상적이었다.¹⁰⁶⁾

ws/magazine-32529679 최종검색일: 2021년 1월 6일.

104) Donna Harsch, *Revenge of the Domestic: Women, the family, and communism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110.

105) 정재훈·박수지,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p. 97.

106) Dagmar Herzog “East Germany’ s Sexual Evolution”, p.91.

3) 합리적 소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갈등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역사가인 마르크 블로흐의 구절을 인용하여 단순한 경제적 요인만을 가지고 특정 사회를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블로흐는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거상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들이 거래했던 상품들, 예컨대 의류, 향신료, 그들이 독점적으로 거래하였던 구리, 수은, 명반 혹은 왕들과 황제의 은행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인가? 홀베인이 거상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거상들이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또한 중세 기사들이 그들의 영주에게 보인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기사들의 신앙을 알아야만 한다.” 고 하였다. 이에 더해 기어츠는 “사회활동의 조직이나 제도화뿐만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관념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¹⁰⁷⁾

이와 같은 기어츠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동독의 소비자 문화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퇴화와 소비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붕괴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붕괴직전까지 동독의 재정상황은 좋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 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다른 사례인 북한과 베트남과 비교한다면 동독 주민들은 훨씬 더 풍족한 사회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사실 사회주의 동독은 전쟁 이후의 혼란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비록 기호품은 조금 부족하였지만 기본적인 식량은 충분히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동독은 이미 스스로를 근대적인 소비자로 인식하였던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타운센드는 “자원이 부족하여 그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여겨지는 영양섭취, 사회활동, 생활환경에 미달되고, 그 사회의 평균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개인, 가족, 집단 등은 빈곤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⁰⁸⁾며 빈곤의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속성을 제시한 바 있다. 동독의 붕괴 당시 동독 주민들의 비교대상은 서독과 서유럽이었다. 따라서 사회

107)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p.361-362.

108) Peter Townsend,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Middlesex and New York: Penguin Books, 1979), p.31.

주의 체제가 서독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동독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동독 주민의 소비자 정체성과 욕망이 사회주의 통합당과 어떠한 마찰을 빚었으며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소비자의 의미와 권리: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대체로 금욕주의적인 입장과 친화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마르크스는 ‘물신주의(Commodity fetishism)’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품이 거짓된 욕망과 서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위치 및 관계가 하락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물인 상품에게 인간이 종속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경계하였던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욕망에 기반을 둔 소비문화를 환영하지 않았다.

전쟁 이후 소련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을 무렵, 동독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상이한 두 모습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비이성적인 시장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점철된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초근대적인 대기업들이 최전선에서 전 세계적 착취를 일삼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이 비효율성과 탐욕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인 소비와 소비재 생산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당의 정치국위원인 프레드 윌스너(Fred Oelßner)는 “사회주의의 경제의 목표는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주장하였다.¹⁰⁹⁾ 이러한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 전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동독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였다.

하지만 이미 스탈린 생전에도 동독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소비문화와 중산층 중심의 문화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스탈린은 동독 지도부와의 면담자리에서 “전문기술자들은 지적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파트와 고급가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해 받

109) Mark Landsman, *Dictatorship and Demand: The Politics of Consumerism in East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29-30.

지 않고, 무엇인가 쓸 수 있는 편안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책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술자들이 당신의 나라를 떠날 뿐만 아니라 젊은 기술자들도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기술자는 일반 노동자의 2-3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4배까지도 받지요. 학자들의 경우 한 달에 1만 2000루블 가량 받습니다. 이것들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전의 낡은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¹¹⁰⁾ 즉 스탈린체제의 말기의 모습은 기존의 평등을 강조하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설립하였고, 강력한 독재자인 스탈린이 통치하고 있었던 소련에서도 물질적 보상 없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물며 바이마르 공화국과 고도의 자본주의를 경험하였던 동독 주민들을 소비자가 아닌 사회주의적 금욕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사실 동독을 포함한 기타 동유럽 국가의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성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가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비와 여가생활이었다.¹¹¹⁾

울브리히트 서기장 역시 동독 사회주의의 성패 여부의 기준을 ‘서독보다 더 많은 소비품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 로 삼았다. 그는 동독의 생산성과 소비수준이 단 시간 이내에 서독을 추월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선언하였다.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1963년 연설에서 당의 경제 관료들은 소비자들이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언짢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은 상품, 효율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전 법칙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¹¹²⁾ 하지만 서독의 급격한 재건을 지켜본 본 동독 주민들을

110) “Record of Conversation of Leaders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W. Pieck, W.Ulbricht, and O.Grotewohl with J.V. Stalin” pp.14-15.

111) 실제로 소련의 서기장 흐루시초프는 1959년 7월 모스크바에 방문한 닉슨 부통령과 전시용으로 마련된 부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많은 소련 주민들이 미국의 냉장고, 식기세척기와 텔레비전에 감탄하였고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흐루시초프 서기장은 소련이 단기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더 훌륭한 제품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112) Judd Stitzel, *Fashioning Socialism: Clothing, Politics, and Consumer Culture in East Germany*, p.15.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동독정부는 양질의 소비품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 까지도 상당히 많은 국가재정을 소비분야에 투입하였다. 사실 소비재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정책 방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분석할 북한의 경우에는 경공업 및 소비재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고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 영역에서 소비자의 정체성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는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소비품은 항상 부족하였고 계획경제를 통해 가까스로 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매력적인 서구의 제품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동독에 소개되었다. 생필품의 실질적인 부족과 새롭게 주입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품고 있었던 동독의 주민들은 신문, 매체, 탄원서 등을 통해 정부에게 자신의 의견(주로 불만족)을 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은 영화 『굿바이 레닌』에서 주인공 알렉스의 어머니인 크리스티 안네가 너무 작게 디자인된 옷에 불만을 표현하면서 담당 부서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장면일 것이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지만 이러한 탄원서는 동독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예전부터 백성들이 군주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공동결정과 참여’라는 형태로 재조직되었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동독은 이 탄원서를 통해서 주민의 동향을 살핌과 동시에 수동적인 관료들을 자극할 수 있기를 원했다. 탄원서가 접수되면 4주 이내에 그 결과를 탄원자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다만 탄원서를 받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할지는 1975년 6월 19일에 제정된 탄원서 법안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¹¹³⁾ 소비품의 부족,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불성실한 애프터서비스, 주문한 트라비와 트라반트 자동차의 지연, 그리고 외화로만 구매 가능한 인터샵과 일반상점의 제품의 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독일의 슈퍼마켓과 매장에는 ‘고객의 목소리(Der Kunde hat das Wort)’라는 노트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113) Jonathan R. Zatlín, *The Currency of Socialism: Money and Political Culture in East Germany*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296.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칭찬과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으며, 담당 주인은 이것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만 했다. 당시 일반 소비자들은 신선하지 않는 빵과 과일에 대해서 불평하였으며 직원의 불친절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주권을 주장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국가는 소비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행위자이다. 따라서 소비품에 대한 항의는 주권과 개인의 권리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분명 동독과 유럽권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었던 민족의 해방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우월함을 토대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서독과 체제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존재는 동독지도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 까닭은 단순하게 소비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사회주의적이지 않는 삶을 욕망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동독의 주민들이 어떠한 물품을 욕망하였고 선망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② 패션: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동독 주민들의 생활 습속과 취향은 서독 및 서구인들과 거의 비슷했다. 베를린은 바이마르 시기부터 패션의 중심지였다. 다양한 의류회사들과 개인 의상점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파리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잡지를 발간하고 젊고 아름다운 모델을 활용한 화보를 발간하면서 전반적인 유행을 선도하였다. 게오르그 짐멜이 패션과 유행(귀속욕구와 분리욕구)을 탐구하였던 장소도 베를린이었다. 많은 의류제조와 도매산업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히틀러에 의한 박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위축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거주자와 대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민들까지도 베를린 패션의 화려함을 동경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의류 역시 일반적인 공장 작업복, 전통의상인 던들(dirndl)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주민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성복이 필요하였다.

특히 서독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서베를린지역의 상점들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동베를린 주민들이 의복을 구매하기 위해 서베를린 지역에서 쇼핑을 하였다. 동독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중앙계획경제로는 급변하는 유행의 패션을 따라 잡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중앙계획경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매우 단조로웠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동독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 하지는 않았으며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동독정부는 1952년 ‘국가패션원 (1957년 독일패션연구원 Deutsches Modeinstitut로 재편됨)’ 을 설립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복을 제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기관은 패션잡지를 발간하여 제품을 홍보하였다. 1956년부터 격월로 출간된 ‘취빌레(Sibylle)’ 는 동독의 ‘보그(Vogue)’ 였다. 아름다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잡지는 화려한 컬러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식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집단주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개인의 개성표출이 허락되었다. 동독 역시 과거 부르주아 계급의 의복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사회주의 체제에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간주하였다. 이들은 파리의 패션위크에 참여해서 서유럽의 트렌드를 파악하였으며,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끼리 별도의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의류공급의 다각화를 위하여 국영기업과 소규모 민영기업의 합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동독 당국은 과거 개인 패션숍을 운영하였던 디자이너 하인츠 보어만(Heinz Bormann)을 승진시켜 서구의 스타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양질의 의류 생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라디오 방송국은 하인츠 보어만을 ‘붉은 디오르(Dior)’ 라고 선전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지도부는 보어만에 대한 이와 같은 칭송과 그의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자칫 서구를 부각시켜 사회주의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보어만이 수정주의자로 몰리거나 반당 행위자로 몰려 축출되지는 않았다.¹¹⁴⁾

하지만 공급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질의 의류는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기 보다는 여전히 개인 사업장에서 생산되었다. 이 때문에 동독은 패션관련 산업을 당장 국유화(보어만의 의류회사는 1972년에 국유화되었다)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부족한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동

114) Judd Stitzel, *Fashioning Socialism: Clothing, Politics, and Consumer Culture in East Germany*, pp.63-68.

독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 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했고 언제 물품이 공급될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충동구매와 사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가격 역시 매우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독의 친척들로부터 소포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특히 몸에 맞는 사이즈를 구하기 힘들어서 동독 여성들은 항상 옷을 스스로 수선하였다. 동독의 지도부는 여성들의 바느질을 건전한 여가 생활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사실 이는 부족한 공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동독 정부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복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TV 프로그램은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방영하기도 하였으며, 의류품 부족에 대한 탄원서가 빗발치기도 하였다.

당시 동독의 패션디자이너들에게는 좋은 면직물이 부족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동독 정부는 다양한 합성 재료를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가죽대용 ‘레드론’, 합성섬유 ‘데드론’, 실크 및 면 대체품인 ‘프레젠트 20’ 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유행도 길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제품들이었다. 이러한 의류들의 품질이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통풍이 잘되지 않아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렸다.¹¹⁵⁾

가죽 재킷과 청바지는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던 물품이었다. 이 때문에 동독 정부는 약 100만 벌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의 청소년과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었다. 사회주의 통합당은 이러한 소비품의 수입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 자체 청바지 브랜드를 만들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실제로 ‘Wisent’, ‘Shanty’, ‘Goldfuchs’, ‘Boxer’, ‘El Pico’ 라는 동독 브랜드가 있었지만 이들 청바지의 품질과 디자인은 리바이스로 대표되는 서구의 제품을 뛰어넘지 못하여 인기가 없었다.¹¹⁶⁾ 동독 정부는 서독의 아디다스와의 계약을 통해 국가 대표 팀

115) Damiaans, Daphne. “Fashion Week in the GDR.” *CENTRALBERLIN Blog*, 29 Jan. 2018. 출처: www.centralberlin.de/blog/fashion-week-in-the-gdr/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116) Tanja Roppelt, “Special Exhibit: Jeans in Fromer East Germany at the Levi Strauss Museum” 출처: <https://levistrauss.com/unzipped-blog/2014/11/11/special-exhibit-jeans-in->

의 유니폼을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자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아디다스 제품을 수입하기도 하였다.¹¹⁷⁾ 리바이스와 아디다스를 선호하였던 청년층의 존재는 사회주의가 형식적인 이념이 아니라 강력한 소비문화로 작동되는 것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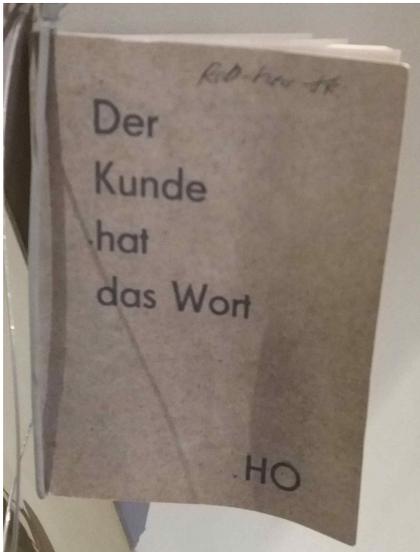
1980년대 들어 동독의 패션은 국제적인 트렌드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서구의 패션을 단순히 이해하고 참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당시 베를린 바이센제 예술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교수들과 학생들은 1980년대 후반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이런 것은 모두 거대한 정치사회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패션쇼를 열기도 하였다. 특히 Allerleirauh (모든 종류의 털)이라는 그룹과 Chic, Charmant und Dauerhaft (스타일, 매력적 그리고 오래가는) 그룹은 다양한 소재 (플라스틱, 샤워커튼 등)를 이용해서 독창적인 의류를 제작하였다. 이 단체는 펑크, 고스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과잉 성애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¹¹⁹⁾ 1984년경부터 이들은 자체적으로 패션쇼를 시작하였고, 독자적으로 화보촬영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당국도 결코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자비하게 탄압받지는 않았다.

former-east-germany-at-the-levi-strauss-museum/ 최종검색일: 2021년 1월 8일.

117) Mike Dennis and Jonathan Grix, *Sport under Communism: Behind the East German 'Miracle'*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2), pp.26-28.

118) Ute Scheffler, *Chic im Osten: Mode in der DDR* (Leipzig: Buchverlag für die Frau, 2010), p.174.

119) Susan Ingram and Katrina Sark, *Berliner Chic* (Bristol and Chicago: Intellect, 2011), p.80.



<그림 2-4: 동독의 소비문화와 패션> 동독의 축구유니폼, 1930년대 패션카탈로그¹²⁰⁾, 독일의 고객노트, 패션잡지 쥐빌레

120) 출처: Kunstbibliothek, Staatliche Museen zu Berlin

③ 주거와 식품: 1950년대 이후 동독에서는 식량부족 문제와 기근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되었다. 그리고 파괴된 주택의 재건이 한창 진행되었다. 동독정부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다. 1946년 주택법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전후 동독정부가 당면한 최우선의 정책 우선순위는 주택 복원 사업이었다.

일찍이 울브리히트는 ‘형식주의’ 예술 전체를 타락한 자본주의의 양식으로 매도하고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전후 건축가들은 불가피하게 웅장한 이미지를 주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베를린의 칼 마르크스 알레의 아파트들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울브리히트의 입장은 급작스럽게 변화하였다.¹²¹⁾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흐루시초프는 웅장한 이미지의 사회주의 건축 및 디자인 양식이 자원을 낭비하고 공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본주의 보다 더 형식적이다’ 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건축, 인테리어 모두에서 불필요한 장식은 사라지고, 실용성이 중시되었다. 소련에서도 전후 복구사업과 주택건설은 ‘더 빨리, 더 튼튼하게, 더 싸게’ 였다. 이는 동독에도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 주택보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주의로 비판받았던 단순한 박스형의 건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공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현재 동베를린 지역에 남아있으며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부터 개인의 사적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스탈린 형식의 주거공간에서는 주방과 침실을 확장시키는 것에만 큰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1950년대는 ‘가정이 사회주의적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라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었으며, 이후 건설된 독일의 아파트들은 거실을 확장시켜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¹²²⁾

121) Smow, “Bauhaus in East Germany: The Formalism Debate” 출처: <https://www.smow.com/blog/2016/12/bauhaus-in-east-germany-the-formalism-debate/> 최종검색일: 2021년 1월 8일.

122) Paul Betts, “Building Socialism at Home: The Case of East German Interiors” In Katherine Pence and Paul Betts eds, *Socialist Modern: East German Everyday Culture and Politic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pp.97-110.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료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미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했다. 소련의 변화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나치에게 폐교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바우하우스(Bauhaus)가 복권되었다. 건축과 디자인의 현대성, 단순성, 실용성과 색채의 분석을 통한 조합을 중시하였던 바우하우스의 전통은 동독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다. 당시 바이마르 건축대학 총장이었던 칼 알베르트 호스는 1976년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바우하우스의 유산이 향후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동독의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 예견하였다.¹²³⁾ 동독의 소비자들은 매우 깐깐하였기 때문에 질 낮은 상품을 대량으로 보급한다고 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 평등을 강조하였던 동독이었지만 여전히 집안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정부도 주민들 특히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구와 주방제품 제공에 적극적이었다. 비록 1950년대 형식주의 논쟁으로 인해 당시 바우하우스 출신의 마트 스타름(Mart Stam)이 축출되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동독 정부는 1972년 ‘산업디자인 사무소(Amt für Industrielle Formgestaltung)’ 를 개설하였고, 이 기관이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마케팅까지도 담당하도록 허가하였다. 특히 동독의 디자인 제품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어 정부는 이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고자 하였다.¹²⁴⁾

아울러 동독 정부는 주민들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서방의 상징인 코카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탄산음료 개발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료의 질뿐만 아니라 그 포장에도 심대한 공을 들였다.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손쉽게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던 동독의 젊은 학생들은 청바지와 코카콜라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심지어는 빈 코카콜라 병을 집안에 전시해 놓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코카콜라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일종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¹²⁵⁾ 특히 서독에 친척이 있는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서

123) Snow, “Bauhaus in East Germany: The Formalism Debate”

124) Deutsche Welle, “How East Germany influenced design” 출처: <https://www.dw.com/en/how-east-germany-influenced-design/a-19178444> 최종검색일 2021년 1월 08일

구의 초콜릿, 감자 칩, 음료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 맛에 길들여진 주민들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동독 정부는 골머리를 앓았다.

동독 정부는 이처럼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름 분주하게 노력하였지만, 주민들의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소비재를 생산할 능력도 부족하였고,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2. 교회와 사회주의의 갈등과 대립

여기서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교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종교집단은 어디에서나 자신들만의 강력하고도 초월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종교적 교리가 타종교나 현실 정치체제에 배타적일 경우 매우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청조 말기의 태평천국의 난, 조선 말기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면, 경제적 착취에 대한 사회의 반발심이 종교적 교리와 결합하여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동독의 종교정책은 크게 박해, 타협, 긴장된 공존 등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 동독의 교회는 사회운동세력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평화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 기독교 박해

동독 설립 당시 전 인구의 86% 가량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통합당은 단 기간에 기독교를 없애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교회를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949년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주의 통합당의 박해를 받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무신론적인 입장의 반영임과 동시에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 나치의 통치 기간 동안 일부 교회는 비협조적인 소극적인 저항을 하

125) Milena Veenis, “Cola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 Fantasies on Western Consumption” *Enterprise and Society* Vol 12. No. 3 (2011), pp.490-491.

였으나 전면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통합당은 이러한 교회의 수동적인 모습을 비판하였다. 또한 동독의 교회가 서독의 교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동독정부를 뒤집을 수 있는 위험한 반동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토지개혁과 집단화가 진행되었던 시절에 교회는 국가 정책을 좌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포츠담 근처 한 지구의 보고에 따르면, 1952년 당시 이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10%에 불과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구의 목사들은 불공정한 선거, 농부들의 체포와 농업 집단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시의 허약한 사회주의 통합당 지방조직으로는 교회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당원들의 24.4%가량이 기독교 신자였으며, 푸르스텐베르크(Furstenberg)는 42%, 앙거뮌데(Angermunde)의 경우는 70%의 당원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었다.¹²⁶⁾ 하지만 동독당국의 지속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신자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45년부터 약 40년 동안의 독재기간 동안, 60%가량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크리스틴 와플러의 연구에 따르면, 에르츠게브리게(Ertzgebirge)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통합당이 아니라 동독내의 기독교민주연합(CDU)을 지지하였다. 교회를 매개로 한 강력한 마을 네트워크는 사회주의와 종종 충돌하였다. 종교계의 교육기관에서는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가치들을 교육하였기에, 이를 둘러싸고 사회주의 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독의 교육부는 1953년 4월 29일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기독교계 교사들이 교육기관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 교사들은 1953년 9월 1일까지만 근무가 허락되었으며, 매우 모멸적인 방식으로 해직이유를 설명하였다. 가령 “제대로 된 교수방식을 습득하지 못한 당신의 비과학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의 계약을 1953년 8월 31일로 종료합니다.”라며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해직을 통보하였다.¹²⁷⁾

126) Corey Ross, *Constructing Socialism at the Grass-Roots: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1945-1965* (London: Macmillan Press, 2000), pp.64-65.

127) Kirstin Wappler, “The Limits of Politicization of the schools in the GDR: The Catholic Eichsfeld region and the protestant Erzgebirge-A Comparison” In Esther Peperkamp and Malgorzata Raftar eds, *Religion and the Secular in Eastern Germany*

1953년 1월 동독지도부와 교회의 관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독의 교회는 반체제적인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었다. 교회는 서독의 교회와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설교나 항의 편지 등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동독정부를 비난하였고, 때로는 동독주민에게 서독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당시 기독교 계열에서 가장 열성적인 조직인 ‘청년 공동체 (Junge Gemeinde)’에서 활동하였던 20-3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조치를 당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슈타지가 이 단체의 성직자들과 멤버들을 체포하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¹²⁸⁾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록 종교에 대한 탄압은 존재하였지만, 죄형법정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원칙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문화보급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고트홀트 레싱(Gotthold Lessing, 1729-1781)의 1779년 희곡 『현자 나탄』을 사회주의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이유는 그 작품이 유대인 억압 외에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곡의 배경은 제3차 십자군전쟁 시기이며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모티프로 한다. 이 극에서는 유명한 반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진리는 그것에 근거한 실천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살라딘의 여동생 시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들의 긍지는 기독교도라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미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인간적인 요소 말인데요, 그들이 그걸 좋아하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니까요. 그 종교의 창시자 때부터 쪽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게 그들에게는 행운이지요. 그분의 미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행운이지요. 그런데 웬걸, 미덕이라니요? 그분의 미덕이 아니라 이름이 온 세상에

1945 to the Present (Leiden and Boston: Brill, 2007), p.65.

128) “Memorandum from General Vasilii Chuikov, Pavel Yudin, and Ivan Il’chev to Georgii Malenkov Critically Assessing the Situation in the GDR, 18 May 1953” In Christian F. Ostermann and Malcolm Byrne eds, *Uprising in East Germany 1953: The Cold War, the German Question, and the First Major Upheaval Behind the Iron Curtain*, pp.84-86.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모든 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욱되게 하고 집어삼켜야 한다는 게지요. 그들에게 소중한 건 오직 그 이름, 그 이름뿐이에요.” 129)

이 작품은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가 지향하는 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통합당은 공연을 통해서 첫째, 교회 역시 사회적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참된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작품은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18세기에 출판되었을 때부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신교와 천주교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둘째, 사회주의통합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정책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도덕관이나 선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신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현세에 구현하는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회를 사회주의 헤게모니로 포섭하려고 하였다. 셋째, 히틀러 통치 시기 독일교회의 침묵과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연극은 나탄, 살라딘, 신전(temple)기사가 사실상 한 가족이라는 동화 같은 결말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도덕적인 존재는 유대인 나탄이며, 기독교인 신전기사는 비록 악인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로 그려졌다. 대주교는 인간미 없고 완고하고 야심만만한 인물로 등장한다.

동독 정부의 박해에 따라 기독교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통합당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였던 것이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예컨대 다른 사회주의권과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국가와 기업에서 일정한 지위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통합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회를 탈퇴해야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독정부는 기독교 의식들을 대체하는 의식들을 고안하였다. 종교의식이 아닌 장례의식을 만들었으며, 견진성사를 대체하는 ‘청소년 의식(Jugendweihe)’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의식을 하지 않거나 자유독일청년단 (Freie Deutsche Jugend)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급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¹³⁰⁾

129) 고트홀드 레싱, 윤도중 역, 『현자 나탄』 (서울: 지만지드라마, 2019), p.59.

2) 타협과 공존

이처럼 사회주의 통합당의 기본노선은 기독교 박해였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종 교회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50년대에는 교회를 동원하여 독일의 분단과 서독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였다. 분단의 극복과 평화를 강조한 이 운동은 동서독 양측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¹³¹⁾ 이처럼 사회주의통합당과 교회의 관계는 이중적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표명한 이상 이를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었다.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가 조금이라도 이완되어 국가가 사회 영역과 타협하는 태도를 보이면, 교회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동독에서 탈스탈린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박해정책도 상당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 내각에 교회부를 설치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브리히트는 1960년 10월4일 인민의회 연설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인도주의적인 목표는 모순되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땅에서는 평화’는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주의 이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³²⁾ 1968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는데 종교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종교인들은 과거에 사라졌던 종교의 자유를 복원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다.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 교회의 독자성이 완전하게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다. 개정헌법 39조 1항과 2항에는 “동독의 모든 시민들은 종교적 신념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회와 다른 종교적 공동체는 자신들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동독의 헌법과 법률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여 종교의 자유를 부분

130) 라이너 바그너, “교회, 동독 전환의 시발점이었나? 복한을 위한 합의” 2013년 8월 29일 평화문제연구소,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워크숍 발표문

131) John S. Conway, “The “Stasi” and the Churches: Between Coercion and Compromise in East German: Protestantism, 1949-1989” *Journal of Church and State* 36 (1994), pp.727-728.

132) GDR Academy of Sciences, *Information GDR: The Comprehensive and Authoritative Reference Sourc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xford: Pergamon Press, 1989), p.656.

적으로 보장하였다.

본래 동독의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인 ‘독일 복음주의 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의 소속이었다. 분단 상황에서도 동독의 교회들은 형식적으로 EKD의 산하(傘下)에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동독정부는 교회가 서독과 서방이 침투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와 교회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1969년 동독 교회는 EKD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독립적인 조직인 ‘동독개신교 연맹(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der DDR)’을 발족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브레히트 쇤헤어(Albrecht Schönherr)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양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쇤헤어 주교는 신학생이었을 당시 디트리히 본회퍼와 교류하였으며, 나치치하 당시 고백교회에서 활동하고 전쟁에도 참여한 종교인이었다. 쇤헤어 주교는 “우리는 사회주의 주변에 있는 교회 혹은 사회주의와 반대하는 교회가 아닌 사회주의 속의 교회를 지향한다(Wir wollen Kirche nicht neben, nicht gegen, sondern im Sozialismus sein!)”며 동독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동독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사회주의 속의 교회는 좀 더 나은 사회주의를 위한 교회를 의미한다. 즉 동독교회는 사회주의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판적 연대의 입장을 견지한, 사회주의 속의 교회였다.¹³³⁾ 이처럼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 동독 정부에 대항하지 않았고, 그 곁에 있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 타협을 통해 동독의 교회는 국가의 간섭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향후 여러 사회운동의 모체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교회의 독자적인 종교관이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영역과 종종 충돌하였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54년 가족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국가와 강하게 충돌했음과 동시에 이혼법안의 제도화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여성 단체와도 충돌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던 임신중절법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던 기독교민주연합이 인민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133) 고재길,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김희권 외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기독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2), p.88.

던지기도 하였다.

신학교육기관도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 나갔다. 베를린, 라이프치히, 그 라이프스발트, 로스톡, 잘레-비텐베르크, 예나 지역의 대학교에 신학부가 남아있었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할 수 있었다.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동독 붕괴의 촉매제 역할을 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크리스찬 뤼러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동독의 구 예나대학이었던 칼 마르크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¹³⁴⁾ 또한 베를린, 라이프치히, 나움부르크, 에르푸르트 지역에서는 사립 신학교도 운영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의 미테 지역에 위치한 교회기숙학교(Sprachenkonvikt)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 교회기관은 기독교 사상이나 신학과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였으며, 라틴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칼 바르트와 조직신학을 연구한 신학자 볼프 크뢰케(Wolf Krötke)도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하 활동가이며 이후 동베를린 시장에도 선출된 이력이 있는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 신학교는 당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으며 규모가 작은 비-인가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독일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¹³⁵⁾ 반체제 운동가이자 목사였으며,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냈던 라이너 에펠만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을 당시 그 자신이 디트리히 본회퍼와 도로테 쾰레의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만일 자신이 마틴 루터를 동경하는 정도의 마음만 가졌다면, 자신은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³⁶⁾

물론 이 시기에도 탄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231년에 완공된 라이프치히의 유서 깊은 건축물 파울리너 교회(Paulinerkirche)의 폭파다. 이 교회는 1968년 라이프치히 대

134)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 통일 15년』(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387-410.

135) Christoph Dieckmann “Eine feste Burg” Zeit Online 2013년 3월14일 출처: <https://www.zeit.de/2013/12/Pfarrhaeuser-Protestantisch-DDR-Revolution/komplettansicht> 최종검색일 2021년 1월 8일.

136) Dirk Philpsen, *We were the people: Voices from East Germany's Revolutionary Autumn of 1989*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3), p.63.

학의 증축을 명목으로 폭파되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통합당의 계략이었다. 당시 이에 반발한 많은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의 시위를 하였으나, 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네커 정권이 들어서도 교회와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1975년 체결된 헬싱키 조약¹³⁷⁾의 영향에 따라서 1978년부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더욱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교회를 사회주의화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교회 역시 사회주의 정부를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협약을 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은 강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포섭하려는 전략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예컨대 기독교의 교리와 사회주의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1983년 4월 22일 호네커 서기장은 재건된 바르트부르크 성을 방문하였다. 이 성은 과거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의 탄압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저술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성이었다. 이곳에서 루터가 사용하였던 방을 ‘루터의 방(Lutherstube)’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에리히 밀케, 게랄트 괴팅(Gerald Götting), 하인츠 아이클러(Heinz Eichler) 등 당의 핵심 인물들이 참여하였으며 교회부의 비서인 클라우스 기지(Klaus Gysi)와 베르너 주교(Bishop Werner Corpse) 등이 참여하였다. 호네커 서기장은 우리 민족의 휴머니즘적이고 진보적인 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들 대표하는 사회주의 통합당의 임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핵무기의 불지옥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세계문화 유산의 보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³⁸⁾ 심지어 1983년 루터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는 호네커 서기장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루터가 격상된 원인은, 토마스 뮌처의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정신이 사회에 받아들여져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되는 것을 사회주의 통합당이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당시 토마스 뮌처의 초상이 5마르크 화폐에 실려 있었을 만큼, 동독에서도 상징성이

137) 헬싱키 협정 7조에는 사상, 양심, 종교, 신앙 등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에 관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양심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38) “Festliche Wiedereröffnung der rekonstruierten Wartburg” *Neues Deutschland* 1983년 4월 2일 1면.

큰 인물이었다). 또한 보다 저명하고 존경받는 루터의 이미지를 사회주의와 연계시켜 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었다.¹³⁹⁾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루터의 신학이 혁명적이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⁴⁰⁾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존재하였다. 동독 지도부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독진영의 교회자금을 끌어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동독 정부는 1970년대부터 교회를 수리하고 재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72년 1월 4천400만 마르크를 개신교 측으로부터, 1천 500만 마르크를 천주교로부터 지원받았다. 물론 이러한 자금이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동독정부는 교회를 재건축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였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더딘 공정 때문에 동독의 교회지도자들이 호네커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할까 우려할 정도였다. 당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5천만 마르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측된다.¹⁴¹⁾ 요약하면 동독정부는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를 무리하게 뿌리 뽑기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주의 체제의 침식과 사회운동의 모체로서의 교회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자성을 부여받은 교회는 정치적인 목소리는 자제하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본래의 사명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교회 속의 자유로운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교회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¹⁴²⁾ 1970년대와 1980년대 동독

139) Robert Goeckel, "The Luther Anniversary in East Germany" *World Politics* Vol. 37 Issue No. 1 (1984), pp.112-133.

140) "East Germany finally embraces Luther" *New York Times* 1983년 5월 8일.

141) Berend Schaeffer, *The East Germans State and the Catholic Church, 1945-1989* (New York and London: Berghahn Books 2010), pp.188-189.

142) 당시 동독의 교회는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요아킴 가우크는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가시간이라는 이름 대신 수양회 또는 성서 수양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동독공산당(SED)은 1970년대 초부터 이런 종류의 활동을 신고하거나 허락받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활동을 신고하거나 허락받지 않아도 되었다. '수양회' 라는 명칭은 종교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양회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조직은 1927년에 조직되어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교회연구소(Kirchliches Forschungsheim)’와 1986년에 조직되어 운동을 시작한 ‘환경도서관(Umwelt Bibliothek)’을 들 수 있다. 교회연구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와 집회를 열었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1981년 신학교 학생들이 최초로 환경 이슈를 다룬 뉴스레터 ‘광선(Streiflichter)’을 발간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하였다.¹⁴³⁾ 환경단체들은 1983년 슈베린과 비스마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어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도 하였다.

동독 정부 역시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응하였다. 1981년 토지이용법, 1982년 수자원관리법, 1983년 핵발전관련법, 1984년 원자력안전과 방사능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환경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다.¹⁴⁴⁾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형식적이고 미흡하였다. 또한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경운동 진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11월 동독 당국은 ‘환경도서관’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인쇄용품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로 서독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이 동독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 당국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향력 있는 교회지도자였던 만프레드 스톨페(Manfred Stolpe)는 이러한 풀뿌리 운동을 지원하였다. 만일 정부가 환경도서관의 인쇄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의 주제를 한정 짓지 않았고 따라서 종교적 문제에만 국한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정치, 다양한 체제, 전쟁과 평화, 관용 등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문학, 불안, 용기, 비겁함, 적응, 자유, 복종과 불복종, 사랑, 성의 형식,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교회는 점차 국가가 배제하거나 터부시하는 주제들, 즉 학교 안에서의 군사교육과 훈련, 체르노빌 참사 이후의 원자력 이용, 환경문제, 인권과 시민권 문제, 핵 시대의 평화 문제와 씨름했다.” 요아킴 가우크, 손규태 역『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회고록: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증언하다』(경기도: 한울, 2018), p.151.

143) Merrill E. Jones, “Origins of the East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German Studies Review* Vol. 16 No. 2 (1993), p.241.

144) 사지원, “구동독의 시민환경운동” 『독일언어문학』 제 50집, (2010), p.278.

또 다른 인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쇄기를 돌려주었으며 체포된 7명을 신속하게 석방하였다. 이 사건 이후 동독 정부는 공개적인 데모 활동이 아닌 불법행위들에 대한 체포와 탄압을 자제하였다.¹⁴⁵⁾

환경단체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경우에 따라 서독과 여러 국제적인 조직들과 연대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가졌다고보다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미온적이고 무관심하였던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 실시되었던 운동의 역사는 전통이 깊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우발적으로 촉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던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평화운동’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의 전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역시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독교 신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 또한 동독 정부 역시 이들의 활동이 국익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폭력적인 서구 제국주의와 대비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주의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981년 평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화의 기도 기간은 원래 교회 구성원들에게 평화 문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동서독에서는 1980년대 이를 수용하여 각 주의 청소년 목회 담당자들이 이를 발전 및 확산시켰다. 평화 기도회에는 동독과 서독 양측이 참가하였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와 아울러 동독 학교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군국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였다.¹⁴⁶⁾ 197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40주년 기념식, 1980년과 1981년 11월의 ‘평화주간’ (‘칼을 보습으로’¹⁴⁷⁾라는 슬로건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 1982년

145) Merrill E. Jones, p.254.

146) 크리스치안 퀴러, 최용준 역,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교회에서 일어난 뜨거운 무혈혁명』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pp.167-168.

147) 소련의 조각가인 예브게니 부체티치(Yevgeny Vuchetich)는 1959년 ‘칼을 보습으로 (Let Us Beat Swords into Plowshares)’ 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조각상은 현재 뉴

2월 13일 미군과 영국군의 드레스덴 폭격을 추모하기 위한 ‘평화시위’ 등이 드레스덴에서 열렸다. 5,000여 명의 청년들이 동독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며 1,000여 명의 청년들은 드레스덴 성모교회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동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교회에서 서로 만나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을 표출하였고 토론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평화운동은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졌다.¹⁴⁸⁾



<그림 2-5: (좌) 칼을 보습으로 (우) 평화주간에서 활용된 배지>

육의 유엔 본부에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웅적이며 노동자를 이상화시킨 남성이 등장한다. 얼핏 이 작품을 보면 히틀러가 좋아하였던 팔롬바라의 디스코볼로스(Discobolus Palombara) 또한 독일의 나치시기에 활동하였던 아르노 브레커와(Arno Breker)와 조세프 토락(Josef Thorak)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처럼 프로파간다를 위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작품도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칼을 보습으로’는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성경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148) Timothy Garton Ash, “Swords into ploughshares: The unofficial ‘peace movement’ and the Churches in East Germany” *Religion in Communist Lands* Vol. 11 Issue 3 (1983), p.246.

당시 슈타지는 “1980년 초부터 동독 정부를 약화·전복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심지어 동독의 체제 변화를 도모하는 인사들이 여러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동독 내부의 교회와 연관되었거나 교회의 물질과 기술을 자신들의 활동에 이용하였다.”¹⁴⁹⁾며 교회의 활동을 매우 우려스럽게 평가하였다. 이처럼 동독의 교회 활동은 1989년 대규모 민주화운동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3.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약화

사회주의 체제에서 예술과 문화정책은 단순한 주민들의 여가 활동의 일부가 아니다. 예술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의 자유화와 민주화는 당의 이데올로기 독점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동독의 예술가들은 사회주의통합당의 공식적인 노선이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환영하지 않았다. 동독 예술의 역사는 정부와 예술가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사회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은 사회주의통합당이 문화예술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인간관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제약하였다. 아울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인간과 민주적인 사회를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상상하고, 이를 예술이라는 실질적인 매체를 통해 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9년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주의통합당의 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을 생각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

1) 문학과 미술

①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저항: 사회주의통합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비터펠트 노선 (Bitterfeld Weg)’을 천명하였다. 1959년과 1964년 비터펠트 공장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서 본격화된 이

149) “Stasi Analysis of the East German Opposition, 1 June 1989” In Konrad Jaraush and Volker Grasnow eds,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Providence and Oxford: Berghahn Books, 1994), p.32.

원칙은 예술가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기존 문예의 생산과 소비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의 지적 수준과 충성심을 동시에 높이고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확립을 기획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세뇌·선전 정책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과 삶 그리고 민중과 작가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생산현장에 문예클럽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글쓰기와 미술작품 창작을 장려하였다.

사실 이러한 정책 속에는 기존의 예술가들을 대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신진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었다. 당시 동독 정부는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엘리트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공간 속에 잔류하여 사회적 실상을 모두 담지 못한다고 보았다. 울브리히트는 예술가들이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식인들이 ‘비판적 트렌드’를 따라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지나치게 보이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중산층 혹은 프티-부르주아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는 이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특히 당의 관료들이 보기에 예술가들은 말이 많고 까다로우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특히 소련에서 문화적 해빙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서 비(非)사회주의적인 사조가 유행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고수한 작품이 모두 다 실패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1963년 출판된 크리스타 볼프의 소설 『나누어진 하늘』은 동독과 서독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희망과 좌절 그리고 비판이 날카롭게 등장한다. 사실 사회주의권에서 출간된 소설에서, 비효율적인 작업장의 모습, 무책임한 노동자와 관료주의 병폐 등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콘텐츠였다. 다만 이 소설과 비슷한 시기의 북한 문학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개인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를 과감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체제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의 고취도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동독체제에 불만을 가져 서독으로 넘어간 남자친구의 이야기도 직접 다룬다. 이러한 자유롭고 솔직한 태도 덕분에 이 소설은 동독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 크리스타 볼프를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비터펠트 노선이 강조되었던 시기인 1962년 드레스덴에서 제5차 독일미술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동독의 공식적인 미술잡지인 『시각예술(Bildende Kunst)』은 “모더니즘은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사실주의적 시대의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¹⁵⁰⁾라고 하면서 전시회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노동자계급 출신의 아마추어 작가들도 많은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잡지는 아마추어들 나름의 미적 취향이 있겠지만 미술사가와 연맹이 직접 개입하여 이들을 올바른 노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스탈린주의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선전화를 전시위원회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베버, 하인리히 비츠, 카를 쿤 등의 작품은 고전을 창조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당했다.¹⁵¹⁾ 특히 클라우스 베버는 스탈린주의적인 선전화를 그려 울브리히트에게 극찬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작가였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선전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동독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지향하였던 미적 가치는 스탈린적인 것이 아니라 바르비종의 밀레 혹은 일리야 레핀의 작품들에 가까웠다.

하지만 비터펠트 노선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작가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1969년 ‘동독에서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이라는 긴 연설에서 당시 동독의 사회주의 문화건설에는 여러 다양한 입장이 혼재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울브리히트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을 어떤 지식인들은 단순히 계몽주의의 고전적인 휴머니즘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는 사회주의 사회를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간주한다...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중간의 길을 추구하기도 한다.”¹⁵²⁾고 이야기하며 사회주의 문화 수립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150) 작자불명, “The Bitterfeld Way: Taking Stock Thoughts on the Fifth German Art Exhibition in Dresedn” *Art in Translation* Vol.5. Issue 1. (2013), p.55.

151) *Ibid*, p.57.

152) “Development of Socialist Cultur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Department of Commerce, U.S.A., *Translations from Kommunist* No. 10 (1969),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특히 노동자들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가 높지 못했던 것이 이 노선이 계속 지속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점은 비터펠트 노선에 대한 반발은 예술가뿐 아니라 풀뿌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양식과 소재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과거 특정 계층이 향유하였던 예술을 일반 주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에게는 예술 그 자체가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여가 시간에 축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였다.¹⁵³⁾ 실제로 당의 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하위 관료들은 사회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효과는 크지 못했다.

② 새로운 문학과 모더니즘의 등장: 이러한 당의 문화정책 노선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전반적으로 이완됨에 따라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1971년 12월 사회주의 통합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호네커 서기장은 사회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예술과 문학에서, 당의 개입과 검열을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 선언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독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울리히 플렌츠도르프의 소설 『젊은 W의 새로운 슬픔 (Die neuen Leiden des jungen W)』은 호네커 시기에 각색되어 새롭게 출판되었다.

pp.45-52.

153) 에스더 폰 리히트호펜은 베를린 근처 포츠담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녀는 국가-사회라는 이분법(억압-저항)을 거부하고 참여자(일반 주민), 문화기획자(예술가), 최고 지도부의 세 행위자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동독의 문화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 주민은 체제에 순응하는 허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나가는 존재이다. 문화기획자는 자신의 고유한 철학으로 작품을 만드는 행위자이며 동시에 주민들을 대변하고 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 최고 지도부는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문화를 동독에 강제적으로 이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양보한다. 그의 삼분법은 동독의 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삼분법 역시 질적으로 본 논문과 다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가-사회 간의 '갈등'에 기초하여 그 메커니즘을 세분화한 것이라 하겠다. Esther Von Richthofen, *Bringing culture to the masses: control, compromise and participation in the GD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09) 관련 논의는 p.16과 2장을 참조.

이 소설은 베를린 철거지역의 한 오두막에서 분무기 실험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가출청소년 17살 에드가 비보의 삶을 역추적하여 조명하는 구조를 취한다. 플렌츠도르프가 이 소설의 초안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에드가 비보가 감전으로 죽지 않고 개심하여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말이었지만, 호네커 시기의 정책으로 작가 자신이 원했던 결말로 수정하였다고 한다.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에드가는 선생님의 발에 무거운 원판을 던지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철거를 앞둔 친구 빌리의 오두막에 숨어서 살게 된다. 이 소설은 젊은 소년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의 고립된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 소심한 반항아적 기질, 자의식 과잉,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첫사랑, 10대들의 문화(청바지, 장발, 재즈 등)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주인공 에드가는 느닷없이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의 구절들을 여러 차례 인용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는 『호밀밭 파수꾼』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작가 쉘린저를 언급하고 있으며,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도 등장한다. 또한 소설 속의 주인공은 공산주의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 있다고 하지만, 소설과 주인공 삶에서 어떠한 이상적인 공산주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¹⁵⁴⁾ 이러한 인간형은 당시 서구의 영향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18세기 독일에서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슈투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질풍노도)’의 전통을 재해석한 것이었다. 이 작품이 동독과 서독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괴테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두 체제의 국가가 산업사회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고립된 개인을 형성시켰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동독에서는 문학에 대한 검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문학인의 자유로운 교류도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1974-1977년경 동서독 작가들의 모임이 개인의 아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슈타지는 이러한 모임들을 승인하였다. 1974년 슈테판 하임은 모든 종류의 검열을 철폐할 것을 당에 요구하기도 하였고, 다른 저명한 작가들 역시 그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당의 정당성까지 침해할 수 있는 급진적인 발언이었지만, 이들은 예전과 같은 정치적인 박해나 불이익을 받

154) 울리히 플렌츠도르프, 강명구 역, 『젊은W의 새로운 슬픔』(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참조.

지 않았다.¹⁵⁵⁾ 실제로 슈테판 하임은 1953년 6월 베를린 봉기를 다룬 『6월의 5일간 (5 Tage im Juni)』를 1974년에 출간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당 지도부가 노동자에게 무리한 생산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당의 경직된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사회주의 통합당 당원이자 공장의 노조위원장인 비테는 당과 당 서기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한다. 노동자 역시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들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분명하게 밝혔다.

“모든 것, 정치 및 이념 교육의 문제요.” 방가르츠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은 민중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고 그 선봉이요. 당신은 우리가 절뚝거리며 민중의 뒤를 쫓아가거나, 게으름을 피우고 논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거요?”

“난 근로 기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자들을 구분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없으니까요. 난 지시가 아니라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공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들과 우리들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자극하지 않고 말이에요.” 비테가 대답했다.

“당신은 당과 정부의 지침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요?”

“헤네케 한 사람이 봄을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노동자들의 의식 상태를 과대평가 하는지도 몰라요.”

“난 당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베테 동지, 당신은 어떤 입장이고, 도대체 누구 편이요?”¹⁵⁶⁾

“그러나 이들이 우리를 착취한다면.” 분노로 칼만의 음성이 높아지자, 비제너가 손을 들어 주의를 주었다. “이들이 더 이상 우리와 같지 않은 노동자 정부라고 주장하며, 나사를 더욱 심하게 조인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그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지를 감히 말해 줄 수 있을 거야...”¹⁵⁷⁾

이 소설은 본래 동독에서 출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출판사에서 받아들

155) Jeannette Z.Madarász, *Conflict and Compromise in East Germany, 1971-1989: A Precarious Stabil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p.172-173.

156) 슈테판 하임, 김충남 역, 『6월의 5일간』 (서울: 지식을 만드느 지식, 2015), pp.8-9.

157) *Ibid.*, p.59.

여지지 않자 서독의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때문에 슈테판 하임은 작가연맹에서 축출되었고, 이후 동독에서의 작품 활동에 큰 제약과 불이익을 받았다.

서독을 통해 자본주의 문화가 적지 않게 유입되자, 1976년부터 당의 검열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볼프 비어만의 추방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76년 동독 정부는 서독 노동조합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러갔던 볼프 비어만을 추방하였다. 그가 만든 노래의 가사에는 동독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비어만은 정부의 추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신의 귀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어만의 추방조치를 지켜본 페터 바이스, 하인리히 벨, 에른스트 블로흐와 같은 서독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동독의 문화 예술인도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볼프 비어만에 대한 구명 운동을 펼쳤다.¹⁵⁸⁾ 이러한 집단적 반발에 놀란 동독 정부는 원래의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하여 그가 동독으로 귀환할 것을 허용하였다. 볼프 비어만 사건 이후로 동독 정부는 일방적인 억압은 지양하였다.

소설가는 아니었지만 정치철학가였던 루돌프 바로(Rudolf Bahro) 또한 1977년 자신의 저서 『대안(Die Alternative)』을 서독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였다. 이 책은 동독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때문에 1978년 6월 체포되어 8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을 비롯한 국제적인 구명 활동 덕분에 1979년 10월 사면되어 서독으로 떠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면 분명 동독의 사회주의는 억압적이었다. 하지만 동독 체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다. 1979년 6월 28일 동독의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되지 않는 조직에 가입할 경우 2년에서 5년 사이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하임 법령(Lex Heym)’이 인민회의에서 발의되었고, 같은 해 8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아울러 비판적인 작가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온건한 전략도 고안되었다. 가령 이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서독의 비자를 매우 쉽게 발급해 주어 이들이 서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

158) 류신, 『장벽 위의 음유시인 볼프 비어만: 독일 분단사의 상징 볼프 비어만의 삶과 문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10.

였다. 비판 세력을 축출한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서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은 후 다시 동독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의 노선에 충실한 작가들이 반-체제적 혹은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맹비난한 작품들을 선전하여 맞불을 놓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¹⁵⁹⁾ 이 모든 일들은 동독의 사회주의가 적어도 스탈린주의적인 독재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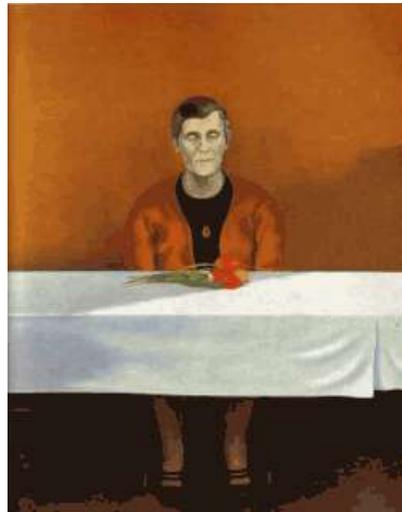
미술 영역은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압의 정도가 약했다. 모더니즘 화풍은 부르주아적이며 당의 노선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관객에게 난해한 느낌을 주었을 뿐 반-체제적인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적인 노선이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1957년도부터 미술사가이며 사회주의통합당 당원이었던 로타르 랭(Lothar Lang)과 볼프강 휘테(Wolfgang Hütt)는 선의 표현성, 시각적 인식 구성의 간결성, 색채의 감정적 사용을 표현주의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였다. 1964년 당의 공식적인 미술사가인 울리히 쿠허르트는 『시각예술』에 ‘리얼리즘 속의 표현성’이라는 논문을 출판하여 이를 공식화하였다.¹⁶⁰⁾

1964년 제5차 미술가 회의는 동독 미술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논쟁적이었으며 실제로 매우 다양한 사안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젊은 화가인 헤르만 라움(Hermann Raum)은 본격적으로 당의 노선을 비판하였다. 라움은 형태와 이데올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나치와 소련 모두 19세기 리얼리즘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예술이 추구하는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교육시켜 피카소의 복잡한 작품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 하였다. 즉 모더니즘의 수용과 실험적 작품의 허용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프리츠 크렘머(Fritz Cremer)는 당내에서 인위적인 토론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스탈린주의적 예술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술가들 사이의 진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와 아울러 현대미

159) Axel Goodbody, Dennis Tate and Ian Wallace, “The Failed Socialist Experiment: Culture in the GDR” In Rob Burns ed., *Germa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190-191.

160) Ulrike Goeschen, “From Socialist Realism to Art in Socialism: The Reception of Modernism as an Instigat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Art in the GDR” *Third Text* Vol. 23 Issue 1 (2009), p.50.

술에 붙인 ‘추상적·형식주의적·타락한’이라는 딱지를 없애 줄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였다. 베른하르트 하이시그(Bernhard Heisig)¹⁶¹⁾ 또한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특히 정부가 작가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서구와의 접촉은 독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긍정적인 면모만을 강조하는 동독의 예술사조가 오히려 작품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공포, 불안전성, 고통, 삶과 죽음은 모두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²⁾ 미술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문화성으로 보고되었고, 이들은 견책을 당해 자아비판을 했지만 크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964년을 기준으로 미술은 문학보다 더 큰 독립성을 지닐 수 있었다. 위의 인사들 외에도 베르너 튀브게와 볼프강 마토이어와 같은 작가들의 다양한 화풍이 미술계에 등장하였다.



<그림 2-6: 동독의 회화> (좌) 베른하르트 하이시그, 가르칠 수 없는 군인의 크리스마스 꿈 (1964)¹⁶³⁾, (우)볼프강 마토이어, 표창장 (1973)>¹⁶⁴⁾

161) 베른하르트 하이시그는 표현주의 작가로 분류되며 막스 베크만과 함께 라이프치히 학파의 창시자로 불린다. 또한 막스 베크만과 오스카 코코슈카의 계보를 잇는 작가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는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 재임시절, 그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통일 이후에는 국회의사당에 그림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162) April Eisman, *Bernhard Heisig and his Fight for Modern Art in East Germany* (Rochester and New York: Camden House, 2018), pp.64-67.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동독의 문학과 미술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은 철저히 고수되지 못하고 점차 약해졌다. 사회주의 통합당 내부에서도 예술가들에게 동조하는 관료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소련의 문화가 아닌 동독 특유의 사회주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동독 정부는 자율성의 부여와 억압적 통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예술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열하고 통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검열과 통제의 강도는 1970년 후반까지의 베트남 그리고 현재의 북한과 비교할 때 훨씬 약했다. 예술가들이 모두 당의 지시에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체제가 붕괴하기 이전인 1988년, 예술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사실상 예술인들의 승리를 거두었다.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안의 예술’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예술의 다양성을 정당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공식적으로 결별한 것이었다.¹⁶⁵⁾

2) 영화 및 음악

① 영화: 영화 부분 역시 사회주의 통합당의 문학과 미술 정책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독의 영화는 사회주의의 가치를 선전하기는 하지만 스탈린체제처럼 지도자를 우상화하거나 당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의 연출은 하지 않는다. 또한 나치 시기 악명 높았던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1902-2003)의 1935년 다큐멘터리 영화 『의지의 승리(Triumph des Willens)』에서 사용된 연출 방식으로 지도자를 우상화하지도 않았다. 비록 동독의 관공서에는 최고지도자의 사진이 걸려있었지만, 당 지도부와 연출가들 모두 과거 지도자를 우상화하여 얻었던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극단적인 우상화 정책은 지양하였다. 또한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국영 보급사인 DEFA (Deutsche Film Anstalt)를 통해서 기획, 촬

163) 미술사학자인 에이프릴 아이스먼에 따르면 휴식을 취하는 병사의 가슴 위에는 탱크가, 나치의 스와티카 깃발과 철십자,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핵폭탄 등이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풍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사회주의적인 테마를 간직하고 있다. *Ibid*, p.76.

164) 볼프강 마토이어의 표창장이라는 그림 역시 긍정적인 면모를 단면적으로 강조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피곤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165) Ulrike Goeschen, p.47.

영, 보급이 이루어졌다. 전후에는 반파시즘 영화가 주로 제작되었으며, 탈스탈린화와 함께 사회비판을 포함한 다양한 영화가 등장하였다.

소련의 해빙기가 시작되기 이전 독일의 영화는 주로 반-파시즘을 주제로 과거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티브가 주를 이루었다. 폐허가 되어버린 환경 속의 절망감과 나치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1946년 제작된 『살인자는 우리 가운데 있다 (Die Mörder sind unter uns)』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심지어 미군과 소련군도 등장하지 않는다.¹⁶⁶⁾ 파시즘을 반성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동독 예술가들의 여러 시도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다. 특히 이 작품은 동독의 예술가들이 서유럽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파시즘과 전쟁이 훼손시켰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양 진영 모두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나치의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유렉 베커(Jurek Becker)의 소설을 각색한 프랑크 바이어(Frank Beyer) 감독의 1974년 작품 『거짓말쟁이 제이콥 (Jakob der Lügner)』은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과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해외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¹⁶⁷⁾

특히 1950년대부터 소련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탈스탈린화는 동독의

166) 군의관이었던 주인공 한스는 폐허가 된 베를린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술에 취해 방황한다. 수용소에 끌려갔다 돌아온 과거 세입자였던 수잔나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은 잠시 연인으로 발전하였다.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하였지만 병원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에 잊으려고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한스는 우연히 죽은 줄만 알았던 과거 자신의 상관 뷔르크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란다. 뷔르크너는 한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2년 12월 24일에 폴란드에서 121명의 남녀노소를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고 한스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받는다. 전쟁이 끝난 후 이름을 바꾼 뷔르크너는 독일군의 철모를 모아 철을 판매하는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스는 뷔르크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를 알아낸 연인인 수잔나가 한스를 말리려고 찾아오고, 뷔르크너를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는 한 여인의 급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한스는 용기를 내어 칼을 들고 수술하여 아이를 살려낸다. 수술을 끝낸 한스의 손과 슬집 무희의 가슴을 만지는 뷔르크너의 손을 몽타주 기법으로 이어낸 장면은 두 인간의 영혼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학살자 뷔르크너가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악당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인물로 나온다. 실제 영화에서 뷔르크너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자신의 옛 부하였던 한스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하지만 뷔르크너는 자신의 과거의 악행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는다. 뷔르크너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체현한 인물이다.

167) 이 영화는 1999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었으며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산업이 국가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957년 미하엘 칼라토초프 (Mikhail Kalatozov) 감독의 『학이 난다』는 소련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있지만, 스탈린 체제를 극복하려는 시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추모,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론 등과 같은 모티브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냉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프랑스 칸 영화제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미국에서는 매카시즘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시절이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영화에 대해 호평하였다. 이러한 해빙기의 영향에 따라 동독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선전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가진 영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 영화, 낭만적 영화, 코미디 영화 등과 같은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¹⁶⁸⁾ 1957년 1월 15일 문화부는 영화에서 동독문화를 묘사하고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서 데파(DEFA)에 일임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의 허가와 검열제도를 없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통합당이 지향하였던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다.¹⁶⁹⁾ 이러한 원칙은 비교적 오랫동안 준수되었다. 볼프 비어만 사건이 터진 직후인 1979년경에 이르러서야 사회주의통합당은 데파에 당원을 배치하였고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일정한 자율성을 얻었던 영화인들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매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DEFA 소속의 쿠르트 매치히(Kurt Maetzig) 감독의 1965년 작품인 『나는 토끼다(Das Kaninchen bin ich)』를 들 수 있다.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단순하게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개인의 삶을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독의 법률과 제도를 직접 비판하였다. 영화는 대학진학을 앞둔 19살의 주인공 마리아가 반역죄로 기소된 오빠를 재판한 판사와의 불륜관계라는 정치적으로 파문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관객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한다. 판사인 폴 다이스터는 마리아에게 검사가 일 년 반의 형량을 구형하였으나, 자유주의자로 몰리는 것이 싫어서 보다 가혹한 3년형을 내렸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임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것이 법원 내부에

168) 피중호, 『동독영화: 생성과 붕괴, 그리고 영향사』(서울: 사곰, 2016), p.110.

169) *Ibid.*, p.134.

서 자신의 권위를 높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원이라는 중요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 때문에 이 영화는 엄격한 검열을 당했다.

1966년에 나온 『돌들의 흔적 (Spur der Steine)』 역시 당시의 엄청난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에서는 건달인지 노동자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도심 한복판의 분수에서 나체로 수영을 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 이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한 것이기에 경찰이 출동하여 분수에서 나올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그는 분수에서 나오는 척하면서 경찰의 발목을 붙잡아 그를 분수에 빠뜨린다. 그의 행위는 사실상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의 개봉이 허가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장면 외에도 공장에 파견된 당원들이 노동자를 통제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한다. 가령 공장 당위원회의 간부로 새롭게 부임한 주인공은 노동자의 과격한 환영식에서 모욕을 당한다. 한 사람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상대방의 손뼉을 치는 것이 이들의 환영식이었다. 영화 말미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당시의 공장은 온순하게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간부들이 쉽사리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체제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삶을 다루는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폴과 파올라의 전설』에서도 자극적인 장면과 불륜과 상처라는 테마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1978년 작 『일곱 개의 주근깨 (Sedm Pih)』는 10대 청소년의 사랑과 성장에 대해 다루었다. 당시 일반적이었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여주인공 캐롤린이 2년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이 기본적인 줄거리이다. 영화에서 젊은 교사 커플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운동만 시키려는 교장 선생님과 갈등한다. 이들은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며 성공을 거둔다. 영화는 10대 청소년의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화에서도 음모 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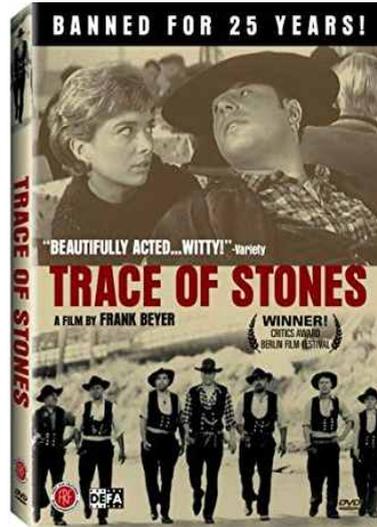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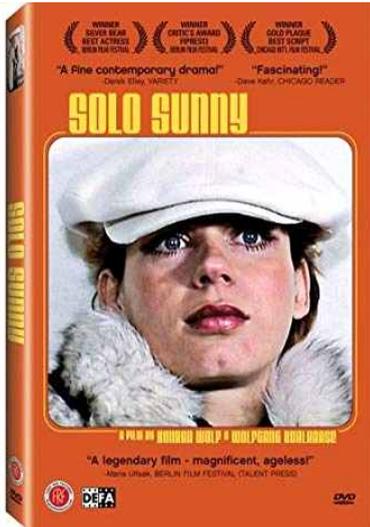
사실 냉전 시기 동구권과 서구권의 문화교류는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 서독 측의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콘라드 볼프 감독의 1979년 작 『솔로 썬니(Solo Sunny)』의 여주인공역의 레나테 크레스너 (Renate Krössner)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여주인공이 밤무대에서 노

래하는 장면과 그 끈적끈적한 영어 노래 가사만을 보면 사회주의 색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아울러 청바지, 가죽 재킷, 술, 담배, 자유로운 성관계, 자위행위, 성폭행, 자살 시도, 일렉트로닉 음악, 전자기타와 드럼연주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있다.¹⁷⁰⁾ 특히 영화 OST를 녹음한 레지네 도버슈츠(Regine Dobberschütz)는 이 영화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 영화들은 주로 개인의 내면과 자아실현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¹⁷¹⁾ 그리고 서독을 직접 비판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다루었다.

국가의 검열과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영화 연출가들의 시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독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DEFA에서 제작한 영화들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며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해 적자만 기록하였다. DEFA 영화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당의 검열뿐 아니라 감독의 철학과 사상이 과도하게 담긴 것에도 이유가 있다. DEFA는 일부 오락영화도 만들었지만, 대다수 영화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즐기기에 쉽지 않은 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상업영화를 만들 유인이 없었다. 국영기업의 특성상 감독과 제작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DEFA는 고상한 영화들을 계속하여 제작하였다.

170) 주인공인 썬니는 매우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과거 공장에서 일했지만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밴드의 동료들과 전국을 돌면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밤무대의 관객들은 그녀에게 지루하고 차가운 시선만을 보낼 뿐 그녀의 음악에 집중하지 않는다. 썬니는 아마추어 연주자이자 철학자인 랄프에게 빠져 매우 과감하게 접근하여 그를 쟁취한다. 하지만 랄프는 다른 여자를 집에 끌어들이며 썬니를 배반한다. 또한 밴드 동료의 강압적인 구애를 거절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녀는 밴드에서 쫓겨난다. 썬니는 자신에게 헌신하는 헤리를 받아들여 노력한다. 헤리는 썬니로부터 동정만 얻을 수 있을 뿐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떠난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실감으로 인해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실려간다. 하지만 동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가수활동에 또 다시 도전한다. 이 영화는 또한 고도의 세련된 연출을 보여준다. 잿빛의 동베를린 건물들과 나무, 햇빛, 새벽, 백열전등을 대비시켜 영상미를 극대화시켰다.

171) 이처럼 당시 동독과 서독뿐만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권과 서구체제는 당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85년 공산권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감독 에밀 쿠스투리치의 『아빠는 출장 중』이라는 작품 역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티토의 민족주의 노선이 소련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영화는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을 매우 진지하게 비판하였다.



〈그림 2-7: (좌) Solo Sunny 포스터, (우) 돌들의 흔적 포스터〉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검열완화뿐 아니라 DEFA로 하여금 서구영화를 수입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였다. 즉 인기가 높은 서구영화를 상영하여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여 동독 영화를 지속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특히 영화의 주된 관객층은 청년들이었다. 1970년대 초 전체 관람객의 3분의 2 가량이 14-25세 사이의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서유럽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액션, 코미디 장르를 선호하였는데 이 청년층을 만족시키려면 서독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에서 처럼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¹⁷²⁾

DEFA가 주로 수입하였던 것은 뉴-할리우드 영화들이었다. 이 영화들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 빈곤과 인종차별 등을 다루고 있었다. 가령 정신 병원을 배경으로 한 잭 니콜슨 주연의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더스틴 호프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등을 수입하여 상영하였다. 동독 문화 관료들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을 통제하려는 제국주의의 폐해를 비판적으

172) Gerd Horten, “The Impact of Hollywood Film Imports in East Germany and the Cultural Surrender of the GDR Film Control in the 1970s and 1980s” *German History* Vol. 34 Issue 1 (2016), p.86.

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제가 동독을 상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버리힐즈 캡』, 『E.T』, 『더티 댄싱』 같은 오락영화는 동독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엑소시스트』와 같은 공포영화나 유혈이 낭자한 영화는 수입하지 않았다.¹⁷³⁾ 서구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화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변화된 관객의 취향에 호응하기 위해 동독의 영화 제작자들은 연출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했다. 예컨대 이미 1960년대부터 제임스 딘이나 『위티프런트』의 말론 브란도가 인기를 높게 끌었을 당시 동독의 연출가들 또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주인공을 등장시켜야만 했다. 동독의 영화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지도자를 우상화한 영화는 애초에 거의 제작되지 않았으며, 당의 노선을 따르거나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영화 모두 관객들에게 별 인기를 끌지 못했다.

③ 음악: 문학과 미술의 영역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당과 대립하였다. 이 대립은 사회주의 동독의 지적 공론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조금 더 대중적인 장르인 음악의 경우에는 주민과 당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흔히 음악은 인간의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의 도구이며 가장 원초적인 예술 장르라고 알려져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대문호 토마스 만은 『마의 산』에서 음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인 한스의 멘토로 등장하는 세템브리니는 음악이 내포하고 있으며 부채질하는 충동성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이는 음악이 자극하는 감성이 그보다 높은 가치인 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음악 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음악과 예술이란 감정과 이성을 모두 사회주의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동시에 사회주의를 향한 충성심을 형성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다양한 음악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주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음악축제는 즐거운 여가를 보내도록 하는 복지적 차원과 축제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인

173) *Ibid.*, pp.79-85.

연대성과 결속을 통하여 당의 통치를 공고하게 형성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것을 크게 보면 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동원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의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동독의 음악축제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독일의 전통음악 공연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과거부터 개최해 온 여러 음악회를 활용하였다. 둘째, 비전문가들 예컨대 노조, 공장위원회, 여성위원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음악회가 있었다. 이들은 음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였지만, 공장과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음악회에 참가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원했다. 셋째, 작곡가 연맹이 주도하는 전문적인 음악 콘서트가 있었다.¹⁷⁴⁾ 이들은 기존의 콘서트 장을 벗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펼쳐 예술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전문가 집단이 제작한 음악이었다. 이들의 음악에서는 조성의 해체를 추구하는 표현주의 계통의 음악들의 색채가 매우 짙게 나타났다. 폴 크루즈바하(Paul Kurzbach), 막스 버팅(Max butting),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 등도 이러한 계통의 인물들이었다.¹⁷⁵⁾ 한스 아이슬러는 동독의 국가를 작곡한 인물이었으며 과거 아놀드 쇤베르크와 밀접하게 교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음악들은 주민들에게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구성의 해체라고 점잖게 표현 하였지만, 듣기에 따라 곡이 정신이 없고, 귀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즉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었다. 1953년 베를린 봉기 이후 음악가들 역시 창작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이러한 음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클래식과 포크송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 사조가 동독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이미 1952년 동독정부는 ‘공연과 댄스뮤직에 관한 실행안(Anordnung über die Befugnis zur Ausübung von Unterhaltungs und Tanzmusik)’ 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174) David G. Tompkins, “Instrumentalizing Entertainment and Education: Early Cold-War Music Festivals in East Germany and Poland” In Cathleen M. Giustino, Catherine J. Plum, and Alexander Vari eds, *Socialist Escapes: Breaking Away from Ideology and Everyday Routine in Eastern Europe, 1945-1989*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2013), p.31

175) *Ibid.*, p.31.

를 갱신하여 1958년 1월 2일 ‘경음악과 댄스음악에 관한 지도안 (Anordnung über die Programmgestaltung bei Unterhaltungs- und Tanzmusik)’이라는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라디오와 공연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60%는 독일과 소련, 사회주의 국가에서 작곡된 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제와 유사하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소위 말하는 60/40 법안은 음악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동독 정부는 DJ가 이 규제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공연 기획자들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40% 정도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주와 콘서트에서 이 규정이 모두 제대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규제안은 별다른 실효성도 없었고 계속 이어진 것도 아니다. 젊은 청년세대들과 음악가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인해 서구음악의 비율은 40%에서 80%로 증가하게 되었다.¹⁷⁶⁾ 실제로 동독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고 가사가 없이 오로지 멜로디와 비트로만 구성된 음악을 작곡하고 공연하기도 하였다. 노래의 가사가 없다고 해서 저항성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동독에서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존재하고 있었다. 재즈 음악은 히틀러 통치 시기부터 인기를 끌었고 정통 예술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동독 주민들도 재즈를 무척이나 즐겼다. 비록 재즈는 모범적인 사회주의 문화로 여겨지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교양 있는 음악 장르로 간주되었다. 동독 정부는 실제로 루이 암스트롱이나 디지 길레스피와 같은 음악가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콘서트를 열었으며 많은 동독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¹⁷⁷⁾

176) Peter Wicke, “Pop Music in the GDR between Conformity and Resistance” In Margy Garber and Roger Woods eds, *Changing Identities in East Germany: Selected Papers from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New Hampshire Symposia* (Lanham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6), p.28.

177) 사실 재즈의 수출은 미국의 대외전략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를 포함한 미국의 백인 보수주의자들은 흑인들의 한(恨)과 저항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재즈를 선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음악이 사회주의권에서 전반적인 인기를 끌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자유주의의 우월성과 자율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변화시켰고 외교적인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enny M. Von Eschen, *Satchmo Blows Up the*

동독 정부를 당황케 한 것은 로큰롤이었다. 로큰롤 음악의 인기와 함께 가죽 재킷과 다양한 청바지 및 여러 액세서리들이 동독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과 같은 당대의 미국 배우들은 동독에서도 인기스타였다. 하지만 동독의 지도부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비트와 북소리로 구성된 로큰롤은 인간의 본능만을 자극하는 일종의 원시 문화로 여겨졌다. 동독 정부는 서베를린 지역에서 열린 빌 헤일리의 콘서트를 맹비난하였다. 노이에스 도이칠란드는 “빌 헤일리와 나토”라는 사설에서 콘서트장의 소동으로 50명이 부상하고 12만 마르크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바흐와 베토벤을 낳았던 공간에 야만적인 짐승의 음악이 들어섰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¹⁷⁸⁾ 하지만 정부의 비난과는 달리 로큰롤 음악의 애호가인 청년세대들은 흑인문화와 음악의 수용은 억압당한 이들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사회주의적인 이념이라며, 당과 기성세대의 지적을 매우 위트 있게 반박하기도 하였다.¹⁷⁹⁾

동독지도부는 이러한 음악과 새로운 스타일이 서방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 음악과 자유분방한 패션은 사회주의와 상반되는 자유로운 인간형을 창출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인간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 그리고 권위에 대한 집합적 거부를 상징하였다. 가죽 재킷을 입은 청소년과 청년층은 또래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동독에서 가죽 재킷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웃은 주로 서독에 있는 친척들이나 암시장을 통해 공급되었다. 동독에서 가죽 재킷은 서구권과 마찬가지로 반항과 일탈의 상징이었다. 당시 가죽 재킷을 입고, 장발을 하고 콧수염을 기르며, 술을 먹으며, 거친 음악을 듣고, 방종한 삶을 사는 젊은 세대 청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기성세대와 지배층의 이상적인 인간관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반체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반항적인 인물들이었지만, 당의 지도부가 원했던 사회주의적으로 교양된 문화적인 존재가 아니었기에 반체제적인 인물들로 인식되었다.

동독 정부 역시 이들의 반발심을 억누르는 방식의 억압적 정책만을 수

World Jazz Ambassadors Play the Cold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178) “Bill Haley und die NATO” *Neues Deutschland* 1958년 10월 29일 1면.

179) Mark Fenemore, *Sex, Thugs and Rock ‘N’ Roll: Teenage Rebels in Cold-War East Germany*, p.135.

립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동독의 국영기업인 VEB Deutsche Schallplatten의 여러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Amiga Record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 회사는 록과 팝 음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유통시켰는데 특이하게도 CD가 아닌 레코드판만을 판매하였다.¹⁸⁰⁾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통합당에게 서구의 문화와 다른 동독 고유의 청소년 문화를 형성시킬 것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의 다양성을 증진시켜나갔다. 그리고 비틀즈의 음반도 판권을 얻어 판매 유통하였다. 아울러 1980년대에는 국가의 검열과 제재가 훨씬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 국영기업에서 판매되는 레코드판의 표지는 사실상 서구의 그것과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동독에서는 서구의 음반 시장뿐 아니라 자체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음악가들이 모두 사회주의에 비판적인 것도 아니었다. 1980년대 당시 동독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록 밴드 Berluc은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 『No Bombs』를 작곡하였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No Bomb, no radioactivity! Niemals Euroshima! No Bomb, but Peace. Hey, Mister Präsident of America! Hey, Mister Präsident, here is a crazy Star” 가사에서는 유럽과 히로시마의 합성어인 유로시마를 지칭하면서 유럽에서는 결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구에 구멍을 내는 미국의 핵 위협을 비판하였다. 이 시기 동독의 록음악을 Ostrock (동쪽을 의미하는 Ost와 록의 rock)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통일이 된 현재에도 과거를 회상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비어 볼프만 사건이 정부의 검열과 예술의 자율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한다면, 서독의 초 절정 록 스타 우도 린덴베르크(Udo Lindenberg)의 동독방문과 그의 음악의 수용은 동독 지도부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린덴베르크는 동독 정부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가수였다. 서독 주민인 린덴베르크는 자신의 베를린 공연이 동독 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1983년에 ‘판코우로 가는 특별열

180) Justinian Jampol, *Beyond the Wall: Art and artifacts from the GDR*, pp.261-271. 만약 동독에서 CD를 판매할 경우, 주민들이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미 다양한 소비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반감지 않은 새로운 물품을 추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차 (Sonderzug nach Pankow)’ 라는 곡을 서독에서 발표하여 동독을 풍자하였다.

Honey, ich glaub’, du bist doch eigentlich auch ganz locker
Ich weiß, tief in dir drin, bist du eigentlich auch’n Rocker
du ziehst dir doch heimlich auch gerne mal die Lederjacke an
Und schließt dich ein auf’m Klo und hörst West-Radio

이봐 당신! 사실 나는 당신이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당신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당신 또한 록커야!
사실 당신은 화장실에서 몰래 가죽재킷을 입고
서구 라디오를 들으며 마구 몸을 흔들어대지

호네커를 직접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는 출시되자마자 서독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는 순식간에 동독으로 유입되었고 클럽에서 재생되었다. 이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된 청년들도 있었다.

하지만 동독 지도부는 최고지도자를 풍자한 우도 린텐베르크를 오히려 베를린으로 초청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과 1980년대 초반의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련의 SS-20 미사일, 미국의 퍼싱2 미사일의 독일 배치로 인한 안보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3년에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얻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경에 설치된 무기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였다. 마침 서독 지역에서 반전운동, 평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운동가인 린텐베르크를 초청하여 동서독의 평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서방을 압박하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다. 린텐베르크의 공연은 동독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며 그에 대한 열광이 지나친 것을 우려한 슈타지는 동독에서의 다른 일정을 취소시켰다. 또한 린텐베르크는 호네커 서기장에게 가죽재킷 그리고 ‘총 대신 기타(Gitarren statt Knarren)’ 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타를 선물하였고, 호네커 수상은 이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어린 시절 불었던 솜(shawm, 관악기의 일종)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일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¹⁸¹⁾

이처럼 동독에서의 최고지도자는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고, 호네커 자신도 스탈린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동독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풍자가 가능했고, 사회주의통합당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독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크리스천 뤼러 목사의 자서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록 밴드들은 당의 환영을 받지 못해 공연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 ‘분노의 발작’이라는 밴드는 뤼러 목사의 허락을 얻어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막론하고 젊은 세대가 지닌 비판의식 혹은 반발심은 로큰롤과 록 음악을 매개로 증폭되었다. 이들의 반발심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서 그 자체에 대한 거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독자적인 문화를 지닌 청년층의 존재는 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림 2-8: 호네커 서기장에게 기타를 선물하는 우도 린덴베르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학, 미술, 영화, 음악 등 모든 예술 분야에서

181) Deutsche Welle, “Rocker Udo Lindenberg: A nightmare for East German authorities” 출처: <https://www.dw.com/en/rocker-udo-lindenberg-a-nightmare-for-east-german-authorities/a-50300013>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확립되지 못했으며, 예술가들의 저항으로 인해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 장르를 불문하고 동독의 예술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집단주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선망하고 지향하였다. 물론 당은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작품들을 유포하려고 하였지만, 이 작업은 예술가와 관객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작품 속에는 경직되거나 과도하게 긍정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달리 어두운 삶의 현실이나 개인적 소망이 담겨 있었다. 예술이 사회주의에 직접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술에 담겨 있던 정신과 사회주의 현실은 조응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관객과 독자로 하여금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도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논의들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약해졌다고 할 수만은 없다. 사회주의통합당 혹은 다른 사회주의 정당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들을 잘 수용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주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였다. 하지만 급진적 자유화, 주민들의 소비문화, 예술가들의 예술사조, 종교인의 신념은 당의 노선과 충돌을 빚었다. 사회주의통합당은 억압과 타협을 통해서 가까스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회의 영역들은 당의 정당성을 계속 약화시켰다. 특히 모든 것이 정치 활동으로 간주되는 체제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비정치적인 취미 활동이나 문화생활마저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서 숨을 죽이면서도 자신의 영역과 독자성을 조금씩 증가시켜온 사회의 영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에너지를 분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제3절 시민사회의 붕괴와 통일로의 전환

1.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1) 경제적 위기와 전망의 부재

호네커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그가 비판했던 전임자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실적이 저조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1981-1985년 기간 동독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4.5%였으며, 1986-1989년 사이에는 3.1%에 불과하였다.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4.3%에서 3.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서독의 40%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생산 분야의 기계설비는 노후화되었으며 생산품의 품질도 낮아 경쟁력이 없었다.¹⁸²⁾ 이 수치 역시 실제 상황보다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동독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동독은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였지만 모라토리움이나 채무불이행은 실행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만일 서구권에서 빌린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경제 관계가 단절될 경우 서구의 소비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비재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뿐 아니라 향후 동독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발전된 서구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였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기술의 유입이 중단될 경우 서구와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체제의 혼란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였다. 상황은 다르지만, 루마니아 역시 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외채 지불을 위해 극단적인 국내정책을 실행하였다.¹⁸³⁾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변혁시켜야 했지만, 동독 지도부는 체제 개혁을 하지 않았다. 물론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산품과 소비품을 서구에 수출하고 소련을 설득하여 원유를 지원받아 판매하였다. 호네커의 계좌와 Koko(Kommerzielle Koordinierung)의 비자금을 동원하였고 서구은행의 예치금까지 모조리 빼서 외채를 지불하는데 활용

182) “Zur Lage der Volkswirtschaft der DDR” *Neues Deutschland* 1990년 1월 11일 3면.

183) 반면 북한의 경우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동독처럼 소비재를 수입하여 주민들을 달랠 필요가 없었다.

하였다. 서독 측으로부터 장기간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동독의 인권 상황 개선을 제안 받았다. 슈타지는 이 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절하였다. 기민연의 보수적인 정치인 요셉 슈트라우스를 통해서 1983년에 10억 마르크, 1984년에는 9억 5천만 마르크를 대출받아 가까스로 외채위기를 극복하고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¹⁸⁴⁾

사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시기까지 동독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난 것은 아니었으며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동독에서 국가 계획위원장을 지낸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의 인터뷰에 따르면, 체제 붕괴 직전의 동독은 비록 파산을 향해 돌진 중이었지만 완전히 파산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을 투입해야 할 분야는 너무나 많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당시 비자금 담당자였던 알렉산더 샬크 골로드코프스키(Alexander Schalck-Golodkowski)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에 청구된 금액은 통일 이전에 지불하였으며 만일 한두 개를 지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국가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¹⁸⁵⁾

스타이너의 연구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동독의 총 채무액을 260억 5000만 달러라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공개되지 않은 미지불 채무, 당시 동독이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 만기일이 남았던 부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약 100억80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외채는 약 82억 불이었다. 이것은 1989년 동독이 서독을 제외한 서구에 수출한 수출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같은 해 동독 GDP의 1/5 수준에 불과했다.¹⁸⁶⁾ 따라서 근본적인 체제전환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든 수년은 버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184) Maximilian Graf, “Before Strauss: The East German Struggle to Avoid Bankruptcy During the Debt Crisis Revisite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42 Issue 4 (2020), 참조.

185) “Gerhard Schürer: Staatsverschuldung der DDR”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ePvRbJlVXk>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186) Andre Steiner, *The Plans that failed: An economic history of the GD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2010), p.192.

주민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된 이후인 1991년 4월 동독 주민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제쯤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서독주민들과 비슷해질 것이냐?” 라는 질문에 5년 이내 -5%, 5년-39%, 10년 49%, 20년-4%로 응답하였다.¹⁸⁷⁾ 통일 이후의 낙관론이 반영된 수치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83%가 10년 이내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를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동서독의 양국의 차이가 극단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이 당면하였던 위기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여 사회와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위기는 아니었다. 다른 아시아의 후발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기본적인 의식주는 충족되었고 문화적인 삶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제는 얼마 동안 더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체제는 주민들에게 전망 있는 미래를 약속해 주지 못했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사회주의통합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발전된 서독이나 서구권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었던 청년들과 주민들은 사회주의체제에 좌절하였다. 독일은 한때 유럽의 중심이었고 베를린은 유럽과 근대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였다. 이러한 독일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전망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¹⁸⁸⁾

187)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 The Press, *The Pulse of Europe: A Survey of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Attitudes* (Washington, D.C,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The Press, 1991), Appendix, p.43.

188) 경제 파탄은 주로 통치 집단을 몰락시키지만, 이것이 항상 국가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국 정부와 기업의 무능 그리고 국제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199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경제 주권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국민이 국가를 거부하거나 해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금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동독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복지와 소비를 줄이고 체제를 개혁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독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다.

2) 고르바초프의 상징적인 효과

당시의 젊은 신임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소련은 동독과 비슷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비지출, 서방과의 경직된 외교 관계는 체제에 부담을 주었다. 아울러 거대한 사회주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위성국가에 대한 원조도 경제에 부담을 주었으며 원유가 하락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냉전의 종식이 본격화되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정치학자 피터 그라이더는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동독의 실패와 동독의 붕괴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주의 통합당의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사회주의 자체의 결함이 국가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실패한 체제가 기능을 완전히 멈추고 붕괴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¹⁸⁹⁾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정치적·경제적 측면과 사회 각 영역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동독 경제개혁에 끼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였다. 물론 그는 혁신과 개혁을 강한 어조로 주창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면서 이 체제 안에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므로 낡은 것과 새로 들어온 메커니즘이 공조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이행 기간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세한 원가 계산만은

189) Peter Grieder,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p.103. 동유럽권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체제의 붕괴과정에서 상당히 활성화된 시민사회를 당연한 상수로 보고, 이를 촉진시킨 엘리트의 정책결정과 소련의 영향을 핵심적인 변수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을 아시아로 넓혀 본다면 이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사실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시작해야 한다...대차대조표, 각종 비율,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상응하는 수입에 대한 요구, 건설 정책, 국가 재정, 방위 등, 이 모두가 확고한 중앙 집중제의 원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공화국과 인민들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과 기회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소비에트 사회의 안정에 대한 보장이 놓여있다. 이것이 우리가 중앙의 역할이 약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획경제의 장점을 놓치고 말 것이다. 동시에 중앙의 지도자들이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현재의 의무를 덜어 줄 것이다.” 190)

‘상세한 원가 계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시장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인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퇴임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당시 국가가 빠져들고 있던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략적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어야 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러질 못했다.”며 정책의 불충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¹⁹¹⁾ 소련에서 시장경제의 수용을 공식화한 시점은 1990년 7월 제28차 공산당대회였다. 동독의 경제 관리와 기업의 운영능력이 소련에 뒤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동독은 이미 ‘신경제체제’가 실행 중이었던 1964년에 경제학자 2,500여 명을 투입하여 원가 계산을 실시하였고¹⁹²⁾ 서구권에 상당한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던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동독 지도부와 경제학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동독 정치지도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 지도부는 소련의 경로를 위협한 선택지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과 동독의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다. 첫째, 사회주의 통합당의 통치구조는 안정적인 상태였다. 에리히 호네커와 밀케를 포함한 전통적인 인사들은 철저히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당내의 강력

190) 미하일 고르바초프, 하용출 역, 『페레스트로이카』 (광주: 사계절, 1988), p.115.

191)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기동 역, 『선택』 (서울: 프리뷰, 2013), p.411.

192) 박광작, “동독 ‘신경제체제’ (1963-1971)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의 비교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제 5권 3호 (2003), p.5.

한 반대세력도 없었다. 둘째, 동독의 경제 상황이 최악은 아니었으며 계획경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분명 외채의 증가는 큰 골칫거리였지만 사회 안전망의 확충 및 복지국가의 면모는 동독 지도부에게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1980년도부터 시작된 콤비네트 수립을 통하여 계획경제가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분권화와 자유화의 성격을 지닌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었다. 이는 과거 울브리히트의 ‘신경제체제’를 연상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소련의 급진적인 개혁이 오히려 동독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효과는 매우 컸다. 동독에게는 페레스트로이카보다 정보공개와 표현의 자유를 골자로 하는 글라스노스트가 더 위협적이었다. 동독의 문화정책과 검열은 서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완화된 상태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의 음악이나 영화 등이 동독에 널리 퍼져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동독은 소련에 비해 훨씬 개방된 체제라고 할 수 있었다. 서독과 인접한 상황에서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원칙을 수용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검열의 완전한 철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발전된 서독과 서구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불만의 형태로 표출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변질 수 있었다. 동독 정부도 이러한 점을 예의주시하였다.

동독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는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변화와 개혁 바람은 서구에서 유입되는 정보보다 더욱 위협적이었다.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를 인용하며 개혁과 변혁을 주장할 경우 이들을 국가와 사회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특히 소련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사회 영역의 요구에 정당성을 더하여 주었다. 1987년 6월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시위를 벌였다. 당시 서베를린에서는 록 그룹 제네시스와 데이빗 보위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열었고, 그 음악 소리는 동쪽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던 청년들은 베를린 장벽에서 경찰들과 대치하였으며 이들은 베를린 장벽을 철거할 것과 경찰들이 떠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분노한 청년들은 ‘고르바초프’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회주의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¹⁹³⁾ 이러한 이유로 라

이프치히의 월요기도회를 주도한 크리스천 워러 목사는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그의 정책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고레스 왕’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동독 주민들은 체제의 경직성(실제로는 다른 사회주의권에 비해 가장 부유하고 유연하였지만)을 과감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증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적 변화는 동독의 지도부에게 위협적 요소였기에, 소련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87년 10월 20일 정치위원회는 소련 지도자의 연설이 향후에는 검열을 받아야만 출판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다국어로 번역되어 소련공산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스푸트닉(Sputnik)은 동독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심지어는 소련의 최신 출판물은 동독이 아니라 서독에서 구하는 것이 더욱 쉬울 정도였다.¹⁹⁴⁾ 1988년 10월부터 이 잡지는 소련공산당의 공식적인 기관지가 아니며, 소련 인민의 성취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격분하였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하였다. 1988년 11월 19일부터 1989년 1월까지 라이프치히에서는 800통, 드레스덴에서는 1000통 이상, 당의 공식 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칠란드는 약 400통의 항의서한을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 전문학교 재학생, 자유독일청년연합의 지방조직원들도 정부의 조치에 매우 큰 불만을 가졌다.¹⁹⁵⁾

분명 고르바초프 효과는 존재하였다. 일례로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하였을 때 당의 ‘자유조직청년단 (Freie Deutsche Jugend)’ 단원들은 ‘고르바초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하였고¹⁹⁶⁾ 이는 반체제운동을 훨씬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부터의 통일과정에서 그의 결단은 평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고르바초프 효과는 동독의 사회운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효력이 증폭된 것이지, 소련 지도자 단독의 힘으로 모든 변화를

193) “East German Rock Fans, Police Clash” *Washington Post* 1987년 6월 9일.

194) Peter Grieder,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93.

195) Steven Pfaff, *Exit-Voice Dynamics and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Revolution of 1989*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54.

196) Frederick Taylor, *The Berlin Wall: A World Divided, 1961-1989*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7), p.409.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고르바초프의 효과가 왜 유럽에서는 활성화되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학생들만 이에 영향을 받았으며, 베트남과 북한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지 않았는가? 이 차이점은 동유럽의 사회가 변화의 방향을 포착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즉 동독의 사회는 고르바초프가 보냈던 여러 정치적 신호들 예컨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사나트라 독트린 등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동독 안에 유럽적 전통이 남아있었고,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 여러 반체제 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고르바초프의 목소리를 해석할 수 있는 사회 영역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였다. 198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변화과정은 <표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80년대	1980년대 말
물리적통제능력	중 (약화추세) 국영기업의 집중화, 슈타지	중 (약화추세) 국영기업의 집중화, 슈타지
자원제공능력	중 (약화추세) 성장동력의 감퇴-	약 (약화추세) 성장동력의 고갈- 주민들의 점증하는 요구-
상징적동원능력	중 시민사회와의 갈등-	약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보수적인 헬무트 콜의 집 권/ 현상유지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동요/ 소련의 영향력 차단 시도

<표 2-3: 1980년대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3) 전국적 시위와 탈스탈린적 사회주의의 종말

① 대규모 시위의 발생: 역사학자 위르겐 코카는 동독에서 1989년부터 급박하게 진행된 여러 사건을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국면은 1989년 9월 시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의 시기이며, 두 번째 국면은 1989년 11월 10일부터 동독에서 마지막 자유선거가 실시된 1990년 3월 18일까지의 시기이고, 마지막 국면은 1990년 3월 19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이 공식적으로 몰락하고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흡수되는 시기로 세분화하였다.¹⁹⁷⁾

1980년대 동독의 경제적 침체와 경직된 사회구조는 민심 이반을 초래하였다. 동독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체제지지 설문 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는 ‘지지’ 51%, ‘회의적인 태도’ 43%, ‘지지하지 않음’ 6%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1988년 말의 조사에서는 ‘지지’ 18%, ‘회의적 태도’ 54%, ‘지지하지 않음’ 28%로 나타났다. 동독에서는 반체제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다른 직종에 비해 미래가 보장된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체제에 더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체제지지도 역시 1985년 70%에서 1988년 34%로 하락하였다.¹⁹⁸⁾ 그러나 당시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회주의통합당은 1989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98.95%라는 득표율을 올렸으므로, 이 시기만 하더라도 체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동독에서 항의와 집회가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콘서트 장에서의 충돌 외에도 1988년 1월 15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추모식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주로 평화 단체, 환경단체의 회원들이었으며 “우리는 항상 남의 자유를 생각해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다.” 라는 그녀의 명언을 인용하며 국가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당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슈타지와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였고 일부는 서독으로 추방하였다.

외부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동독 사회를 동요시켰다. 체코와 헝가리의 국경이 개방되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때문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와 체코의 서독 대사관으로 모여들어 이주를 요구하였다. 사실 주변국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베를린 장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1989년 6월 헝가리는 제네바조약을 따르기로 동의하였으며, 석 달 후 헝가리 정부는 동독과의 조약보다는 국제적 합의를 우선시하였다. 서독 정부와의 비밀 협정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동독 주민을 위해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였다. 이에 서독은 헝가리에 대한 5억 마르크의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동독 정부의 보복에 대한 손실 보상

197) 위르겐 코카, 김학이 역 『독일의 통일과 위기』 (서울: 아르케, 1999), p.41.

198) Frederick Taylor, *The Berlin Wall: A World Divided, 1961-1989*, p.405.

을 약속하였다.¹⁹⁹⁾ 이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로 간 동독 주민들이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망명을 요구하였다. 서독,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이들이 비공개로 봉인된 기차를 타고 동독 진영을 지나 서독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소식은 동독 주민들에게 알려졌으며 드레스덴의 주민들은 그들의 탈출을 응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망명자들은 동독 주민신분증을 찢어서 경찰에게 던지기까지 하였다.²⁰⁰⁾ 이처럼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본격적인 해체는 베를린 장벽에 간혀있었던 독일 주민에게 새로운 탈출 통로를 제공해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였다. 특히 대규모 이주는 동독 주민들에게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와 동시에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1989년 9월 노이에스 포름과 새롭게 조직된 사회민주당이 자발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치범 석방, 자유 비밀선거, 정치적 목적의 조사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동독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던 UN헌장과 헬싱키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평화기도회가 대규모로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다. 니콜라이 교회의 크리스천 뤼러 목사는 1985년도부터 동독을 떠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출국 희망자들의 소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독일 땅과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평화기도회를 조직하였다. 체제에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1989년 6월부터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교회와 연대하여 당국의 승인 없이도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9년 9월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월요기도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라이프치히에서는 10월 2일과 10월 9일에 약 7만에서 달하는 인파가 모여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시위대 지도부와 라이프치히 사회주의통합당 지도부 양측 모두 시위가

199) Hans-Hermann Hertle, “The Fall of the Wall: The Unintended Self-Dissolution of East Germany’s Ruling Regim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2/13 (2001), p.133.

200)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6), p.244.

과격화되어 무력개입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다. 10월 9일 라이프치히 게 반트하우스의 수석지휘자이며 명망이 높은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 희극인 베른트-루쯔 랑에(Bernd-Lutz Lange), 신학박사인 피터 짐머만(Peter Zimmermann)이 시민사회진영을 대표하여 사회주의통합당 라이프치히 당 당 간부 세 명과 논의한 후 ‘6인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호소문에서는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뿐 아니라 향후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방향을 놓고 동독 정부와 토론을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시위대 역시 몽둥이와 돌맹이가 아닌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평화적으로 표출하였다.²⁰¹⁾ 10월 16일 라이프치히 칼 마르크스 광장에는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하여 시위를 벌였다.

② 동독의 대응: 여기까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통합당이 유혈진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혁명을 연구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인 테다 스카치 폴은 “사회혁명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와 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독립된 행정력과 강제력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²⁰²⁾라고 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의 ‘사회’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사회의 불만에 대응하거나 혹은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 조직으로 그 분석을 확장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즉 국가의 비효율적인 행정력과 상실된 강제력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사회혁명을 추동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혁명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혁명으로 인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력’과 ‘강제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찰력과 군대의 숫자가 부족한 경우이며, 둘째는 사회혁명을 주도하는 집단이 정당성을 독점하여 경찰과 군대를 포함한 국가기구의 구성원을 조직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숙련된 경찰력과 병력은 존재하지만, 정치 엘리트 사이의 갈등으

201) 크리스치안 퀴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p.363.

202)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14.

로 인한 제약 때문에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53년 베를린 봉기 당시 동독은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력과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하였다. 하지만 1989년 동독의 봉기에서는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9월 22일 호네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진압하라!” 는 확실한 지시사항을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정치국 내의 온건세력이 유혈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호네커와 밀케는 질서유지를 강조하였다. 당시 동독은 슈타지, 경찰, 인민군, 공장민병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87년 동독인민군(NVA, Nationale Volksarmee)의 규모는 약 17만 3000명 정도로 10-11개 사단의 규모였다. 이 정도의 군 규모라면 물리적인 진압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동독의 군대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 중간간부 및 하위관리직의 이탈도 무혈 시민혁명에 크게 기여했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당, 슈타지, 군은 최고지도부에 실망하였고 불만이 컸다. 가레츠 데일에 따르면, 같은 해 슈타지는 체제에 반대하는 선전물을 지니거나 배포하는 자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명령에 반발하였다. 예컨대 당시 정치국위원과 슈타지 내에서 4성 장군에 해당하는 직위를 맡고 있었던 루디 미테그(Rudi Mittig)조차 반체제 인사들과 그 지지자 그리고 이탈자들을 적이라고 간주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10월 초에는 약 10만여 명의 당원이 사임하고 탈당을 하였다. 시위대를 진압하는 작전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군인도 없었다.²⁰³⁾ 10월 31일과 11월 4일 시위에 개입하기 위한 예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었고, 11월 10일에는 군대의 투입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군 지휘부는 당의 명령에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일선에서도 투입 명령은 거부되었다. 국경수비대 제42연대장은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자의적으로 내렸고, 포츠담에 위치한 국경수비대 제44연대장은 비상 명령을 무시하였다. 장벽 붕괴 하루 후인 1989년 11월 11일에 군 당위원회가 개최되어 호네커의 친구이자 개입을 명령하였던 국방장관 하인즈 케슬러의 퇴진을 결정하였다.²⁰⁴⁾ 또한,

203) Gareth Dale, *The East German Revolution of 1989*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7), pp. 17.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과거처럼 군대를 파견하여 시위를 억압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하였고²⁰⁴⁾ 동독지도부에게도 유혈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분명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동독지도부가 유혈진압 카드를 내려놓고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한 까닭은 그들이 이미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불복하는 사단장과 연대장을 교체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커서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 무력진압이 전개될 경우 당장 서독과 서방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분명했다. 이는 추가 차관도입 불가, 서방 진영은 물론 동구권에 의한 경제제재, 소련의 지지 철회를 초래할 수 있었다. 차관도입과 만기연장 거부, 경제 제재 등이 실시될 경우 비효율적인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회적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지만, 국가의 복지제도로 간신히 달래던 주민들이 격분하여 다시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중국 정부 역시 천안문 진압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부 엘리트들의 의견 조정과 손익계산 후에 유혈진압을 실시하였다. 중국 역시 이 사건 이후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을 지속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동독의 경우 중국과 비교할 때 반체제 운동이 훨씬 더 강력했으며, 경제는 더 허약했고, 대외적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소련은 동독 내부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지만 유혈진압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서구의 거센 불만과 항의를 접수한 소련이 사회주의통합당은 유지하되 지도부를 모조리 교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종교인이면서 반체제 운동가였으며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라이너 에펠만(Rainer Peter Zimmermann)은 동독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치에 개입하였다면 독일통일 문제는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만일 군

204)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서울: 팔복원 1996), pp.101-103.

205)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직후 동독의 주민들이 소련군사시설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고르바초프에게 전달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사항을 콜 수상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콜 수상은 KGB 혹은 슈타지가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을 인위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헬무트 콜, 김주일 역,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냄, 1998), pp.97-98.

부가 개입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외교 문제가 발생하여 독일 통일과정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무력사용 혹은 쿠데타가 발생해도 이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미 노쇠한 사회주의 체제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키기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당시 동독의 상황에서는 무력사용이 아니라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외교를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물론 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설사 주민들과 합의를 하여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혹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해도, 탈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은 피할 수 없었다. 호네커 서기장의 사임부터 체제의 몰락은 시작되었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사회주의 체제는 그 기능과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식물 상태나 다름없었다. 11월 10일 베를린 연설에서 빌리브란트가 “아무것도 그것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지는 않는다.”²⁰⁶⁾라고 언급했듯이 동독은 이미 다른 유형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2. 사회주의 체제 개혁시도와 민족의 부흥

전국적인 시위의 발발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의 체제는 엄청난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통합당은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개혁적인 인물 한스 모드로를 총리에 임명하여 체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당원이 사회주의 통합당을 탈당하였으며 수십만의 주민들이 동독을 탈주하여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평화집회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하였던 시민운동진영 역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노이에스 포룸을 비롯한 여러 자발적인 정치조직들은 경직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였던 것이지 사회주의라는 이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서독의 자본주의에 흡수당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다소 이상적이고 심지어는 몽상적인 청사진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206) 빌리 브란트, 『빌리브란트-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서울: 하늘땅, 1990), p.514.

이 시기 동서독 양측에서는 민족주의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패전 이후 양측은 민족주의의 발현을 자제하였지만 격동의 시기에 다소 평화로운 형태로 부활하였다. 또한 헬무트 콜 수상은 사민당의 동방 정책을 계승에서 벗어나 온갖 지략을 발휘하여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안팎으로 흔들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사회주의 통합당의 수습안, 시민운동진영의 몰락, 민족주의의 부흥 그리고 1990년 3월 18일 선거부터 시작된 통일의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

1) 한스 모드로의 개혁 시도

① 한스 모드로의 등장과 지도부의 개혁 시도: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Hans Modrow)가 수상에 선출되었다. 일련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의 주류와는 조금 불편한 관계였지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지닌 모드로가 등판한 것이었다. 그는 1973년부터 동독의 대도시인 드레스덴의 서기장을 지냈으며 공개적으로 당의 노선과 호네커를 직접 비판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모드로는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에는 선발될 수 없었다. 하지만 동독의 고르바초프로 기대를 받았던 모드로의 개혁 지향성과 존경받는 인품 덕분에 그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독일연방의회와 유럽의회 의원을 맡아서 정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²⁰⁷⁾ 한스 모드로의 등장은 상징적인 변화뿐 아니라 통치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스 모드로는 사회주의 통합당의 서기장이 아니었다. 그는 의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가지도자로 선출되었다. 비록 공산당의 일당독재구조 아래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아니었지만, 당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형식적으로나마 의회의 대표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모드로는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외교를 통해서 서독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가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207) 동독 출신으로 김일성대학교를 졸업한 튀디거 프랑크 교수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당시 사회주의 개혁을 상징하는 한스 모드로를 초청하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튀디거 프랑크 교수는 서독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드로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북한에게 보다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ire the speech writers: An East German’s perspective on President Park’s Dresden Speech” *38 North* 2014년 4월 3일.

첫째, 정치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모드로는 11월 16일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 발표문은 18/19일 당 기관지인 노이에스 도이칠란드에 발표되었다. 그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약속하였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립내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5개의 정당(사회주의통합당, 동독 기민당, 독일민주농민당, 독일자유민주당, 극우성향의 독일국민민주당)이 모두 내각에 참여하고 25개의 장관직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였다.²⁰⁸⁾ 모드로는 “더 나은 사회주의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으며 삶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체제일 것이다. 개인주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유연성은 보장될 것이다!”²⁰⁹⁾라며 나름의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사회주의 통합당의 지도적인 위치를 보장하였던 1조를 삭제하였으며 이 조치가 취해지기 하루 전날인 11월 30일에는 1968년 체코의 침공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동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였다.²¹⁰⁾ 이러한 유감 표명은 체코에 대한 사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동독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12월 7일에는 ‘원탁회의(Runde Tisch)’가 출범하였다. 사회주의 통합당을 비롯하여 의회에 진출한 정당과 노동조합, 여성조직 등 제도권 정치세력과 노이에스 포름, 사회민주당, 지금 당장 민주주의 (Demokratie Jetzt), 민주 쫓기 (Demokratischer Aufbruch)등도 합세하였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정부와 재야 세력이 협치를 통해 국가를 재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 선거법, 정당법, 새로운 헌법, 경제 분야의 실무단을 조직하였다. 또한, 악명 높았던 슈타지를 해체할 것을 협의하였다. 비록 ‘원탁회의’는 공식적인 정부 조직은 아니었지만, 모드로의 측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안건들의 논의하였다.

특히 변호사이며 개혁적인 인물인 그레고리 기지(Gregor Gysi)를 사회주의 통합당 대표로 선출한 것도 큰 변화였다. 그는 노이에스 포름 인사

208) “Eine Regierung der Koalition, eines neu verstandenen kreativen Bündnisses” *Neue s Deutschland* 1989년 11월 17/18일 1면.

209) “Diese Regierung wird eine Regierung des Volkes und der Arbeit sein” *Neues Deutschland* 1989년 11월 18/19일 3면.

210) “CSSR-Aktion 1968 aus heutiger Sicht nicht mehr zu akzeptieren” *Neues Deutschland* 1989년 12월 1일 1면.

들의 변호를 맡았던 경험도 있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서독이 이룬 성과를 아래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는 서독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들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 부문에서 독점에 저항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업에서의 공동결정,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여론의 위치와 새로운 사회 문화 운동, 고도의 과학기술발전, 지역의 참여와 문화적 지원 등을 본받아야 합니다.” 211)

하지만 그레고리 기지는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독 그리고 미국과 나토는 제국주의적이며 국제적인 군산복합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동독이 취할 방향은 독점자본주의의 길이 아니며 스탈린체제의 관료적 통치에서도 벗어난 ‘제3의 길’임을 강조하였다. 12월 17일 기존의 사회주의 통합당의 명칭을 ‘사회주의통합당-민주사회당(SED-PDS)’으로 변경하여 이미지 쇄신을 도모하였다. 사회주의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다른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당명처럼 민주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동독의 주권 고수’, ‘헌법에 기초한 정치적 다원주의(민주적인 의회)’, ‘제한받지 않는 인민과 그들에 의한 통치와 법치’, ‘생산적인 경제와 환경 친화적인 국가건설’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외에도 사회민주당원이었던 아구스트 베벨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스프타구단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이 아니면, 주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둘째, 새로운 동독지도부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켜야 했다. 하지만 모드로의 개혁안에서는 경제개혁 방안이 충분하지 못했다. 동독지도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원칙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콤비

211) “Wenn wir alle für die neue Partei streiten, wird sie stark bleiben!” *Neues Deutschland* 1989년 12월 9일 3면.

나트와 개별기업에 더 많은 독립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협동농장의 농부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들을 철폐할 것을 공언하였고, 금융·대부·경영 등과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하였다. 또한 성과급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²¹²⁾ 하지만 이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동독의 경제개혁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원칙을 수용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독의 경제개혁안 및 통일방안은 사전에 소련과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²¹³⁾ 물론 동독의 경제학자들과 실무진들은 모드로의 개혁안보다 더 진전된 방안들을 기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1989년 말과 1990년 초 사이에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까운 수준의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논문들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코메콘 국가, 유럽공동체와 양립 가능한 경제구조의 형성, 소유권의 근본적인 개혁, 기술혁신, 시장개방, 경쟁구조의 확립 등이 논의되었다.²¹⁴⁾

셋째,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여 서독으로부터는 지원을 받고 쿨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모드로는 동·서독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동서독 기본조약’을 더욱 발전시킨 ‘조약공동체 (Vertragsgemeinschaft)’ 체결을 제안하였다. 동독지도부의 이 안건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먼저 동독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서독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조약공동체’는 서독의 민심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212) Dirk Philipsen, *We Were the People*, p.95.

213) 한스 모드로의 연설 전문이 실린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의 같은 날의 다른 지면에는 고르바초프의 인터뷰가 실렸다. 전반적으로 동독정부의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독일과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서독으로의 통일에 대한 동독정부와 고르바초프의 부정적인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Gorbatschow: Wir begrüßen, wus in der DDR geschieht” *Neues Deutschland* 1989년 11월 18/19일 1면.

214) 빌프리트 에틀·위르겐 뢰거·디터 발터, “동독에서의 경제개혁에 관한 근본사상” K.모르겐슈테른 외 저, 신현준 편역,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서울: 중원문화, 1990), p.142.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동독 측은 ‘조약공동체’를 통해서 서독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며 동시에 급진적인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주변국(프랑스, 영국, 소련)과 서독 야당의 지지를 얻어 콜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② 개혁안의 좌절과 평가: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한스 모드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개혁안은 실제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첫째, 의회에서 지명된 모드로 정부의 정당성은 높지 않았다. 의회는 사회주의 통합당과 위성정당의 독재 시기인 1986년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1986년 총선거와 1989년 지방선거 모두 민주적이지 못했고 조작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였다. 따라서 개혁적인 모드로가 인민의회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절차적 정당성은 여전히 취약하였다. 물론 그의 취임 이후 의회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한 것은 중요한 성취였다. 또한,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부질없고 무모한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특히 연립정부 구성, 정치적 다원주의 선포, 공정한 선거 보장 등은 이 체제가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분명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를 극복한 것이었다. 이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거부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구체제의 악행들이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고 선전하였던 당의 최고위 간부들이 누렸던 특권과 사치에 대한 보도는 모드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가치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아울러 슈타지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노이에스 포룸을 비롯한 시위대가 슈타지 본부로 들어가 시설을 장악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막았다.²¹⁵⁾ 1990년 1월 15일 슈타지의 해체를 실행하여 8만 5000여명의 요원 가운데 3만 명을 해고하였으며 우편과 전화 감시를 중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파기는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 비

215)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회고록: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증언하다』 (경기도: 한울, 2018), pp.261-262.

록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분명 정권의 개혁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독의 지도부는 경제체제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였다. 당 지도부의 선량한 의지와 과감한 결단만 있으면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경은 단순히 의지로만 이룩할 수 없는 사항이다. 특히 동독지도부뿐 아니라 반체제 진영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개혁안은 여러 모로 한계가 있었다. 당시 서독 측은 개혁안 가운데 특히 투자보호협정이 매우 미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외국자본의 투자 한도가 전체 자본 규모의 49%에 불과하였으며, 합작기업의 경우 다른 민간 파트너를 선임할 수 없었다. 특히 서독과 해외투자가에게 동독 재무체계 자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²¹⁶⁾ 동독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투자자금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한스 모드로의 자서전에는 자신이 수립하였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집권했던 시기 콜의 전략에 경도된 고르바초프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²¹⁷⁾ 한스 모드로와 사회주의 통합당은 당시 개혁을 추진할 힘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방제’를 주창하며 통일에 대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가능하면 서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동독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1990년 1월 30일 모드로는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으로 남을 것을 제안하였고 동독의 암울한 경제적 상황을 전달하였다. 모드로는 고르바초프가 콜을 압박하여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하였지만, 고르바초프는 모드로의 말을 끊고 이 사안은 소련의 수상인 리카초프와 만나서 상의할 것을 요구하였다.²¹⁸⁾ 사실상 모드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다. 이처럼 동독의 경제개혁은 서독의 지원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설사

216)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서울: 통일부, 2016), p.207.

217) 그렇지만 한스 모드로는 고르바초프를 비난하지는 않으며 그로 인해 거대한 변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218) Hans Modrow, *Perestroika and Germany: The Truth Behind the Myths* (London: Marx Memorial Library, 2014), p.88.

서독이 지원해도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려웠다.

동독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 역시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제약하였다. 국영기업과 콤비나트의 전면적인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었다. 즉 기업의 운영진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협상력이 높은 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선부른 경제개혁은 동독지도부의 정당성을 훨씬 더 심하게 침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대(大)전환기(Die Wende) 동안 동독의 노동계급은 수동적으로 상황을 방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동독의 노동자가 시민의 자격으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일의 체제 변화는 폴란드처럼 노동자가 주축이 된 혁명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이 노동자들이 반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컸다. 실제로 통일 이후 1991년 동독지역의 생산성은 약 30%가량 하락하였다고 한다. 물론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이 가능하였겠지만, 정당성이 약한 모드로 정부는 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모드로 정부 시절 정치적인 불안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도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분명 동독의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과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말뿐이었으며, 단기간 내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

셋째, 헬무트 콜 수상은 동독의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통일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콜 수상 역시 모드로의 경제개혁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모드로의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증언하였다.²¹⁹⁾ 하지만 노련한 정치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스 모드로는 1989년 12월 14일 드레스덴 정상회담에서 120억 마르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요청

219) 헬무트 콜,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p.190.

하였지만, 콜 수상은 원론적 주장만 하면서 사실상 그 제안을 물리쳤다. 이는 11월 6일 서독의 경제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이 결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들은 “이 회의에 참석한 차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서독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동독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²²⁰⁾고 결의하였다. 서독 측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동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기존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다. 콜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서독으로 이탈하는 주민들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독 특히 베를린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지하였다. 1990년 3월 총선에서 구공산당인 민주사회당은 베를린에서 30%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 수치는 당시 수도인 베를린의 생활 수준이 동독의 다른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에 구공산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공산당의 당 조직이 시민운동진영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 외에도 동베를린 주민들이 이 과도기 기간에 서베를린을 쉽게 방문하여 그곳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공산당을 지지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개혁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모드로 정부와 신임 서기장인 그레고르 기지의 개혁안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필립 켈리코와 콘돌리자 라이스가 “모드로가 등장한 시기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콜은 동독 주민들의 희망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잡지 못했을지도 모른다.”²²¹⁾고 평가할 만큼 모드로의 개혁 방향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3월 18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체제의 유

220) BARE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서울: 통일부, 2016), p.200.

221) 필립 켈리코, 콘돌리자 라이스, 김태현, 유복근 역,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 경제술연구』(서울: 모음북스, 2008), p.486.

형은 확실히 변했다. 이 시기의 동독은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탈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전체주의 혹은 후기-전체주의) 유형에서 확실하게 이탈하였다.

2) 시민운동진영의 주도권 상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총선에서 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기독교민주주의연합(CDU)이 40.9%를 확보하여 제1당이 되었다. 선거의 승리로 말미암아 동독의 제도권 내에서 통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독의 사민당과 연대하였던 동독의 사민당(SPD) 우세가 예상되었지만 21.84%를 얻는 데 그쳤다. 구공산당인 민주사회당은 16.33%의 득표율로 선거에서 참패하여 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시민운동진영 역시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점이다. 노이에스 포름이 중심이 된 ‘동맹90(Bündnis 90)’은 2.9%를 얻었다. 라이프치히와 기독교 가치에 기반을 두고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라는 이름으로 콜 수상 및 기독교민주연합과 연대한 ‘민주궐기당(Demokratischer Aufbruch)’의 득표율은 0.9%에 불과하였다. 동독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하였던 시민운동진영의 몰락은 매우 충격적이다. 여기서는 동독의 반체제진영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콜의 적극적 개입이 사회주의 개혁의 시도를 어떻게 물리치고 통일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89년 9월 9일에 출범한 ‘노이에스 포름(Neues Forum)’은 동독의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저항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단체였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는 질서를 원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고, 자신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세계 무역과 수출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 산업국가에 종속되거나 채무자로 전락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채권자 혹은 약탈자가 되지 않는 조건 아래 세계 무역과 수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다.²²²⁾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을 확실하

222) “Founding Appeal of the New Forum, 9 September 1989” In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p.40.

게 보여주었다. 노이에스 포럼은 동독 헌법 29조와 제정된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국은 이 단체가 반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승인해 주지 않았다. 반체제 운동 혹은 민주주의적인 운동이 더욱 가열된 11월 8일에야 가까스로 노이에스 포럼은 공식적인 사회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노이에스 포럼이 주로 활동한 무대는 제도권이 아니라 거리였다. 왜냐하면, 당시 시민운동진영에는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이에스 포럼은 비록 느슨하게 조직되었지만, 이들이 제시하였던 개혁의 아젠다는 많은 동독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11월 중순 약 20만 명의 주민들이 노이에스 포럼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이에스 포럼은 동독의 교회와도 전략적으로 연대하였지만, 거리를 두기도 하였다. 노이에스 포럼의 창립자 중의 한 사람인 예술가 바르벨 볼리(Bärbel Bohley)는 동독의 교회가 민주화운동을 후원하고 지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교회는 제도권 안에 있는 반대세력에 불과했다. 따라서 더 풍부하고 민주적인 아젠다를 가진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이에스 포럼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희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동독의 억압적인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서독의 발전상에 대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실제로 노이에스 포럼에는 상당수의 개혁적인 사회주의통합당 당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때문에 바르벨 볼리는 엄밀히 말해서 노이에스 포럼은 반체제 진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²³⁾

노이에스 포럼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은 주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시민봉기를 통해 주권의 소재를 확인한 것을 큰 성과로 간주하였고, 이 동력을 활용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11월 4일 베를린 알렉산더 플라츠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당시 동독의 개혁을 요구하였던 많은 지식인이 총출동하였다. 당시 노이에스 포럼의 적극적인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스타 볼프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23) Dirk Philpsen, *We were the People*, pp.292-293.

“모든 혁명운동은 언어의 해방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갑자기 자유롭게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을 이제 제법 큰소리로 외치게 된, 우리는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지금 아니면 결코 이를 수 없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이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아무도 떠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도피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메아리쳐 옵니다. ‘무엇인가를 하라!’ 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세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자세로 바뀔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조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행정개혁...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문도 읽어야만 합니다.” 224)

크리스타 볼프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또 다른 문인인 슈테판 하임과 크리스토프 하인 역시 유사한 입장에서 자신의 비전을 주민들에게 개진하였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그것은 스탈린적 사회주의가 아닙니다-는 민주주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그리스말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225)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 아래 하나의 민주사회를 창출해냅니다. 사회주의란 말을 만평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 그런 사회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적합하고 인간을 구조에 종속시키지 않는, 그런 사회를 건설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과업을, 특히 여러 자잘한 과제들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뜨개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226)

224) 크리스타 볼프, “전환의 언어: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의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 · 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서울: 창작과 비평, 1991), pp.54-56.

225) 슈테판 하임, “11월 4일 시위에서의 연설: 베를린 알렉산더광장” 프리데만 슈피커 · 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pp.57-58.

226) 크리스토프 하인, “한 늙은 남자와 거리: 베를린 알렉산더광장에서의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 · 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p.60.

이처럼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 저항하였던 반체제진영의 인사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원했다. 이들은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주의를 꿈꾸었다. 동시에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착취하고 있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동독의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오랜 시간 갈등하였던 저항적인 예술가들의 신념에 찬 연설은 많은 주민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어떤 제도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체제를 희망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이들은 동독 사회주의가 그나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특히 예술가들과 문인들의 피상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로는 이미 사회주의의 억압과 비효율성에 실망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의 개혁을 기획하였던 시민운동진영은 급속하게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콘라드 자루시는 이러한 변화를 ‘전환 속의 전환’이라고 표현하였다.²²⁷⁾ 이처럼 주민들이 사회주의의 개혁보다는 서독으로의 통일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동독의 시민운동진영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대통령을 지낸 요아힘 가우크 목사는 “기초단체 내에서는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지금 민주주의’의 울프강 울프만은 통일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노이에스 포룸의 바르벨 불리는 동독이 서독으로 팔려가는 것을 우려하며 경고했다. 로스토크에서 나와 번갈아 목요예배를 이끌 어갔던 가까운 동지 헨리 로세와 나의 동료 목사들은 통일 후에 닥칠 자본주의의 결과를 우려했으며, 생필품 폭등과 높은 집세 그리고 실업 등을 걱정했다.”²²⁸⁾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였다. 물론 당시 모든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는 남는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다른

227) Konrad Jarausch, *The Rush to German 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87.

228) 요아킴 가우크, 손규태 역『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회고록: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증언하다』, p.250.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집단들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 친화적인 분위기가 우세하였다.

시민운동진영과 주민들의 의견이 이처럼 급격하게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동독과 서독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죄로 인하여 전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 따라서 동서독의 통일은 독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동독 주민들은 이러한 가치에 동의했다. 더 중요한 요인은 민족주의의 부흥과 쿨 수상의 적극적인 개입이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고 여기서는 시민운동진영의 역량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첫째, 시민운동진영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노이에스 포름은 제도권 정당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자발적 결사체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들은 개혁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체제가 바뀌고 주민들의 온전한 시민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이들 스스로가 권력을 획득하고 개혁을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물론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시민운동진영은 국가의 통치와 경제운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었다. 특히 1989년 말의 상황은 경제적 침체가 경제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세력은 정치개혁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제운영 경험이 없었던 시민운동진영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주저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남부의 반체제 인사들은 노이에스 포름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독일포럼정당(Deutsche Forum-partei)’을 조직하였다.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의회 밖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뒤늦게 총선 후보도 내세웠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²²⁹⁾

둘째, 시민운동진영은 구공산당내의 개혁세력과 연대하거나 혹은 당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노동계급과 연대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해야만 했지만 이에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동독의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는 필립센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진영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원했다면 굳이 자기 자신과는 아니라도 사회주의 통합당의 개혁적인 신임 대표였던 그레고르 기지와 연대해야만 했다고 말했다.²³⁰⁾ 즉 구공산진영

229) Konrad Jarausch, *The Rush to German Unity*, p.119.

230) Dirk Philpsen, *We Were the People*, p.363.

의 개혁파와 시민운동진영이 연대한다면 동독 사회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공산당내의 개혁세력과 시민운동진영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양자 간의 동지애와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은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던 시민운동진영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과 연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학자인 린다 풀러는 두 집단 사이에 연대가 실패한 까닭을 동독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지식인과 노동계급 사이의 양극화와 감정적 간극으로 설명하였다. 1980년대 중반 당의 고위직은 물론 국영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는 모두 대학 혹은 기술대학을 졸업한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대학졸업자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고 승진할 수 있었던 반면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전되었던 노동자들은 기업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점 소외당했다. 또한, 폴란드에서처럼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투쟁한 경험도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지식인들을 공산당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다.²³¹⁾

노동계급의 이러한 냉소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시민운동진영의 지도부는 공산당 최고위지도부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가령 작가연맹은 회원들을 위해 연간 예산의 절반을 연금보험으로 책정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금액을 증액시키기도 하였다. 작가들은 정부로부터 편리한 대출, 다양한 지원금, 주택과 자동차 등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휴가 중 숙박지 이용, 해외여행 승인과정에서 편익을 얻었고, 출판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²³²⁾ 즉 사회적 기회 및 물질적, 문화적 자본의 불평등한 점유는 양자 간의 연대를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물론 일부 노동계급 역시 사회주의의 존속을 원했고 노이에스 포룸과의 연대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공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였던 한 인사는 “개인주의적인 노이에스 포룸의 사람들은 우리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공장이나 사업체 내부에 노이에스 포

231) Linda Fuller, *Where Was the Working Class? Revolution in Eastern Germany*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7장 참조.

232) 요아힘-뤼디거 그로츠, 서정일 역, 『문학이 남긴 유토피아의 흔적-40년 동독의 문학과 정치』 (서울: 예림기획, 2000), p.142.

름의 하부조직을 건설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사실 우리 공장 내부에서도 노이에스 포룸을 지지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다.”²³³⁾ 고 회고하였다.

이는 분명 시민운동진영의 실책이었다. 비록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FDGB’는 당의 하부기관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존재하였던 ‘사업장협의회(Betriebsrätegesetz)’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개별 기업의 자발적 노동조합은 일정 부분 신뢰를 얻고 있었다. 1991년 조사에서 ‘노동조합’은 주민들로부터 약 68%의 지지율을 얻었다 (매우 좋은 영향 13%,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 55%)이었다. 이는 서독지역의 47%(매우 좋은 영향 10%,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 37%)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²³⁴⁾ 이뿐 아니라 지역적인 편향도 문제였다. 노이에스 포룸은 주로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베를린의 생활수준은 다른 동독지역보다 훨씬 높았으며, 작센지방(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은 산업단지로 일종의 ‘러스트 벨트’였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의 침체가 본격화되었다. 동독 정부 역시 소비재 공급에 집중하여 시설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남부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비폭력 시위를 지지하였던 노이에스 포룸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이에스 포룸은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과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²³⁵⁾ 정리하자면 시민운동진영은 노동계급을 포섭하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사회주의 개혁안으로 이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갈 곳을 잃은 노동계급은 당면한 문제를 개혁이 아닌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3) 민족의 부흥과 독일의 통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통합당과 시민운동진영의 역량 부족은 사회주의 개혁운동이 실패한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베를린 장벽 붕괴 시점부터 동독에서 부활한 ‘민족’ 의식의 영향력을 간

233) Dirk Philpsen, *We Were the People*, p.290.

234)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The Press, *The Pusle of Europe: A Survey of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Attitudes*, Appendix, p.55.

235) Steven Pfaff, *Exit-Voice Dynamics and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The Crsis of Leninism and the Revolution of 1989*, pp.207-211.

과해서는 안 된다. 노이에스 포룸의 리더였던 바르벨 불리는 ‘우리는 국민이다’ 라는 구호를 내세워 동독 사회주의 체제와 대립하였던 주민들이 ‘헬무트는 또한 우리의 수상이다’ 라며 통일을 요구하였던 동일한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²³⁶⁾ 이처럼 이 시기에 새롭게 태동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개혁을 제한하였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통한 체제 전환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였다.

① 민족의 부흥: 동독은 이미 1955년도부터 ‘두 국가론 (Zwei Nationen Theorie)’ 을 주창하였다. 1970년대 동서독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양 독일의 분립을 의미하는 ‘경계설정(Abgrenzung)’ 원칙을 고수하였다. UN가입과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동독이 서독과 관계 없는 독자적인 국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서독 역시 원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을 개별적인 주권을 지닌 국가로 대우하였다. 1987년 9월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이 최초로 본을 방문할 당시 동독 국가를 연주 (가사를 생략하였지만)하여 사실상 타국의 정상수준으로 의전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정부는 한 민족이라는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냉엄한 현실 때문에 ‘통일’에 대한 논의를 앞세우지는 못했지만 동방정책을 이어나가면서 접촉의 면적을 확대해 나아갔다. 헬무트 콜 정부가 반체제 운동과 동독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정부의 성과를 성실하게 이어받아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서독 내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²³⁷⁾ 특히 동독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사항이 수면 아래서 얻었던 신뢰였다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의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기쁨의 재회를 나누었던 것이 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당시 동서독 모두 거대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에게 100 마르크의 환영금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은 유명한 ‘카푸하우스 데스 베스텐스 (Kaufhaus des Westens)’ 백화점을 방문하여 과일과 음식 등을 구매할

236) Dirk Philpsen, *We Were the People*, p.362.

237)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 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호 (2008), p.367.

수 있었다.²³⁸⁾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비전과 따뜻한 동포애를 동시에 보여주었던 정책이었다. 12월 19일 헬무트 콜의 드레스덴 방문 당시 동독 애국가의 한 구절인 ‘통일된 조국 도이칠란드(Deutschland Einig Vaterland)’ 라는 슬로건이 서독 깃발과 함께 등장하였다. 그리고 12월 22일 콜과 모드로가 동시에 브란텐브루크 문을 개방하고 지나가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림 2-9: 콜의 드레스덴 방문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주민들>
출처: Der Tagesspiegel 2018년 3월 5일

한편 서독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독일의 민족주의와 통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²³⁹⁾ 이들은 민족주의가 낡은 이념일 뿐만 아니라 과거 나치즘을 태동시켰던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물론 이들이 평화와 화해라는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주체로 ‘민족’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에 더욱 방점을 두었다. 비록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은 콜 정부의 통일추진을 지지하였지만 사민당 당수 오스카 라퐁텐을 비롯한 당내 좌파 주류계열은 통일에 미온적이었다. 같은 시기 녹색당의 안체 볼머(Antje Vollmer)는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양 독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생태적 연방’을 제안하였다.²⁴⁰⁾

238) Deutsche Welle, “East Germans storm KaDeWe after Berlin Wall falls” 2019년 11월 7일.

239)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2호 (2009), 참조.

240) Jan-Werner Müller,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그리고 독일의 저명한 지식인인 쿤터 그라스와 위르겐 하버마스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1959년 『양철북』을 통해서 나치를 열렬하게 추종하였던 독일 소시민의 무비판적인 정신세계를 비판하였던 쿤터 그라스에게 독일의 재통일은 분명 위협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소수의 의견이었지 독일 주민들이 공유하던 생각은 아니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쿤터 그라스는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한 청년에게 통일국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국의 배반자’라는 모욕을 들었다.²⁴¹⁾

서독의 지식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시기 태동된 민족주의는 과거와 같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한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동서독 모두 과거 나치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통일’이 세력팽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잘 알려지다시피 서독은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했으며 냉전 가운데에서도 빌리 브란트는 사회주의 국가 폴란드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독일의 만행을 진지하게 사죄하였다. 동독은 나치즘의 출현이 타락한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반-파시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주의통합당의 공산계열 인사들이 소련과 함께 나치즘에 저항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물론 베를린 장벽을 ‘반-파시즘 장벽 (Antifaschistischer Schutzwall)’이라고 왜곡하기도 하였지만 동독 역시 과거사 문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반성하였다. 서독에 비해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낮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동독민족’을 강조하면서 ‘독일민족’의 긍정적인 면모들을 자신들이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메리 풀브룩이 주장하듯이 ‘민족주의’가 동독의 붕괴와 통일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의 몰락’이 체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²⁴²⁾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동된 ‘민족주의’는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포용할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서독에 편입하는 방안을 선

Identi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122-123.

241) 쿤터 그라스, “조국을 모르는 어떤 녀석의 짧은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p.99.

242) Mary Fulbrook, “Nationalism in the Second German Unification” In Ronald Speirs and John Breuilly eds, *Germany’s Two Unifications: Anticipations, Experiences, Response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5), p.253.

택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통일이 줄 수 있는 편익에만 온통 휩싸여 사회주의 체제를 개선하거나 통일 독일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계획하고 토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② 통일을 통한 체제전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헬무트 콜 수상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고조된 ‘민족주의’ 만으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콜 수상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띄운 여러 가지 정치적 승부수가 제대로 먹혀들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콜 수상이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주변국으로부터 통일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콜 수상이 동독에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안을 사실상 좌절시키고, 통일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다. 이 시기 콜의 대-동독 정책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외교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의 통일과정의 시기 구분은 앞절에서 언급한 위르겐 코카의 과도기와 통일을 모두 포함한 시기 구분과는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 (1989년 11월9일-1990년 2월10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서독과 주변국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서독의 통일을 승인하는 시기. 제2단계 (1990년 2월11일-3월18일): 동서독에서 통일의 논의가 제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콜 수장과 기민연의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거한 통일안이 정당성을 얻어 확립되는 시기. 제3단계 (1990년 3월19일-10월3일): 독일의 나토 주둔과 유럽통합 및 화폐통합과 같은 실무적인 사안이 추진되어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핵심쟁점에 따라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다. 실제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여러 전략이 동시에 기획되고 있었다. 독일통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현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은 모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도전이었다.

① 제1단계 (1989년 11월 9일- 1990년 2월 10일):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여겨지던 통일 문제를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하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폴란드에서 급히 베를린으로 향하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콜 수상은 하루 뒤인 11월 10일 미군 군용기를 빌려 베를린 쇤베르크 집회현장으로 달려갔다. 콜 수상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콜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베를린 쇤베르크 광장에서 “내가 이 순간 모든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이고자 하며, 서로 연대해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함께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이고, 통일이고 자유입니다.” 라고 외쳤다. 사실 콜 수상뿐 아니라 빌리 브란트 전 수상 역시 “유럽의 전역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독일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철조망과 죽음의 선으로 이루어진 분단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나는 ‘베를린은 살아있을 것이며 장벽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²⁴³⁾라며 통일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서독의 전 현직 두 수상은 서독의 국가를 열창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통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1월 17일 모드로의 연설이 새로운 독일 관계를 제안하자 콜은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았다. 모드로는 동독의 경제개혁을 위해 서독의 도움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 통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동독 측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분명 달라졌다. 헬무트 콜은 이 변화의 상황을 통일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11월 20일 동독의 지도부와 서독의 수상 비서실장인 자이터스와의 회담이 열렸다. 동독 지도부는 긴급 경제 지원을 요구하였고 자이터스 측은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콜 수상은 11월 23일 “우리는 모드로에게 이니셔티브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그의 제안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동독 공산당에 가해지고 있는 통일에의 압력을 약화하려는 기만 작전입니다.” 라며 이에 대해 비

243) Willy Brandt, “Growing Together, 10 November 1989” In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p.80.

관적인 입장을 보였다.²⁴⁴⁾

11월 28일 10개항 발표²⁴⁵⁾를 통해서 관련국들과 동독의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당시 서독은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여 사회주의통합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을 지체하여 이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모드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고르바초프의 양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동독을 강하게 압박할 수는 없었다. 1989년 12월 2일과 3일에 개최된 미국과 소련의 감동적인 몰타회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통일의 논의를 바로 진행할 수 없었다. 12월 19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모드로는 헬무트 콜의 10개 조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당시 서독 측이 동독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양 정상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콜의 드레스덴 연설은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유도하였다.

동독 측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월 26일 동독의 외무장관 오스카 피셔가 오스트리아 알로이스 모크 외무부 장관에게 양 독일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⁴⁶⁾ 나흘 후인 1990년 1월 30일 고르바초프가 동·서독의 통일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전까지 통일에 반대하였던 동독의 한스 모드로 역시 통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2+4 회담의 개최가 원칙적으로 공표되

244) 헬무트 콜,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p.123.

245) 10 개항은 다음과 같다. 1. 과도기간 동서독 간 여행의 자유를 촉진하는 기금조성에 기여 2. 환경, 인프라 및 통신 분야에서 동서독 간 협력의 지속과 강화 3. 동독의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전제조건으로 동독경제 지원 및 협력강화 4. 모드로우 총리가 제안한 계약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5. 동독의 자유총선거 이후 국가연합 형성. 6. 지속적이고 공정한 유럽의 평화질서를 고려하여 내독관계를 전 유럽의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추진 7. 공동의 유럽시장을 확대하는 무역과 협력조약의 체결 찬성. 독일의 재통일은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추진. 유럽공동체는 민주동독과 기타 중·남부 유럽의 민주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함 8. ‘유럽안보협력협의 과정(CSCE)’은 전 유럽 건설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존속되어야 함 9. 군비축소와 군비통제의 광범위한 진전 요구 10. 통일은 서독의 정치적 목표임.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84

246) “January 30, 1990 Memorandum of Conversation Foreign Ministers Alois Mock (Austria) and Oskar Fischer (GDR), Vienna”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문서번호: ÖStA, AdR, BMAA, IIPol 1990, GZ. 43.18.01/11-II.3/90.

었다. “독일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독일통일을 어떠한 국가 형태로, 언제, 어떤 속도와 조건으로 성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독일인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점에서 소련, 서독, 동독 사이에는 하등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고르바초프는 확인하였고, 콜 수상이 이에 동의하였다.” 는 내용이 2월 11일 발표되었다.²⁴⁷⁾

② 2단계 (1990년 2월 11일- 3월 18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한 이후에는 동독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이겨 통일을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만했다. 동독에서 기간을 앞당겨 3월 18일 민주적인 총선거를 치루기로 합의한 것은 큰 진보였다. 콜의 입장에서는 민족감정을 보다 확산시켜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지만, 동독의 상황이 완전히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비록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에 실시되었던 몇 가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콜 수상과 통일에 대한 지지는 상당하였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1990년 2월에도 자본주의 도입보다는 사회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즉 56%가 사회주의 개혁, 13%는 또 다른 대안, 31%가 자본주의를 지지하였다. 물론 이는 1989년 11월 당시 약 86%가 사회주의 개혁, 5%는 자본주의로의 복귀, 9%는 또 다른 길을 지지하였던 것보다는 발전한 것이었다.²⁴⁸⁾ 아래의 표에 따르면 시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라이프치히에서조차, 1990년 2월까지 한스 모드로의 지지율이 헬무트 콜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드로 개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고, ‘즉시 통일 지지’의 입장이 60%에 육박하였다. 그리고 노이에스 포룸의 지지도는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 자발적인 조직을 지지하고 있었다.

247) 호르스트 텔치, 윤여덕 역『329일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서울: 한독산협협동단지, 2007), p.177.

248) Konrad Jarausch, *The Rush to German Unity*, p.80.

선호도	11/13/89	11/20/89	12/11/89	1/15/90	2/12/90
모드로	56	48	62	38	61
콜	19	26	26	49	56
기지	-	-	36	4	11
노이에스 포룸	70	69	54	64	47
SED/PDS	-	-	9	2	5
독일을 위한 동맹	-	-	-	-	53
즉시 통일	-	-	18	31	59
향후 통일	-	-	55	52	33

<표 2-4: 라이프치히 시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989년 11월-1990년 2월>
출처: Muhler and Wilsdorf 1991, Steven pfaff p.241에서 재인용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정당이 통일에 우호적이었으며 구공산당인 민주사회당조차 동서독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동독의 선거결과에 따라서 콜 수상과 기민연의 정치적인 주도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당시 가장 큰 위협은 동독의 사회민주당이었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이 59%, 민주사회당이 12%, 기민연이 11%, 노이에스 포룸이 4%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²⁴⁹⁾ 사회민주당은 1989년 가을에 새롭게 조직된 정당이었으며 서독의 사민당과 연대하였다. 특히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켰던 상징적인 인물인 빌리 브란트가 서독 사회민주당 출신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1970년 빌리 브란트가 에르푸르트에서 빌리 슈토프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인파가 몰리기도 하였을 만큼 동독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다. 물론 동독에서 사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이전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동서독 관계도 진전될 것은 확실하였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콜과 기민연이 원하는 만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⁵⁰⁾

249) 이은정,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5: 화폐통합분야 관련 정책문서』(서울: 통일부, 2016), p.140.

250) 호르스트 텔칙은 1990년 5월 25일 사민당 소속의 동독 외무부장관인 마르쿠스 메켈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메켈은 화폐동맹, 경제동맹 및 사회동맹을 위한 국가조약에 대한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서독 사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동독 사민당조차도 지지하고 있는 이성적인 결정을 서독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서독 사민당을 비판하자, 메켈은 필요할 경우 라퐁텐에게 연락을 취해 그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라퐁텐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긴밀한

사회주의통합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나름의 계산과 전략이 있었다. 민주사회당에게는 자체적인 개혁안도 부재하였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였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 나름의 방안을 계속 제시하여 중도파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다. 만약 선거에서 충분한 득표를 하고 사민당이나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당시 동독 기민연의 경우 콜의 기민연과 명칭만 같았을 뿐 특별한 점이 없었다. 특히 동독체제에서 기민연은 위성 정당의 역할을 했을 뿐 적극적인 개혁 및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독의 기민연은 모드로의 연정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신선함이 떨어졌던 것도 분명 문제였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콜 수상은 통일과 화폐통합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2월 화폐통합을 공식화하여 통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만일 동독에서 사민당이 승리한다 해도, 경제통합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이었다. 소련의 외교적인 승인과 별도로 서독은 독자적으로 동독과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항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1월 12일에 서독의 연방재무부와 동독 측은 시장경제 도입과 화폐통합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추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2월 9일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골자로 하는 ‘통합된 경제와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화폐통합을 핵심적인 선거 캠페인으로 삼았다. 콜과 기민연은 “화폐통합은 동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서독 마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화폐이며 서독의 경제적 경쟁력과 풍요의 기초가 된다. 서독 마르크는 동독과 우리의 통일 조국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선전하였다.²⁵¹⁾ 단기간에

협력을 제안하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 즉 서독의 사민당이 화폐 통합에 상당한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동독의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 콜 수상의 정책 실행에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호르스트 텔치, 윤여덕 역, 『329일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 pp.301-302.

251) Helmut Kohl, “Kohl’s Campaign Promises, March 1990” In Konrad Jarausch and Volker Gransow eds,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p.123.

추진된 동서독의 화폐통합은 현재까지도 큰 논쟁거리이다. 당시 서독의 많은 경제 관료뿐만 아니라 동독 측에서도 1:1 화폐교환을 반대하였지만 콜 수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1:1 화폐통합은 중장기적으로 동독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령 서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동독 기업들은 서독의 화폐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뿐 아니라 동독의 기업은 서독의 기업 더 나가서 독일에 수출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과도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²⁵²⁾

콜은 더 나가서 정치적인 라이벌인 사회민주당을 공격하였다. 독일을 위한 동맹은 ‘PDSPDPDSPD’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민사당(PDS)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이 사실상 동일한 좌파정당이라고 공격하였다.²⁵³⁾ 사실 과도기와 선거기간 동안 서독의 사회민주당은 콜의 기민연 만큼 통일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980년대 야당으로 전략하였던 사회민주당은 기존의 ‘동방정책’ 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빌리 브란트 시절에는 이 정책이 동독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독 사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은 기존의 입장과 노선을 그대로 간직한 채, 동독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²⁵⁴⁾ 이 때문에 1989년 9월에도 동독에서 사회민주당을 건설하는 시도

252) 1990년 4월 5일 약 10만명의 동독주민이 동베를린 인민공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일중앙은행이 화폐교환 비율을 2:1로 설정한 것에 항의하였다. 사실 것은 동독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은 소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 비율로의 교환을 원했다. 실질적으로 개인 예금은 6000 마르크 까지 1:1로 교환이 가능하였으며 초과액수의 경우 2:1로 교환되었다. 동독 퇴직자의 연금은 또한 1:1의 비율로 지급되었다.

253) Konrad Jaraush, *The Rush to German Unity*, p.124.

254) 동독은 1982년 슈미트 수상의 사임과 동시에 동독 사회주의 통합당과 서독 사민당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이는 전임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양당간의 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동독 측에 제안하였지만 수용되지 못했던 정책이었다. 당시 동독은 보수적인 기민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민당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였다. 정권을 잃었던 사민당 역시 ‘동방정책’ 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동독과의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독은 ‘사회 민주주의’ 를 ‘반-사회주의’ 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비-사회주의적’ 으로 변경하였다. Timothy Garton Ash,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Books, 1994), pp.313-322.

를 반대하였다. 사회민주당은 동독의 사회주의 통합당을 대화상대로 간주하여 호네커의 후임자인 에곤 크렌츠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동독의 내부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이후에야 사회주의 통합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동독의 신생정당인 사회민주당과의 연대를 결정하였다.²⁵⁵⁾ 사회민주당의 다소 애매한 입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나,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콜과 기민연의 전략은 성공하였다. 기민연과 독일을 위한 동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민당과 민사당을 합친 것 보다 많은 의석수를 얻었으며,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동독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기민연의 득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당과 사민당은 30% 정도 득표하였다. 그리고 약 두 달 후인 1990년 5월 6일 지방선거에서 기민연의 득표율은 34.3%로 6% 정도 감소하면서 간신히 승리했다. 콜 수상과 기민연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었다.



<그림 2-10: 1990년 동독 총선 포스터 “더 이상의 사회주의는 NO! 자유와 번영 YES!”, “미래를 위한 귀환” >

255) Stephen Silvia, “Left behi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Eastern Germany” *West European Politics* 16:2 (1993), p.31.

③ 3단계 (1990년 3월 19일- 10월 3일): 헬무트 콜의 기민연과 독일을 위한 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당성을 얻게 되자, 기본법 23조에 기초한 통일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5월 18일 ‘서독과 동독 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의 체결에 관한 조약’ 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서독 화폐의 공급은 7월 1일부터이며, 서독의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화폐와 관련하여 동독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사실상 양국의 경제적 통합이 실무적 차원에서 가시화된 것이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돌파구도 마련하였다. 소련은 4월 28일 동·서독간의 화폐통합이 전승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하여 2+4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동독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1990년 5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소정상회담에서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를 가까스로 동의하였다.²⁵⁶⁾ 이로 인해 독일통일의 정치적인 장애물은 사실상 극복되었다. 8월 23일 동독의 인민의회에서는 기본법 23조에 의거하여 서독에 편입되는 안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8월 31일 서독도 이에 동의하였다. 소련의 경제지원에 대한 복잡한 실무적인 논의가 계속되었고 9월 12일 ‘독일 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 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0월 2일 동독 인민군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며, 10월 3일 마침내 통일이 이루어졌고 동독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소결

현대 민주주의를 전공하는 스티븐 레비스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

256) 필립 켈리코, 콘돌리자 라이스, 김태현, 유복근 역,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 경제술연구』, p.386.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257)

이러한 규범의 역할과 중요성은 비단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독재체제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환과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²⁵⁸⁾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붕괴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시민적 자유,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유럽적 현상이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규범이 약했던 베트남과 북한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훨씬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사회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그 경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계획 경제는 성장률은 낮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하게 운영되었다. 이는 동독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발전된 산업화의 경험, 근대적이고 정교한 법률, 발전된 고등교육 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독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권 뿐만 아니라 서구권에도 기계 설비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비교적 넉넉하게 의식주를 누렸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서독과 서유럽 국가의 발전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술을 혁신하기보다는 모방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기술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서독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차관을 도입

257)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박세연 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울: 어크로스 2018), p.132.

258) 이 주장을 조금 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노동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거부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을 계승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악셀 호네트의 지적과도 상응한다. 동독은 서독과의 대결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었고 이 원칙이 침해당할 때마다 ‘사회’는 ‘국가’에 유무형적인 저항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고 기술을 수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서구권에 대한 부채만 증가하던 형국이었다.

반면 동독의 주민들은 국가의 ‘상징’ 과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세뇌당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동독은 스탈린체제를 모델 (일당제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공식적 제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법치, 개인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와 같은 유럽적인 규범과 전통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하에서도 사회 영역에 남아 있었다.²⁵⁹⁾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독일의 전통 속에 내포된 근대적 가치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지식인, 예술가,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주권과 권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대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활용하여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 와 대립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독립적이었던 동독교회는 1980년대부터 환경, 평화운동을 포용하고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였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5년의 헬싱키 조약으로 인해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동독은 이러한 내부의 운동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장한 사회의 영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회세력들을 결집하여 사회주의를 무너뜨렸다.²⁶⁰⁾

259) 에곤 바르(Egon bahr)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서구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주도한 핵심적인 힘은 노동운동이었다. 그가 보기에 동독의 붕괴는 단순하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경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19세기부터 노동운동을 대표한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의 세력의 대결이었다. 즉 치열한 대결의 결과 독재적이고 관료적인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사회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었다. 김누리,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 통일 15년』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 59.

260) 이것은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의 경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혁명이 발생하였던 루마니아의 경우, 혁명의 도화선은 타미소아라시 개혁교회의 라스즐로 토케스(Laszlo Tokes)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87년 부임 당시 약 50명의 신도만 있었던 교회는 1989년 5,000 여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89년 정보부가 토케스 목사를 폭행하고 감금하자, 이에 반발하는 신도들이 반정부 투쟁을 하였다. 여기서 시작된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차우세스쿠의 몰락을 가져왔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공산당의 박해에도 천주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스테판 비신스키 추기경은 공산주의의 탄압에 맞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분투하였고 폴란드 사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또한 폴란드의 성직자인 카롤 보이티야(Karol Wojtyla) 추기경이 1978년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폴란드의 종교지도자와 사회운동가들은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1979년 교황의

사회주의 통합당의 지도부는 주민들을 단순히 탄압하고 억압만 한 것이 아니라 회유하고 참여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그 체제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었다. 동독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를 귀담아들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체제가 붕괴하는 시점까지도 동독의 관료적이고 전망이 부재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었지만, 동독이 구축하였던 사회제도를 온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동독의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한스 모드로 정부를 통해 사회주의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반체제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노이에스 포룸과 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은 사회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실험과 도전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서독으로 편입되는 길을 택했다.

방문은 사회 전체를 열광에 빠뜨렸으며, 수백만의 폴란드 주민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공산당의 억압적 정치체제를 비판하였다.

Ⅲ. 베트남: 체제개혁의 경로

베트남과 북한, 즉 아시아의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수립될 당시의 경제, 사회적 상황은 동독 및 유럽의 사회주의와 매우 상이하였다. 막스 베버는 그의 고전적 저작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건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관료제적 행정을 위한 조건으로는 재정 회계적인 전제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교통, 기술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관료제적 행정의 정확성은 철도·전보·전화를 필요로 하며, 점차 이러한 교통 기술에 얽매이게 된다. 사회주의적인 질서도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회주의적 질서가 자본주의 질서와 같이 합리적인 조건을, 즉 바로 사회주의를 위한 엄격하게 관료주의적인 행정에 요구되는 그와 비슷한 조건을, 보다 확고한 형식적인 규칙에 의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여기에 다시금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사이의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커다란 비합리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은 사회학이 무수히 확인해야만 했던 이율배반 가운데 하나이다.” 261)

막스 베버의 위의 주장을 조금 더 부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가 제대로 작동 및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도로 합리적인 관료체제를 비롯한 발전된 통신수단, 정교한 법률을 비롯한 근대적인 통치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합리적 행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될 경우,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증진을 목표로 한 본연의 목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생 사회주의 국가(북한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며 이점은 본 논문의 북한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베버가 언급한 관료제적 행정의 정확성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실정이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실 베트남을 침략하여 강압적으로 통치하였던 프랑스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해방 이후 건설된 베트남 민주

261) 막스 베버,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 (서울: 나남 2009), p.424.

공화국(북베트남),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남베트남, 그리고 통일 이후 수립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등은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고도로 발전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근대적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된 이후 국가의 ‘전제적인 권력(Despotic Power)’은 약해졌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권력 (Infrastructure Power)’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더 효율적이고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 베트남이 직면하였던 가장 큰 과제는, 남북 모두에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사회구조를 근대적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동독의 협동농장의 경우 다양한 품종은 아니었지만,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자국민들이 소비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었다. 콤비나트의 생산물 역시 서구보다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서구권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되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농업 협동화 정책이 실패하여 주민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그리고 소련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산업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즉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내적 결함과 모순이 극대화된 것이 아니라,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 수립의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사회의 영역’에서의 저항은 동독이나 동유럽만큼 강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가치와 윤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부의 종교 세력에 의한 시위 외에는 정치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고르바초프 효과’는 동독처럼 시민사회를 흔들기보다는 당내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제1절 1970년대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정책 방향

1973년 1월 27일 북베트남의 레득토와 닉슨 행정부의 헨리 키신저는 미군 철수와 종전을 골자로 하는 ‘파리 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을 체결하였다. 1969년 아시아 지역에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이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닉슨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였고,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며 조약에 따라 남베트남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켰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미군의 철수는 남베트남의 체제 붕괴를 초래하였다. 1975년 초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월맹군은 같은 해 4월 30일 사이공을 함락시켜 남베트남의 국가수반인 쓰엉 반민의 항복을 받아냈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가진 이후 1976년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포하고 기존의 국호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òa,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베트남은 비로소 외세를 격퇴하고 염원하였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 공산당의 최고지도부는 통일된 베트남의 미래를 낙관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제국주의를 격퇴한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최고지도부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무력의 격차를 극복했던 베트남 군인들의 의지, 국민들의 정신력과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경제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당 지도부는 이 승리를 베트남민족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이며 동시에 사회주의의 승리라고 간주하였다. 제4차 당 대회 연설문에서 나타나듯이, 당 지도부는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인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획 경제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베트남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재앙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 말부터 이미 사회주의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조심스럽

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장에서는 통일 이후 베트남의 지도부가 수립했던 정책과 그 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을 고찰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경제구조가 왜 베트남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해보겠다.

1. 북부에서의 미완의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상황

통일 베트남의 청사진은 15년 전 1960년대 북부에서 실시하였던 스탈린적 사회주의 건설 방안이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농업의 집단화, 국영기업을 통한 중공업화 정책,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미 북부에서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베트남 지도부는 이를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주의 청사진은 문제가 없으며 정책실패는 불안정한 외부요인과 전쟁 발발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겼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한 현 상황이야 말로 기존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북베트남에서도 농업 집단화와 산업화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베트남을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은 과거 북부에서의 전환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정책적인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먼저 1960년에 추진되었다가 전쟁으로 중단된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하고 이것이 통일 이후의 경제 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겠다.

1) 북부에서 중단되었던 사회주의 건설

1960년 제3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1961-1965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 발전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는 북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세 가지 과제가 논의되었

다. 그것은 ① 농업 집단화를 확립시키는 것 ②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③ 문화 영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여 사회주의적인 인간을 형성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다(이 사안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 노선이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3차 당 대회를 통해 이 정책을 북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 대회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것은 립 서비스에 가깝고 중공업 육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첫째 농업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농업 집단화를 도모하여 농업 상황의 안정과 공업화를 위한 잉여 생산을 이루고자 하였다. 당시 베트남 학자들은 베트남의 상황이 소련과 동구권과는 달라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은 1920년대 말 농업 집단화 정책과 동시에 트랙터를 이용한 대규모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동독 역시 대규모 경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농업기계를 제작할 수도 없었으며 이러한 경작 방식이 ‘베트남 지리에 적합한가?’ 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단화 정책이 농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가령 당내 경제학자들은 “산업화가 먼저 완료될 때까지 농업 집단화를 지체시킬 수 없다...소규모 자영농이 자신의 작은 토지를 위해 관개수로나 제방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협동농장에서만 용수확보가 가능하며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²⁶²⁾라고 분석하였다. 당 지도부와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적으로 산업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트랙터의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합리적 노동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현 베트남의 발전 단계에서는 기계화를 목표로 두지 않고, 협동농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증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업 집단화 정책은 사회주의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생산성 또한 증대시키지 못했다. 당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인센티브 부재: 이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만을 품도록 하였다.²⁶³⁾ ② 국가의 구매능력 부족: 당시 협동농장은 국가 기구

262) Nguyễn Khắc Viên, Phan Quang and Nguyễn Ngọc Oanh,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policy” *Vietnamese Studies* No. 13 (1967), pp.79-83.

에 완전히 종속된 하위기관은 아니었으며 형식적으로 독립성과 자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는 계획했던 양의 식량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반에는 협동 농장원 가운데 할당량을 판매하고, 초과로 국가에 파는 식량에 한해서는 10-20%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식량 수매가 안정적이지 않자 초과 판매 식량분에 대하여 약 50%가량의 보너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²⁶⁴⁾ 또한 수매량 증가를 위해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다.²⁶⁵⁾ ③ 당 지도부는 협동농장이 한해 농사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은 여전히 기존 마을 단위의 소규모 협동농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협동농장 내에서 협동적 생산이 아닌 개별 가구와 계약을 맺는 일이 상당히 일상화되었다. 예컨대 수리시설 정비와 같은 일부 필수적인 사안들은 공동으로 작업하였지만, 나머지 생산은 개별 가구와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계약된 양을 협동농장에 판매하고 추가적인 생산물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약제도가 환영을 받았던 까닭은 시간과 업무관리 그리고 텃밭 가꾸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분권화는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이 있었던 초반 3년 즉 1965-1968년 기간에

263) 커크빌렛은 인터뷰를 통해 농민들이 당시 농업 집단화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다섯 가지 불만을 제시하였다. 1) 잉여 처분권의 부재-협동농장에서는 추가 생산량의 20%만 개인 소유가 가능했음 2) 공동재산의 관리부실-계대로 관리되지 않은 농기구, 흑사당한 가축 3) 삶의 질의 하락 4) 다양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원 활동의 부담감 5) 전통가족의 해체-기존의 친족중심 농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 등이 주요한 문제점이었다. Benedict Kerkvliet, "Village-State Relations in Vietnam: The Effect of Everyday Politics on Decollectiviz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4 No. 2 (1995), pp.402-405.

264) Christine White "Agricultural Planning, Pricing Policy and Co-operative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 13 No. 1 (1985), p.101.

265) 베트남의 한 경제학자는 사상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농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국가가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만든다. 개인주의적인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사이의 경쟁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각각의 농민들은 농산물을 국가에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 시장에 판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농민들의 대다수는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국가에 판매하여 그는 조국의 독립 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다. 이처럼 정치적 의식이 고양된 농부들에게는 강압적인 방법은 전혀 필요가 없다. 만일 흉년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의 농부들은 기꺼이 농산물 가격이 높은 시장보다는 국가에 판매할 것이다" Vu Huy Bang, "The purchase of farm products by the state and the price problem" *Vietnamese Studies* No. 13 (1967), pp.141-142.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²⁶⁶⁾

이처럼 협동농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당 역시 한발 물러서서 비사회주의적인 경제운영방식을 묵인하였다.²⁶⁷⁾ 전쟁 중에는 식량 조달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협동농장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당의 방침을 위반하고 ‘은밀한 계약’을 실행하였던 빈 폭성의 서기 킴 응옥은 가벼운 질책만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과 지원은 분명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많은 젊은 남성들이 징집되어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여성 노동력으로 잘 대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들은 토지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었고, 전시의 특수한 긴장감이 결합하여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물론 산업화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정도였다.

둘째, 공업화의 진전 역시 매우 느렸으며, 사회주의 경영방식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베트남과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자본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산력이 높아진 후에야 비로소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레 주언 서기장은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의 전략이 수정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소련의 물질적인 지원과 지도를 받

266) Hy Van Luong, *Tradition, Revolution, and Market Economy in a North Vietnamese Village, 1925-200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p.182-189.

267) 당시 당의 경제학자 응우옌 쑤언 라이는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현재의 협동부문은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농업부문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상인들이 사적 시장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집단이 협동부문의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가족경영부문은 협동농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것은 협동농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가족경영부문은 현 단계의 협동농장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도 한다...(일부 간부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가족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들은 모든 것이 ‘계획’ 영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분의 시간에 텃밭과 가축들을 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협동 작업을 방치한다거나, 부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연발생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걷는 행위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좌경주의 오류는 과도하게 단순한 평등주의에 입각해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이 집중화될수록 협동부문이 더욱더 효율적이며 노동통제가 엄격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분야가 협동부문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협동부문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소득을 얻어야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Nguyễn Xuân Lai “The family economy of cooperative farms” *Vietnamese Studies* No. 13 (1967), pp.118-121.

는다면, 베트남은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생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산업화는 베트남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며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⁶⁸⁾ 종합하자면 당시 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선진 산업국가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농업사회인 베트남이 산업사회로 바로 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중공업화의 파급효과가 다른 경제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²⁶⁹⁾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요한 당 대회에서 중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재나 설비 그리고 전력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자본조달의 구체적인 계획은 필수적이다. 아마도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우방국의 원조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수립할 초기 단계부터 중국과 소련은 베트남의 중공업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예비단계인 3개년 경제발전계획 시절부터 소련과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베트남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공업 발전 사업은 너무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북베트남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았다. 현 단계에서는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였다. 예컨대 당시 북베트남에서는 상당한 양의 광물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었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개발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일부 광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기도 하였다.²⁷⁰⁾

268) Le Duan, "Socialist Industrialization the common cause of the entire people" In Le Duan, *On the Socialist Revolution Vol. II*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5), p.19.

269) 베트남의 중공업화 노선 수립에는 북한 측의 조언과 경험이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 1957년 7월 호치민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났으며 1958년 11월 김일성은 베트남에 방문하였다. 호치민 박물관에서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호치민은 평양의 의류공장과 천리마운동의 상징인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노동동원과 자체 과학 기술력을 통한 자력갱생의 성격이 강했다. 소련과 중국 측이 탐탁히 여기지 않는 중공업화에 대해서 김일성은 나름의 답변을 베트남 측에 한 것으로 보인다.

270) Balazs Szalontai,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in North Vietnam, 1955-56" *Cold War History* Vol. 5 Issue 4 (2005), p.416.

이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경영방식이 확립되지 못했다. 1963년 초 노동당 중앙운영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협동농장의 관리와 농업기술을 개선할 것, 경제와 금융관리 및 기술 발전을 유도할 것, 관료주의와 낭비나 부패를 근절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북베트남 경제에서 자발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인 단위로 자유로운 시장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²⁷¹⁾ 당 지도부 역시 당시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산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모방운동을 통한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도입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5년도부터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북베트남의 산업시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주의적 운영방식의 확립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국가 운영은 중앙 집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산되었다. 당시 베트남의 경제학자인 응우옌 쉐언 라이는 “중공업 우선 정책 노선은 지속될 것이지만 새로운 ‘탈-집중화’ 관리 및 기술 원칙에 따라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적 경제단위(약 1백-1백5십만 명 규모)를 구성하여 각 지역마다 산업, 농업, 금융, 시장을 형성하여 경제와 군사영역에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과 각 성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노동 중심, 원자재, 전력공급 등)를 건설해야 한다.”²⁷²⁾고 주장하였다. 이는 제3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노선과 상충되는 것이다. 전쟁 중에 이러한 분권화된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리 없었다. 레 주언 서기장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현재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과 상업점들이 분산되었거나 비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경제 관리, 수입-수출, 통신과 운송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국가의 공공 재산이

271) Communist Party of Vietnam, *50 years of activit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155.

272) Nguyen Xuan Lai, “The Economy of the D.R.V. Facing the Trial of War” *Vietnamese Studies* No. 17 (1968), pp.98-99.

제대로 관리 보관되지 못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²⁷³⁾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하였다. 이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 부문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종합하면 베트남노동당의 야심찬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은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또한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점은 1975년 통일 이후 사회주의 건설을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2) 통일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

베트남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통일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통일 베트남은 인구 5,000만 명을 지닌 큰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 인구는 1975년 당시 사회주의권이었던 폴란드의 3300만 명과 동독의 1700만 명을 합친 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쟁은 매우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응우옌 깍 비엔에 따르면 1965-1973년 동안 1,435,00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약 80만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다. 전체 마을 15,000개 가운데 9,000개가 파괴되었고, 1000만 헥타르의 경작지와 5백만 헥타르의 숲이 훼손되었다. 북베트남에서는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건설된 공장들이 1965-1968년 공습으로 파괴되었으며, 1969년부터 일부 시설이 복구되었으나 1972년 재개된 공습으로 인해 다시 파괴되었다. 하노이를 제외한 북베트남의 6개의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철도, 병원, 저수지 등이 크게 파괴되었다.²⁷⁴⁾ 게다가 통일(해방) 당시 약 350여만 명의 주민과 70만 명의 중국계 화교가 상업 활동을 하는 사이공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 때문에 북베트남의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즉각적인 통일이 아닌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응우옌 깍 비엔은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한 후, 남베트남의 티에우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사회 도처에 남아있었고, CIA의 공작으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통일이 절실하

273) Le Duan, *On the Right to Collective Mastery*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0), p.94.

274) Nguyen Khac Vien, “An Uneasy But Irreversible Development 1975-1979” *Vietnamese Studies* No. 58 (1978), pp.7-10.

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통일을 통해서 병합된 남베트남 역시 효율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룩하지 못했었고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연명하였던 ‘연금국가(Rentier state)’에 다름이 없었다. 미국의 원조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고, 많은 산업시설이 미군의 하청업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한 후 전시경제는 종료되었고, 남베트남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남베트남에 미국의 원조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새로이 명칭을 바꾼 북베트남 정부가 미국을 대신하여 남부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 역시 원조로 연명하고 있었던 또 다른 ‘연금국가’였다. 전쟁 이전에도 생산성이 낮았던 북베트남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때문이었다.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받았던 원조총액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해외원조와 차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였다. 1960년 국가 예산의 국내 조달 비율은 77.6% 해외조달은 22.4%였다. 전쟁이 시작된 후 집계된 1965년 국내 57.7%, 해외 42.3%으로 해외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1968년에는 국내 31.1% 해외 68.9% 비율로 정부 수입의 2/3가 해외원조로 조달되는 기이한 재정구조를 보였다. 전쟁이 끝난 1975년 해외원조의 비율은 54.9%로 낮아졌다.²⁷⁵⁾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통일 이후 원조는 감소하였다. 소련은 전쟁 시기 연평균 3억5천만 달러 규모였던 지원금을 통일 후 5개년 경제개발 기간인 1976-1980년 사이에는 연간 2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였고, 이 또한 상당 부분은 차관형태로 지급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연간 30만 톤 규모로 제공 받았던 석유제품과 소비재 지원 또한 중지되었다.²⁷⁶⁾ 이처럼 통일 이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275) *Niên giám thống kê 1982* (Hanoi: Tổng Cục Thống Kê, 1983),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40에서 재인용.

276) Gareth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137.

2. 스탈린체제의 전국적 수립 시도

초기 남베트남 점령정책은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당풍은 전후 초기에는 전기·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교통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시장도 평상시처럼 열려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폭격과 살육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정신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특히 20년간의 분단이 종식되었고 이산가족의 재회도 이루어졌다. 전쟁 때문에 남베트남의 국토도 황폐해졌지만, 시장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골격은 남아있었으며 국제적인 시장 네트워크도 유지하고 있었다.²⁷⁷⁾ 하지만 하노이 정권은 이를 활용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물로 간주하였다.

1) 1975년 제4차 당 대회와 전국적 사회주의 건설

베트남노동당 지도부는 국가 이름과 당명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베트남 공산당으로 각각 변경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통일 베트남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제4차 당 대회에서, 당시 레 주언 서기장은 “지난 20년 동안 북부지역에서는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확립시켜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제는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규모 생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우리는 반드시 또한 신속하게 농업 집단화와 대규모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국영 부문을 수립해야 한다.”²⁷⁸⁾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며,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제4차 당 대회의 결의안과 이 시기에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트남 지도부는 1960년 제3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과 동일한 원칙을 세웠다. 즉, 집단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277)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Hanoi: Nhà xuất bản Tri thức, 2009), pp.14-15.

278) Communist Party of Vietnam, *4th National Congress Document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77), p.40.

자금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와 차관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1970년대 중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정책과는 상이하였다.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개혁조치가 부분적이지만 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생산 기업에게 자율성을 허락한 분권화 정책과 노동자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²⁷⁹⁾ 그리고 베트남 지도부 역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트남 지도부는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권에서도 점차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던 스탈린적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였을까?

베트남이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과 추진력으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⁸⁰⁾ 그리고 베트남 지

279)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집단화가 아닌 분권화 방식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트남 지도부가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965년 당시 소련의 수상인 코시긴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노동당 지도부와 담화를 나누었다. 비록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코시긴은 1960년대 분권화에 기초를 둔 경제개혁정책을 들고 나왔던 경제통이었다. 실제로 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분권화 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의도하지 않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소련이 베트남에 원조했던 금액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규모 산업설비 시설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만큼 베트남의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해 보면 소련은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수립에 나름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1975년 승전 이후 레 주언은 동독을 방문하였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의 서기장은 동독의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호네커 서기장을 면담하였다. 1975년 10월 16일 동독의 기관지 노이에스-도이칠란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다. 아마 향후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동독이 어떠한 경제적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동독에서 1963년에 이미 시작된 분권화에 기초를 둔 경제 정책, 소비제품의 생산을 중요시하는 경제정책, 1952년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베트남 지도부에게 충분히 전달해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협동농장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기근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DDR wird die solidarische Hilfe fiir Vietnam konsequent fortsetzen” *Neues Deutschland* 1975년 10월 16일 2면.

280) 북베트남은 건국 이후부터 소련 및 중국과 밀접하게 협력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이로 얻은 성취로 인한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련은 베트남의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총선거를 치르는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중국 역시 남베트남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도부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1975년 레 주언 서기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하지만 5년 혹은 10년 후에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소련의 도움으로 적(미국)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현재 베트남의 목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정치와 경제 정책의 방향입니다.” 라고 한 연설의 내용과 베트남 측의 10억 루블의 차관을 요구 등을 근거로, 뜨엉 부는 당 지도부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²⁸¹⁾

물론 이러한 점은 사실이며 분명 당 지도부는 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 대회와 공식적인 석상에서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현실감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기존과는 다른 면모가 등장한다. 집단주의 원칙과 사회주의 원칙은 고수되었지만, 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중공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우선하며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킨다(Ưu tiên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nặng một cách hợp lý, đồng thời phát triển nông nghiệp và công nghiệp nhẹ)” 에서 “농업과 경공업의 토대 위에서 중공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우선시한다(Ưu tiên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nặng một cách hợp lý trên cơ sở phát triển nông nghiệp và công nghiệp nhẹ)” 로 변경되었다. 이는 제3차 당 대회에서 동시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중공업에 몰두하였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 대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발전계획을 농업·경공업·중공업 순으로 언급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4차 당 대회 당시 지도부는 이미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

결정을 소련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Mari Olsen, *Solidarity and National Revolution: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ese Communists 1954-1960* (Oslo: Institutt for Forsvarsstudier, 1997), p.124.

281) Tuong Vu, *Vietnam's Communist Revolution: The Power and Limits of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237-238.

히 제4차 당 대회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4차 당 대회에서 논의된 발전 노선 및 남베트남 정책의 기본 방향은 1960년대 초반 주은래 총리의 정책 권고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은래 총리는 구체적으로 ① 농업 기반을 철저히 다질 것: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이 90:10 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 ② 무리한 중공업화에 집착하지 말 것: 중국의 중공업 시설은 단 기간에 수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수립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것이었으니 이를 오해하지 말 것, 대규모 공업시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것 ③ 도시의 인구 과밀화를 방지할 것: 행정과 사회주의 기업 경영의 미발달로 인하여 도시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농촌이 미발달된 상황에서 이촌 향도 현상은 농촌과 도시 양측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④ 미국의 폭격에 대비하여 산업시설을 분산시킬 것 등을 주문하였다.²⁸²⁾

이 가운데 산업시설 분산은 전쟁 중에 이미 집행되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호치민(사이공)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던 30만 가구의 상업시설을 국유화하려고 했으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십만의 농민들을 ‘신 경제 지역’으로 재배치하였다.²⁸³⁾ 제4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농업 우선 정책은 주은래 총리의 제안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경제발전계획과정의 오류를 경험하면서 무리한 중공업화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공산당이 주민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강조하여 실책을 덮을 수 있었지만, 이미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282) “December 05, 1960 Record of Conversation from Premier Zhou Enlai’ s Reception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Economics and Trade Delegation led by Vice Premier Nguyen Duy Trinh”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문서번호: PRC FMA 106-00602-01, 1-10.

283) 당시 새로운 지도부가 수행했던 작업은 1) 도시에 식량을 비롯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 2) 미국의 갑작스러운 원조 중단에 따른 산업과 수공업 분야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수공업을 회복 및 발전시키는 작업 3) 약 상업에 종사하는 약 30만 가구의 인원들을 국유화하여 노동자, 장인, 시장 판매용 채원경영자(마켓 가드너)로 전환시키는 작업 4) 도시의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 과거 농업에 종사하였던 수십만의 농부들을 ‘신 경제 지역’으로 보내는 작업 5) 약 20여 년간의 미국의 점령에 따른 미국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새롭고,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대중문화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Nguyen Khac Vien, “An Uneasy But Irreversible Development 1975-1979”, pp.27-28.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비록 발전 분야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스탈린적 사회주의 모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남베트남의 소규모 상공업자들을 국가기관 혹은 준국가기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지도부는 베트남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경제담당 계통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같은 시기 소련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의 분권화 조치(개별 기업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수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는 중앙계획경제를 제대로 확립해 보지 못했던 개발도상국 베트남에게는 적절한 모델이 아니었으며,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정책은 여전히 적대시되었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노선은 유지하되, 비현실적인 중공업화는 일단 후순위로 선정하고 농업에 집중하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특히 통일로 비옥한 메콩 델타를 확보한 베트남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농업부문을 협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여기서 확보한 잉여자본을 수출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하여 산업화를 달성하고자 계획하였다.²⁸⁴⁾ 이 역시 과거 제3차 당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이었지만, 제4차 당 대회부터는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하지만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이미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집단농업체제였다. 그리고 외부의 적이 없는 상황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이 발전하기 이전)에서 이 그릇된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였다.

2) 협동농장의 확대와 신설

공산당 지도부는 협동농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농장의

284) 이러한 발전방식과는 달리 농업을 먼저 발전시켜 수출하는 것이 중공업화를 달성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이미 1960년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제3차 당 대회 당시 정치국 위원이었다가 80년대에 도이머이 이후 부총리를 지낸 팜흥(Phạm Hùng)은 농업국가에서 농산물 수출이 30%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과 공업의 분업을 촉진하고, 농산물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판매하여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Hanoi: Nhà xuất bản Tri thức, 2009), p.8.

생산성은 높지 않았으며, 농민들의 불만을 인지한 빈폭성의 킴 응억의 경우 사회주의적 집단농업에서 이탈한 개인주의적인 농업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쟁 시기 베트남 농민들은 충분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⁸⁵⁾ 이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집단농업을 도입하는 것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당 지도부는 이미 나타난 과거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단농업이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마도 레 주언 서기장이 동독을 방문하여 농업 집단화의 성공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들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농업 집단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제2차 경제발전계획에 약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22억 5천만 달러가 농업 부문에 배정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0% 규모이며, 35%를 할당받았던 중공업 부문에 육박하는 규모였다.²⁸⁶⁾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미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협동농장의 발전을 위해 투입되었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1975년 1월 18일 협동농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1975년 중앙위원회 9월 24일 보고를 통해서 남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⁸⁷⁾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실제

285) 여기서 잠시 이론적 논의를 해보자면 사무엘 폼킨의 ‘합리적 농민’과 제임스 스캇의 ‘도덕 경제’의 형태가 동일한 집단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폼킨이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 농민이란 벼버의 ‘도구적인 합리성’과 유사하며 여기서 농민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전쟁 시의 농민은 구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절제하고 자신을 헌신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보면 개인의 노력과 생산성 증대가 전세를 좌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협동농장 내부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또한, 많은 자녀가 군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산한 쌀이 온전히 전달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다. 또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탄압당한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농민들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비민주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초월하는 헌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 시점만 따로 본다면 스캇의 도덕적 농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베트남 농민은 합리적 농민으로 되돌아왔으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도덕적 농민과 합리적 농민이라는 유형은 농민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전시 농민들의 헌신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주의 협동농장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오판이었다.

286) Tan Teng Lang, *Economic Debates in Vietnam: Issu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75-8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5), p.14.

287) Đcsvn, “Báo Cáo: Của bộ chính trị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24 Ban Chấp hành Trung

로 베트남 공산당은 1977년까지 확장할 협동농장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저지대에서는 300-500 헥타르 규모로 고산지대에서는 1000-1500 헥타르 규모로 협동농장을 재조직하고자 하였다.²⁸⁸⁾ 이 정책에 따라 북베트남 지역에서 협동농장의 수는 1975년 17,000개에서 1979년 10,529개로 약 40% 정도 감소하였다. 협동농장의 규모는 기존 평균 199가구 115 헥타르 규모에서 378가구 202 헥타르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북부 베트남의 홍강 유역의 경우 비록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971년 328가구, 1976년 528가구, 1979년 918가구로 추산되며 8년 동안 협동농장의 규모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1975년 이 지역의 협동농장 경작지 면적은 약 200 헥타르 정도였는데 1979년 357헥타르로 증가하였다.²⁸⁹⁾ 이와 같은 협동농장의 대규모 확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인민공사(人民公社)’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인민공사는 약 3,000여 가구를 관할하는 거대한 생산조직이었다. 이미 중국에서도 인민공사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지도부는 대규모 집단화를 지속하였다.

협동농장의 통합과 확장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해왔던 일련의 사회주의적인 집단주의 정책을 재실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매우 큰 정책 변화와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파멸적인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협동농장은 생산한 식량을 국가에 판매하며, 국가로부터 구매한 기구·연료·종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한 일부 예비비를 편성한 후 남은 금액을 농장원에게 분배한다. 협동농장의 관리자들과 농장원들의 노동 난이도와 노동시간 등을 토대로 개별 농장원의 노동 기여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과 수익을 분배한다. 얼핏 보면 이 방식을 통해 농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러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큰 비효

ương Đảng” In Đcsvn, *VKĐTT TẬP 36 1975*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4), pp.313-314.

288) Đcsvn, “Thông trị của ban bí thư Số 335-TT/TW, ngày 7 tháng 7 năm 1976 Về việc mở rộng quy mô hợp tác xã sản xuất nông nghiệp “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4), pp.163-164.

289) Benedict Kerkvliet,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145.

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노동의 난이도와 질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감퇴했다. 둘째, 인치(人治)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장원이 평가자에게 인격적으로 종속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미 1960년대에 나온 협동농장 운영 방침이기도 하였다.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의 규모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 모니터링, 노동 기여도 등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가구 규모의 협동농장과 500가구 규모의 협동농장, 그리고 900가구 규모의 협동농장은 각기 다른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농장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배치, 노동 난이도 평가, 노동시간 측정과 같은 작업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리스크가 분산된다. 같은 논리로 높은 근로 의욕을 가진 농민이 열심히 일해 생산성을 높여도 다른 부분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종의 병목현상이 나타나 노력의 결과가 개인에게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평가자와 친분이 있는 농장원이 유무형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동 의욕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 정교한 행정 및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고취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농장 규모의 확대와 비례하여 행정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다.

국가의 경직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당시 협동농장의 관리자와 농민들은 국가의 낮은 수매 가격과 시장 가격보다 비싸면서 품질은 좋지 않은 농업용품의 강제적 판매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이 사항은 당의 최고 지도부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레 주언 서기장은 농장원들의 불만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농민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가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산업 및 농업용품이 원래의 가격보다 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매 가격이 인상되면 부대용품의 판매가격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며, 사실상 가격 및 농업 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였다.²⁹⁰⁾ 농업용품의 판매를 통해서

국가가 폭리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레 주언 서기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마 국가는 비료, 종자, 관개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용품을 생산하는 국영기업에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한 조달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부분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 부문 자체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농업용품 생산가격 자체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생산된 제품마저도 품질이 낮아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웠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은 남부에서도 토지개혁과 협동농장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당시 남부의 사회구조는 1950년대 북부와는 상이하였다. 1970년대 남베트남의 농촌은 일부 부농이 장악한 봉건적 지주-소작의 관계가 아니었으며 일정 수준의 중농층이 발달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티에우 정권 역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실시하였으며 1975년 2월까지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1,136,705 헥타르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이뿐 아니라 북베트남의 지시를 받았던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에서도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남부의 전체 소작농 77%가량이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개혁은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다.²⁹¹⁾ 특히 다품종 수용, 관개시설 확충, 현대적인 비료와 이모작 덕분에 남부의 생산성이 북부보다 높았다. 평균적으로 베트남의 전통적인 쌀은 1 헥타르에서 약 1.5톤가량 생산되었지만, 신종 쌀은 4-5톤 정도가 생산되었다.²⁹²⁾

베트남 지도부 역시 남부에서 토지의 상당수가 이미 농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북부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비옥한 남부의 농업을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을 가졌다. 따라서 1976년 9월 20일 일부 잔존해 있는 봉건적 요소를 척결하고 사회주의

290) Le Duan, "Towards a Large-scale Socialist Agriculture" In *Le Duan Selected Writings (1960-1975)*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1994), p.480.

291) Trung Dinh Dang, "Post-1975 Land Reform in Southern Vietnam: How Local Actions and Responses Affected National Land Policy"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5 Issue 3 (2010), pp.78-79.

292) Prabhu L. Pingali and Vo-Tong Xuan, "Vietnam: Decollectivization and Rice Productivity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0 No. 4 (1992), p.703.

로 전환할 것을 예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전쟁 당시 남베트남의 군대에서 일한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타지에서 유입된 가구(전통 촌락에서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도 차별이나 차별을 하지 말고 토지를 분배하라고 지시하였다.²⁹³⁾ 당 지도부는 과거 북부의 토지개혁과정의 오류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1954년처럼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물리적 폭력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토지재분배는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1975년부터 1985년 말까지 남부지역에 대한 토지 재조정과 협동화에 대한 사항은 공포되지 않았으며, 1985년까지 약 48만 9,183 헥타르의 토지가 재분배 및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지도부의 원안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된 것이었다.²⁹⁴⁾ 비록 과거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았지만, 부농층과 일부 중농층은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신해방지역과 간척지에 도시주민들과 농민들을 이전시키고 협동농장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남부에서의 생산성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남부지역의 농부들은 협동화 정책을 지지할 아무런 물적 인센티브가 없었다. 북베트남에서는 1954년도부터 본격화된 토지개혁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이 생겼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정당성 덕분에 협동농장을 형식적으로나마 조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은 남부의 농민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부 주민들에게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북부에 의한 폭력적인 점령정책으로 여겨졌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자료에서도 당시 정부의 강요로 협동농장에 참여한 남부의 농부들이 이념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으며, 수습 기간 역시 매우 짧았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농부가 경작지를 떠나버렸으며 땅은 황폐하게 변해버렸다. 1978-1979년 사이의 겨울-봄 작물 재배 기간에 메콩강 주변의 20만 헥타르의 토지가 경작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많은 협동농장이 출범과 동시에 와해되었으며, 1980년까지 남부에서 농업협동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던 정책은 달성되지 못했다.²⁹⁵⁾

293) Đcsvn, “Chi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235-CT/TW, ngày 20 tháng 9 năm 1976”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pp.259-263.

294) Trung Dinh Dang, “Post-1975 Land Reform in Southern Vietnam: How Local Actions and Responses Affected National Land Policy” , p.88.

295) Tổng Cục Thống Kê, *Số Liệu Thống Kê Việt Nam Thế Kỳ XX, Tập 2* (Hanoi: Nhà

3) 대외관계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끼친 영향

소련의 점령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이식되었던 동독,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해방과 통일을 쟁취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지도부는 스탈린적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체제를 수립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물론 전쟁 기간 사회주의 우방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이들의 위성국가는 아니었다. 그리고 1970년대의 냉전 구조는 1940-1950년대의 상황과는 달랐기 때문에 베트남 지도부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외국인 투자법: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집단농업 강화정책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농업을 제외한 상업, 경공업의 민간 부문을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유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확실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통일 이후 상이한 두 체제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토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본격적으로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따르지 않았던 카터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소련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에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것이었다. 1977년 3월 중국의 무역대표부의 레오나드 우드콕(Leonard Woodcock)이 하노이를 방문하였다. 우드콕은 팜반동과 회동하여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제안하였다. 베트남 측도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1977년 5월 파리에서 당시 동아태 담당 차관보인 리차드 홀브룩(Richard Holbroke)과 팜 히엔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1977년 4월 18일 베트남은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외투자법 ‘115-CP’를 공포하였다.²⁹⁶⁾ 법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기업의 형태는 ① 생산합작 상품분할 기

Xuất Bản Thống Kê, 2004), p.29.

296) Pham Van Dong, “Bản hành Điều lệ về đầu tư của nước ngoài ở nước Cộng hò

업 (Hợp tác sản xuất chia sản phẩm): 양측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생산한 물품을 나누어서 소유하는 형태 ② 합동기업 (Xí nghiệp hoặc công ty hỗn hợp): 앞의 유형과 동일하나 상품이 아닌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 ③ 수출품 생산 민간기업 (Xí nghiệp tư doanh chuyên sản xuất hàng xuất khẩu): 개인과 민간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 현재 베트남의 수출가공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법안 10조 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10-15년 동안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보장하며 합의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안 11조는 소득세 면제, 수입 관세 면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출품 생산 민간기업’은 정부가 허락하는 전문기술자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주민만을 고용하고 임금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법안에 포함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자와 베트남 국가 사이의 갈등을 해결과 관련한 사안은 매우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비록 연장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10-15년만 보장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 베트남은 4차 당 대회에서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산업화의 확립보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장경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 중인 1977년 9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는 해외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물론 베트남 역시 미군 실종자(Missing In Action, MIA) 수색과 유예발굴에 성의를 보였다.

당시 관계 정상화의 쟁점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인 사안이었다. 베트남은 관계정상화와 경제적 보상 및 지원을 패키지로 묶었다. 특히 베트남 측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팜반동 수상에게 3억 2500만 달러의 재건비용 지원 약속했던 편지를 보이며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닉슨 대통령이 북베트남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재건 비용을 당근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측은 파리평화회담의 위반과 닉슨 대통령의 지원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베트남 측은 과거 전쟁에 반대하였던 미국의 여론이 다시 끓어올라서 경제적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오판하였다.²⁹⁷⁾ 이와 달리 홀브룩은 의회가

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문서번호: Số : 115-CP.

297) John D. Howard, “The Rocky Road to Reconciliation” *History Net* June, 2018.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에 일단은 관계정상화만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⁹⁸⁾ 물론 미국 측도 관계정상화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을 사적으로 약속하였지만 공표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를 분석한 도퀘이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측이 매우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미국 측에게 건넸다. 공개된 베트남의 극비문서(이 문서는 미국 측에서도 확인되었다)에 따르면 5년간 500만 톤의 곡물, 면 20만 톤, 50-70마력 트랙터 2만대, 불도저 3000대, 화학비료 200만 톤, 관개(灌漑)활동을 위한 15톤 트럭 1000대, 시멘트 200만 톤, 건축용 철근 100만 톤 및 1억 달러의 의약품을 요구하였다.²⁹⁹⁾ 아마 베트남 측도 일단 크게 부르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베트남은 경제 재건을 관계정상화의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하지만 전쟁이 막 종료된 시점에서 미국의 여론이 대규모 원조안을 납득할 수 없었고, 카터 정부 역시 이를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³⁰⁰⁾

② 사회주의 노선 결정과 CMEA의 가입: 1977년 베트남 외교부는 향후 소련, 중국,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련이 브레즈네프의 통치하에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성과도 매우 좋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중국은 모택동 사후 최고지도부가 권력투쟁에 빠져있으며 최근 경제정책은 변화하였지만 반-소련기조의 외교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반-소련정책을 유지하고

출처: <https://www.historynet.com/rocky-road-reconciliation.htm>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25일.

298) Robert D.Schulzinger, *A Time for Peace: The Legacy of the Vietnam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0.

299) Do Dieu Khue,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9), pp.149-150.

300) 물론 불발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가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애초에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취하고 소련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혹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협상 칩으로 삼아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는 방법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있다. 1977년과 1978년 불발된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의 궁금증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있지만 내부의 경제문제와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국제적 영향력에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 중이니 보다 지켜보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³⁰¹⁾ 즉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불발로 그치면서 남부의 1978년 3월 남부의 국유화가 5월에는 화폐개혁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이는 1977년 4월에 제정한 위의 해외투자 유치를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이었다. 자국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투자할 기업인은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1978년 6월 CMEA에 정식 가입하였고 11월 3일 레 주언 서기장과 팜반동 수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코시긴 수장과 회동하였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직접 공항으로 나와 레 주언 서기장 일행을 영접하였고 양측은 친선협력 조약을 체결하였다. 소련의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베트남 측은 캄장(Cam Ranh)만을 해군기지로 임대 해주면 양측의 본격적인 밀월관계가 시작되었다.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베트남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몰도바의 총리를 지낸 표토르 파스카(Pyotr Andreyevich Paskar)를 단장으로 한 소련의 경영 자문관과 전문 경제연구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들 방문단은 과거의 경직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전파하였다. 당시 다오 쑤언섬(Đào Xuân Sâm) 교수도 이들의 새로운 시각은 당시의 베트남 간부들이 더 유연하고 새롭게 사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많은 베트남 공산당 간부들이 장기 혹은 단기로 소련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베트남으로 돌아와 레닌의 ‘신경제 정책’ 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1979년 중앙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장관실, 부총리실, 비서실, 지방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약 1,000여명의 간부들이 레닌의 ‘신경제정책’, 가격결정, 계약에 대한 강의를 접할 수 있었다.³⁰²⁾ 비록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보다 분권화된 경제제도를

301) “Báo cáo tình hình công tác sáu tháng đầu năm 1977 của Ngoại giao” 문서번호: Folder 10160, CPMO.2, Do Dieu Khue, p.155에서 재인용.

302)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Quyển I: Giải phóng*, p.335-338.

지지하는 지식이 유입되었고 이는 베트남 내부의 정책 변화 요구와 맞물려 향후 개혁적인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4) 남부에서의 무리한 기업 국유화 시도

전쟁종료 이후 베트남지도부는 남부에서 부르주아와 봉건 지주를 박멸하고 전체 경제를 사회주의적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선포하였다. 많은 부르주아 세력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지네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을 몰래 사재기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니, 이들 세력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이들의 생산수단은 모두 국유화하더라도 이들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들은 남겨두며 식민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사회주의적 문화의 전파를 주문하였다.³⁰³⁾ 당의 지도란 개인의 자산을 사실상 몰수하고, 사기업 역시 국영기업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주의로 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국영 부문, 협동 부문, 국가-개인 협동소유, 사적 부문 등과 같은 다양한 소유의 형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현재의 소규모 기업과 수공업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규모 기업과 중요한 사업체는 국유화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은 국가가 중요한 핵심 부분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³⁰⁴⁾ 이 시기 내부적인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국유화를 집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실패하면서 남부에서도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1978년 초 부수상 겸 정치국원인 도 무어이(Đỗ Mười)가 남베트남의 상공업개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사회주의 개조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1978년 3월 25일 “국영기업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Về việc tăng cường xây dựng đảng trong xí nghiệp quốc doanh)” 라는 지도안을 공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³⁰⁵⁾ 1978년 5월에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남부와 북부 양측에서

303) Đcsvn, “NGHỊ QUYẾT CỦA BỘ CHÍNH TRỊ SỐ 254-NQ/TW, NGÀY 15 THÁNG 7 NĂM 1976 VỀ NHỮNG CÔNG TÁC TRƯỚC MẮT Ở MIỀN NAM”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4), pp.192-194.

304) Đcsvn, “Báo Cáo: Của bộ chính trị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24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In Đcsvn, *VKĐTT TẬP 36 1975*, p.289.

동일한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화폐 개혁에는 자본가와 상인층의 자산을 사실상 몰수시키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기존 남부의 1,500여개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650개의 ‘국가-개인’ 합작기업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이 신생기업들에서 약 13만 명의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1,000여개의 소규모 기업도 협동화했다.³⁰⁶⁾ 포터는 ‘국가-개인’의 합작기업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었고, 사유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사업소유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⁰⁷⁾ 사실상 국가에 의한 강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 거주하였던 중국인들에 대한 탄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주의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남부에 정착하고 있었던 30여만 명의 중국계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하였다. 중국인들은 응우옌 왕조 시절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을 벌였으며, 프랑스 식민통치 시기 남부로 진출하여 중국 본토와 활발한 교역을 벌였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남베트남 통치와 전쟁 시기에도 이루어졌으며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 국제적이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입장에 따르면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중국계 상인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심대한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사업체 또한 강제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의 결과 시장경제로 작동되는 사적 경제영역이 축소되었다. 1976년 137억 동이었던 사적 부문의 공업생산이 1978년에는 80.7억 동으로 감소하였다.³⁰⁸⁾ 당시 정치국원이며 호치민시를 책임지고 있었던 응우옌 반 린은 중앙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남부의 상공업인들은 새로운 지도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었으나 당 지도부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³⁰⁹⁾ 그렇다고 해

305) Đcsvn, “Chi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35-CT/TW, ngày 25 tháng 3 năm 1978” In Đcsvn, *VKĐTT TẬP 39 1978*, pp.124-129.

306) 국영기업은 국가로부터 노동자들이 순수하게 임금을 받는 형태이며, 협동화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기여분과 노동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07) Gareth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44.

308)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2호 (2010), p.221.

서 전반적인 국영화와 협동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1978년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영기업과 협동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기존 30%에서 40%로 증가하였을 뿐이었다.³¹⁰⁾

남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기업을 강제력을 동원하여 통폐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국유화된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국영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지만, 기업 자체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적었으며 이미 배정받은 노동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은 유럽의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 자재 등을 포함한 많은 물자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물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베트남은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규모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자를 활용하거나 가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운송수단의 미발달로 인해서 물자들은 제 때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물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자와 설비들은 도로 옆에 방치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³¹¹⁾ 베트남 지도부는 엄격한 노동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잘 이행되지 못했다. 일례로 1968년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후에 베트남의 상업상을 역임하였던 쩌 프엉(Trần Phương)은 북한과 같은 군대식의 노동규율에 매력을 느껴 이를 모델로 삼고자 하였던 레 주언의 의견에 반대를 표명하였다.³¹²⁾ 쩌 프엉이 북한에서 어떠한 인상을 받았으며 이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추측하면 베트남의 물리적 통제 능력으로는 북한과 같은 규율과 억압의 방식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산업 부문에서 국유화와 협동화를 계속 관철하였다.

309) Neil Sheehan, *After the War Was Over* (New York: Random House, 1991), p.77.

310) Tran Khanh, *The Ethnic Chines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Singapore: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p.85.

311) Melanie Beresford and Dang Phong,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Trade and Aid in the Demise of Centrally Planned Economy* (Gloucestershire and Massachusetts: Edward Elgar, 2000), pp.29-30.

312) Dang Phong and Melanie Beresford, *Authority Relations and Economic Decision-Making in Vietnam: An Historical Perspective*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1998), p.65.

후술하겠지만 1984년까지 국영 부문은 확장되어 남부 전체 기업의 70-75%를 차지하였으며, ‘협동화된 기업’이 21%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생산성은 높지 않았다. 포터에 따르면, 국영기업은 전체 생산 능력의 30-50%의 효율로만 가동되었다. 호치민 시의 경우 국영기업은 전체 유통되는 소비품의 30-40% 정도만 생산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상품들은 모두 암시장을 통해 공급되었다.³¹³⁾ 대도시인 호치민 시가 다른 시와 성에 비하여 많은 국영기업과 협동기업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양자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는 호치민 시 경공업 제품 전체 생산물의 20%에 불과하였다. 국영 및 협동회사가 판매한 소매품은 육류 50%, 생선류 24%, 채소류 22%, 설탕류 34%, 연료 50%에 불과하였다.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이 진행된 이후에도 사적 영역이 전체 생산과 거래에서 40%-60%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³¹⁴⁾ 즉 사회주의적 국가영역이 사적 경제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했고, 국영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였던 실정이었다.

일반 국내 거래						
연도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국영 및 협동	39.2	58.8	58.6	56.8	49.6	41.6
사적영역	60.8	41.2	41.4	43.2	50.4	58.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식량 및 서비스						
연도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국영 및 협동	39.2	58.8	58.6	56.8	49.6	41.6
사적영역	60.8	41.2	41.4	43.2	50.4	58.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1: 1980-1989 기간 일반거래 및 식량 거래 현황>

출처: Statistical data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76-1989 (1990), pp.111-112. Tran Khanh, *The Ethnic Chines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Singapore: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p.89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이 함께 작용하면서 농업과 공업 분야 모두 참담한

313)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pp.44-47.

314) Tran Khanh, *The Ethnic Chines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p.88.

결과를 가져왔다. 협동농장의 무분별한 대형화는 식량난을 발생시켰다. 1976년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1천 100만 827톤이었으며, 5년 후인 1980년에는 2천1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1980년의 생산량은 약 1천 100만 647톤에 불과하였다. 1976년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한 양은 200만 톤이었지만 1979년에는 1백 45만 톤에 불과하였다.³¹⁵⁾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비효율성, 병충해 방지의 실패, 비료 부족, 관개시설 정비의 실패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도 매우 심각한 기근 현상이 나타났다. 응우옌 주이트린은 1978년 4월 15일자로 현재의 하이즈엉(Hải Hưng), 타이 빈(Thái Bình), 하남 성(Hà Nam Ninh)과 현재의 호아빈과 하타이, 박닌 성 등지에 전보를 보내 심각한 하노이의 식량을 언급하면서 긴급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현재의 하노이의 식량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3월 원래 제공해야 할 식량의 30%가량을 공급하지 못했으며 이번 4월은 더욱 더 심각하다. 야채, 두부, 물고기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정부는 30%라도 공급하려고 하는 데 쉽지 않다. 최소한 권장량의 50%, 최저 40%라도 공급해야 한다.”³¹⁶⁾고 호소할 정도였다. 또한, 남부에서도 식량부족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공식적인 경로로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자 암시장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말에 집계된 1976-1980년의 제2차 5개년 경제개발의 성적표는 매우 참담하였다. 이 기간 13-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0.4%에 불과하였다. 농업의 성장률은 2%, 산업 성장률은 0.6%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게다가 1979년과 1980년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전체 GDP는 약 1.4%-2.0% 정도 감소하였고, 산업 생산은 약 4.7%-10.3%로 감소하였다. 많은 공장에서는 자재, 전기, 석유가 부족하여 생산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었다.³¹⁷⁾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경제난은 당내 개혁적인 인사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수파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동독의 경우 이미 건설된 사

315)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Hanoi: Nhà xuất bản Tri thức, 2009), p.29.

316) Đcsvn, “Điện của ban bí thư Số 15, ngày 17 tháng 4 năm 1978 Về công tác cung ứng lương thực, thực phẩm cho Thủ đô Hà Nội” In Đcsvn, *VKĐTT TẬP 39 1978*, p.182.

317)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p.27.

회주의 체제가 그 내부적 모순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베트남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는 첫걸음부터 문제에 직면했다. 즉 통일 후 사적 영역을 국유화하고 농업경제를 사회주의적 산업화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표 3-2>로 나타낼 수 있다.

	1975-1979년
물리적통제능력	약 (유지) 중앙집권체제와 계획경제의 미수립 -
자원제공능력	약 (약화추세) 협동농장의 부진 - 남부의 무리한 국유화 -
상징적동원능력	중 (약화추세) 통일의 정당성 + 남부의 민심 -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실패 - 소련과의 밀접한 동맹 +

<표 3-2: 1975-1979년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제2절 사회주의 개혁시도와 한계

1. 지도부의 부분적 정책 수정과 한계

1) 지도부의 정책 수정 움직임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통일 이후 개최된 제4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분권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있었으며, 개별기업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1976년 팜반동 수상은 베트남의 경제 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팜반동 수상은 경제 관리 체제를 ‘행정경제관리’와 ‘생산경영관리’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행정경제관리체제’란 전체 국가 경제 그리고 각 부처와 지역경제의 정책을 세우고 계획·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부처의 장관, 중앙정부 소속의 기관장, 지역 인민위원회의 의장이 경제 관리를 담당한다. ‘생산경영관리’란 개별기업의 운영과 생산 활동을 지칭하며, 여기에 소속된 간부들은 생산과 경영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동력과 물자를 잘 활용하는 임무를 행한다. 하지만 당시 이 두 영역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팜반동 수상은 “현재 다양한 부처와 모든 수준의 국가권력기관이 일반적인 일이나 생산과 경영의 전문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반면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과 경제 관리에는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1977년부터 중앙정부기관은 각부의 장기 경제계획을 세우고 필요 없는 규제와 절차를 철폐하며, 현재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관리규율을 연구·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적 관리의 철폐가 기업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³¹⁸⁾ 물론 이러한 분권화 및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부 개혁조치만으로는 혼란스러운 베트남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운

318) Pham Van Dong, “Raising the efficient of the state apparatus” In Pham Van Dong, *On the Problem of the State*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3), pp.79-80.

영의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남부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효율성이 나타났고, 협동농장의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평적인 계약관계에 대한 요구가 1979년부터 등장하였다. 1979년 8월 6차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부분적인 정책 수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레 주언 서기장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매우 냉혹하고 정직하게 평가하였다.

“수출의 비중은 생산(약 15%)에 비해 여전히 너무 적다.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계설비 수입을 제외한,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액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여전히 낮다...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생산능력의 50-60%만 가동하는 실정이다. 물론 전쟁의 후유증은 아직 존재하며,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경영관리 역시 매우 오랜 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아직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 생산조직들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생산과 가공, 소비재 부문 간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19)

비록 이 회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급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회의는 기존 당의 노선과 국가와 사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풍 역시 이 회의를 “비록 도이머이 당 대회라고 불리는 제6차 당 대회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 공산당이 터부시하던 시장에 대한 입장이 상당 부분 선회하였고, 계획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진지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회의 덕분에 그 다음 해부터 보다 과감한 실험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산업 부

319) Đcsvn “Báo cáo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khoá IV)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sáu Về tình hình và nhiệm vụ, phương hướng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hàng tiêu dùng và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háng 8 năm 1979” In Đcsvn, *VKĐTT TẬP 40 1979*, pp. 206-207.

문에서 다양한 생산이 이루어졌고, 유통 부문에서 기존의 계획경제의 틀을 깨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³²⁰⁾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 계약제가 합법적으로 전국에 도입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가운데 1982년 제5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³²¹⁾ 이 당 대회는 소위 도이머이 혹은 사회주의 체제 전환이라고 불리는 제6차 당 대회의 전야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당 대회에서는 시장경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운영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대대적으로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먼저 캄보디아와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베트남 경제에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1976-1980년까지 진행된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당 대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을 알 수 있다.³²²⁾ 제4차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당내에서 논쟁했던 사

320)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p.40

321) 베트남공산당이 제5차 당 대회를 원래 1981년 말에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연기 하였던 점도 의미심장하다. 1980년에 5개년 계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완충기를 갖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 대회를 연기한 까닭은 소련 측에서 베트남 원조의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소련 측은 베트남 공산당이 원조물자와 기업 경영을 합리적으로 행하지 못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였다. 이는 베트남 공산당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화를 추진할 수 없었고 자본과 기술 모두 소련에 의존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Sally W. Stoecker, *Clients and Commitments: Soviet-Vietnamese Relations, 1978-1988* (California: The Rand Cooperation, 1989), p.15.

322)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제4차 당 대회에서 농업 분야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예산이 중공업 부문으로 편성되었던 것인가?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업과 중공업 부문의 예산 배분의 변동추이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 정책 방향을 예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농업과 공업의 투자비율만을 살펴보면 당 지도부가 당 대회 결의안과는 달리 여전히 공업 부문의 발전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당시 베트남의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회주의 국가권의 유무상의 원조물자로 충당되었으며 이 원조 물품이 주로 중공업 시설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중공업 분야 예산은 베트남의 재정 능력과 별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조달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행정 능력과 징세 능력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힘으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농업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항이 농업과 공업 부문의 비중 문제였다면, 제5차 당 대회에서는 기존의 논쟁에 더해 국가의 개입 정도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³²³⁾ 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 결의안 26호에 따라 생산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 관리 조치가 실행되었다고 밝히면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경제를 운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생산을 방해하였던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지 못했다.”³²⁴⁾ 이 짧은 문장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코르나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적 메커니즘은 사회주의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며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가, 협동농장, 개별 농가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산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사회주의 경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계획, 경제적 계약, 농산물의 국가 구매 및 공산품의 판매 그리고 다양한 생산과 경영 협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²⁵⁾ 이 뿐만 아니라 협동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예전처럼 급격하게 협동농장을 세우거나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장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원칙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아담 포드는 이 기간 사적 영역과 시장적인 요소가 ‘국가계획경제’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허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여전히 국가의 중앙관리에 따라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물적·인적 자원 역시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³²⁶⁾

323) 농업부문이 강조된 까닭은 소련의 영향도 있었다. 당시 베트남은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신설을 소련 측에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소련 측은 베트남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간주하였다. 당시 소련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는 분명 무리한 요구였다. 소련은 베트남의 농업을 활성화시켜 자국에 필요한 식품들을 수입할 수 있기를 원했다. Balazs Szalontai, “The Diplomacy of Economics Reform in Vietnam: The Genesis of Doi Moi, 1986-1989” 『아세아연구』 제 51권 2호 (2008), p.204.

324) “Political Report of the 5th Central Committee to the Congress” In CPV,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30-2015): A selection of documents from eleven Party Congresse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15), pp.512-516.

325) *Ibid*, p.529.

326) Adam Fforde and Stefan De Vylder,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2) 생산물 계약제의 도입과 한계

생산물 계약제는 기존의 근로 평가제와는 달리 개별농가와 협동농장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별농가는 계약된 할당량을 협동농장에 납부하고 추가 생산물을 점유 및 처분할 수 있었다. 즉 과거 전통사회에서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를 정액으로 지불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베트남 주민들은 비효율적이고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는 협동농장보다는 개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협동농장의 다른 구성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산성 낮아지고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당의 간부 역시 비생산적인 협동농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생산량의 증대를 지시하였고, 아래의 농민들은 중간 간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가와 당 간부 역시 생산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계약제를 선호하였고 이 정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생산물 계약제는 당 지도부가 주도한 자발적인 개혁이 아니라, 당내 개혁적인 인사들이 장기간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쟁취한 것에 가깝다. 1970년대 말 파멸적인 기근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최고지도부와 사회주의 이론가들 그리고 정부의 언론매체들은 기존의 집단주의 정책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당시 농업상을 지냈으며 도이며이 개혁이후 국가주석을 지낸 보찌콩(Võ Chí Công)은 농민들의 불만을 접하면서, 농민 개인들의 자율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설득하였다. 그리고 하이퐁 시의 당 서기였으며 훗날 부주석을 지낸 도안 주이 타잉(Đoàn Duy Thành)은 계약제 실험의 결과를 레 주언 서기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가까스로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타잉 서기는 당의 실력자이자 이론가인 쯔영진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쯔영진은 1960년대 말 빈푹 성에서 암묵적으로 행하여진 탈 중앙적인 분권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었다. 타잉은 다섯 번의 설득을 통해서 쯔영진의 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 1980년 7월 하이퐁에서 계약제가 실행될 수 있었다.³²⁷⁾ 사실 이

in Vietnam (Boulder, Colorado: WestviewPress, 1996), p.127.

327) Benedict Kerkvliet,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182.

제도는 많은 현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모범적인 협동농장으로 알려진 현재의 타이 호아(Thanh Hóa) 지역 딘콩(Đình Công) 협동농장에서도, 몰래 사절단을 파견하여 하이퐁 지역의 생산물 계약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였다. 타이빈(Thái Bình)성의 부탕(Vũ Thắng) 지역 협동농장 역시 생산성이 높아 합리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계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³²⁸⁾

생산물 계약제의 도입은 막판까지도 진통을 겪었다. 최고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은 마지못해 생산물 계약제를 승인하였지만, 협동농장과 계약한 농부들의 추가 수확량의 일부를 협동농장에 공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행히 당시의 농업전문가들은 계약 속에 추가 생산물에 대한 농부들의 독점적 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확량까지 공납하도록 요구할 경우 노동 의욕의 감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하여, 보수적인 지도부의 주장을 가까스로 물리치기도 하였다.³²⁹⁾ 사회 영역의 요구를 귀담아들었던 간부들이 용기를 내어 주민들의 의견을 상달하였고, 이는 조심스럽게 최고 지도부에게로 전달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81년 1월 13일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 계약제를 최초로 승인하였다. 당의 지시문에 따르면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계약제가 생산성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계약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당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 농기구와 비료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초과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개인에게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국가, 협동농장 그리고 개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당의 지침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³³⁰⁾

328) Thai Duy, “From ‘Contracting’ to ‘Autonomous Farming Households’ ” In Dao Xuan Sam and Vu Quoc Tuan eds, *Renovation in Vietnam: Recollection and Contemplation* (Hanoi: Knowledge Publishing House, 2008), pp.321-324.

329) *Ibid.*, p.347.

330) Đcsvn,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100-CT/TW, ngày 13 tháng 1 năm 1981 Cải tiến công tác khoán, mở rộng “khoán sản phẩm đến nhóm lao động và người lao động” trong hợp tác xã nông nghiệp” In Đcsvn, *VKĐTT TẬP 42 1981*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5), p.23.

생산물 계약제는 1976년 중국 안후이 성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개혁과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시장경제의 도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협동농장을 소규모로 변화시키고 생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잉여생산물에 대한 소유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를 임의로 개별농가에 나눠주는 것을 불허하며 또한 개별농가에 과종과 추수를 모두 담당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³³¹⁾ 즉 협동농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허락함과 동시에 생산과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협동농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혹은 가구였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자율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생산물 계약제가 도입되면서 개별농가들은 협동농장과 계약을 맺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부 작업(관개시설, 모내기 등)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스스로 담당할 수 있었다.³³²⁾

당 최고지도부의 의심과 내키지 않는 동의 속에서 진행된 생산물 계약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보반끼엣(Võ Văn Kiệt)은 식량 생산량이 약 1700만 톤에 육박하며 정부의 수매량도 1982년보다 80만 톤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목표치인 375만 톤을 15만 톤가량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이와 같은 생산량의 증가가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과멸적인 결과를 초래한 제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보다는 훨씬 유익한 정책이었다. 생산물 계약제의 성과는 단순한 생산지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 협동농장 담당자에 따르면 생산물 계약제 도입 이후부터는 아침에 종을 울려 농민들을 깨워 농장으로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확보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331) *Ibid*, p.28.

332) 베트남의 생산물 계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델로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단 제도적 형태는 중국 인민공사에서 실시한 포간도호(包幹到戶)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계약제도가 이미 베트남에서 암묵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자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년도	작물 생산 총 가격 (단위: 백만동)	재배 경작지 (단위: 헥타르)
1976	53056,4	7040,9
1977	48344,2	7632,8
1978	48023,1	7845,7
1979	52598,2	8033,1
1980	56085,9	8251,0
1981	56932,1	8316,2
1982	63920,9	8388,8
1983	64776,0	8282,3
1984	68360,6	8498,0
1985	70239,1	8556,8

<표 3-3: 베트남의 작물 총생산 및 재배 경작지 규모 1976-1985>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Số Liệu Thống Kê Việt Nam Thế Kỳ XX* (Hanoi: Nhà Xuất Bản Thống Kê, 2004), p.111-112. 재구성.

하지만 생산물 계약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산물 계약제의 등장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증가한 것은 분명했지만,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했다. 자유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근본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째서 시장요소를 도입한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일까? 커크빌렛은 생산성 담보를 초래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식량 자체의 생산이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농업생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수준으로 퇴보하지도 않았다. 둘째,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시스템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 당시 협동농장은 개별농가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따라서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이 포착될 경우 다음 해의 할당량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것은 개별 농가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국가의 추가적인 개입과 여전히 강력한 준조세 때문에 노동 인센티브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개혁이라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협동농장이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탈곡과 건조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³³³⁾

특히 최고지도부의 애매모호한 개혁 의지만으로는 당시 농업부문의 준조세 제도를 철폐하지 못했으며, 이는 농민들의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 농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다오 테 뚜언 (Đào Thế Tuán)은 제6차 당 대회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농업부문의 생산량 증진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국가의 낮은 구매 가격은 농민들의 노동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의 저소득 국가에서도 농민의 하루 일당은 0.8-1.9(평균 1.1)달러이며 이는 쌀 4.2-14.2(평균 8.2)kg에 달한다. 반면 정부가 농업생산을 위해 농부들에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생산 원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동남아국가에서 인산염 비료 (phosphate fertilizer) 1kg의 가격은 쌀로 계산하면 0.7-3.4(평균 2.3)kg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북베트남의 홍강 유역은 약 5.3kg 남부의 메콩 강 유역은 약 6.8kg에 육박한다. 베트남에서 쌀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현미의 2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주변의 다른 아시아국가의 1.5배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상품의 유통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과 국가가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국가가 농부들에게 판매할 마땅한 농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판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농부들이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농가의 농산물에 대해 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³³⁴⁾

이와 더불어서 베트남에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생산물 계약제 덕분에 기존의 심각한 식량 위기가 조금씩 개선되었으며, 개별농가들은 추가적인 잉여 농업생산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정책이 기존의 집단주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이며, 개별농가는

333) Benedict Kerkvliet,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 p.211.

334) Dao The Tuan,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n Vietnam” In Communist Party of Vietnam ed., *Vietnam in face of today's socio-economic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7), pp.78-79.

시장을 통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여력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매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는 할당량을 제외한 잉여생산물들을 시장에 판매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1983-1985년도 사이 국가의 농산물 수매 가격은 암시장 가격의 최대 10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남부에서는 시장경제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통일전과는 달리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국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기피 하고, 예전보다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보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의 사항들 외에도 생산성이 정체된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생산물 계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 외에도 설비, 비료, 종자, 농업전문가의 육성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 정부와 협동농장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예컨대 북베트남 지역인 홍강 유역의 경작지 규모는 1976년 90만 헥타르, 1982년에는 100만 헥타르였는데, 1989년 까지도 100만 헥타르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생산량은 1 헥타르 당 267톤, 334톤, 379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메콩 강 유역의 경작지 규모는 1976년 210만 헥타르, 1982년 230만 헥타르, 1989년 250만 헥타르였으며 1 헥타르 당 생산량은 454톤, 419톤, 635톤이었다. 남부의 기존 생산량은 통일 이후 농업 집단화의 여파로 생산성과 경작지 면적이 모두 감소하였다가 생산물 계약제 도입 이후 급상승하였다. 그 이후 담보 상태를 보이다가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³³⁵⁾ 동독에서도 농민들은 정부의 반강제적인 협동화 정책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계화와 경작지 면적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 베트남의 최고지도부가 생산물 계약제의 도입에 반대하였던 것도 기계화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인센티브 도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는 하였지만,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낙후성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산물 계약제가 도입되면서 결과적으로 개별농

335) Adam Fforde and Stefan De Vylder, pp.206-207.

가의 자율성은 증가하였고, 국가의 개입은 후퇴하였다.

3) 기업의 부분적 자율화의 승인

농업부문뿐 아니라 경제영역의 전반의 탈중앙화 정책은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이었다. 팜반동 수상은 1980년 경제영역에서 지방정부와 당의 지방 위원회의 자율성을 허가하는 논조의 연설을 하였다.

“개인과 사적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국가는 경제정책, 행정적 지도, 대중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통하여 이 사적 경제 부문이 국가의 계획 방향과 노선에 부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 성과 군은 관할 지역의 노동력, 토지, 전문가, 자재에 대한 총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부분에서 협업이 가능한 것인지,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물품과 자재들이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기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추가 생산계획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의 계획은 반드시 지방의 특색과 장점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과의 상품교류와 수출과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336)

즉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농업과 경영을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통일 베트남의 면적은 330,341km²(북베트남 157,880km²)이었으며, 이는 북한 120,538km², 동독 108,333km²보다 세 배 정도 큰 면적이었다. 특히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전 국토를 통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에게 보다 큰 재량권(사회주의 틀 안에서)을 허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완전한 분권화는 아니었다. 제 5차 당 대회 이후 각 지방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행정과 기업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³³⁷⁾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를 가능케 하고

336) Pham Van Dong, “Building a new managerial mechanism” In Pham Van Dong, *On the Problem of the State*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3), p.90

337) Đcsvn, “Thống trị của ban bí thư Số 04-TT/TW, ngày 10 tháng 6 năm 1982 Về việc tiến hành sơ kết công tác xây dựng huyện và tăng cường cấp huyện 1982” In Đcsvn, *VKĐTT Tập 43 1982* (Hano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005), pp.410-411.

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1년 당 중앙위원회는 ‘개별기업의 생산, 경영과 자치권에 대한 지도안 25-CP’를 발표하였다.³³⁸⁾ 이는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기업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독립성을 허용하고 설비, 자재, 노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생산성(생산, 노동자들의 사기, 임금, 삶의 질, 국가의 세수증대 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 지도안은 “과거 지역의 소규모 협동기업과 사기업에서 새롭게 국영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들은 원료, 에너지, 운영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해체되거나 생산협동조합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면서 당시 계획경제와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모습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영기업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동 소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중앙기업의 경우는 해당 부처의 장관과 각 성의 지사의 승인이 요구되며, 지방 기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의 서기들의 승인이 필요하며, 중요 기업의 경우 수상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획득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 가운데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부터 아웃소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가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각 기업소가 스스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공장 지배인의 권위도 강화되었다. 공장 지배인에게 생산에 필요하지 않은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주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으며, 인사와 보너스 제공 같은 사항에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1980년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낸 판 반카이는 “당시 호치민시 당 서기장인 응우옌 반 린은 관료적이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제 메커니즘을 탈피하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따라 160여개의 기업과 800개의 생산 품목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38) Hội đồng Chính phủ, “Của hội đồng chính phủ SỐ 25 - CP NGÀY 21-1-1981: Về một số chủ trương và biện pháp nhằm phát huy quyền chủ động sản xuất kinh doanh và quyền tự chủ về tài chính của các xí nghiệp quốc doanh” 문서번호: Số: 25-CP.

하지만 그는 이어서 “당시 도시 행정의 창조성은 종종 오인되었고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정책을 사회주의 경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고 회고할 만큼 현장과 하노이 당국 사이의 인식 차이는 매우 컸다며, 이러한 정책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³³⁹⁾ 정리하면 1977년부터 남부 지역에서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4년이라는 길지 않았던 시간 동안 이미 기업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스탈린적 체제에서 한 발짝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위의 정책들이 예전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지만, 여전히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많은 규제들이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원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호치민 시의 ‘성공방직회사(Xí nghiệp dệt thành công)’는 남베트남에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대기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면직물과 의류를 판매하고 수출하여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통일 이후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고 외화를 사용하여 수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외환거래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었기에 개별기업이 스스로 원료를 조달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며 종업원들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축 기르기와 같이 기업의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일도 하였다.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영 관광업체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 이들을 통해 면직물을 관광객들에게 외화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기업을 정상화했다. 1982년 응우옌 쉘언 하 (Nguyễn Xuân Hà) 사장은 기업의 상황을 보반끼엣에게 보고하였고 수출입은행(Ngân hàng ngoại thương)을 통해 가까스로 연 15% 이자를 조건으로 18만 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으로 섬유 650톤과 염색을 위한 화학제품 20톤을 구매하였다. 사장의 탁월한 사업수완과 근로자들의 노력 덕택에 수익을 올려 원금을 상환하고도 8만 2천불의 이윤을 낼 수 있었다.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 신용을 얻어 수출입은행에 외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 1984년 이 공장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당의 고위간부들이 방문하였다. 방문 및 감찰 과정에서 이중장

339) Xuân Linh, “Thời ‘cời trời’ của Bí thư TP.HCM Nguyễn Văn Linh” *Vietnamnet* 2015년 6월 22일. 출처: <https://vietnamnet.vn/vn/thoi-su/thoi-coi-troi-cua-bi-thu-tp-hcm-nguyen-van-linh-245381.html>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27일.

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였다. 한 장부는 중앙정부의 규율에 따라 작성한 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을 위해 사용된 물품 가운데 시장을 통해서 구매 및 지출된 사항을 기입한 것이었다.³⁴⁰⁾ 물론 이는 당시의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미 남부의 기업에서는 암암리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응우옌 쑤언 하 사장은 생산계획은 관료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 기업의 역량과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모범적이었으며, 대다수 기업은 경영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느꼈다. 1981년 12월 레 주언 서기장은 “여러 가지 경영 개선방안(임금인상과 보너스)으로 노동자들의 자조 정신, 창조성, 진취성 등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또한, 에너지와 원료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 특히 지방 산업은 1980년도에 비해 계획에 도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부 기업과 소규모 수공업 협동 공업기업의 경우 계획을 초과 달성하기도 하였다. 몇몇 핵심 건설 작업도 기간 내에 완료되었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³⁴¹⁾ 하지만 이후 연설의 대부분이 경제의 문제점 지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의 완고한 보수 세력들은 기업에 허용된 자율성과 분권화가 오히려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1982년 하노이의 중앙정부는 수십 개의 감사팀을 남부에 파견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하였다. 1982년 8월 10일부터 18일 기간 동안 개최된 회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행위들을 매섭게 비판하였고, 당시 병상에 있었던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 의장인 마이찌토(Mai Chí Thọ)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중앙정부의 감사팀으로 부터 “(사회주의 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는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³⁴²⁾ 참고로 마이찌토는 지압 장군의 약해진 영향력을 대신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기획한 초(超)거물

340) Đặng Phong,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pp.46-48.

341) Đcsvn, “Số 41-NQ/TW, ngày 28 tháng 12 năm 1981 Về phương hướng, nhiệm vụ kinh tế - xã hội năm 1982” In Đcsvn, *VKĐTT Tập 42 1981*, pp.494-497.

342) David W.P. Elliott,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45.

레득토의 친동생이었다. 이런 배경을 지닌 사람들도 중앙감찰반으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지도부가 사회주의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수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 나온 시장화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들을 ‘우경화’ 조치라고 비판하는 글과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였다. 이 시기만 해도 당내의 모든 인사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관료적 조정기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당내에 많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할 수 있는 개혁조치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1983년 6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레 주언 서기장은 제5차 당 대회 이후의 여러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차 당 대회 당시에 시장적인 메커니즘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레 주언은 당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간부들이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지 못했던 것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간부들이 혁명정신과 도덕성을 망각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당의 규율과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였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외화를 낭비하는 사치품과 미술품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1985년까지 남부에서의 농업 협동화와 경공업 부문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소유 혹은 집단적 소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산관계, 새로운 정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인간 등의 형성을 주문하였다.³⁴³⁾

비록 중앙정부의 정책이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하였지만, 당 내부의 개혁파는 좌절하지 않고 분권화 정책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다. 레 주언 서기장이 강력하게 스탈린적 사회주의 경제 확립할 것을 천명한 지 약 두 달

343) Đcsvn, “Nghị quyết số 13 - NQ/TW ngày 24/06/1983, Hội nghị lần thứ tư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oá V) về những vấn đề cấp bách về tư tưởng và tổ chức bảo đảm thực hiện thắng lợi những nhiệm vụ kinh tế và xã hội trước mắt” In Đcsvn, *VKĐTT Tập 44 1983*, pp.240-268.

이 지난 시점에, 쓰영진과 팜반동을 위시한 당의 최고지도부가 남부의 모범적인 기업을 시찰하였다. 레 주언 서기장은 모스크바 방문 중이었으므로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호치민의 서기장이었던 응우옌 반 린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실무자가 최고 지도부에게 보고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보고서를 받은 쓰영진과 팜반동은 놀랍게도 분노하거나 간부들을 야단치지 않고 ‘사막의 오아시스’ 라며 기업들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³⁴⁴⁾ 1983년 ‘달랏 사건’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허락하는 방향의 정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중앙계획경제로 완전히 회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베트남의 집단주의 지도체제가 일정 부분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산업 발전시킬 수 없었다. 멜라니 베레스포드와 당퐁은 1980년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비공식적인 무역은 소비재 부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것은 암시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뛰어든 상인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국영계획 부문의 전용과 지대확보는 소비재 부족을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수요 증가와 시장가격을 상승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물론 상인들의 수익은 증가하였다. 국영 분야와 사적 분야의 연계, 공식적 비공식적 원조 및 무역 등은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베트남 경제를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계획 경제를 침식시켰다...수출을 담당하는 기업 가운데 외국투자에 주로 의존 하였던 크루드 오일 생산과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지 않은 섬유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영기업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무역의 탈중앙화는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³⁴⁵⁾

정부의 개혁조치는 기업에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허락하였을 뿐 국영

344) David W.P. Elliott,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p.46.

345) Melanie Beresford and Dang Phong,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Trade and Aid in the Demise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2000), pp.152-154.

부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었다. 국영 부문에 종사하였던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역을 통제하지 못해 밀수가 증가한 것은 중앙계획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지시안 40-CP’를 통해서 각 성이 개별적으로 해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이 지시안의 원래 취지는 기업이 필요한 원료와 물품을 적시에 공급하여 기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일반 기업이 밀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 향만의 공무원, 과거에 베트남을 탈출한 친인척들을 통해서 많은 물품이 바다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경유하여 국내로 유입되었다. 베트남의 기술 수준으로는 수입품을 대체할 수 없었으므로 보호무역을 통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행정력 미비로 무역을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역 현황을 집계조차 하지 못했다.³⁴⁶⁾

또한, 국가의 구매력 약화로 인하여 도시 지역에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의 구매량은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식량의 부족은 가격을 인상시켰다. 기업의 근로자들은 폭등하는 식량 값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업의 임금으로는 의식주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노동규율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하였다. 기업의 경우 기존의 원자재를 구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이탈하는 노동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공업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농업용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이뿐 아니라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캄보디아와의 전쟁 및 점령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 등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제 3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한 분권화와 탈중앙화라는 개혁조치만으로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웠다. 생산물 계약제 덕분에 식량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346) 밀수로 인한 국고 손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여전히 식량 상황은 불안정하였다. 그리고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갈등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등소평의 ‘흑묘백묘’ 만큼 결정적인 선언이나 서방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도 없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운영과는 다른 운영방식이 최고지도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국가의 통제완화 및 후퇴의 징후도 명백히 드러났다. 경제운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으며,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개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항목	목표	실제 생산량
식량	1,900-2,000만 톤	1,820만 톤
석탄	800-900만 톤	570만 톤
전기	55-60억 킬로와트	52억 킬로와트
시멘트	200만톤	150만 톤
면직물	100만-300만 미터	374만 미터
제지류	9만-10만톤	7만8천500톤

<표 3-4: 제3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 주요부분 목표와 생산량>

출처: Nguyen Kien, *Vietnam 15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Saigon*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0), p.60.

2. 완화된 사회문화정책

이 절에서는 1975년도부터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베트남의 문화 정책에 대해 고찰하겠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통일 베트남의 문화·사상 정책은 ‘재교육 캠프’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남베트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체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인사들 가운데 위협적인 인물들을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용소에 감금하였다. 수용소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문화 정책은 통일 이전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비록 1980년 헌법 44조와 45조는 각각 “베트남의 문학과 예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베트남 공산당의 관점과 노선에 기초하여 발전해야한다.” “매스미디어, 보도, 출판, 도서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정치적·이

념적·미적 가치를 계속 발전시켜 여론을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전 인민들의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수준을 높여 이들이 사회주의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해야 한다.”³⁴⁷⁾고 명시해 놓아, 예술과 언론에 대한 당의 우월적인 위치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탄압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경제 건설과는 달리 문화 영역에서는 예전에 비해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전쟁 과정에서 엄격하게 고수되었던 당의 문화 노선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쟁 기간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역할은 계급과 혁명의식을 고취하여 적을 격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당 안팎의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은 헌법 조문과는 달리 실질적인 창작활동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약간의 자율성을 허락하였다. 문학, 영화, 미술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변모

① 통일 이전 북베트남의 문화정책: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노선을 충실하게 따랐다. 문화예술의 기본 목표는 당의 입장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시키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을 다루었던 응우옌 반 봉(Nguyễn Văn Bông)의 1954년 소설 『꺼우 밭의 말뚝박기(Cắm thê đờng Cẩu)』는 당의 입장을 잘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었다.³⁴⁸⁾ 당시 베

347) Communist Party of Vietnam,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15), pp.103-104.

348) 『꺼우 밭의 말뚝박기(Cắm thê đờng Cẩu)』는 토지개혁 시기 베트남의 농촌 마을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당의 노선을 완벽하게 선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봉건 지주의 악랄한 착취, 촌락 질서의 문제점, 전통적인 문화 특히 신화적 사고의 낙후성과 식량을 낭비하는 마을의 의례, 토지개혁의 정당성 및 지주세력의 의견을 수용하는 변질된 빈농 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여주인공인 누의 부모님과 오빠는 마을 수호신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열린 잔치 기간에 오빠는 죽었고, 이 과정에서 진빛을 갠기 위해서 누는 안 지주의 수양딸로 들어가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다. 누의 부모님은 모두 객사하여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다. 베트남 노동당이 승리하고 새로운 정치구조가 형성되었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악덕 지주들이 모두 당원이라는 점이다. 지주들은 토지를 숨겨 좋게 분산시켜 놓았으며 서류를 조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간척한 땅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였다. 누의 약혼자인 토안이 농촌위원회에서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

트남 노동당은 숙명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문화를 비판하였으며,³⁴⁹⁾ 전통을 계급투쟁의 입장에 따라 급진적으로 재해석하여³⁵⁰⁾ 사회주의적인 문화예술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였다. 하지만 이미 한통속인 간부들은 토안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도부를 향해 ‘당신들은 농민들의 당이 아닌 지주들의 당’ 이라고 비판한 것을 트집 잡아 토안을 위원회에서 내쫓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분개하였지만, 간부들에게 반발하는 것이 자칫 큰 대업을 이룬 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간주 될까 염려하여 분을 삭이고 있었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은 당의 토지개혁위원인 쩌우(Châu)라는 여성혁명가에 의해 발각된다. 처음 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토안과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쩌우는 당의 지시를 성실하게 따라 히엔 노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밥을 먹고, 일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모를 가까스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 사안을 보고하여 모든 실책을 바로잡고 악덕 지주를 축출한다. 지주가 축출된 후 이들은 당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한 토안과 누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할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신입 당원인 이 커플은 토지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게 된다. 이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을의 노인들이 “개인의 승리는 집단의 승리 뒤에 오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문예 작품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비교해도 개인의 위치는 현저하게 축소되어있다. 다만 북한의 수령숭배문학보다는 그 이상화의 정도가 덜 하다고 할 수 있다.

349) 『쭈 엔 끼에우 (Truyện Kiều)』는 현재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을 만큼 베트남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섬세한 문체를 통해 여주인공의 끼에우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작품에는 당대에는 파격적인 요소들이 분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사시에서는 집안의 어른들이 자녀들의 혼사를 결정한다는 사회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여 주인공인 튀 끼에우가 우연히 만난 낯 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출하였던 것, 두 사람이 비밀리에 약혼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였지만 상황에 따라 정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대사들은 분명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도 않으며 봉건적인 폭력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 서사시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낭만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근대적 사회질서를 꿈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350) 예컨대 신데렐라와 콩쥐 팥쥐의 베트남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땀과 감 이야기(Tám Cám)』는 농민계급의 착취와 근절이라는 모티프로 새롭게 이해되기도 하였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설화는 여러 판본(현대에 들어서는 잔인한 내용은 삭제되기도 하였다)이 있지만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땀은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인 감의 학대 속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다시 환생한 이후 왕비가 되어 잔인하게 복수를 한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이다. 이복동생 감을 냄비로 유도하여 끓여서 죽인 다음 시신에 향신료를 뿌려 음식으로 둔갑시켜 계모에게 건네주어 먹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몬티라 라토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토지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시점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땀을 농민계급으로 감과 계모를 착취를 일삼는 지주계급을 상징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때문에 땀의 잔인한 복수 역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하노이 인문사회대학에서 장기간 동안 교편을 잡은 덩 지아 카잉은 “만약 땀이 악인들을 징벌하는 데 그토록 잔인한 방법을

1956년을 기점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사회주의권에서 탈스탈린화가 진행되어 문예 노선에서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북베트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년반-자이펴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 운동은 일부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을 뿐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베트남 노동당은 문화적 자유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1956년 12월 14일 호치민의 이름으로 발표된 출판법 1조는 법의 제정 취지가 “인민들의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권리를 남용하여 평화, 통일, 독립, 민주주의에 방해하는 세력을 금지하기 위함.”³⁵¹⁾이라며 국가에 의해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제약당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1957년 2월 20일 개최된 제2차 전국문화예술대회에서 쓰영진은 “년반-자이펴 패당의 반동적인 언사들을 짓밟아버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였던 작가들에 대한 재교육과 숙청이 수년간 계속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예술인의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노선에 반발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³⁵²⁾ 물론 일부 작가들은 당의 승인 하에 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지만³⁵³⁾ 전반적으로는 자유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고결해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우리는 복수에 개입해서도 아니 개입할 수도 없다. 분노의 감정이 가득했던 땀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설화의 저자 또한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농민들이 지주에게 가지고 있는 깊이를 젤 수 없는 분노를 이해해야만 한다.”며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Montira Rato, “Peasants and the countryside in Post-1975 Vietnamese Literature” (University of London: Ph.D. dissertation, 2003), p.22.

351) Hồ Chí Minh, “Kèm theo luật về chế độ báo chí” 문서번호: Số 282/SL.

352) Hirohide Kurihara, “Changes in the Literary Policy of the Vietnamese Workers’ Party 1956-1958” In T. Shiraishi and M. Furata (Eds.),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NY: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1992), p.184.

353) 1957년 부 바오(Vũ Bảo)의 소설 『근래의 결혼 (Sáp cưới)』은 상당한 부수가 판매되었으며 토지개혁을 담당하였던 많은 간부들이 종종 읽었던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췌(c hê)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쑤언 (Xuân)과 부어이 (Bưởi)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을 담당하였던 간부들의 잘못된 정보로 부어이 가족을 지주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이후 부어이 가족이 많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촌락의 사람들은 이 가족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쑤언의 가족은 결혼을 미루게 되었으며, 그는 새롭게 실험하는 합작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부어이와 멀어졌다. 부어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국영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토지개혁 오류 수정과 계급 재분류 작업에 따라 부어이의 가족은 가까스로 복권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쑤언은 친구를 보내 재회를 계획하였지만 부어이는 “그 끔찍하고 굴욕적인 날 동안 그는 나를 떠났었고, 나는 혼자 버려져 있었다. (Những ngày cực nhục anh bỏ tôi, tôi vẫn đi một mình nó quen rồi)”라고 말하

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특히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북베트남은 당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노동당의 핵심 지도부였던 팜반동 수상은 1962년 7월 작가 및 예술가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당의 문예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작가들 개인의 입장이나 세계관 보다는 당의 노선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만일 당의 관점과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르크스주의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작가는 자신의 관점, 자신의 평가, 자신의 판단과 같은 작가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뒤엉켜버린다면 작가는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여러분들의 작품 가운데서 어떠한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작가들이 부정적인 것에 경도된 작품을 출간한다면, 독자들은 이를 반대할 것이고 이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제가 말한 선과 악의 의미는 아주 고전적인 나무와 숲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까이에서 관찰한다면 상당수의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무들이 숲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같이 부족한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사업도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진행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그림을 중심에 놓고 동시에 다른 관점과 문제점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정말로 종합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³⁵⁴⁾

면서 재회를 거부하고 이 둘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남녀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소설이었지만 북베트남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가져온 파국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지도자와 당을 절대적으로 신격화시켰던 북한의 주체 문학과도 분명 거리가 멀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 토론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 소설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 책은 1957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88년에 재출판 되었다. 온라인 버전은 <https://gacsach.com/doc-online/118003/sap-cuoi-phan-i-chuong-1-2.html> 에서 읽을 수 있음.

354) Pham Van Dong, “Our Homeland, Our people, Our Cause and the Artist” In Pham Van Dong, *Some Cultural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1), pp.71-73.

이 연설의 후반부에서 작가 개인의 창조성과 자유를 보장할 것을 말하였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유란 부르주아적인 의미의 방종이 아니며 사회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자유라고 명시하면서, 작가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혁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작가들은 당의 노선을 선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1968년 1월 제4차 작가 회의에서 당 타이 마이³⁵⁵⁾교수는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전투에 참여하는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웅을 창조해야만 한다.” 며 문학과 예술이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북부에서 대중들은 스스로 ‘우리의 노래가 적의 포탄 소리보다 더 높게 울리도록 하라’ 라는 슬로건을 만들기도 하였다.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과 낙관을 유지하자 우리를 협박한 적들이 오히려 당황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라며 위의 입장을 더욱 강조하였다.³⁵⁶⁾

영화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팜 키남(Phạm Kỳ Nam)감독의 1962년 작품『찌 허우 (Chị Tư Hậu)』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에는 여성들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면, 이제는 당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아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⁵⁷⁾ 1965년 베트남과 소련이 합작한 『조준 깃발(lá cờ

355) 당 타이 마이(Đặng Thai Mai)는 임시정부에서 문화성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식민지 시절부터 탕롱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지압 장군 등과 매우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지압 장군은 첫 부인인 독립운동가 응우옌 티 광 타이(Nguyễn Thị Quang Thái)가 호아로 수용소에서 수감생활 도중 옥사한 후 1947년 당 타이 마이의 딸인 당 빅하(Đặng Bích Hà)와 결혼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당 타이 마이는 전반적인 문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356) Dang Thai Mai,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Vietnamese Studies* No. 17 (1968), pp.115-122.

357) 영화는 평범한 여인이 병원의 정원에서 딸에게 줄 옷을 뜨개질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나레이터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에게 매우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된다. 영화는 주로 프랑스와의 전쟁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인 허우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식모 생활을 하다가 화(Khoa)를 만나 결혼하여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 어촌 일을 돕고 산파로 살고 있다. 남편은 베트남 노동당 당원이며 프랑스군과 전투 중에 사망한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상을 치루고 있었던 늦은 밤, 한 남자가 찾아와서 출산이 임박한 자신의 부인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린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남편의 상을 치루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한다. 이에 남자는 “죽은 사람 때문에

chuán)』은 소련의 해빙기에 제작되었던 『학이 난다』, 『병사의 시』와 완전하게 대조적이다. 이 영화는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다. 전투 중 불가피하게 본대에서 이탈한 병사 응우옌 반 렉은 탈영하지 않고 다른 부대 지휘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 부대에 잠시 머무른다. 이 주인공은 가족들을 프랑스군에게 잃었고 여동생만 남겨두고 전쟁터로 나왔다. 임시로 편입된 부대는 매복한 프랑스 진지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포격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주인공 병사가 “내 눈으로 적들의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해 달라”며 목숨을 걸고 프랑스 진지로 잠입하여 붉은 기를 세우는데 성공한다. 포병부대는 이 깃발을 보고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작전 장교의 외모는 지압 장군과 매우 닮았으며 온화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연출되었다. 병사들도 상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위협한 작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화에서 병사들이 고향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가족들이 땅을 분배받고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연출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전쟁 수행과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명분으로 동구권과 전략적으로 연대하였다. 그러나 동구권에 남아있었던 근대적, 개인주의적인 요소는 아시아의 신생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종합해보자면 베트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매우 경직되었고 예술의 자율성도 현저하게 제약받았다.

② 완화된 문화정책: 통일 이후에도 당 지도부의 경직된 사고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남부의 문화가 자본주의적이며 타락했다고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를 뿌리 뽑고 공산주의적인 인간관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과는 달

어떻게 산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면서 울먹이며 하소연한다. 허우는 이 말을 듣고 슬픈 감정을 추스르고 총알이 빗발치는 산모의 집에서 아이를 받아낸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베트남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지시를 성실하게 따른다. 그녀의 착한 성품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덕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녀의 지인들이 도와주어 위험을 모면한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그녀는 기관총을 들고 동료들과 함께 프랑스군 본진으로 침투하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납치된 그녀의 딸을 가까스로 구출해 낸다.

리 예술가들은 당의 억압적인 정책 노선을 비판하고 창작의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조명해보겠다. 구체적으로 문학, 미술, 영화 부문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결이 다른 양식의 예술작품들이 등장했으며, 베트남 공산당은 이를 어느 정도 허락하였다.

1978년 유명작가인 응우옌 밉 쩌우(Nguyễn Minh Châu)는 전쟁 기간 출간된 문학의 작품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특히 인물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와 진실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³⁵⁸⁾ 이 글을 접한 공산당의 이론가인 호앙 응옥 히엔 (Hoàng Ngọc Hiến)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켰다. 그는 근래 베트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숭고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고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무엇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압도하였다. 예술적 표현 방식의 경우 이성이 감정을 압도하였다. 문학의 구조는 내용이 형식을 압도한다. 작품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형상을 본다면 이성과 합리성이 감성을 압도한다. 작품의 형상화 과정에서 본질이 형태를 압도한다. 이러한 성향들이 베트남의 문학 전반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문학은 비현실적으로 변질되었다. 그 까닭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당의 엄격한 지도와 검열은 작가들이 보고 느낀 것을 쓸 수 없게 제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가들은 그들의 상사들이 구성해 놓은 틀에 맞추어 글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³⁵⁹⁾

호앙 응옥 히엔은 소련에서 유학하였으며 스탈린의 찬사를 들었던 전위 시인 블라드미르 마야콥스키의 작품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즈다노프 강령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진지한

358) Dana Healy, “Poetry, politics and war: Representations of the American war in Vietnamese poetry” In Andrew Hammond ed., *Cold War Literature: Writing The Global Conflict* (London: Routledge, 2006), p.127.

359) Tuan Ngoc Nguyen, *Socialist Realism in Vietnamese Literatu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Ph.D. Dissertation: Victoria University, 2004), pp.264-265.

비판이 1979년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베트남 정권은 작가들의 서구권과의 문화적 접촉을 심하게 차단하지 않았다. 예컨대 1977년 4월 25일 팜반동 수상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여 레이몽 바레 (Raymond Barre) 수상과 회담을 했다. 프랑스 외신들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져 남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어로 직접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및 기술교류가 타결되었다. 1978년 파리 7대학과 하노이대학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문학과 인문학에서 자료, 교원, 연구자 교류가 계획되기도 하였다. 이 덕분에 프랑스 학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었다.³⁶⁰⁾ 즉 베트남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서구권의 지식과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였으며 베트남의 독립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스탈린 독재체제에는 반대하였지만, 베트남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설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프랑스에는 베트남의 우호적인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교류가 가능하였다. 소련과의 친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베트남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타이 선(Đặng Thái Sơn)은 전쟁 이후 하노이 음악원에 교환교수로 파견 온 소련 음악가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여기서 실력을 닦아서 1980년 아시아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가 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는 년반-자이퓌 운동과 같은 베트남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획기적으로 문화 노선을 변경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로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이 작가들과 공식적으로 마주하면서, 당의 지나친 검열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보장한 것은 도이머이 정책이 실행된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당 내에서 예술가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통로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였고, 이것이 당의 검열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련의 영향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360) 필립 랑글레, 피익 타인 땀, 윤대영 역, 『베트남 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경기도: 진인진, 2017), p.129.

1982년 12월 ‘소련문화의 날’이 개최되었다. 소련의 예술가들이 방문하였으며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약 2,500개의 영화관과 클럽에서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³⁶¹⁾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상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1980년 소련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화는 유명했던 영화가 블라디미르 멘쇼프(Vladimir Menshov) 감독의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³⁶²⁾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와 비슷한 영화들이 상영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지도부가 모든 것을 다 용인했던 것은 아니었다. 엘리엇은 1982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쩌 도 (Trần Độ)와 레득토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인민군 중장을 지낸 쩌 도를 개혁파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분명 예술가들의 불만사항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들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엘리엇의 연구에 따르면 레득토는 문화부가 장발과 나팔바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 이러한 느슨한 방식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수정하지 않으며 제5차 당 대회에서 장관직과 중앙운영위원회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였다. 이 둘은 식민지 시절부터 함께 독립투쟁을 하다 체포되어 같은 감옥에 수감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문화정책 노선의 문제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³⁶³⁾ 하지만 쩌 도의 문학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가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베트남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창작활동은 창의력, 상

361) P.Navrozov, E.Plotnikov and Michel Vale, “Soviet-Vietnamese Friendship- a Factor of Peace and Construction” *Soviet and Eastern European Foreign Trade* Vol. 21 No. 1/2/3 (1985), p.217.

362) 이 영화는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상경한 세 여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카테리나이다. 노동자로 일하는 그녀는 부유한 교수인 친척이 휴가를 떠나는 기간 동안 그의 호화로운 집을 지킨다. 카테리나와 친구들은 파티에서 부유한 카메라맨을 만나고 그와 하룻밤을 보낸다. 하지만 우연히 공장에 촬영을 나온 카메라맨에게 신분이 발각되었다. 카테리나는 이미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신분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 미혼모가 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인정받아 기업의 대표로 승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이 영화는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서구음악인 ‘베사메 무초’가 등장한다. 당시 소련 영화가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1981년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였다.

363) David W.P. Elliott,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p.30.

상력, 영감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의 근간이 되는 개성과 세계관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³⁶⁴⁾ 쩌도는 199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논쟁하던 시점에서는 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 수준의 자율성을 허락하는 정도였다.

이 당시 단순히 문화정책 노선을 둘러싼 논쟁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의 내용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 문학 연구자인 몬티라 라토는 통일 이후인 1975년부터 도이머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인 1986년 사이에 베트남의 문학이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⁶⁵⁾ 이 시기에 발견될 수 있는 문학적 변화는 ① 문학이 일반적인 생활상을 반영하기 시작 ② 현실에 대한 경고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언급 ③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는 주제가 적극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베트남에서도 개인이 처한 여러 모순을 묘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주어진 공간에서 사회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문학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작품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파격적인 작품은 호 아잉 타이(Hồ Anh Thái)의 『섬 위의 여자 (Người Đàn Bà Trên Đảo)』였다. 이 작품은 반-사회적인 예술가인 뜨영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품에서는 정치적 요구나 사회비판적인 면모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매우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순결’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였던 주인공의 모습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저자는 국가의 서사를 거부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강조한다.

“1973년 이후 저희 부대가 옮겨와 임업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많은 부대원이 이 5반으로 현재 앉아 있습니다. 평화는 왔습니다만 제가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싸울 때, 우리 옆에는 삶과 죽음이 있었고 본능적인 갈망을 억제할 수,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에게 나이를 넘겼으니, 다

364) Trần Độ, *Trần Độ tác phẩm, tập II* (Hà Nội: Nxb Hội Nhà Văn, 2012) 온라인버전 출처: <http://trandotacpham.blogspot.com/2019/01/phan-au-xay-dung-nen-van-hoa-moi-xa-hoi.html#more> 를 참조.

365) Montira Rato, “The Decline of Socialist Realism In Post-1975 Vietnamese Literature” *Journal of Humanities* Vol. 10 Issue.2 (2007) 참조.

끝났으니,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시집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식 하나만 있다면 얼마간 위로가 되어서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지키지만 앓았더라면 적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가 있었을 겁니다. 나 혼자 외로울 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몸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겠습니까? 조직에서는 저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간 걱정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³⁶⁶⁾

미엔의 선언은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혁신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영화 『찌 허우』에서처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개인주의가 존재하거나 부재하다는 뜻은 개인의 존재와 부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유형의 사회와 공동체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사회의 발전 정도와 민주성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양은 달라질 수는 있다. 한편으로 개인의 고충과 고민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따라 진지하게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가 존재한다. 반면 개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목소리가 공동체에 반영되지 않으며 일면 자발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가족, 친족, 공동체에 의해 위계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사회도 존재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지만 이들 내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작가인 호 아인 타이는 1960년생으로 유년 시절 전쟁을 경험하였고 통일된 베트남에서 청년기를 보내었다. 이 작품은 1985년에 집필되어 1986년에 출간되었다. 제6차 당 대회가 12월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화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가 이끈 대변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75년부터 시작된 문화의 고유한 ‘장(habitus)’에서 진행된 부분적 자유화 조치의 결과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등장과 문화적인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주권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되지는 못했다.

영화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생산의 주체

366) 호 아인 타이, 최하나 역, 『섬 위의 여자』 (인천: 인천문화재단, 2010), p.108.

가 다양해졌다. 영화는 특정 국가기관이 독점하여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다양한 기관이 더 큰 자발성을 가질 수 있었다. 배양수는 이 시기의 영화산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통일 이후로 베트남의 영화산업은 남북이 합쳐지면서 그 규모가 커졌고, 각 사회조직이 영화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베트남 청년연합회 소속의 ‘청년영화사’, ‘문인협회 영화사’, ‘영화협회 영화사’, 적십자사의 ‘휴먼영화사’, 각 텔레비전 방송국 소속의 영화사, 호치민 영화협소속의 ‘밴응에 영화사’, ‘사이공영화사’, ‘꼰다오 영화사’ 등이 생겨났다...이 시기는 영화산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1975-1988년 사이에 220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내용 역시 전처럼 전쟁, 사회주의 건설 및 생산 등과 같은 주제를 탈피하여 보다 다양해졌다.”³⁶⁷⁾

이처럼 영화감독과 영화사들이 사회주의 선전물만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감독은 작품에 자신의 예술관을 투영시킬 수 있었다. 1980년 쩌 프영(Trần Phương) 감독의 『마지막 죄 (Tội lỗi cuối cùng)』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성매매 여성인 히엔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전반부는 국가의 구금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히엔의 모습과 그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에는 사회로 돌아와 과거 친한 친구 디엵의 애정 어린 도움에 감사하며 방직공장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었다. 과거 히엔을 도와주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녀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깡패 두목 레번이 경찰의 도주를 피해서 히엔에게 도움을 청한다. 레번의 등장으로 그녀의 정상적인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 레번은 디엵을 살해하였으나 히엔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친구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레번과 함께 호치민시를 떠난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부하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본 히엔은 직접 레번을 죽이면서 영화는 종료된다. 도덕의 승리인지 악의 승리인지 불분명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영화의 주인공 히엔은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감독도 의도적으로 구원과 갱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367) 배양수, “혁명영화에서 상업영화로: 베트남 영화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50권 (2006), pp.428-429.

있다. 사회주의의 승리나 당에 대한 고마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히엔의 갱생을 도와주는 친절한 2명의 경찰과 수용소 최고책임자가 등장할 뿐이다. 과거의 전쟁영화처럼 국가와 혁명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미술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의 미술은 어느 정도 전통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허락하였으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고수하였고 정치적 선전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작가들이 생각하는 ‘미’에 대한 추구가 일정 수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베트남 공산당은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서구의 현대미술과 유사한 작품들 혹은 작가들 자신의 세계관이 강하게 투영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가 국가의 눈을 피해 개인적으로 소장된 것이 아니라 정식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당 쩌 퀘이(Đặng Thị Khuê)의 『미국의 공습』은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화풍을 연상시킨다. 베트남의 평론가들 역시 이 작품이 입체파를 연상시킨다고 비평하였다. 당시 정부가 이러한 작품을 허용함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화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³⁶⁸⁾ 실제로 1946년생인 그녀는 현대미술 계열의 작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1998년 미국에서 작품전을 개최한 최초의 베트남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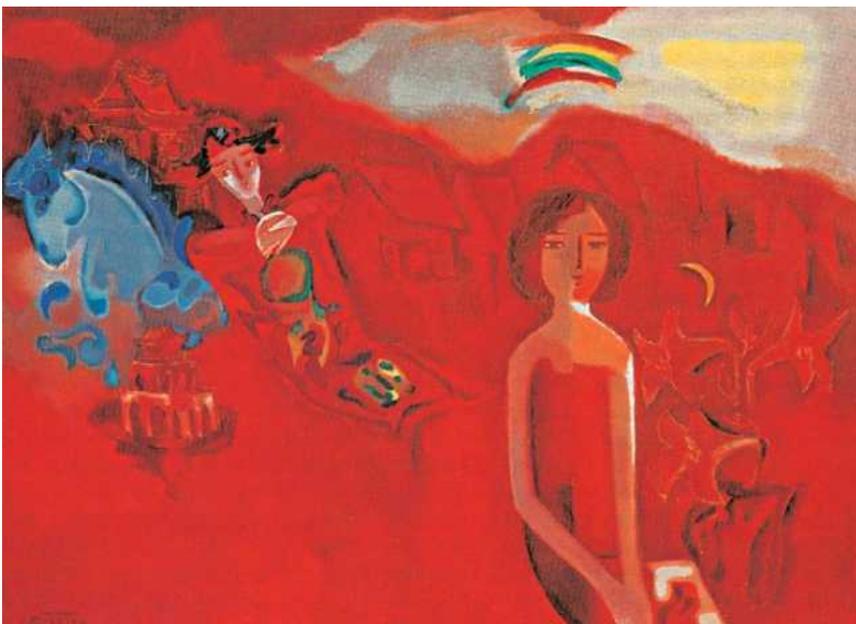
1984년 제작된 루영 쑤언 도안 (Lương Xuân Đoàn)의 『하노이 나의 도시』라는 회화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샹갈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1980년과 1985년 하노이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이력을 지닌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가 반정부적인 인사가 아닌 친정부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소속 화가로 1973년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되어 전투현장을 그렸다. 군 복무를 통한 기여를 인정받아 1984년 소련으로 파견되어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루영 쑤언 도안은 1985년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중앙당선전위원회(ban tuyên giáo trung ương đảng)에서 활동하였다.³⁶⁹⁾

368) “Lược sử các Triển lãm Mỹ thuật Toàn quốc Việt Nam” *Mỹ thuật Nhiếp ảnh số tháng* 2015년 6월호. 출처: <http://ape.gov.vn/luoc-su-cac-trien-lam-my-thuat-toan-quoc-viet-nam-d743.th#>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369) “Lương Xuân Đoàn Biography” Vietnam The Art of War 출처: <https://vietnamtheartofwar.com/1952/08/11/luong-xuan-doan-biography/>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그림 3-1 : Đặng Thị Khuê, Giặc Mỹ (미국의 공격), 1980>



<그림 3-2 : Lương Xuân Đoàn, Hà Nội Của Tôi (하노이 나의 도시), 1984>

또한 년반-자이펄 사건에 연루되어 작품전시가 금지되었던 부이 쉐언 파이(Bùi Xuân Phái, 1921-1988)는 1984년 특별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다시 얻었으며, 베트남의 언론 역시 그의 작품을 칭송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또 다른 미술가인 응우옌 뜨 응히엠(Nguyễn Tư Nghiêm, 1922-2016), 즈엉 빅 리엔 (Đương Bích Liên, 1924-1988), 응우옌 상 (Nguyễn Sáng, 1923-1988) 역시 타락한 부르주아의 잔재가 아니라 베트남 현대미술의 기둥들이라고 평가받기 시작하였다.³⁷⁰ 1996년 이들의 지위는 복권되었으며, 최고의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호치민 메달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의 현대미술이 프랑스 식민지 교육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메달을 받았던 인사들은 모두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인도차이나 대학의 에콜 보 자르 (École des beaux-arts du Viêt Nam)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역시 작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2) 통일 이후 종교정책과 갈등

남베트남을 장악한 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종교정책을 펼쳤다. 북베트남에서는 종교의 통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부에 융성했던 가톨릭, 불교, 호아하오교, 까오다이 종교 세력과는 마찰이 일어났다.

사실 북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민간신앙, 종교, 장례 등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지 못했다. 1975년 1월 15일 당 중앙운영위원회는 ‘새로운 혼인, 장례, 추모와 축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214호 지도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도안은 최근 도시와 농촌 지방에서 미신, 결혼, 장례식, 제사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료, 당원 그리고 청년조직 구성원들이 구습(舊習)을 따르고 있어,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 조직과 대중 조직들은 악한 구습의 철폐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다. 장례식의 경우 보건부의 방

370) Boi Tran Huynh, “Vietnamese Aesthetics From 1925 Onwards” (University of Sydney Ph.D. Dissertation, 2005) 참조. 이들에 관한 정보는 Quang Phong, Quang Viet and H.C. *Viet Nam Cultural Window* No. 29 (2000) 참조. 출처: <http://www.vietnamartist.com/vietnamese-modern-paintings-the-pioneers/>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침에 따라 사망 이후 48시간 이내 매장할 것, 전반적인 의례를 간략하게 할 것, 장례식 때문에 입대를 비롯한 공적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미신을 타파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을 부르는 행위, 부적을 그려 붙이는 것, 향을 태우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간략하고 검소하게 장례와 혼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악지대와 소수민족의 경우, 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전쟁 후에도 이 지역에는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훨씬 많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³⁷¹⁾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하노이 시 당국은 1975년 2월 7일 ‘미신, 점, 점성술, 영매, 저승길 노잣돈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³⁷²⁾ 베트남 공산당은 민간신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풍속을 체제에 대한 직접 도전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부에는 다양한 종교 세력들이 남아있었다.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남부의 종교집단은 상당한 규모와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국가인 응오 딘 지엠과 티에우 정권 아래서는 제한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집단 전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CIA 보고서에 따르면, 남베트남에는 900만에서 1,100만 명의 주민들이 불교 신자였으며, 그 가운데 약 300만 명은 열성적인 신도였다. 과거 남베트남 정부의 가톨릭 친화 정책과 불교탄압 정책은 불교 신도들의 반발을 샀다. 가령 남베트남 정부는 석가탄신일 행사에 종교적인 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63년 6월 11일 틱꽝득 스님의 소신공양을 통해, 응오 딘 지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당시 CIA 보고서는 불교집단의 시위가 응오 딘 지엠 정권의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³⁷³⁾ 그리고 그해

371) Đcsvn,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214-CT/TW, ngày 15 tháng 1 năm 1975 Về việc thực hiện nếp sống mới trong việc cưới, việc tang, ngày giỗ, ngày hội” In Đcsvn, *VKĐTT Tập 36, 1975*, pp.18-20.

372) Shaun Kingsley Malarney, *Culture, Ritual and Revolution in Vietna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67.

37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pecial Report: The Buddhists in South Vietnam” 문서

11월 군부 쿠데타로 응오딘 지엠은 처단되었다. 천주교도 상당히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가령 반공주의자인 쩌 허우 타잉(Trần Hữu Thanh) 신부는 티에우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는 반부패운동(Phong Trào Chống Tham Nhũng) 의장을 맡아 정부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새롭게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무신론’의 원칙에 따라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종교를 공정하게 탄압하였다. 1977년 11월 11일 팜반동 수상은 ‘종교정책에 관한 결의안-297호’를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두었다. 주요사항을 요약해보자면 종교는 국가와 사회주의를 존중해야 하며 베트남 시민의 의무를 강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종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는 자체적으로 신도들을 훈련하여 목사, 신부, 승려 직을 수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초급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교인이 되려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만 했다. 또한 종교단체 지도자가 되거나 지도자로 선출되는 것은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톨릭의 경우 바티칸의 승인을 얻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교 관련 서신 역시 정부에 보고해야만 했다.³⁷⁴⁾ 사실상 종교탄압 정책이 실시된 것이었다.

남베트남에서 활동한 앙리 르메르트 신부는 축출 당하였으며, 군목으로 활동하였던 70명의 주교는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또한, 가톨릭이 운영하였던 고아원과 ‘성찬청년조직’은 활동을 금지 당했다. 새롭게 남부 가톨릭 수장이 된 몬시뇰 빙(Nguyễn Văn Bình)은 베트남 공산당과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 4월 24일에서 5월 1일 기간 공산당의 입김 하에 개최된 남북가톨릭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덕분에 19명의 주교들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알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³⁷⁵⁾ 남부의 신학교 역시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부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번호: CIA-RDP79-00927A004100030002-4. pp.1-4.

374) Hội đồng Chính phủ, “Nghị quyết: Về một chính sách đối với tôn giáo” 문서번호: Số 297-CP.

375) Stephen Denney, “The Catholic Church in Vietnam” In Pedro Ramet ed., *Catholicism and Politics in Communist Societies* (Durham:Duke University Press, 1990), pp.280-283.

1985년 8만 권의 미사 경전과 8,000권의 성경책 반입을 허가하였다.³⁷⁶⁾

불교에 대한 탄압도 강력하였다. 1976년부터 사찰의 자산을 몰수하였으며, 승려들과 비구니들을 속세에서 살도록 강압하였다. 당시 한 승려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예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고 여행할 수도 있었고 강연도 진행할 수 있었다. 경제는 더욱 나빠져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상황이다.” 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³⁷⁷⁾ 이 때문에 1977년 1월에 개최된 베트남 통일 불교회(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Nam Thống nhất) 제7차 회의에서는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불교 세력과 민족해방전선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1978년 3월에는 3,000여 명의 신자들이 호치민시에서 반정부 데모를 조직하였지만, 이는 무력으로 진압 당했다. 남부에서 영향력을 지닌 호아하오 불교 역시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의 반공주의 성격과 과거 남베트남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도 문제가 되었다. 사원의 자산들은 국가에 몰수당하였으며 창시자인 후인 푸소(Huỳnh Phú Sổ)의 기념일 행사도 금지되었다.³⁷⁸⁾ 까오다이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카오다이 민병대의 지도자인 쩌 꾸앙 빙(trần quang vinh)은 옥사하였고, 떠이닌에 위치한 까오다이교의 중앙사원은 공산당에게 몰수되어 떠이닌 공산당 위원회 건물로 활용되었다.³⁷⁹⁾

서구의 학자들은 다른 동남아시아 예컨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력한 헤게모니를 지닌 종교적 집단이 베트남에서는 부재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공산권의 경우 폴란드는 가톨릭, 소련은 정교회라는 종교가 있었으나, 베트남의 종교적 전통은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³⁸⁰⁾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에서는

376) *Ibid*, pp.292-294.

377) Victoria Bulter, “Communism versus Buddhism in Vietnam” UPI 1981년 11월 17일.
출처: <https://www.upi.com/Archives/1981/11/17/Communism-versus-Buddhism-in-Vietnam/2158374821200/>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29일.

378) “Vietnam: The Hoa Hao religion: type, structure, leaders, number of members, and the treatment of members by the government” 출처: <https://www.refworld.org/docid/3df4bec514.html>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29일.

379) Nguyen van Canh, *Vietnam under Communism 1975-1982*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83), p.186.

380) Clare Trần Thị Liên, “Communist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Vietnam: A Historical Perspective”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No. 5 (2013), p.247.

베트남 공산당이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종교가 분명 존재하였다. 이들의 존재와 투쟁이 베트남을 도이머이로 전환 시킨 것은 아니다. 전쟁 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종교는 여기에 정면으로 저항할만한 힘이 없었다. 그렇지만 종교집단이 베트남 공산당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도이머이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베트남 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완화되었고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 그리하여 종교 세력과 일종의 합의를 모색하면서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만약 도이머이 정책이나 부분적인 종교 자유화 조치가 없었다면, 1989년에 즈음하여 사회 영역의 많은 부분이 폭발하여 베트남은 큰 내부적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국의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한 베트남이지만 유독 종교 정책만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천주교, 불교, 까오다이교, 호아하오교 등은 공산당의 규범과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과거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종교집단이 다른 민주적 가치 예컨대 헌법, 공정성, 평등, 자유라는 요소들과 결합되면 사회변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현재의 베트남 공산당도 종교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 사회주의의 변화 특징은 <표 3-5>와 같다.

	1980-1986년
물리적통제능력	약 (변동없음) 중앙집권체제와 계획경제의 부분수립 -
자원제공능력	약 (약화추세) 생산물 계약제의 부분적 성과 + 중공업 발전 노선의 유지 - 1985년 경제개혁의 실패 -
상징적동원능력	중 (약화추세) 문화적 자유화 노선의 확대 - 남부 종교집단의 반발 -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소련과의 밀월 +

<표 3-5: 1980-1986년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제3절 도이머이 개혁과 적응

1. 제6차 당 대회와 도이머이

1) 경제상황의 악화

베트남공산당은 제5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실행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여전히 농업 생산성은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업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도시의 생필품 부족은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가격-임금-화폐(Giá-Lương-Tiền)’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사실 1985년의 개혁이 왜 600%에 육박하는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결과적으로 차기 서기장으로 유력하였던 또 호우(Tố Hữu)가 낙마하였다. 또한, 제6차 당 대회에서 베트남공산당은 공식적으로 과오를 인정하였고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베트남의 경제연구자들도 당이 실수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양자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1985년에 발생한 일련의 위기 상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방식의 문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경제적 현상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5차 당 대회에서 결의한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다. 사회주의 기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연체율도 매우 높았다. 중앙은행은 많은 화폐를 발행하였고 정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지도 못하였다. ‘연성예산제약’과 저성장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독립 채산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부족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하였

다. 특히 임금을 현금과 현물(식품)로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³⁸¹⁾ 이는 농업의 생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식품에 대한 배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노동자들은 암시장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입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점을 예측하여 국영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전폭적으로 인상하였지만, 시장가격은 임금인상 분을 훨씬 초과하여 상승하였다.

암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투명한 자유 시장 경제는 결코 아니다. 생산물 계약제에 따라 나온 추가생산물 가운데,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생산비와 유통비용 그리고 약간의 이윤을 더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통업자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그 결과 일반 노동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뿐 아니라 외화와 사용 가능한 현찰을 보유한 국영기업 역시 암시장으로부터 물건을 사재기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 국가가 인위적으로 기업들을 통합시킨 강압적인 정책은 큰 후유증을 낳았다. 국영기업은 종종 생산능력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배정받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예산과 자재들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독립 채산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독자성이 강조되었다. 농업의 생산물 계약제와 유사하게 기업은 정부와 계약한 재화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법정임금을 제공한 다음, 남은 수익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익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밀수 등을 통한 이윤 창출은 개별기업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 경제를 교란하는 일이었다.³⁸²⁾

381) 박희진, “베트남, 화폐개혁 이듬해 도이모이 채택…북한은?” 『통일한국』 통권 제 313호 (2010), pp.33-35.

382) 쉬운 예를 들어 사회주의 철도기업 중앙정부로부터 약 3000 억 원이라는 사용 가능한 현금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라면 3000억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기업과 거래만 가능한 자금이며 이에 대한 사용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시행되면서 철도회사는 정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대출받은 3000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 철도공기업이 새로운 열차의 도입, 선로개선,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철도공기업이었다면 법률 혹은 장관의 재량으로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제한될 수 있고 투명한 감사절차, 중앙정부의 감사원, 비상임 감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제반

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국가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식량의 값이 폭등하였다. 버스비도 10배 정도 인상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으며, 의약품이나 국수 등과 같은 생필품도 화폐가 아닌 담배로 거래되는 상황이었다. 국가가 뒤늦게 생필품에 대한 독점적인 수매를 선포하였지만, 이미 시작된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 없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당원들과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이 정책의 심각한 피해자가 되었다.

2) 제6차 당 대회: 도이머이와 내부혁신

① 6차 당 대회: 1985년부터 시작된 또 다른 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엄격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참사였다. 개혁의 실패는 지도부의 위신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민심을 이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계획경제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혁을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베트남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차 당 대회가 1986년 12월에 개최되었다. 전당대회의 발표문은 과거 정책실패에 대한 베트남공산당의 통렬한 반성으로 시작한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분명 일정한 성취를 거두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의 급격한 생산 감소, 경제 구조 확립 과정에서 저지른 오류 특히 투자분배 실패와 지난 5년간의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과정의 실책은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주로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된 국가 예산은 오랜 기간 세수(稅收)를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 구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농업은 발전이 필요한 핵심적인 분야로 간주되지 못했다. 또한, 농업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자재, 물품, 자본은 부족하였으

경영사항이 모니터링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 베트남에서는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도 부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투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투기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받은 3000억 가운데 일부만 시설개선에 투자하거나, 1월에 입금되어 7월에 사용해야할 투자금 일부를 6개월간 투기시장에 전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며 인센티브 정책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383)

당 대회에서는 정책 각론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사항까지 논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였다.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우선 농업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 물자 공급,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물론 투자되는 재원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유통부문의 경우 무역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밀수에 능한 중견기업과 상인들은 국가-민간 합작 기업에 통합시켜 이들의 노하우가 법과 국가 정책에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산과 경영 사이의 계약은 ‘계획 수립’의 기초이며 또한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계약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중재 제도를 통해 그 효율성을 보장해야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임금개혁이 요구된다.” 384)

베트남의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당시의 국가계획위원회(Ủy ban Kế hoạch Nhà nước)는 1982년부터 위원회 내에 장기계획 부처를 조직하여 1986-1990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³⁸⁵⁾ 물론 이러한 연구와 계획이 일관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경제통관료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② 고르바초프의 효과와 정치권의 변화: 사실 도이머이 개혁은 주민들의 불만을 인식한 당내 개혁파가 보수파를 압박하고 설득하여 쟁취한 것이었

383) CPV, “The 6th Party Congress, 1986” In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30-2015): A selection of documents from eleven Party Congresses*, pp.608-617.

384) *Ibid*, pp.634-653.

385)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5 years of innovation (1986-2000)” 출처: <http://www.mpi.gov.vn/en/Pages/Ishtpt.aspx?idTin=1846>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30일.

다. 물론 주민들의 저항은 존재하였으나 이것은 ‘일상의 저항’ 수준이었으며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개혁안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개혁파는 이를 통해 얻은 정당성을 가지고 보수파를 압박할 수 있었다. 레 주언 사후 임시로 당 서기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령의 쓰영진은 1986년 제10차 하노이 당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이 회의는 제6차 당 대회를 위한 최종 리허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영진은 과거 당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였고, 체제의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기존의 관료적 중앙집중화를 탈피해야 하며, 효율적인 원가계산과 사회주의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년 전인 1985년 고르바초프를 만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소비재, 가공산업, 관광,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³⁸⁶⁾

사실 1985년 여름 쓰영진이 몇 가지 개혁안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소련의 입장을 매우 우려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해 3월에 취임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선포하였지만, 아직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베트남공산당의 개혁안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색채가 약화되고 시장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안이 소련의 심기를 건드릴까 매우 우려하였다. 베트남 지도부는 과거 헝가리와 체코가 소련에 반기를 들었다가 맞이한 결과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개혁안을 소련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당시 쓰영진이 가져간 개혁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85년 6월에 실시된 ‘가격-임금-화폐’ 개혁안 보다 더욱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도이며이 정책의 초안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베트남공산당 지도부의 우려와는 달리 정상회담은 매우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쓰영진의 개혁안을 보고, 몇몇 정책들 특히 다양한 경제 분야를 용인하는 정책은 소련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보수파가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386) Trường Chinh, “Consolidate the socialist relations of production, develop the forces of production and make our capital city strong, prosperous and beautiful” In *Vietnam in face of today’s socio-economic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7), p.22.

소련의 지지와 승인이 없었더라면 도이머이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베트남공산당의 보수파 정치인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면서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당시 부총리였던 쩌 꾸잉(Trần Quỳnh)은 소련의 수상이 베트남의 ‘시장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당시 정치권을 동요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쓰영진은 소련 서기장의 지지가 담긴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반대파들의 발목잡기를 물리쳤다.³⁸⁷⁾

6차 당 대회에 즈음하여 당의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보수파의 반대 목소리를 약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중앙 정치무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응우옌 반 린(Nguyễn Văn Linh)이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였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앞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도이머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 개혁파들은 당의 원로들을 설득하여 정책 방향의 수정을 승인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련의 개혁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보수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자신들이 주도한 일련의 정책실패로 정당성에 타격을 입었다. 결정적으로 레 주언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1986년 7월)하게 되자, 당의 원로들도 큰 틀에서 개혁을 지지하는 청신호를 보냈다. 경직된 당의 정치적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당의 원로이자 보수파의 수장인 레득토는 1986년 5월 당과 국가기관에 정년퇴직, 연령 제한, 임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부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지압 장군 역시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 만일 혁명 1세대 원로들이 변화에 둔감하였거나 후배들의 개혁요구를 묵살하였다면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의 중앙위원회에 신진인사들이 계속 진입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6년 기준 전체 위원의 31%가량이 초선이었으며, 37%가 1982년에 선출된 재선이었으며, 24%는 1976년에 선출되었던 인사들이었다. 물론 베트남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소수의 최고지도부와 막후 실세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진인사들의 중앙정계 진출은 개혁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레닌주

387)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 - Quyển I:Giải phóng* (Saigon: Osin Book, 2012), pp.357-358.

의 ‘민주적 중앙집권제’ 를 지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체제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원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지방에서 간부 활동을 시작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혁명원로들의 비중이 15%였던 반면, 지방 출신 관료들은 30%에 육박하였다.³⁸⁸⁾ 새로운 중앙위원회 인사들은 현장의 요구를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젊은 관료들이 비록 자유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소련을 통해서 보다 유연한 경제정책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것도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자칫 ‘일상의 저항’ 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회 영역의 불만과 저항을 공적인 국가 영역으로 강력하게 전파하고 확산시켰다.

2. 제 6차 당 대회 이후의 정책변화

현재 베트남의 고도성장을 보면서 자칫 도이머이 정책 이후 급격한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또한,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전에는 의미 있는 개혁안이 부재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도이머이 개혁은 1970년대 말부터 계속 실시된 여러 부분적인 개혁들이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등장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을 기준으로 내부의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즉각적인 개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 기간에 공산당 지도부는 영미식 자본주의 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유형의 발전국가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자신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지 않았다. 중국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1979년 전쟁 이후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처럼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없었다. 베트남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노선을 따르고 이를 베트남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³⁸⁹⁾ 이는 동독의

388) Carlyle A. Thayer, “The Regularization of Politics: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1951-1986” In David G.Marr and Christine White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1988), p.189.

389) 소련의 변화는 베트남이 변화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의 사회구조적 상황은 소련과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과 속

지도부가 고르바초프의 효과를 차단하고자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었다. 주요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사회주의 개혁의 본격화

① 경제개혁 추진: 6차 당 대회 이후 개혁안이 곧바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기 보다는 베트남을 둘러싼 안보적인 문제가 갑자기 북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캄보디아 점령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베트남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여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사항이었다. 게다가 미국과의 적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의 보수세력과 군부는 개혁의 추진을 우려하였다. 헝가리 외교문서를 분석한 발라즈 살론타이에 따르면 1987년 4월 주 헝가리 베트남 대사인 응우옌 령은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6차 당 대회의 결의안은 옳지만 아직 이 계획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을 솔직하게 밝혔다.³⁹⁰⁾

하지만 외교적인 사안이 개혁을 좌초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지체 이후 세부적인 정책을 담은 법안들과 지시안이 실행되었다. 1987년 11월 14일 국영기업 개혁안인 HDBT-217호가 실행되었다.³⁹¹⁾ 이 법안은 당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포함한 실행안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장기·중기·단기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기업의 계획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지도하에

도가 모두 달랐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에서는 애초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수립이 지연되었으며,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일정 수준 변경되었다. 가령 1985년도부터 계획된 소련의 협동농장 콜호즈(kolkhoz)의 개혁안 아렌다(Arenda) 제도는, 추가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독자적인 소유권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베트남에서 이미 1980년부터 공식화되기 시작한 생산물 계약제와 매우 유사하다. 소련의 산업 부문 역시 일련의 정책적 흐름에 따라 고스플렌에 의한 통제를 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당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경영실패로 이미 분권화 정책이 실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390) Balazs Szalontai, “The Diplomacy of Economics Reform in Vietnam: The Genesis of Doi Moi, 1986-1989” , p.223.

391) Hội đồng Bộ trưởng, “Quyết định 217/HĐBT Ban hành các chính sách đổi mới kế hoạch hoá và hạch toán kinh doanh xã hội chủ nghĩa đối với xí nghiệp quốc doanh” 문서번호: Số: 217-HĐBT.

노동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수립 할 수 있다. 기업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납품하고 세금을 내는 의무만 수행하며, 나머지 경영 제반 사항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법안의 34조에는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은행(이자율 등을 고려)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국가는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조에 따르면 개별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고용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1989년 195-HDBT, 1990년 144-HDBT를 실시하여 더 정교한 제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개별기업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같은 법안의 44조에 따르면 개별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국가조정위원회(Trong tài kinh tế Nhà nước)’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 역시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45조에 따르면 채용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기술자에 한해서 자체적인 고용이 가능하였다.³⁹²⁾ 다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동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업에게 허용되었다. 기업에 상당한 자율성이 허락되었음에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1988년 4월 5일에는 새로운 농업정책인 ‘농업 경영관리 개선안’이 발표되었다.³⁹³⁾ 37 페이지에 달하는 이 긴 개선안은 제목과는 달리 농업 분야뿐 아니라 경제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사적 소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국가는 개인경제와 사적 경제가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이것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법적 지위, 합법적인 경영권, 임금 지급 그리고 개인 사업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권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개인과 사적 경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사라져야 한

392) 물론 당시 베트남 상황에서는 노동부처를 통한 고용이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

노동시장이 활발하지도 않았으며, 개별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393) 전문은 Đcsvn, “Nghị quyết của bộ chính trị Số 10-NQ/TW: Về đổi mới quản lý kinh tế nông nghiệp”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Hano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2006), pp.100-137에 수록되어있다.

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거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개인과 개별 가구 사이의 협업, 특히 자본과 생산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술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협업을 장려한다. 또한, 자발성·상호이익·민주적 경영방침·강압 없는 협동의 원칙 등에 따라 생산 발전·신기술의 도입·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개인과 협동(공공 혹은 국영)부문의 합작 등을 지지한다.” 고 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사실상 제도화하였다.

개선안은 당시 농민들이 원했던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 법안은 “계약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은 1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토지의 종류는 반드시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계약 당시 측정된 면적당 생산량과 가격은 5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생산물의 경우 수출이 가능하며 다만 이 과정은 국가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기존의 생산물 계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안정적인 계약, 소유권의 인정, 독점적 상품처분권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북부, 중부, 중부 고산지역의 대규모 협동농장 가운데 생산성이 낮고, 관리가 부실한 곳은 적절한 규모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협동농장이 국가와 체결한 계약 외 생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이는 적법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협동농장 구성원들의 노동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과 정부 및 대중 조직에 참여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합산하지 말며, 협동농장 당 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협동농장의 운영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였다. 물론 국가의 개입과 관료적인 통제가 단번에 사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혁안에 나타난 개인 소유권의 인정, 독점적 처분권, 독자적 경제활동의 승인 등은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책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었다. 1992년 개정된 베트남 헌법의 15조 “국가는 국가의 경영과 사회주의 지향에 기초한 시장경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다중구성 상품경제를 추구한다.”³⁹⁴⁾와 23조 “개인과

394)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992”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15), p.156.

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 방위, 안보와 국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는 개인과 단체에 시장가격을 지급하고 강제로 구매하거나 징발할 수 있다. 강제 구매와 징발절차는 법으로 정한다.”³⁹⁵⁾ 등과 같은 조항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개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협동농장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판매 및 임대하고 그들에게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허락하였던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단기간에 식량 부족국가에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하였다. 개혁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모두 잡음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남부에서는 과거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1975년부터 시작된 협동농장 건설로 인하여 개인의 토지가 사실상 국가에게 몰수되었다. 이를 개인에게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은 1988년 8월 31일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문을 발표하였다. 이 지시문은 당 간부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의 경우 농민들에게 바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지만 동시에 담당자들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당 지도부는 1954년 토지개혁의 뼈아픈 경험덕분에 토지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중앙에서 설정한 기준이 현장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시문은 지방의 관료들이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의존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토지 재분배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강제적인 방법과 명령은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당 간부의 참여하에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가령 토지의 원소유주가 노동력을 상실하여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 땅을 분배받은 농민이 약간의 식량과 의복을 제공하는 화해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토지는 재분배하지 말고, 국가 유공자의 토지는 남겨두며 개인의 권리가 국가와 충돌할 경우 ‘농업경영관리개선안’의 정신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조

395) *Ibid.* p.159.

하였다.³⁹⁶⁾ 물론 이 과정이 모든 개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토지개혁 당시처럼 폭력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고 농촌은 큰 혼란을 겪지 않았다.

② 정치사회의 개혁과 갈등: 도이머이 개혁은 기본적으로 경제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시기 정치질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변함없이 고수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82년부터 정치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1945년 북베트남 베트남민주공화국 건국 이후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에서부터 경력을 쌓고 새롭게 교육을 받은 당원들이 당 대회 대의원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베트남공산당은 중앙과 지방에서 선발된 1,000여명의 대의원들이 100여명 정도의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10여명 안팎의 정치국을 선발하고, 정치국에서 최고지도자인 서기장을 선발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는 민주적인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선발된 대의원들에게 중앙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특히 이들은 중앙의 무리한 정책이 실제현장에서 과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비판하였다.³⁹⁷⁾

위와 같은 당의 내부 토론은 도이머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기존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베트남공산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혁은 부패혐의가 있거나 무능한 당 간부들을 출당시키거나 재교육시키는 방안이었다. 문제가 있는 12만 7,800명의 당원들은 재교육 받았으며 7만 8200명은 출당되었다.³⁹⁸⁾ 하지만 당 지도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몇 가지 분명한 성취는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분출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다.³⁹⁹⁾

396) Đcsvn, “Chi thị của Bộ Chính trị: Số: 47-CT/TW ngày 31 tháng 08 năm 1988 Về việc giải quyết một số vấn đề cấp bách về ruộng đất”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2006), pp.361-373.

397) Carlyle Thayer, “The Challenges facing Vietnamese Communism” *Southeast Asian Affairs* (1992), p.352.

398) *Ibid*, p.349.

399) Đcsvn, “Báo Cáo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sáu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iểm điểm hai năm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Đại Hội 6, và phương hướng nhiệm vụ ba năm

제도권 내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 베트남 국회(Quốc hội)가 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부출신으로 국회 의장과 대통령 대리를 지낸 응우옌 호우 토(Nguyễn Hữu Thọ)는 당의 노선을 의회에 지나치게 겁박하지 말고 설득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국회는 기존의 ‘거수기’의 행태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기도 하였으며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들은 도 므어이 (Đồ Mười)가 수상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베트남 인민의회는 한 명의 수상을 추천하여 100% 동의를 얻는 기존의 절차를 변경하였다. 국회는 도 므어이와 보반끼엣 두 명을 추천하여 투표를 했다. 도 므어이가 63% 득표하여 수상 자리에 올랐지만,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그는 수상에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⁴⁰⁰⁾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 민주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선출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었다.⁴⁰¹⁾

당 내부에서는 이보다 급진적인 의견도 등장하였다. 1986년 6차 당 대회를 통해서 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발된 쩌 쑤언 박 (Trần Xuân Bách)은 1989년 11월 정치국회의에서 공산당 일당제를 철폐하고 다당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⁰²⁾ 이는 반체제적인 입장이기 보다는 1989년 폴란드에서부터 다당제가 수립되었고 소련 역시 다당제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tôi”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p.919.

400) 응우옌 반 린과 보반끼엣은 모두 도이머이의 설계자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두 지도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이 1980년대 초 남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 시도를 하다가 최고지도부의 반발을 사서 정치국 위원에서 사임하였을 때, 보반끼엣과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1982년경 레 주언과 레득토는 후임 서기장으로는 또 호우, 수상으로는 보반끼엣을 내정하였다는 설득력 있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문에 보반 끼엣이 의도적으로 최고지도부의 눈 밖에 난 응우옌 반 린을 멀리하였던 것이 그들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뿐 아니라 레 주언 서기장이 사망한 이후 보반끼엣이 쯔영진에게 조금 더 오랫동안 서기장으로 활동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응우옌 반 린에게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은 레득토와 팜반동을 만나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도 므어이를 수상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 - Quyển II: Quyển binh* (Saigon: Osin Book, 2012), p.99

401) Gareth Porter, “The Politics of ‘Renovation’ in Vietnam”, *Problems of Communism* Vol. 39 No. 3 (1990), pp.81-82.

402) Russell Heng Hiang Khng, “Leadership in Vietnam: Pressures for Reform and Their Limit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5 No. 1 (1993), p.100.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어 베트남의 통치 구조를 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쩌 쑤언 박의 주장은 아시아의 공산권 국가의 정치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방안이었다. 가령 중국공산당의 조자양(趙紫陽) 서기장 조차 중국에서 다당제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당의 보수 세력은 물론 온건한 개혁파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었으며 그는 1990년 3월 정치국원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당의 외부에서도 다당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부이 띠(Bùi Tín) 대령을 들 수 있다. 그는 사이공함락작전에도 참가하였으며 동시에 당원이었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베트남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였으며 도이머이 이후 퇴역 군인들과 함께 정치 개혁을 주창하였다. 그 역시 다당제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베트남공산당과 함께 ‘베트남 조국전선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에 속해 있는 다양한 외곽단체들을 독립시켜 의회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주창하였다.⁴⁰³⁾ 하지만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1990년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다.

이처럼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며, 남부의 일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도이머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시위로 연결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던 탓이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 13년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전-지구적인 탈냉전을 겪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성장했던 시민사회가 나름의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국가와 대립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는 있었다. 그리고 1988년 협동농장해체와 농가계약제의 도입은 베트남공산당의 정당성을 높여주었다. 당시 1954년과 1978년의 무리한 국유화에 대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베트남공산당이 매우 겸손한 언어로 주민들을 설득하였던 것도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도이머이는 다당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403) Carlyle Thayer, “The Challenges facing Vietnamese Communism”, p.361.

③ 문화정책: 제6차 당 대회 이후 경제, 무역, 국제관계 분야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예전과 비교할 때 완전한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술가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수용되었다. 또한, 당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제6차 당 대회를 통해서 서기장으로 취임한 응우옌 반 린은 도이머이 개혁이 선포 된지 약 1년이 지난 1987년 10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당의 예술가들을 만나 당의 새로운 문예 정책 노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호치민 주석은 시에는 반드시 강철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호치민 주석이 말한 ‘강철’이란 혁명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무엇을 칭송할지, 무엇을 비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악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회주의는 오류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 따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토피아적이며 천진난만 태도에 불과합니다. 나 자신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지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환기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과 그들의 실책과 한계를 정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옳고 그름 사이의 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리한 눈과 과학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삶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예술적 창작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거나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중들은 여러분의 작품 속에서 어두운 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04)

이처럼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은 지식인들의 자율성을 억압하였던 기존의 정책들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다. 이 시기를 ‘풀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꺼이 쩌이(cởi trói)’라고 부른다.⁴⁰⁵⁾ 하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완전

404) Nguyen Van Linh, “Let Writers and artists actively contribute to renovation” *Vietnamese Studies* New Series No. 21(91) (1989), pp.117-125.

405) Sophie Quinn-Judge, “Vietnam’s Bumpy Road to Reform” *Current History* Vol. 105 Issue 692 (2006), p.287.

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틀과 형식은 고수하면서, 여러 개인과 사회를 예전보다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이 시기 출간된 소설과 영화를 살펴보겠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인 마반강(Ma Văn Kháng)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신부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네』는 당 지도부의 숙청과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65세의 품위 있는 외모를 가진 타이 씨는 과거 매우 영향력 있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관료였다. 하지만 한 장관이 그의 얼굴이 호아로 수용소의 간수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여 심문하였다. 타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의 목소리는 최고지도부까지 전달되어 엄격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던 수사관이 폭격으로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그는 2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당을 비판하였다. 마반강이 작품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당이 아니라 내각이었다. 베트남체제에서 내각은 당의 지시를 수행하는 하위기관이며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내각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살벌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당의 지시였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국가 관료의 어처구니없는 의심과 가벼운 말 한마디가 한 개인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마반강의 작품이 당 지도부의 우연한 실수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당을 비판하는 작품도 등장하였다. 레 허우 룡(Lê Hữu Long) 감독의 1990년작 『그것은 사랑이었네 (Có một tình yêu như thế)』라는 영화는 아직도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배우 레 카잉(Lê Khanh)이 여주인공인 킴(Kim)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시골의 한 소녀가 학교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이별한다는 줄거리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줄거리일 뿐이고 지식인과 예술인의 자유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킴은 어려서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킴은 종종 마을의 나무 심는 노인에게서 그가 쓴 작품을 빌려 읽기도 하였다. 이 노인은 과거 한때 유명한 작가였지만, 당에 의해 반동분자라고 낙인찍혀 시골로 유배되어, 나무 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김이 성인이 될 무렵 시골 마을로 공부를 가르치러 온 교사 실습생 쓰영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당시 쓰영은 김에게 실재인물인 키르키즈스탄 출신의 소련 작가 칭기스 아이트마토프(Chingiz Aitmatov)의 소설 『자밀라』를 주면서, 그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문학관을 칭송하였다. 1958년 출간된 이 소설에는 사회의 인습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자밀라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였지만, 풍부한 영혼을 지닌 목동과 사랑에 빠져 야반도주를 한다. 김은 지적이며 문학을 사랑하는 순수한 모습 때문에 쓰영에게 반했다. 그리고 쓰영의 권유로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아이트마토프의 세계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를 비판하라는 명령을 당으로부터 받고, 쓰영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는 아이트마토프의 문학이 개인주의적이며, 그의 작품 속에 사회의 질서를 미혹하는 악한 요소를 고의로 심어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달변가인 그의 해석을 들은 많은 학생은 쓰영의 비판을 수긍하며 동조한다. 하지만 표리부동한 쓰영의 모습에 김은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그러자 쓰영은 이러한 태도 변화는 사회생활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쓰영은 당의 노선을 잘 따른 공을 인정받아 소련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작품 안에서는 도이머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베트남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정치사회 변화를 맞이한다. 소련에서 돌아온 쓰영은 또 다시 돌변하여 이제는 아이트마토프를 칭송하기 시작한다.⁴⁰⁶⁾ 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그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성공을 보장하였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당 간부와 이들의 일부가 된 쓰영이, 김이 살던 마을의 노인을 찾아와서 그의 복권을 알린다. 하지만 노인은 이를 환영하기는커녕 쓴웃음만을 터뜨린다. “내가 글을 쓸 힘이 있었던 시기에 창작활동을 금지해놓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의 글을 쓸 수 없는 시점에 나의 허락도 없이 나를 복권한단 말인가? 만약 당신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예술을 통제한다면, 당신들은 인민과 예술을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충고하였다. 잠시의 대화가 끝난 후, 쓰영은 그곳에서 과거의 연인인 김을 만난

406) 흥미롭게도 실제 아이트마토프는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에게 발탁되어 외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와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 김의 경멸적인 눈초리에 쓰영은 “당신이 나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재회를 희망한다. 하지만 김은 침묵을 지키면서 예전에 쓰영으로부터 받은 아이트마토프의 책을 돌려주고 돌아선다. “하지만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라는 김의 독백으로 영화는 끝난다.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균열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남아있었던 시점이었다.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보다 제작과정이 소상하게 노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제작과 상영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베트남 지도부의 문화 노선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1987년도에 출판되었다. 바오닌은 북베트남 군대에 입대하여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북측에서 가장 역사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사이공 함락 작전에 참여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썼으며,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스러운 전쟁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 전쟁터의 끔찍한 묘사, 처녀성의 상실, 술에 중독된 퇴역군인의 삶 등과 같은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이전의 베트남 문학에서 발견되기 어려웠던 내용이었다. 바오닌의 작품이 지나치게 유명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출판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작품이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옹 토 호영 (Dương Thu Hương)의 작품인 『눈먼자들의 낙원 (Những thiên đường mù)』은 출판이 금지되었다. 이 소설은 저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1950년대 토지개혁 시기를 무대로 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비극 특히 사회적 관계의 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룬 이 작품은, 주인공 ‘어린 시절의 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였고, ‘성년이 된 딸’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이 작품은 1988년 최초로 영문으로 번역된 베트남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당시 베트남공산당이 보기에 지나치게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출판이 금지되었고 작가는 재판 없이 구금당했다.

정리하면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는 과거의 영웅적인 인물묘사,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 미래에 대한 강요된 낙관주의 등이 확실히 약화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이머이가 수립된 이후의 문화정책

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통일 이후부터 계속된 문화 자율화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당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술가들처럼 무한에 가까운 자유가 허락되지는 않았다.

제6차 당 대회가 지난 2년 후인 1988년에서야 검열과 통제가 훨씬 완화되었고, 작가들에게 자발적인 예술 활동이 보장되었다. 만약 도이머이 정책을 경제적인 개혁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문예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의 검열과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한 작업이었다. 시장경제의 도입 때문에 당의 정당성의 근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체제의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통일 이후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진행·발전되고 있었다. 당 지도부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정책을 허용하였다.

④ 체제 전환의 구조적 이점: 그렇다면 베트남은 경제 전환이라는 큰 과업을 발전된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보다 어떻게 더 잘 실행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베트남의 전환과정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기업 파산,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개혁, 개방정책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베트남 특유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었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를 연구하는 베리 노턴은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상업 부문의 국가통제와 가격통제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의 ‘가격’은 계획경제의 가격보다 ‘시장균형가격’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분석하였다.⁴⁰⁷⁾ 경제학자는 가격에만 주목하였지만, 그의 진술에는 아주 중요한 함의가 담겨있다. 노턴의 주장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혼란은, 사회주의 체제가 생성시키는 문제(연성예산제약, 도덕적 해이 등)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중앙계획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력과 정확한 행

407) Barry Naughton, “Distinctive Features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In John McMillan and Barry Naughton eds,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growth of market institu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279.

정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시장 철폐, 사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를 위한 토지개혁 및 지주계급 제거, 행정부와 군부의 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 제거 등과 같은 작업은 매우 강력한 국가조직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근대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룩해야만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다. 베트남에서는 봉건왕조, 프랑스 및 일본의 제국주의, 사회주의 베트남, 남베트남의 행정부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실현하지 못했다. 1975년 국토가 통일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는 ‘사회영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즉 베트남공산당은 정치는 장악할 수 있었지만, 시장을 포함한 사회 영역은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계획경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정 초기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극복해야만 한다. 사실 계획경제 수립과정에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예외 없이 단기간의 경제적 후퇴를 경험하였다. 왜냐하면,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시장경제를 통제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우 1928년 NEP를 종료하고 농업 집단화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발생하였다.⁴⁰⁸⁾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외포적인 성장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포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적정수준의 국가의 통제능력과 근대적 행정 능력이 필요하다. 체제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농업사회의 경우, 국가는 농촌의 노동력을 산업노동자로 전환 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산업화를 위하여 농촌의 인구를 산업인력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업생산량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기구 개발, 비료 증산, 개간 사업, 관개 시설, 파종의 효율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베트남의 사회주의는 바로 이 초기 단계에서 부터 실패하였다. 동유럽 및 북한의 사회주의가 외연적 성장에 성공하고 그 이후의 비효율성과 내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었다면, 베트남의 경우 산업화의 초기 조건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수립의 실패가 베트남에서의 시장경제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국영기업의 수와 노동자는 다른 사회주의

408) 동독에서는 1953년도에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였고 이것은 베를린 봉기로 이어졌다. 북한에서도 1958년도 협동농장을 완결시키는 과정에서 생산량의 손실을 경험하였다.

권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1984년 베트남의 전체 기업 가운데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율은 29.1%에 불과하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동독 80%와 헝가리의 65%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⁴⁰⁹⁾ 베트남의 공식자료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표는 베트남 통계국이 작성한 1985년 국영 부문 노동자의 수인데 당시 총인원은 77만3661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전체 인구수인 5987만2천 명의 1.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국영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업률이 폭증하지는 않는 구조였다.⁴¹⁰⁾ 이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가 국영 부문의 일자리 감소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구조였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국영 부문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임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기업의 투자가 사회 전반의 효율과 복지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년도	전체 인원 (명)	중앙정부소속 기업	지방정부소속 기업
1977	552,516	317,228	235,288
1978	609,169	339,534	269,635
1979	652,318	340,838	311,480
1980	645,693	344,821	300,872
1981	630,655	332,455	298,200
1982	641,100	344,267	296,833
1983	682,381	369,501	312,880
1984	725,456	382,622	342,834
1985	773,661	404,300	369,361

<표 3-6: 국영부문의 산업노동자 인원현황 1977-1985>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Số Liệu Thống Kê Việt Nam Thế Kỳ XX* (Hanoi: Nhà Xuất Bản Thống Kê, 2004), pp.428-430.

409) 김영윤, 『북한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사회주의 국가의 협동농장 개편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72.

410) 베트남의 경우 동구 사회주의권에 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동구권의 시장화가 사회주의 정권의 급작스러운 몰락 이후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유럽 단일 시장의 구축과 보조를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탈냉전 흐름 이전부터 공산당의 통치를 유지하면서 시장화를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국영기업을 구매할 수 있는 국내의 민간자본이 사실상 전무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경영능력 또한 입증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도, 상당 기간 국영기업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는 구조적 특징이며 군대의 축소로 인해 실직한 군인들 그리고 국영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2) 대외관계의 변화: CMEA⁴¹¹⁾와의 협력좌절과 개방의 다각화

당시 베트남 지도부는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문화적인 이완을 계획하고 있었을까? 베트남공산당은 도이머이 초기에 많은 과감한 개혁을 실행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개방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1986년 당시에는 CMEA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더 과감한 개방정책을 실행하였다.

① CMEA와의 협력 시도와 좌절: 개방정책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일은 베트남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제6차 당 대회에서 논의된 대외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당시 정책의 방향성과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CMEA 회원국(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몽고, 폴란드와 루마니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우호 국가인 알바니아와 북한과의 관계도 넓힐 것이다...우리는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CMEA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조(自助)정신과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우리는 조국의 건설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보다 증진해야 한다.”⁴¹²⁾고 언급하였다. 즉 도이머이가 선포된 제6차 당 대회에서는 해외의 직접적인 투자 유치는 주로 사회주의권을 대상으로만 계획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외투자법은 제6차 당 대회가 종료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198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해외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베트남의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향후 베트남의 무역 및 대외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 내용이 1988년 사실상 당의 공식 영문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Vietnamese Studies*에 소개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제6차 당 대회의 결의안을 지지하였으며, 당시 다른 지식인들과 당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주의권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를

411)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약자이며 흔히 ‘코메콘’으로 불린다. 베트남은 1978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412) CPV, “The 6th Party Congress, 1986”, pp.675-676.

유도하며,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과거의 노선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을 살펴보면 당시 베트남의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약 30개의 나라가 이미 해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베트남은 사실상 이 법안을 제정한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⁴¹³⁾ 특히 당의 완고한 사회주의 보수계열 인사들의 반발을 인식한 듯 “이러한 지원들이 일부 인사들에게는 사회주의 정부가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변의 다른 국가들은 더 부드럽고 폭신한 카펫을 깔아주었다.” 고 하였다.⁴¹⁴⁾ 또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정과 경영의 합리성을 증대시켜, 베트남에 선진적 경영 방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특히 이 당시 베트남의 학자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의 유치는 사회주의 국가권 특히 CMEA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당시 베트남 무역의 70%가 사회주의권이었고 나머지 30%가 자본주의권이었던 구조를 단시간에 바꿀 수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인프라가 취약하고 법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캄보디아와의 분쟁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던 베트남에 투자할, 자본주의 국가는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분업체계에 참여한 후에 자본주의권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공동체와 함께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상호 간의 주권, 평등 그리고 상호이익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국제적 노동 분업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성과를 거두면

413) Nguyen Xuan Oanh, “The Beginning of a Challenge” *Vietnamese Studies* No.94, (1989), p.124.

414) *Ibid*, p.127.

우리의 문을 사방으로 열고 국제적인 수준의 분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 통합을 통해 발전된 자본주의로 성장한 좋은 예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CMEA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415)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베트남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자칫 소련에게 사회주의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아직 고르바초프의 ‘시나트라 독트린’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냉전 및 양극 구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소련과 동유럽권의 지지철회는 베트남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응우옌 깍 비엔은 이점을 우려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등의 투자액이 소련의 지원 규모인 15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⁴¹⁶⁾ 이 시기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군사 및 경제지원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베트남에 파견된 소련 기술자들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도 자국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련은 베트남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베트남이 도이머이를 선포한 이후인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은 매년 30억 달러 규모였다.⁴¹⁷⁾

CMEA 측에서도 베트남의 지원안을 승인하였다. 다만 베트남 측의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많은 자원이 낭비되었기에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1987년 10월 제43차 CMEA 특별회의에서 1991-2005년 기간 아시아와 북미에 있는 정회원 국가인 베트남, 쿠바, 몽골과의 경제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협력지침이 결의되었다. 예컨대 이런 원칙을 세웠다. ① 수혜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무분별한 대규모 원조를 해서는 안된다. ② 무분별한 원조를 지양하며 수여국의 경제 잠재력과 발전수준을 고려해야 한

415) Hoang Nguyen,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Some Reflections” *Vietnamese Studies* No. 94 (1989), p.142.

416) Nguyen Khac Vien, “Unwavering Orientation” *Vietnamese Studies* No. 94 (1989), p.134.

417) Anton Tsvetov, “Vietnam-Russian Relations: Glorious Past, Uncertain Future” In Le Hong Hiep and Anton Tsvetov eds, *Vietnam’s Foreign Policy under Doi Moi*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8), pp.144-146.

다. ③ 수여국의 중앙계획부처의 비효율성과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장기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실제로 베트남과 소련의 합작회사인 ‘비엠포트로(Vietsovpetro)’가 설립되어 원유생산과 가공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많은 CMEA 국가들이 경공업과 섬유산업에 투자와 지원을 하였다. 베트남은 이들 국가에 주로 열대과일을 제공하였다.⁴¹⁸⁾

이처럼 CMEA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간주되었지만, 베트남은 이들 국가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 베트남과 CMEA 국가들의 관계는 피원조국과 원조국의 관계에 불과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점령 중이었으며 소련은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도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세력은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밖에 없었다. 이는 1960년도부터 시작된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분업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출계획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베트남은 소련의 호의에 기대어, 동구권에서 필요한 일부 물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동구권의 시장에 판매하기를 기대한 것 같다. 하지만 당시 동구권에서도 서구의 소비품이 인기가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공업 제품과 소비품으로 동구권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울 수는 없었다.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베트남의 투자유치 전략은 1989년부터 본격화된 동구 사회주의권 변혁과 붕괴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1991년도에 집계된 무역총액 가운데 사회주의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폭락하였다. 1986-1989년 평균 84.4%와 1990년 67.7%와 비교하면 그 폭락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은 해외자본 유입의 증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베트남은 훨씬 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양금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418)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pp.209-212.

② 대외관계 개선과 개방의 다각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혁적인 당 서기장인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이 국익을 위해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응우옌 반 린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캄보디아에서의 철수, 중국과의 관계개선,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개선, 프랑스와 일본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의 의지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표명하였다. 특히 미국의 존 베시 합참의장이 실종자 수습을 위해 베트남에 온 것을 매우 환영하였고, 이 일에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⁴¹⁹⁾ 그리고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은 여가 시간에 베트남의 문학과 역사 관련 서적 뿐 아니라 미국의 문학과 역사서를 읽는다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⁴²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1989년 10월 베를린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에 참가하여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벽이 무너진 후에도 호네커 서기장, 고르바초프 서기장, 에곤 크렌츠 등을 찾아갔으며,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우애를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과거 중국과 전쟁한 적이 있고, 1980년 헌법에는 중국의 대국주의를 비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부가 앞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을 방문하여 ‘혁명’을 지속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는 언급을 하였다.

419) Nguyen Van Linh, *Answers by General Secretary of the CPVCC Nguyen Van Linh*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9) 참조.

420) *Ibid.*, p.36.

년도	사회주의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권	개발 도상국	국제기구
1986	83.3%	9.6%	4.9%	2.2%
1987	85.8%	7.9%	4.3%	2.0%
1988	85.8%	10.1%	4.1%	N/A
1989	83.0%	8.7%	8.2%	N/A
1990	67.7%	7.5%	25.8%	N/A
1991	4.1 %	95.1.%		N/A

<표 3-7: 베트남의 수입현황 1986-1991>

출처: Mya Than, "Vietnam's External Trade, 1975-91: A Survey in the Southeast Asian Context" In Mya Than and Joseph L.H. Tan eds, *Vietnam's Dilemmas and Options: The Challenge of Economic Transition in the 1990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p.225.

년도	소비재	생산재			
		생산재 전체	공장	부품	연료 및 원자재
1986	13.4%	86.6%	27.9%	5.6%	47.3%
1987	14.3%	85.7%	30.5%	6.2%	49.1%
1988	15.3%	84.7%	27.6%	6.8%	49.9%
1989	12.8%	87.2%	26.6%	7.0%	53.7%
1990	14.9%	85.1%	22.5%	4.9%	57.8%
평균	14.1%	85.9%	27.0%	6.1%	51.6%

<표 3-8: 수입재의 부문별 구분 1986-1991>

출처: Mya Than (1993), p.226.

비록 회이득과 뜨엉 부는 모두 응우옌 반 린 서기장의 보수적인 면모를 보면서, 도이머이 이후의 공산당이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혁명에 여전히 집착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의 실용주의에 가까운 태도였다. 도이머이 정책은 비록 초기에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도는 상당 수준으로 변화된 상태였다.

이 발언은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즉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한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 안에서의 분업과 지원도 물거품이 되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비사회주의 국가권에서의 자본조달이 필요하였다.

해외투자법은 1990년과 1992년 개정되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해외투자법이 제정된 후 3년 동안 (1988-1990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1991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입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91-1997년 동안 2,230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체결된 투자 총액 160억 달러 가운데 1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⁴²¹⁾ 1991년은 동유럽에서 냉전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이었고, 이 상황에서 베트남은 사회주의권이 아닌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6차 당 대회는 적극적으로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계획경제 요소를 줄여나갔던 일종의 대내 정책의 혁신적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베트남의 고도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은 1991년 제7차 당 대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역시 공산당 내의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베트남은 ‘안보’ 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자본주의 국가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포괄적 안보’ 라는 개념이 1988년 처음으로 베트남에 소개되었다. 경제발전과 외교가 상호보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적 네트워크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⁴²²⁾ 이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세계를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1992년 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 아세안의 7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어, 아세안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원래 아세안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이 동남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베트남이 개방의 의지를

421) Nguyen Huong, “30 years of foreign investment policy improvement” *Vietnam Investment Review* 2017년 12월 17일. 출처: <https://www.vir.com.vn/30-years-of-foreign-investment-policy-improvement-54504.html>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422) Hari Singh, “Vietnam and ASEAN: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2 (1997), p.233.

보이며 캄보디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고, 소련해군이 캄장 만(Vinh Cam Ranh)에서 철군하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1992년 12월 22일에는 과거 전쟁을 했던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 당시 회담의 한국 측 대표단이었던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에 의하면 “베트남이 발전하려면 한국이 도와야 하고, 한국이 발전하려면 베트남이 도와야 한다. 그럴 경우 나쁜 인연이라도 인연이 있던 것이 인연이 없던 것보다 훨씬 낫다.” 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마 협상을 담당하였던 외교관의 입장에서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가 난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의 카잉 차관보는 “베트남사람들은 현명하다. 과거에 연연하여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고 화답하며 수교를 추진하였다.⁴²³⁾

제6차 당 대회 이후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만을 모색하였지만, 베트남 공산당 내에 많은 유연한 사고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뎀의 개혁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 덕분에, 동구권이 무너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거의 퇴행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고, 주변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으로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호치민 사상의 재해석과 사회주의로부터의 사실상 이탈

① 호치민 사상의 재해석을 통한 위기 극복시도: 제6차 당 대회 직후만 해도 베트남에 우호적인 공산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베트남공산당의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내의 논쟁과 토론이 주로 경제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지 공산당 일당독재와 체제 정당성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은 확고하였다. 하지만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이후 당 지도부는 ‘새로운 경제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어떤 가치관에 근거하여, 어떻게 정의할

423) 또한, 김석우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경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이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발원조가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을 개발원조의 최우선국으로 선정하여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김석우, “베트남, 한국에게 왜 특별한가? 『팬앤마이크』 2018년 1월 22일. 출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 최종검색일 2020년 12월 23일.

것인가?’ ,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통치체제를 공고히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엄격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회귀하는 것,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였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개최된 1991년 제7차 당 대회에서는 베트남 공산당의 당황한 모습이 나타났다. 도이머이 정책이 시작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당 대회문서는 공식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들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공산당에 의한 일당제와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유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혼합경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비록 이 용어를 사회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사적 영역을 성급하게 철폐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보수적인 당원들의 반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6차 당 대회 이후에 얻은 성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과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혼합경제 즉 시장을 받아들인 현재의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전환기에 있다면서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노선을 천명하였다.⁴²⁴⁾ 사실 제6차 당 대회 이후 국가가 안정을 되찾은 것은 큰 성과였지만, 이것이 과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제 7차 당 대회에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주류가 된 개혁세력이 향후 추진할 경제정책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 원로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레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그 안에서 양자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형태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형식적 지지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당 지도부는 호치민 사상을 현실에 알맞게 재해석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호치민 사상

424) CPV, “To continue taking the cause of renovation forward along the socialist path: Report of the 6th Central Committee on the documents of the 7th Congress” pp.729-757.

으로 사실상 대치하는 작업을 담당한 인물은 당 서기장인 응우옌 반 린이 아니라, 호치민의 오랜 전우이자 존경받는 군인 지압 장군이었다. 사실 지압 장군의 군사적 업적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통일 이후 레득토에 의해 당과 군에서 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권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베트남의 영원한 2인자라는 그의 상징성은 변함이 없었다. 1991년 지압 장군이 직접 나서 개혁에 대한 사상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원로인 지압 장군뿐 아니라 당의 지도자들도 도이며이는 사회주의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는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정치사회 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상향적인 유토피아 혹은 농업 국가인 베트남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다.

지압 장군은 호치민의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베트남에 알맞도록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며 이를 통해 조국의 해방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지압 장군은 “호치민에게 사회주의는 물질적인 조건과 인간의 지성 사이에서 불화하는 완고한 도그마가 아니었다. 호치민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기간을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프랑스와의 전쟁 때 지주층과 연대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실용주의 입장이 호치민이 견지해왔던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⁴²⁵⁾ 베트남의 경제상황이 1986년도부터 안정을 찾았을 뿐 급격하게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개혁정책에 대한 지압 장군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은 개혁을 위한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② 현재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렇다면 ‘도이며이를 채택하였으며 시장을 개방한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공식적인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이다. 상당수의 영미권 학자들은 베트남 혹은 중국의 국호와 헌법을 근거로 이들 국가에서 경제만 변화

425) Vo Nguyen Giap, “The world has still been changing, but the Ho Chi Minh’s thought will live for ever” In Vo Nguyen Giap, *Vo Nguyen Giap Selected Writing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1994), p.609.

하였을 뿐,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야노스 코르나이 교수는 도이머이 이후의 베트남과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라고 간주할 수 없는 독특한 유형의 정치-경제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베트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상징이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으며 일당독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 사회의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국영 부문(국영 부문도 시장형 공기업과 유사하다) 보다는 사적 영역의 규모가 더 크며, 노동자의 임금도 시장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⁴²⁶⁾ 이는 사실 동구권 사회주의국가가 붕괴하기 전의 모습과도 확연하게 다르다. 동구권에서는 국영 부문이 매우 비대하였고 시장의 확산이 체제를 현저하게 약화시켰지만,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베트남의 당 지도부와 지식인들도 이러한 간극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베트남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출간한 책자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호치민의 지도와 많은 당원 및 주민들의 희생으로 베트남이 제국주의를 격퇴하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전혀 미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당이 심각한 오류와 실책을 범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⁴²⁷⁾ 또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 베트남 공산당이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역사 발전 법칙과 인류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거처럼 사적유물론과 같은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도래할 사회주의의 설계도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실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베트남이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사적 경제에 대한 긍정이다. 사적 경제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더욱

426) Janos Kornai, "Socialism and the Market: Conceptual Clarification" In Janos Kornai and Yingyi Qian eds, *Market and Socialism: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of China and Vietna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p.22.

427) Communist Party of Vietnam, *Political Program for National Construction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Socialism (Amended, developed in 2011)*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2011), p.6.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의 법률에 대한 강조이다. 과거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당의 지시였다. 당의 지시만 있으면 법률은 언제든지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셋째,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과거와 같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나누어 적과 아군이라는 시각을 탈피하였다. 이들은 UN헌장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세력들과 평화, 친선, 협력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이런 베트남을 ‘시장 사회주의’로 명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국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⁸⁾ 베트남 국립도서관이 위치한 하노이 호안키엠 뒤편에는 서점거리가 있다. 이 거리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여러 가지 서적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서점의 전면에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전기와 자서전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병국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이 편저인 박정희 시대의 연구서가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이완유 전 수상의 저작집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며 이것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여, 신규주택의 30%를 외국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체제변동 이후 베트남의 특징은 <표 3-9>로 요약할 수 있다.

428) 다만 대한민국, 싱가포르, 타이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이들 국가는 반공주의적이었으며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라도 다당제 정치체제를 유지하였다. 야당은 비록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와 여당을 부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야당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이머이 이후
물리적통제능력	약 (개혁) 경찰과 군 병력을 통한 치안유지
자원제공능력	강 (강화추세) 외국인 투자유치 ++ 농업협동화 폐지 ++
상징적동원능력	약 (개혁)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실상 수정 - 문화적 자유화 노선의 확대 -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고르바초프의 긍정적 기여 + 냉전의 종식 +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활성화 +

〈표 3-9: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특성〉

소결

국가-사회-대외관계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베트남의 위기와 체제전환을 유도하였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국가’였다. 비록 통일 이전의 남베트남에서 상업과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지만, 그 강도는 동독보다 훨씬 낮았다. 또한, 대외관계(미국)와 주변국(중국, 캄보디아)과의 관계는 좋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다.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일련의 위기는 베트남 공산당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 당 지도부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불필요하게 소진되었던 철 지난 1930년대 소련의 농업 집단화와 산업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된 남베트남의 농업, 상업망, 산업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보다는 이것들을 국유화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이뿐 아니라 북부에서도 협동농장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는 캄보디아 및 중국과의 전쟁과 맞물려서 베트남의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그리하여 베트남은 비옥한 농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 기근이 발생하였다. 기술력, 행정력, 자본, 노동력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화에도 실패하였다.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면하였던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주의 전환과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성공한 후 발생한 내적 모순과 시장화 및 시민적 저항이었다.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는 전근대적 경제·사회질서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즉 국가가 생산수단의 사회화, 협동화,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포드와 빌더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던 베트남이 자본축적은 하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분배만 할 수 있는 ‘약한 국가’ 라고 표현하였다.⁴²⁹⁾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의 개혁파들은 정책 노선의 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베트남 지도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산물 계약제와 기업의 분권화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만으로는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는 역부족이었다. 1985년 경제개혁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지도부의 리더십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86년 레 주언의 사망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당내 개혁파의 위치를 강화했다. 그리하여 1986년 제6차 당 대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 1988년부터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토지와 농기구를 개인에게 분배한 정책은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장기간 토지를 분여 받아 안정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단시간에 쌀 부족국가에서 쌀을 수출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습속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다. 국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였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애초부터 산업 부문과 국영 부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던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동구권에 비해 체제 전환과정에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베트남 공산당이 구 지배세력을 척결하고 물리

429) 다만 경제학자인 이들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못하는 국가라고만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흔히 약한 국가란 국가기구의 미발달 혹은 국가에 대항하는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통치가 굴절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마이클 만의 국가권력이론을 베트남에 적용하면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베트남은 국가의 ‘전제적인 권력(Despotic Power)’은 높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이 매우 낮았다. Adam Fforde and Stefan De Vylder,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pp.66-67.

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룩한 것이 향후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약한 통치력은 동남아국가들 비롯한 제3세계 신생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통치력은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였지만, 사업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 이처럼 뒤늦게 자신들의 잠재력을 확인한 베트남은 체제 개혁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IV. 북한: 체제고수의 경로

사회주의권 연구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아치 브라운(Archie Brown)은 그의 저서에서 북한을 조지오웰의 『1984』에서 등장할 법한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는 패러디조차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⁴³⁰⁾ 사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며 새로운 것도 아니다. 특히 아치 브라운의 혹평을 단 순히 강경 매과 서양인의 완고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고르바초프를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자로, 동유럽의 체제 전환을 혁명보다 더 대단한 평화적이고 도덕적인 사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가 북한을 이처럼 혹평한 것은 아마 그의 눈에 북한이 분명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와는 상이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코르나이는 “생물학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체제라는 ‘종(species)’이다. 비록 개인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종’에 속한다. 이처럼 개별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기 다르지만 동일한 사회체제의 구성원들이다.”⁴³¹⁾라고 서술하였다. 북한의 일인독재, 일당독재, 혁명, 중앙계획경제, 국가계획위원회, 공장당위원회, 작업반, 무신론적 지향, 사회주의 리얼리즘, 평등의 개념은 모두 스탈린체제를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위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 체제 즉 스탈린체제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를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체제로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에서 스탈린체제의 요소들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건설적일 것이다. 분명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일인독재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혈연 세습,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 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경직된 이념,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보다 더욱 경직된 종교·문화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모두 기존 스탈린체제의 골격 위

430) Archie Brown, *The Myth of the Strong Leader: Political Leadership in the Modern Age* (London: Basic Books, 2014), pp.277-278.

431) Janos Kornial, *The Socialist System*, p.5.

에 북한적 맥락, 김일성의 의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결과물이었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북한이 어떻게 초스탈린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970년대 형성되었던 북한의 독특한 통치구조는 1990년대 본격화된 내외부적 위기 가운데에서도 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였던 힘이였다.

제1절 1970-80년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방향

북한의 1970년대는 매우 강력한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한 시대였다. ‘주체사상’을 통한 유일체제가 완성되어 김일성의 권력은 완전하게 공고해졌으며 후계자 김정일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성장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이 축소되는 조짐을 틈타서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쳐 민족관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침체와 위기를 발현시킨 모순들이 서서히 축적된 시기였다. 북한 경제는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생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탈린방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197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분되는 독특한 정치체제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1970-1980년대 조선로동당에서 김일성의 권력의 강도는 민주적 중앙집권화의 전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스탈린 독재정치보다 강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서 보다 멀리 이탈하여 더욱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이루었다. 또한 자신의 굳건한 체제에 기반하여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⁴³²⁾

432) 본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초스탈린화는 기본적으로 스탈린체제의 현상들이 훨씬 강력하게 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스탈린체제에 없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여 더욱 강력한 독재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스탈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성을 보다 명료하게 조명하기 위함이다. 사실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한 많은 지적인 시도가 있었다. 여러 학자들은 북한의 막강한 독재체제와 주민들의 지지 혹은 열광을 설명하기 위해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 유격대 국가,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신정체제, 최근에는 극장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수성론은 냉전시기 전체주의 이론을 극복하고 북한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거나 혹은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지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단일 사례, 엘리트 구성, 정치문화화를 통해 북한을 조명한 연구만으로는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모든 국가와 사례는 특수하다. 따라서 북한이 특수하다는 것 역시 적절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수한 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1. 1970-1980년대 계획경제의 유지와 부분적 변화

1970-198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제로 대표되는 공업관리체제와 협동농장의 골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해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수입한 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당의 개입과 사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독일의 콤비나트를 본 딴 연합기업소를 출범시켰으며 동시에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이 완전히 독특하거나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권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일종의 ‘제도적 동형화 (Institutional Isomorphism)’ 를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1970년대 외자도입과 대중동원의 재등장

1950-1960년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룩하였던 산업화는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1961년에 시작된 제 1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은 1967년 3년의 연장기를 가져 1970년에 완료되었다. 국가예산의 58% 가량이 공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이는 농업부문 예산인 12%의 5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북한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약 11.1%를 기록하였다. 이는 목표치였던 18%에 미달하는 수치이지만 적어도 산업화에 진전을 보인 것은 틀림없다.⁴³³⁾

하지만 북한의 노선은 ‘창조적인 파괴’ 와 같은 혁신을 통한 발전노선이 아니라 ‘후발성의 이점’ 을 극대화하여 중앙집권적인 동원방식을 통해 이룩한 것이었다. 즉 코르나이가 지적한 전형적인 ‘외포적인 성장’ 방식을 실시한 것이었다.⁴³⁴⁾ 물론 관점을 달리해보자면 ‘외포적 방법’ 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자본을 조달하고 노동력을 동원해야만 한

433) 정연호,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추이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7호 (2002), pp.22-23.

434) 코르나이에 따르면 외포적 방법이란 고용증가, 근로시간 연장, 경작 면적 증가, 광물 채취 증가 등 동원 경제를 지칭한다. 반면 내연적 방법으로는 노동강도 증가, 기술진보, 조직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180-184.

다. 즉 근대적인 관료제, 법률, 치안통제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수립이전에 일정수준의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근대적인 법률, 행정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제 3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자원을 통해 특정거점에만 산업화를 추진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공산당이 집권하였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리아,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예멘, 콩고 등지에서는 ‘외포적 방법’을 통해 산업화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인 북베트남, 통일 이후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북한과 유사한 정책을 펼쳤으나 초기 산업화에도 성공하지 못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외포적 방법’으로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은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에서 초보적인 산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만 유용하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제도 만으로는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⁴³⁵⁾ 북한에서도 이미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국가계획위원회의 분발을 주문하였던 ‘계획의 세분화와 일원화’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열정도 사그라지고 있었다. 천리마 운동 시기 일부 숙련노동자들을 통한 기술혁신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으며 북한의 작업조직은 개인의 창의력을 증진시켜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적작업, 수작업 노동의 분리, 위계적인 통제, 세분화·탈숙련화된 노동력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명령·통제와 같은 초기 자본주의 작업장의 모습과 유사하였다.⁴³⁶⁾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분주하게 노력하였다. 서구권으로부터 차관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435) 사실 이 지점에서 소련과 서구권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소련 역시 원유, 원료가공, 철강생산 등에서는 큰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반도체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서구권을 따라잡지 못했다. Manuel Castells and Emma Kiselyova,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A View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27-39.

436) 이동명, “북한 기업의 작업조직”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179.

들을 고수하기 위해 과거의 대규모 대중운동을 재조직하여 정치우위의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1970년도의 ‘3대 혁명 소조’는 분명 북한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외의 정책들은 다른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볼 때 특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당히 보편적인 노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①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한 수출능력의 증진 모색: 경제에서의 ‘자립’과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구하였던 북한이었지만 세계정세 변동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외자도입과 기술수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당시 전 세계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데탕트가 시작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적대감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서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수입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임시변통적인 방안을 추구하였다.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에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들여온 차관은 12억 9,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도입한 9억 8,210만 달러 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또한 OECD 국가권과의 무역 역시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OECD 및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액이 전체 무역액의 53.7%를 차지하였다.⁴³⁷⁾

하지만 오일쇼크로 인하여 원유 값이 급등하면서 투자를 하였던 산업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초보적인 북한의 기술수준으로는 물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기도 어려웠다. 1974년부터 외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1974년 무역수지 적자액이 6.2억 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수출 총액인 6.8억 달러에 육박하였던 액수였다. 1974년 7월 일본 철강재 수입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해 철강재 선적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플랜트수입 대금 지불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또 다른 차관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

437) 양문수,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 (2003), pp.60-62.

나 서방의 금융기관은 이를 거절하였다. 1975년 6월부터 주요채권들과 지불연기를 위한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1976년 말 북한의 총외채 규모는 약 20억-24억 정도로 추산된다.⁴³⁸⁾

다만 앞에서 언급된 동독의 사례와 분명 다른 점도 존재한다. 동독의 경우에는 산업설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소비재도 서구권에서 수입하였다. 이는 수입제품을 통해 사회의 불만을 달래 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비재 수입이 아니라 생산재 수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80년대 초반 동독은 외채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하지 않는 정책적인 양보를 하여 서독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기대 할 수 없었다.

② 대중운동을 통한 발전전략의 재도입: 북한은 수입을 통한 기술도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대중동원을 통해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사실 침체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북한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관료주의적인 행태와 잘못된 사상을 지닌 개인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미 1950년대 ‘천리마 운동’을 통한 생산운동을 통해 큰 성과를 얻었던 북한은 과거와 같은 대중운동을 재 호명하였다.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3대혁명’이라 명명되며 이는 ‘3대혁명소조운동’와 ‘3대혁명붉은기생취운동’을 포괄한다. ‘3대혁명’이란 구체적으로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지칭한다. 평양에서 훈련된 청년간부와 대학생들이 생산현장으로 파견되어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지시하며 기존의 간부와 노동자들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3대혁명소조’의 소조원들은 사회주의적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기존의 간부들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활동은 1973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김정일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도 당에서는 종종 한 두 명의 인원을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지도하였지만, ‘3대혁명’ 시기에는 20-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각 기업소가 당면한 문제들을

438)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pp.41-42.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였다.⁴³⁹⁾ 1975년 11월 검덕광산과 청산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사실상 증산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적이 좋은 모범 작업반에게 여러 가지 영예, 혁명사적지 및 평양 견학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⁴⁴⁰⁾

사실 ‘3대혁명소조운동’이 과거의 ‘천리마운동’과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물론 파견 주체, 인원, 조직의 규모, 사업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것 역시 ‘천리마운동’ 시기에도 이미 실시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3대혁명소조가 기존의 대중동원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⁴⁴¹⁾ 오히려 두 운동이 활용되었던 정치적인 맥락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 모두 ‘정치사상’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다만 1970년대에는 과거에 비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보다 강력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이 운동의 성과를 활용하여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북한이 일정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홍(red)’을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²⁾

이 운동의 결과는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경제

439) 장인숙,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 15권 제1호 (2011), p.258.

440) *Ibid.*, p.261.

441) 강호제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실질적인 기술혁신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압연기의 공칭능력이 6만 톤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최대 7만 2천 톤의 강재 생산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가령 분괴압연기의 베어링 교체작업의 사전준비를 잘하면 기존의 24시간 교체시설은 16시간으로 최대 12시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기존의 보수기일이 100일에서 75일로 줄어들어 12만 톤의 강재를 생산했다고 주장한다. 즉 천리마 운동은 단순한 저수련 노동자들의 사상동원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이루어졌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강호제,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91-99.

442) 정영철은 이를 북한에서 이루어진 ‘홍(red)’과 ‘전문가(expert)’의 독창적인 결합이라고 보았다. 북한에서 산업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엘리트 역시 일부 ‘탈-급진화’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혁명 엘리트’의 정치적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한 것이었다. 정영철,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1호 (2003), p.144.

지표는 계속하여 성장하였으며⁴⁴³⁾,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역시 이 대중운동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다만 당 중앙에서 파견된 젊은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의 제반사항들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이 운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동했을 것이다. 첫째,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을 받은 초급간부, 기술 간부들의 지도에 의해 실제로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몇 가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후진국이었던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첨단적인 의료기술은 도입이 어려우나, 잘 훈련된 간호사만 육성하더라도 질병발생과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당 중앙에서 파견된 혁명 소조가 아니라 일반 근로 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하여 경제성장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기존의 느슨했던 관료조직이 중앙에서 파견된 소조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례(ritual)를 통해서 ‘씨족(clan)’ 과 같은 조직으로 변모되어 스스로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억제하여 생산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⁴⁴⁴⁾

여하튼 북한의 대중동원 혹은 대중운동 능력은 분명 다른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이었다. 동독에서는 1948년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을 모방한 대중운동을 실시하였다. 당시 모범노력 영웅인 아돌프 헨네케(Adolf Hennecke)를 본 따서 ‘헨네케 운동’ 을 실시하였다.⁴⁴⁵⁾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계급이 독자성을 누리고 있었던 동독에서는 국가주도의 대중운동은 현장에서 매우 많은 반발을 샀다. 노동자들은 과잉 노동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여겨 헨네케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협박 편지를 보

443) 1971-1975년 기간 동안 북한 측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북한당국은 14.2%, 북한연구소는 6.1%, 조동호는 10.1%로 집계하였다. 한국은행의 조태형과 김민정은 이 기간 북한의 성장률을 3.9%로 추정하였다. 조태형·김민정,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p.36.

444) 씨족 형태의 경영조직에 대해서는 William Ouchi,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5 No. 1 (1980), pp.129-141 참조,

445) 광산 노동자인 헨네케는 1948년 10월 작업시간 이전에 필요한 장비를 잘 준비하여, 1교대근무기간 동안 약 24㎡의 석탄을 채굴하였다. 이는 평균 할당량의 387%에 해당하는 작업량이었다. “Activis Adolf Hennecke (1948)”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출처: https://ghdi.ghi-dc.org/sub_image.cfm?image_id=1027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30일.

내기도 하였다.⁴⁴⁶⁾ 중국은 1950년대 후반 대약진 운동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간 이후 대규모의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지양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시점인 1950년대 중후반 잠시 동안 열성적인 대중동원이 실시되었으며 통일 이후인 1970년대 중반에는 과거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공산당이 국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으며 공업 시설이 매우 적었기에 대규모 대중동원이 불필요했던 이유도 있었다. 북한은 대규모 노동동원과 사회주의권의 경제협력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중반 이미 디폴트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소비하락을 방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었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불과하였다. 즉 위기를 잠시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였다.⁴⁴⁷⁾

③ 농업정책: 농업부문에서는 1960년대의 ‘사회주의 농촌 테제’와 ‘청산리 방법’의 골격이 1970-1980년대 시기 동안 유지되었다. 공업부문과는 달리 1960년대 수립된 위와 같은 제도들은 큰 결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농산물 생산과정이 공업에 비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운영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독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협동농장을 통한 대규모 농업은 농업생산량을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동독에서 농민들의 자율성은 침해한 것은 문제였으며 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경영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농업은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 첫째, 농업 업무의 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동량과 난이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⁴⁴⁸⁾ 실제로 북한에서는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

446) Corey Ross, *Constructing Socialism at the Grass-Roots: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1945-1965* (London: Macmillan Press, 2000), p.45.

447) 이창희,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경제의 재고찰”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3호 (2014), pp.156-157.

448) 1960년대에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장원들의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안을 취했다. 김일성은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도 불가하고 다 같이 평균적으로 나누어준다면 누가 힘든 일을 하려하며 누가 기술을 배우고 창발성을 발휘하며 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고 애쓰겠습니까? 로동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 분배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생산이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고 분배받는 것은 로동자, 농민의 등을 치먹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사회주의 원칙은 원래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나온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

제’ 449)를 통하여 노동 인센티브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⁴⁵⁰⁾ 둘째, 농장원들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정의 ‘병목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가령 공업의 경우 노동자의 이탈, 전력의 부족, 기계의 과부화, 자재의 부족은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반면 농업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수평이동이 보다 원활하였으며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순발력도 지니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 ‘주체농법’이 도입되었다. 주체농법은 단위면적당 수확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다각적 영농에서 다수확 작물인 강냉이와 벼 중심의 단작 영농형태로 변화하였다. 또한 육종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강냉이 종자들이 도입되었고, 품종의 배치는 전국적 범위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⁴⁵¹⁾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고 남의 등을 치먹으려는 자들에게는 분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난이도에 따른 차등지급을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288-289.

449)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종합하여보면 분조의 규모는 15-2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알맞춤할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토론한 순안군 중석화협동농장의 녀성분조장 동무는 그전에 녀원군에 있을 때에는 작업반장을 하던 동무인데 그는 작업반보다 분조를 지도하는 것이 더 좋으며 관리하기도 험하다고 합니다. 군대의 경험으로 보아도 분조를 너무 크게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대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강한 규율 밑에 조직생활을 하고 침식을 같이하는 군대에서도 분대장이 여러 명의 분대성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제각기 흩어져서 살며 아침이면 제각기 호미를 차고 일터로 나가는 농장에서 20-30명으로 분조를 조직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토지 정리가 잘되고 포전이 넓어지며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분포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조의 규모는 고정불변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고에 분조관리제를 운영한 경험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매 농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315-316.

450) 기존의 노동일 평가제에서는 전반적인 생산량의 증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만 담당하고 할당량만 채웠다. 이 제도에서는 노동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일손이 필요한 업무에는 잘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쟁기질을 충분히 깊게 하지 않더라도 출근만 한다면 노력일(노력공수)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전체 농장원들이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생산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생산량을 작업반 전체 인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노동 인센티브를 촉진하였다. 김영훈, 전형진, 문순철,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22.

451) 정은미 “북한의 시대별 농업생산구조 분석: 적지적작의 원칙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0권 3호 (2007), pp.61-62.

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식량 농업기구 측의 자료에 따르면 1971년 449.9만톤 1976년 535.1만톤 1986년에는 711만톤을 생산하였다. 같은 기간 북한 측은 350만톤, 800만톤 그리고 1984년에는 1000만톤을 생산하였다고 집계하였다.⁴⁵²⁾ 북한의 통계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다. 다만 경제학자 남성욱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식량생산이 정상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통계상의 차이는 있지만 식량생산의 경향(trend)이 실제 상황과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량 발표 최고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식량 부족 현상이 최소화했다.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무가치하다고 간주해서는 곤란하다.”⁴⁵³⁾는 의견처럼 북한의 협동농장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물론 사회주의 북한의 농업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나 대한민국과 비교한다면 그 성과가 보잘 것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베트남과 같은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1982년 김일성은 정확한 농산물 수확고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풍년이 들어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고수확년도 보다 농사가 잘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1년에 6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총 50만 정보를 획득하고 이곳에서 30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⁴⁵⁴⁾ 이처럼 사회주의 농촌체제와 분조관리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농업 정책을 모색하였다.⁴⁵⁵⁾

이는 북한의 ‘물리적 통제능력’과 ‘자원제공능력’ 가령 투입자본량, 농업행정, 농업기술, 임금분배, 노동일 집계방식 등이 동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개혁이전의 베트남보다는 훨씬 뛰어났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공업화의 부분적인 성공이 농업발전에 공

452)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33.

453) *Ibid*, pp.32-34.

454) 김일성,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2월 9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p.155-176.

455) 북한은 1976년 자연개조 5대 방침(발관개사업의 완성, 다락밭(계단식 밭)의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치산치수사업의 실시, 간석지의 개간 등)을 내세웠다. 또한 후속작업으로 1981년 4대 자연개조사업 (서해갑문, 태천발전소 건설, 30만 정보 간석지 개간, 20만 정보 새땅찾기)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농업의 운영방식은 변화하지 않았다.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일종의 ‘승자의 저주’ 였다.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베트남은 통일이후 협동농장의 실패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반면 북한에서는 어정정한 성공으로 인하여 향후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파탄 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개혁을 논의할 수 없었다.

2) 1980년대 경제제도의 부분적 변화와 침체의 본격화

앞에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1970년대 북한의 계획경제는 그럭저럭 작동하였다. 하지만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기업소’ 체제를 도입하고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골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두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연합기업소체제의 도입: 북한이 연합기업소를 도입한 까닭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한 경영과 행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북한 측은 연합기업소의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단위들 사이의 생산적연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있는 내부에 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하여 사회적생산단위와 기업소조직형태를 옹게 조직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456)

1960년대 즉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었던 시절부터 복잡해지는 ‘생산적 연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이 미결의 과제를 ‘연합기업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연합기업소’가 김일성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 2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련과 동독은 이미 콤비나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이를 벤치마

456)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공업업에서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9), p.23.

킹한 것이었다. 북한은 정치사상 부분에서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 하였기 때문에 마치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제도와 교류협력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연합기업소 도입을 통해서 추구하였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생산과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합기업소는 생산물과 생산단계의 전문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연합기업소 산하의 기업소들을 통일적 생산 및 경영단위로 구성하여 분업을 촉진하고, 중복설비와 중복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⁴⁵⁷⁾ 둘째, 연합기업소는 동독의 콤비나트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구조를 단순화하여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관료적인 개입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북한 측 연구서는 “기업관리환절과 지도단위를 줄일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발전의 이 요구는 기술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는 일정한 기업소들을 통합하여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인 정무원의 위원회, 부나 총국에 직접 소속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있게 실현할수 있다. 이 통합의 방법이 기업관리환절과 지도단위를 가장 효과있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되는 것은 사회적 생산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에서 중간다리를 없애는것과 같은 복잡한 대책을 특별히 세우지 않아도 되며 위원회, 부들이 직접 지도해야 할 관리대상인 기업소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만든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며 이 제도가 경제지도의 단순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⁴⁵⁸⁾ 셋째, 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의 직급을 공장당위원회의 비서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경제전문가에 의한 경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물론 기업소당위원회가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생산과 경영에 전문성이 높은 지배인에게 힘을 더 실어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중앙정부가 공장의 실질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기업 역시 정확한 생산능력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이에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생산기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방침이

457)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서울: 해남, 2002), p.125.

458)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공업에서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p.17.

정해진 것이었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생산의 큰 방향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연합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 것이었다.

연합기업소는 ① 생산기술적 연계를 가진 다른 부문의 기업연합일 것 ② 모체기업이 존재할 것 ③ 대규모 생산단위일 것 ④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가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⑤ 산하에 개별기업이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다섯가지 구성여건을 충족하여야 했다.⁴⁵⁹⁾ 이에 더해 북한 측은 연합기업소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제 1형태는 일정한 지역내에 생산적 연계가 밀접한 여러 부문의 기업을 망라한 것. 제 2형태 일정한 지역내에 동일한 부문의 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을 망라한 것 (주로 탄광, 광산 등), 제 3 형태는 전국적 범위에서 같은 부분 또는 서로다른 연계된 기업을 망라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제 3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의 예를들면 모공장은 청진화학섬유공장이며 아들공장으로 길주팔프공장, 화성탄광, 상화탄광, 화성화학공장, 길주경관지공장, 스텐트 공장, 길주경제림공장 등이 하나의 연합기업소를 구성하고 있다.⁴⁶⁰⁾ 하지만 연합기업소의 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합기업소 체제의 큰 방향을 살펴보면 기업에게 더 많은 권한과 독자성의 허락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기업에게 자율성을 허락하는 동시에 이를 제약하는 모순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째, 당의 개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되었다. 지배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경영의 독자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김일성은 1985년 련합기업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앞으로 련합기업소 당위원회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작성 사업과 생산총화를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련합기업소당위원회들이 공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어떤 련합기업소에서는 당비서가 독판치는

459) 나카가와 마사히코, “북한 연합기업소의 형성” 『KDI 북한경제리뷰』 제 5권 3호 (2003), p.50.

460) 차문석, 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실태 분석』 (서울: 한국노동중앙연구원, 2008), pp.34-35.

당관료가 나올수 있고 어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배인이 독판치는 행정관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주의나라에서는 공장지배인의 권위를 높여준다고 하면서 당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다보니 지배인이 공동자금을 마음대로 떼먹고 건달을 부려도 통제하는 데가 없으며 공장이 무법천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장지배인이 독판을 치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461)

이 언술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기업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김일성이 동구권의 분권화된 경영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의 당 비서와 당 세포비서들의 권한이 지배인과 작업반장 보다 더 컸다. 소규모 기업소에서는 내부인사를 지배인으로 승진시키기도 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소의 지배인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기업소의 지배인은 사실상 모두 당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이 강화되었던 지배인은 기업내부의 생산의 효율성과 일반 노동자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 및 감시하고 상위 조직에 보고할 수 있는 공장당위원회와 갈등이 촉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생산자(지배인, 종업원)와 기획자(공장 당위원회)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김일성은 결국 지배인이 아닌 ‘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독립채산제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북한은 기존의 독립채산제를 확장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여 련합기업소의 하부생산단위 공장들에게도 ‘독립채산제를’ 허용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아들 기업은 모기업과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소의 수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 이는 분명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독립채산제에 대한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독립채산제기업소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경영상 복종관계를 설정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462)며 기업의

461) 김일성,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1월 19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448

462)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공업에서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p.63.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종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셋째, 연합기업소에게 독자적인 무역허가권을 내어주지 않았다. 김일성은 국가가 무역을 독점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⁴⁶³⁾ 연합기업소는 독립채산제와 더불어 무역허가권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영을 실시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로부터 구입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역성의 도움을 받아 수출과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상위기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원료조달에도 불필요한 간섭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방침은 1979년도에 즈음하여 국영기업이 독자적인 무역과 거래를 암묵적으로라도 허락하였던 베트남 보다 훨씬 더 경직된 것이었다.

넷째, 북한 내부의 과감한 개혁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일성의 언급에 따르면 일부 연합기업소에서 거래 결제수단을 미국 ‘달러’로 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 방안은 여러 차례 걸쳐서 김일성에게 요청되었지만 ‘주권침해’를 이유로 들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⁴⁶⁴⁾ 비록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연합기업소의 당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된 안건으로 사료된다. 사실 연합기업소 측의 달러 사용 요구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당시의 ‘대안의 사업체

463) 김일성은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고 하여 위원회, 부들에서 무역을 제멋대로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무역은 철저히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에도 명백히 규정되어있습니다...어느 한 품종의 제품을 몇 개의 무역회사에서 국제시장에 가지고나가 서로 가격경쟁을 하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결국 밀지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역회사별로 수출 품종을 정해주어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서는 한 개의 무역회사에서만 전문적으로 팔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김일성,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2월 13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p.333-334.

464) 김일성은 외화사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일부 일군들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 기관, 기업소에 외화를 받고 팔거나 수출할 수 있는 제품과 바꿀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가 국내에서 다른 나라 돈이 통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 돈을 국내에서 통화로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1월 19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p.449.

계’의 제도적 골격으로는 자재, 물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력 있는 화폐인 ‘달러’를 활용한다면 판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연상예산제약’을 감소시켜 기업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연합기업소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대안의 사업체계’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연합기업소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책을 ‘분권화’로 보기도 어렵다.⁴⁶⁵⁾ 북한의 연합기업소의 경영진이 동독의 콤비나트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동유럽에서처럼 탈스탈린화와 더불어 증진된 기업의 분권화, 경영진의 독자성, 사회의 자율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연합기업소체제를 통해 중앙의 통제가 강화된 것도 아니었다.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기업 경영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탈제도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합영법의 도입: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도입하였다. 해외자본을 북한에 직접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노선이었다. 북한도 합영법과 해외투자유치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중국이 1979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제정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해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 북한에게 큰 참조가 되었다.⁴⁶⁶⁾ 북한은 합영법을 통해 전자, 자동차, 금속, 채취, 기계제작, 화학, 식료가공 등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생산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만

465) 사실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하에서 분권화라는 용어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 분권화는 중앙정부(국가계획위원회)의 개입이 약화된다는 것을 지칭하여 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입한다는 것과 개별기업에게 독자성(독립채산제, 계약,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당이 아닌 도(道)와 시(市)의 당위원회가 경제활동을 개입하고 조직한다면 그 기업은 독자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466) 이기수, “北韓의 合營法” 『北韓法律行政論叢 第 7 輯』(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p.160.

행들이 발목을 잡았다. 북한은 1983년 10월 아웅산 묘역 테러를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당시 남한 측은 미국의 만류에 따라 물리적인 보복을 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1984년 북한은 남한의 수해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을 시도하였고 막후채널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상황 속에서 남한이 서방으로 하여금 북한의 투자 유치에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외채문제로 인하여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웠다. 김일성은 1985년 가와가쓰 남해전철(南海電鐵) 회장을 초청하여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사를 밝혔고 일본 측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외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투자유치는 불발되었다.⁴⁶⁷⁾ 또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돌파구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일본의 조총련이었다. 김일성은 1986년 2.28 교시를 통해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미 1982년부터 ‘애국기업’을 북한에 유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친화적인 조총련과의 거래를 확장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고자 하였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방편이었기는 하지만 북한 측이 원했던 합작 사업은 조총련이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컸다. 당시 북측이 희망하였던 합작투자는 주로 중화학공업이었다. 북한이 희망하는 사업 83건 가운데 전기전자업(25건), 금속 및 금속가공업(13건), 화학(11건), 기계(8건), 섬유류(7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었다.⁴⁶⁸⁾ 하지만 재일조선인들은 대부분 빠칭코, 불고기집과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합영사업의 경험과 이해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1984년도에 합영사업이 이루어진 분야는 소규모 커피숍, 레스토랑, 자동차 수리공장과 같은 경공업과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다.⁴⁶⁹⁾ 극소수의 기업 전연식, 전진식 형제

467) 신지호,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서울: 대외정책연구원, 2000), pp.21-23.

468) 이주철,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투자” 『史叢』 85권 (2015), p.106.

469) 이진희, 『북한의 조조합영사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25.

가 이끌었던 사쿠라 그룹은 북한의 ‘조선은하무역총회사’와 합작하여 ‘모란봉합영회사’를 조직하고 의류를 수출하여 수익을 올렸다. 또한 사실상 사쿠라 그룹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PACO는 ‘평양피아노합영회사’와 합작하여 피아노를 제작하고 수출하였다.⁴⁷⁰⁾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합영사업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북한에 진출하였던 조총련 기업들이 합영사업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사기업을 대하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198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합영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합영회사도 많이 조직하여야 하겠습니까. 제일본조선상공인들과도 합영회사를 조직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도 합영회사를 조직하여야 합니다...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합영회사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합영회사를 많이 조직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외자를 도입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영회사를 조직하는 목적은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려는데 있습니다.”⁴⁷¹⁾라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연설에서 김일성은 “외자를 도입할 목적으로 경제합영을 한다면 그것은 곧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길이며 따라서 매국행위로 될 것입니다. 합영회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서 이런 측면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처럼 외자를 끌어들이는 합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⁴⁷²⁾라며 기업운영은 북한식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이 시기 자유경제지역을 별도로 선포하지 않고 자국의 전 지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은 특정지역에 전면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⁴⁷³⁾

이처럼 북한 측이 실질적인 기업경영을 담당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합영 기업에서도 계획경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났

470) 이진희, *Ibid*, p.41.

471) 김일성,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급속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6년 2월 5-8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p.515.

472) *Ibid*, p.516.

473)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90.

다. 가령 북한 측은 원자재를 계약대로 공급하지 못했으며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되었다.⁴⁷⁴⁾ 그리고 합영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는 책정된 임금 가운데 일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인센티브가 약화되었다.⁴⁷⁵⁾ 종합하자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누적되었으며 경제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경제를 통한 ‘물리적 통제능력’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였기에 여기에서 벗어난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

2. 김일성 유일사상체제와 초(超)스탈린체제의 완성

1) 주체사상의 확립과 정통적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이탈

1970년대에는 북한에서 점증되어왔던 김일성의 권력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정치적 영역에서 김일성의 권력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통해서 이미 공고화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사회의 종속은 소위 말하는 1967년의 5·25교시를 통해서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는 노동당 제 5차 당 대회, 1972년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제정, 1974년 4월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수립을 통해서 일인지배체제는 보다 강력하게 확대되었다. 다만 이미 실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던 김일성이었지만 그의 종신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1980년 제 6차 당 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의 위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몰아내고 사실상 유일한 통치사상으로 승격되었다.

사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개념적 특성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제도는 스탈린 체제를 모체로 하였기에 초기의 주체사상은 소련과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승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순수 이데올로기’ 그리고 보편적

474)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75) 홍성걸·임경희,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p.15.

인 이념으로 격상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주체사상을 종합하고 축약했다는 평가를 받는 1982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철학적·사회역사적 원리’와 ‘지도원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철학적·사회역사적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론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이며 지도원칙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비전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⁴⁷⁶⁾ 하지만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전반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그 이전부터 준비되었지만 김정일의 1982년 논문에 따르면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시었습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었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었습니다.”⁴⁷⁷⁾라면서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킨 새로운 사상임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나치게 구조 중심적이며 인간의 존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신을 물질적 존재의 반영으로 보는 관점을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라는 명제를 내놓았다. 그들은 사회적 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였다. 예컨대 자연지리적 환경이라든가

476) 정성장은 주체사상의 기원과 발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먼저 해방직후에는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1단계는 (1955-1973년) 스탈린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 이데올로기’ 단계로 전(全)지구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순수이데올로기로 간주하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인 제2단계인데 (1974-1981년), 여기서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심스럽게 대체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을 수용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하여 수령론과 후계자인 김정일의 위치를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주체사상은 통치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종교적인 성격마저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상과 철학적인 요소에 집중한 방인혁은 1955년에서 1967년까지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을 목표로 하였던 사상적 잉태기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이론적 연구와 준비기를 거쳐 주체사상이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본다. 정성장,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1집 2호 (2000), pp.321-327. 방인혁,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마르크스즘·주체사상·NL·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서울: 소나무, 2009), pp.260-262.

47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7.

인구, 생산력과 생산관계 같은 것을 사회적 존재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사회적 존재의 기본으로 인정하였다.” 478)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479)

김정일에 따르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 480)가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과는 다른 주체사상만의 핵심이자 독창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구체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무엇을 대체하였다는 것일까? 정치학자 방인혁은 “스탈린을 포함하는 소비에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분명히 구조중심적 혹은 경제 결정론적인 입장을 채택했었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그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언급하면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 그리고 서유럽의 다양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스탈린 체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했다고 주장하였다. 481) 하지만 설사 스탈린이 구현하고 재수립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고 하여도 적어도 보편적·철학적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북한 측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밝혀야만 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북한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의 보편성의 원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북한이 진정 스탈린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생산력과 구조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문제라고 여겼다면, 인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뒤따라야만 했다. 즉 주체사상이 만약 마르크스-레닌주의

478) 황장엽, 『인간중심철학 원론』 (서울: 시대정신, 2008), p.86.

47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9.

480) *Ibid.* p.9.

481) 방인혁,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마르크스즘·주체사상·NL·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서울: 소나무, 2009), p.296.

보다 더욱 유연한 사상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살펴보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브라이언 마이어스가 유머스럽게 지적하였듯이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에 나타나는 인본주의적인 기본 주장들 즉 ‘인간이 만사의 주인이다’, ‘인간은 창조성과 자주성을 부여받았다’ 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482)

게다가 북한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근본원리에 ‘수령의 지도’ 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원래의 의미를 현저하게 퇴색시켰다. 형식적으로는 노동계급을 역사 발전의 주체이지만, 노동계급이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탁월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김일성 방송대학은 혁명적 수령관을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로부터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자체의 기본구성부분,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삼는다.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란 곧 수령에게 충정을 다하는 것이다.” 로 정의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시도를 한 까닭은 독재체제를 완전히 굳히는 것 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절대화하여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민주적중앙집권제는 무너졌으며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김일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나름대로의 명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단순하게 혈연 승계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탁월한 이론가이며 혁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2) 주체예술과 주술적 프로파간다를 통한 초스탈린화

① 강력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립: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로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문예노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보다 정확히는 즈다노프적인) 문예정책의 강

482) 브라이언 마이어스, 고명희·권오열 역,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서울: 시그마북스, 2011), p.45.

도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는 이미 소련 및 동유럽 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련군정의 정책과 북한의 사회상이 결합된 결과였다. 군국주의적인 일본 제국주의 특성상 온전한 부르주아적인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 뿐만 아니라 전통적 유교적 봉건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규범으로 격상되지는 못했다.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적인 전통이 조금은 남아있는 ‘즈다노프시대(Zhdanovshchina, 1946-1953)’의 소련이 해방된 조선보다 더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문학평론가 안함광의 1947년 9월 글에 따르면, 북한문예의 목표는 “주로 해방의 은인 소련군대와 전체 소련 인민에 대한 친선, 조선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에 대한 민족적 감격, 토지 개혁을 위시한 여러 민주개혁을 예술적으로 형상화” 483)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문학이 개인숭배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안함광의 주장이 나오기 이전인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모티브로 한 이기영의 출간된 『개벽』은 즈다노프 노선보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악독한 일제 강점기가 끝났으며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를 분배하여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는 부분적이지만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다.

“또 어떤 동리에서는 솔가지 바탕에다 실노끈으로 글씨를 수놓아서 깃대를 만든 것이 아름다운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어가 써어 있었다.
‘우리 조선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 ”

하지만 당시 이기영의 작품은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희망’, ‘혁명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매우 짧았으며 ‘응향’ 필화 사건으로 인하여 즈다노프적인 노선이 본격화되었다.484)

483) 안함광, “북조선민주문학운동의 전개과정과 전망” 『조선문학』 1947년 9월 창간호, pp.267-268. 배개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권 (2011), p.259에서 재인용.

484) 1946년 9월 원산 문예총의 위원장이었던 박경수가 중심이 되어 시집 『응향』을 발간하였다. 구상 시인과 강홍운, 노랑근, 정상진(정율), 편집자인 박경수 역시 직접 시를 게재하였다. 당시 시집의 표지에는 이중섭의 그림이 삽입되었다. 이 시집은 당시 남북한 모두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문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문예총은 이들의 문학이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퍼붓

1947년에 출간된 조기천(1913-1951)의 『백두산』은 흔히 수령형상문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보천보 전투를 줄거리로 삼는 이 장편 서사시에서는 항일 빨치산 운동, 민족의 열, 식민지 타도와 독립에 대한 열망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김일성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형상은 반인반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일제가 치떠는 조선의 빨찌산 대장!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 손에 넣고 동서에 번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디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 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푸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백두산두메에서 우러러 떠드는
 조선의 빨치산 대장!”

사실 조기천의 백두산의 개작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소련출신인 조기천은 원작에서 소련에 대한 찬사를 포함시켰으나, 이후 판본에서는 이것들은 삭제되었으며 그 자리를 항일 빨치산이 차지하게 되었다.⁴⁸⁵⁾ 이것은 물론 사실이며,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문학작품이 개작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작에서도 김일성의 절대적인 위치는 확고하게 나타난다. 도덕의 화신이며, 자애롭고 근엄하며, 인민을 사랑하며 완전히 확실치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한다. 예컨대 조만식, 박헌영, 김두봉, 허가이, 최창익과 같은 당대의 정치지도자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화적 공간을 이미 김일성이 침범하고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⁴⁸⁶⁾

기 시작하였다. 문학평론가 백인준은 구상 시인의 시 『여명도』는 지나치게 음산하고 괴기하며 또 다른 시 『길』의 ‘사람이 빵 없이 안개를 마시고 산다’는 구절을 비과 학적이고, 관념적이고, 환상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였다. 국문학자 김윤식은 1947년 1월 문예총의 ‘시집 응향에 관한 결정서’가 즈다노프의 1946년 8월 14일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서를 그대로 흉내내었다고 보았다.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p.27-28.

485) 그의 친구였던 정상진(정률)은 조기천이 스탈린과 독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오히려 소련군정은 작품을 접하고 소련시민권을 지녔던 조기천에게 그의 조국은 조선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나의 조국’, ‘내 나라’, ‘내 나라 땅’을 ‘이 나라 땅’, ‘이 땅’, ‘이 나라’로 변경하였다.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서울: 지식산업사, 2005), pp.148-150.

486) 국문학자인 오성호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백두산의 이 증언과 예언에 대한 질문이나 회의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신령한 존재에 의해서 말해진 ‘성스러운

또 다른 문학작품인 한설야의 1948년작 『개선』에서도 위인 형상을 한 김일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김일성의 작은어머니인 ‘창주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 단편소설은 김일성을 신격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개인숭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비범한 가계의 효성이 지극한 효자로 등장하다.

“아니 장군, 나를 알겠소?”

하는 순간 속모는 하마터면 눈물이 쏟아질 뻔하였다. 속모야 분명 속모가 옳지만 이렇듯 옛날의 그 인정 그대로 불러줄 줄은 하마 몰랐다. 오늘은 옛날 만경대의 증손이 아니요 전 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버이요, 스승이다.

“아니 내가 왜 작은어머닐 모르겠고. 저한테 술해 애를 받았지요.”

하고 장군은 그 잘 웃는 웃음을 대판으로 터쳐놓았다.

그러나 속모는 마침내 울고야 말았다.

“옳쇠다. 장군은 온 조선의 장군이 옳쇠다. 이 나라 한 풀, 한 나무도 해 해 같은 장군의 은혜를 입을 것이외다.”⁴⁸⁷⁾

심지어 김일성의 어머니는 조국의 해방을 죽어서라도 지켜보기 위해서 간도의 맨 높은 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것은 김일성의 비범함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리북명의 소설 『노동일가』는 1947년 국유화된 북한의 공장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도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령 노동자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거나 초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기술발전을 도외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소설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교양시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장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건국사업은 백두산의 증언과 예언에 매개됨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성과 신성성을 획득하게 된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건국사업은 일찍이 환웅이 환인의 명을 받아 처음 나라를 연 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격상된 것이다.” 오성호, “조기천의 『백두산』과 북한 서사시의 형성” 『상허학보』 제 11집 (2003), p.293.

487) 한설야, “개선”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음, 『북한문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p.142.

“달호 동무, 고맙소, 정말루 고맙소. 우리 지내간 잘잘못은 잊어버립시다. 이제부터는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친밀성을 가지구 47년도 인민경제계획 25만톤 유안비료 책임량을 넘쳐 생산하는 데 친형제처럼 협력합시다. 저 김일성 장군의 초상화를 쳐다보시오. 우리는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 주위 에 내 (我)라는 것을 버리고 툇튼히 뭉칩시다. 김일성 장군...김일성 장군 만세!” 488)

위 작품에서처럼 개인주의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신’ 보다는 ‘집단’, ‘국가’가 훨씬 중요하였다. 이 시기 김일성은 수령이 아닌 장군이라는 명칭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후견을 받았던 김일성이지만 이미 즈다노프 시대와 절정기 스탈린체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문학작품 외에도 다른 우상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1946년 10월 1일 기존의 숭실대학교 자리에 김일성대학교가 개교하였다. 또한 같은 해 ‘김일성 장군의 노래(리찬 작사, 김원균 작곡)’가 등장하였고 그 시기 문학작품에도 이 노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② 주체예술론의 등장: 위에서 제시된 작품들은 분명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 속에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등장한 것이지 문학의 목적 자체가 김일성의 우상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스탈린 사망이후 해빙기가 본격화되면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김일성은 탈스탈린화에 대한 반발감을 보이면서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반대파를 숙청하였다. 1955년에서 1958년 사이 북한의 문예장에서는 도식주의와 기록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면 1959년부터 당적 문예 원칙의 규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489)

488) 이복명, “노동일가” 『북한문학』, p.126.

489) 김성수, “1950-60년대 북한 문예미디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大東文化研究』 제 108집 (2019), pp.80-81.

그럼에도 이 시기에는 ‘당의 노선’이 김일성의 이상화와 완벽하게 합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60년대 ‘천리마운동’ 시기의 문학들을 살펴보면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인 이상화가 등장하지 않는다. 가령 천리마시기를 대표한 소설인 김병훈의 『길동무들』에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병훈은 1980년대 ‘노력영웅훈장’, ‘김일성훈장’을 받았으며 2013년 사망할 때 김정일이 직접 화환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문학 속에서도 개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에 충성하는 모습, 도덕적이고 성실한 노동자를 이상화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인 ‘비터펠트 노선’ 속에서 개인의 고뇌뿐만 아니라 조국의 경직된 모습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었던 모습과는 분명 대조적인 것이다.

이미 강력하게 전개되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노선은 1967년 ‘갑산과 숙청’이라는 정치적 변화로 또 다시 굴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25살이었던 김정일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백두혈통이 아닌 인물이 김일성 이후 최고지도자에 등극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던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산과의 박금철 부수상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다. 갑산과는 비무장항일투쟁을 실시하였으며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당시 연락책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1965년 12월 박금철의 부인 서채순의 부고와 추모를 로동신문에 내고 본격적으로 갑산과의 항일 운동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혁명전통을 다원화하여 김일성의 절대적인 상징을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⁴⁹⁰⁾ 이러한 작업은 8월 종파사건과 같이 김일성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김일성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하였다.

김일성은 국내정치를 완전하게 장악하였고 대외적으로 주체노선이 본격화된 만큼 더 이상 사회주의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에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고혁은 곧바로 숙청당했다. 이들은 주로 사상, 선전,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1967년 5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15차 전환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490) 조우찬, “1967년 북한 갑산과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현대정치연구』 10권 1호 (2017), pp.199-201.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기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사항이 결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⁹¹⁾ 이것이 소위 말하는 5.25 교시⁴⁹²⁾ 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김일성 저작집』에서도 전체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결과적으로 5.25 교시에 따라 문예 부문에서는 ‘도서정리사업’이 실시되었고, 김일성의 우상화, ‘항일무장투쟁’의 신성화를 다루는 작품이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실 1967년 이전까지 서구권의 문학 작품들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지만 이 시점 이후로 번역이 중단되었다. 북한에서 번역한 해외문학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가 번역한 『하이네 시선(1963)』, 『몰리에르 희곡선(1963)』,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테, 고리오영감(1964)』, 『환멸(1964)』,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1964)』,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일가(1965)』, 하인리히 만의 『충복(1965)』, 헨리크 입센과 비에른스티에르네 비에른손 등의 작품을 담은 『북구라과 작품집(1967)』 등이 있다. 하지만 1967년부터 1991년까지는 세계문학 작품의 번역과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도서

49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433.

492) 1983년의 김일성 저작집에서는 5.25 교시의 핵심적인 사항은 문화정책이 아니라 과도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 전환이 완료된 시점이었지만 원래 목표로 하였던 계급없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자본주의경로를 밟지 않아 생산성의 발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도기 기간에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라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일뿐 아니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차이도 없고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좌경·우경기회주의 입장을 모두 비판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 독자적으로 현 단계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지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점으로 김일성의 개인숭배가 더욱 고조되었다.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 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259-276.

정리사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1928년 함경남도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 평퍼물 갑산화전민항일운동을 다루었던 소설 『평퍼물』은 연재가 중단되었다.⁴⁹³⁾ 그리고 1960년대 중반까지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과 같은 실학자들의 작품들도 더 이상 소개되지 않았다. 평양의 국어대학 졸업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시기 소련의 책들을 불사르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항일빨치산희상기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⁴⁹⁴⁾ 1967년 이후 부터는 김일성의 가계를 이상화하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학교 교사였던 김형직을 항일투쟁의 선구자로 기념하는 집체창작 서사시 『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 있으리(1969)』, 김일성을 혁명투사로 양육한 모범적인 어머니상을 기념하기 위한 『강반석 어머니(1969)』라는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⁴⁹⁵⁾

문학 장의 정치영역에 대한 종속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헌법 3장에 ‘문화’라는 장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35조-39조를 통해서 ‘민족문화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⁴⁹⁶⁾ 이우영이 지적하듯이 헌법에서 언급된 ‘민족’과 ‘사회주의’적인 문화는 한민족전반과 일반적인 노동계급의 문화를 지칭하지 않는다. 민족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를, 사회주의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지칭한다. 즉 항일혁명과 김일성의 업적을 강조하는 노선이 형성된 것이다.⁴⁹⁷⁾ 이 시기 ‘불후의 고전적 명작’인 『꽃 피는 처녀(1972)』, 『피바다(영화 1969, 가극 1972)』, 『한 자위단원의 운명 (1973)』이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즈음하여 김정일의 ‘종자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기

493) 조우찬, “1967년 북한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p.200.

494) 그러나 흥미롭게도 영어와 불어작품은 남겨 놓았다고 한다.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 7권 제1호 (2017), p.132.

495) 고봉준, “1960-1970년대 북한문학의 흐름”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1』(서울: 청동거울, 1999), p.73.

496) 북한에서 헌법은 당대회 규약보다는 권위가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72년 헌법 제 37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며 정치의 우위를 공식화 하였다.

497) 이우영, “1970년대 북한의 문화” 『현대북한연구』 제 6권 1호 (2003), p.111.

존에는 작가들이 작품의 주제와 핵심을 뜻하는 ‘씨앗’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지만 1973년 1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문예 사상을 받들고 혁명적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라는 글에서 ‘작품의 핵인 종자를 잘 잡아야 한다.’ 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⁴⁹⁸⁾ 정리하자면 소련의 즈다노프주의 보다 경직적이었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67년부터 더욱 더 정치의 간섭을 받았다. 그리고 1973년 ‘주체예술’의 확립과 함께 희미한 독자성마저 상실하고 통치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③ 주술적 프로파간다의 수립: 주체사상에 못지않게 독특한 사항은 바로 북한이 주술적인 프로파간다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북한의 선전이다.⁴⁹⁹⁾ 이러한 주술적인 프로파간다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민간신앙에 적대적이었지만 필요한 경우 전통을 유지시키거나, 재해석하여 새로운 체제에 포섭하여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당시 북한사회에 천도교의 전통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물을 떠다놓고 비는 ‘청수봉전’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북한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동학’의 핵심개념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였다.

“박인진은 천도교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다...늦그릇에 청수를 떠서 모시는 것을 청수봉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도교세계에서 단 하루도 어길 수 없는 법도로 되고 있다. 나는 박도정과 함께 저녁에 한담

498) 오창은, “북한의 문예창작 방법론: ‘종자이론’의 형성과 발전”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북한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경기도: 경진, 2011), pp.26-27.

499)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동의하고 있다. 한홍구 교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들 식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인 일본군을 상대로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겁니다. 김일성이 도술이라도 부려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반근대적 또는 전근대적 정서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지적하였다.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 현대사이야기』(서울: 한겨레출판사, 2009), p.20.

을 계속하다가 9시가 다가오자 문득 청수봉전시간이 다 됐다는 생각이 나서 전령병을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오게 하였다. 물그릇이 들어오자 투박한 통나무상 한복판에 정히 올려놓고 도정에게 청수봉전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천도교를 숭상치도 않는 장군님네 군영에 와있으면서 제 어찌 감히 청수봉전을 하겠습니까?’ 박인진은 몹시 놀라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결국 박도정은 청수를 모시고 앉아 21자의 주문을 외웠다...그는 다른 유가족들처럼 나를 ‘장군님’ 이라든가 ‘수령님’ 이란 말로 부르지 않고 ‘한울님’ 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렇게 부르면 안된다고 해도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꿈에서도 한울님을 보았습니다.’ ” 500)

위의 내용은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김일성은 비록 자신이 천도교 교인은 아니지만 이 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글에서 주장하듯이 동학의 지도자가 김일성을 ‘한울님’ 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화가 아니라 동학이 개척해놓았던 유일신적인 공간마저도 김일성이 흡수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일성 혹은 아마도 대필한 작가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북한의 소설 『암록강』에서도 박인진 도령의 입을 빌려 김일성을 조선의 ‘한울님’ 이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며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도 북한에서 김일성을 ‘한울님’ 이라고 표현한 제목의 책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을 기독교의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그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것만 같아 단장우에 겹쳐있고 있던 손을 들어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전히 눈빛이 환한 이상한 사람의 거룩한 영상이 우러러 보였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부러 깨우쳐주기라도 하듯 옆에서 속삭이는 리창선의 귓속말이 들렸다. ‘도정님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오호라. 내 수십년간 한울님을 찾고 또 찾아 주유천하 수만리, 불출산외 수삼년 거쳤건만 오늘까지 찾지 못했고 뵈지 못했던 한울님을 예 와서 찾았구나! 수운대신사가 우리더러 사람 속에서 한울님을 찾고 자기 마음속에서 한울님을 찾으시라 일렀거늘 어찌 대신사의 가르침을 명심치 못했던가? 사람 속에 계신 한울님께서 예 계시

50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207.

는 것을...여기 계신 장군님께서 바로 우리 한울님이시구 조선의 한울님이 신것을!!)” 501)

“그이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 속에서 나신 만사형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한울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고 그것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류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시다.” 502)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엇 때문에 미국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503)

흥미로운 점은 동학의 ‘인내천’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동학에 내재되어 있는 ‘인내천’ 개념이 사회주의와 친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학도들이 주장하는 ‘인내천’ 의 사상은 사람을 하늘에 비기며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자체를 신적존재로 보는 것으로 하여 이론적 불합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령혼설은 불가불 숙명론에 떨어진다. 숙명론으로부터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지론이 나올 수 없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도 도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우리는 교리에서 하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람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과 다른 종교들에서처럼 하늘이나 신의 초자연성과 초인간성을 운운하면서 봉건사회제도나 봉건적 신분제도를 하늘이 정한 질서라고 설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놓고 천도교가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종교로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504)

이처럼 북한은 ‘인내천’ 의 핵심적인 사상은 계승하되, 동학이 지니고

501) 최학수, 『압록강: 불멸의 력사 총서』 (평양: 4.15문학창작단, 1983), pp.486-496.

502) 최덕신,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이시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283.

503) 허정숙,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되새기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159.

50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214-215.

있는 종교성은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종교성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주체성’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북한에서 이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북한은 민간에서 떠돌던 신앙을 정치체제 통합시켰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사항은 동학의 핵심개념인 한울님을 차용하여 김일성과 동일시하였다고 해서 북한이 천도교를 완전히 계승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주술적 프로파간다의 등장은 북한이 ‘전설’을 허구적인 장르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전설을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적 사건에 주민들의 희망이 결합된 문학적 이야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설은 ‘진실성’과 ‘지향성’ 모두를 충족해야만 한다. 한정미의 연구는 북한의 다양한 설화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 한정미는 “북한 당국은 신화, 전설, 민담, 동화, 우화에 각각의 장르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화는 계급사회 이전의 환상적 장르로, 그에 반해 전설은 환상은 약화시키고, 진실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역사성을 지닌 장르로, 민담은 사실보다는 허구성이 강화된 장르로, 동화와 우화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장르로 각각 그 서열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장르적 동향에 의거하여 장르를 실현하고 있다. 장르의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⁵⁰⁵⁾ 북한은 이 가운데서 역사적 사실을 상당 수 담보하고 있는 ‘전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⁵⁰⁶⁾ 예컨대 단군릉의 발견, 김정일의 출생지 조작과 같은 사업들은 전설을 객관화시키려는 일련의 작업이었다. 또한 동화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전설은 전체 인민대중을 그 독자로 삼는다.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신화와 전설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김정일이 아버지의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이어받는 방법 역시 당과 군을 장악하는 방법과 기층 민중을 장악하는 방법은 다르다. 기층민중의

505) 한정미, “북한의 설화 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제15호 (2004), p.208.

506) 예컨대 봉이 김선달처럼 개인적인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설화마저도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김정일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결코 허풍쟁이나 난봉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그 저 사람들을 웃기려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라면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인민들 속에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설·엄병섭, 『봉이 김선달 전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4.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신화적 탁월함까지 세습해야만 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이 신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지도자의 출생지역이 중요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일이 태어난 밀영의 귀틀집에서 솟은 봉오리는 현재 ‘정일봉’으로 불리는 216m로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을 상징한다고 한다. 김정일 역시 도술을 쓸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지략과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세월을 주름잡는 술법인 축시법을 쓰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축시법이라 하면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니 일반적으로 세월을 앞당기는 술법이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쓰시는 축시법은 세월을 주름잡을 뿐 아니라 시간을 늘구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려 세우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게 그 자리에 멈추세우기도 하여 참으로 못부리는 조화가 없다고 한다...그러나 인민들은 그 원인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남조선의 한 로인은 “축시법을 쓰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술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축시법으로 시간을 혼란시켜 군사훈련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507)

이러한 선전선동은 무신론적 계몽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이는 관념론적 색채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도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는 일본과 식민지에서도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다.⁵⁰⁸⁾ 따라서 북한 주민들 역시 이러한 신화적 사고에 상당 수준

507) 북한예술종합출판사, 김동규 엮음, 『김정일 전설집』(서울: 백수사, 1996), pp.140-150.

508) 일본이 어떠한 성격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 체제에서도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패전 후 히로히토 일왕의 ‘인간 선언’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일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 신뢰와 경애로 묶여지는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어신으로 하고, 또 일본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왕이 자신의 신격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과거 일본사회가 근대성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전통적이고 주술적인 프로파간다를 실시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와 신화의 어색한 공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중과 엘리트층을 통치하는 방식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을 복잡한 사상으로 통치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대하여 완전하게 통달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주체사상이 자신들의 통치이념임을 어렵듯이 자각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즉 북한의 프로파간다라는 양가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치 집단에게는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의거한 주체사상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승된 봉건적인 문화와 전설에 기초한 주술적인 프로파간다를 실시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독에서는 예술가들이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 받아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도 있었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벗어난 창작 활동이 가능하였다. 베트남 역시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적 사조를 받은 미술작품의 전시가 가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영화와 문학의 영역에서도 감독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문자 그대로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더욱 더 경직된 예술 사조만 허용되었으며 문학과 예술의 비판적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즉 1970년대부터는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스탈린체제와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된 북한의 선전에 근거하여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혹은 스탈린 체제의 토착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탈’과 ‘토착화’라는 용어로 북한을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재체제가 사상적으로 확실히 이탈하였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고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체제는 각기 나름대로의 토착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북한은 스탈린체제의 특징인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 초(超)스탈린적 체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이 스탈린체제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주은우, “점령초기 쇼와 천황의 시각적 변신-맥아더 방문과 ‘인간선언’, 그리고 사진” 『사회와 역사』 112호 (2016), p.328.

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스탈린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 하였으며 이를 대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김일정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스탈린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소련공산당의 근본적 사상을 제공한 인물이었으며,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시킨 인물이었다. 1930년대부터 스탈린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으며,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루즈벨트 사망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 엄청난 스탈린조차 레닌의 상징성을 넘어설 수 없었다. 스탈린의 역사 조작과 우상화는 그가 얼마나 레닌에게 가까웠고 충실했는지 혹은 레닌만큼 유능했는지를 나타내는데 그쳤다.

스탈린의 역사 조작의 한 예를 살펴보자. 1917년 8월 레닌은 핀란드로 피신을 갔었다. 당시 정황상 스탈린은 도저히 레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기 두 번이나 레닌을 만났다고 역사를 조작하였다. 당시 숙청을 당해 시베리아에 유배 중이었던 과거의 혁명가 예멜리야노프는 1945년 6월 스탈린에게 “1917년 당신은 제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을 헛간에 숨겨주도록 주선하여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스탈린에게 보냈다. 이 덕분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곳에 위치한 레닌 박물관에 채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멜리야노프의 회고는 스탈린의 공식전기가 되었다.⁵⁰⁹⁾ 이처럼 스탈린은 역사적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레닌과 가까운 존재이며 혁명에 좀 더 기여했던 인물로 자신을 연출하였다. 반면 북한은 영성한 학술논문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도전하였다. 물론 북한의 이론가들도 계승성과 독창성 사이에서 고민하였지만 결국 주체사상을 상위에 두었다.

사실 다른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작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모택동의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 원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서로 결합한 산물이었지 이를 넘어선 독자적인 사상체계는 아니었다. 또한 당 지도부의 다른 인사들이 모택동의 사상을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가령 1960년대 임표가 모택동주의의 핵심을 ‘사상결정론’으로 간주하였던 것과는 달리

509) 올레크 V. 홀레브뉴크, 유나영 역,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서울: 삼인, 2017), p.103.

1970년대 등소평은 문화혁명시기의 사상을 ‘자기의 옳은 것을 어긴 사상’ 이라고 비판하며 모택동주의 속에 있는 ‘실사구시’ 적 요소를 강조하였다.⁵¹⁰⁾ 이처럼 당과 혈연승계자가 아닌 인물이 사상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개혁이후 당 대회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위의 국가들 모두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문화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숭배의 지속기간과 강도이다. 스탈린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제약을 받아 레닌 사후 권력 투쟁을 벌였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스크바 재판을 통해 비로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의 50주년 생일을 기점으로 개인숭배가 시작되었고, 1930년대 초반부터 공공장소에 그의 사진과 칭송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숭배는 약 2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탈린에게는 다소 영리하지 못한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야코프 주가시빌리는 전투 중에 독일군에 잡혀 수용소에서 명예롭게 사망하였고, 차남 바실리 스탈린은 1952년 공군 상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비록 그가 둘째 아들을 상당히 사랑했음에도 당내 다양한 여러 실세조직인 5인회, 7인회의 지지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세습은 차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혁명의 정신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개인숭배의 기간이 훨씬 길었다. 심지어는 김일성의 사후에도 ‘유훈통치’ 를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사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였다’ 라는 문장은 중립적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체하였다’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속의 근대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더 억압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를 부정적으로 대체하였다. 이 대체된 사상은 보편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북한에서만 작동하는 고립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510)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181-184.

3) 1970-1980년대 북한의 제한적인 사회주의적 근대성

위와 같은 개인숭배와 심지어는 주술적인 프로파간다가 공식화된 것은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사회영역의 역량이 매우 약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적 근대성’이 존재하였고 이는 사회주의통합당과 갈등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일정부분 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룩하였지만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근대성’이 매우 약했다.

① 법에 의한 통치: 권력자의 자의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에 의한 통치는 1950년대 후반에 이미 북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단순히 계파투쟁에서 김일성의 승리를 거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건 이후로 사실상 헌법과 법치라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1958년 김일성은 사법기관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실시하였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구호는 원래 부르쥬아지가 자기 법의 계급적본질을 숨기고 근로인민을 속여 그들을 부르쥬아법앞에 순종시키기 위한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당종파분자들이 이와 같은 부르쥬아지의 기만적 구호를 들고나온 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침범하는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법을 리용하기 위한것입니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완전히 우리 법의 계급적립장을 떠난것이며 우리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떠나서 지주들과 자본가들을 옹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것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⁵¹¹⁾”

“우리는 법에만 복종한다고 하면서 당도 소용없고 정권도 다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이전 최고재판소 소장으로 있던 황세환 같은 자는 마지막 시기에 와서는 당에도 오지 않고 최

511)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 사법, 검찰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4월 29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10.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두봉한테만 찾아갔습니다. 그는 최고재판소는 인민회의에서 선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인민회의에만 속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인민들은 누가 지도하고 그 인민 회의는 누가 령도하고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우리 당이 령도하는 것입니다.⁵¹²⁾

김일성의 위 발언은 근대법의 기본적인 정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주들과 자본가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며 공식적으로 박멸시켜야 할 대상인 것이다. 김일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는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강하지 않았다. 이들은 1946년 토지개혁과 주요산업국유화 조치로 인하여 약화되었으며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계급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반대파를 억누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률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주권의 소재가 사실상 당에게 있다는 김일성의 발언과 지침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도 훨씬 퇴행적이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도 형식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인정하되 다른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반대파를 색출하거나 억압하였다. 호치민은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1946년 헌법 1조는 “베트남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가의 권력은 그들의 인종, 성, 재산, 계급, 종교와 상관없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호치민은 스탈린으로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다.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된 1960년도 개정헌법의 4조도 “베트남민주공화국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1936년 소련의 헌법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고 있으며, 헌법 125조에는 사상, 출판, 집회 그리고 시위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당 지도부들은 레닌처럼 헌법을 중시하지는 않았으며, 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지도 않았다. 소련에서는 1937년대부터 대숙청이 발생하여 70만명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로 처형당했고, 베트남에서도 토지개혁 과정에 많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소련보다는 적다. 하지만 북한만이 ‘민주적 규범’이라는 그 원칙을 공격

512) *Ibid.* p.220.

하였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야욕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법치라는 규범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다.

8월 종파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시 최고재판소장 황세환, 사법상 홍기주, 검찰소장 조성모 등이 숙청당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도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숙청당한 인물들이 연안파, 소련파와 연계하여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파 행위를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근대적인 법치’ 정신이 북한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이 종파행위에 가담하여 불가피하게 숙청해야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을 노골적으로 공표하지는 말았어야 한다. 이처럼 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것은 법치와 주권, 권리라는 개념이 북한사회에서 희박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195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당내에서 김일성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사라졌다. 또한 근대를 지향했던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일정 정도 인정을 받았던 ‘법의 정신’ 조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② 사회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의 한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 혹은 공적영역을 창출하지 못했다. 산업화는 북한 지도부에게는 분명한 자랑 거리였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근대적인 ‘도시화’도 달성하였다. 그렇다면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산업화와 주술적 프로파간다를 사용하는 초스탈린체제가 어떻게 같은 시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과학자인 한 개인이 주술적인 세계관을 지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닌 특정 과학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그 사람의 세계관과 종교관과 일치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이 도시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북한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익명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주술적인 프로파간다와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의 힘을 약화시켰다.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이제는 저자의 명성만큼이나 고전이 된 자신의 저작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서 대도시의

핵심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짐멜은 화폐경제와 개인주의적 익명성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아주 가공할 만한 평준화 기제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 없이 없애 버린다. 돈에 의한 사물의 평가는 이제 확연히 인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화폐 순환의 본거지이면서 사물의 구매 가능성에 있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대도시는 또한 둔감함의 고유한 터전이 된다...소도시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대도시에서 개인들의 만남은 짧고 드물다는 점이 그것이다.” 513)

이처럼 근대 유럽의 산업화와 도시발전은 화폐경제, 분업과 개인주의와 조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폐는 매우 강력한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인간을 소외시켰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화폐의 힘은 이처럼 강력하지 않았다(물론 국가는 외화를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도시의 노동자는 농산물을 비롯한 중요 물품들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았으며 북한 당국은 양질의 소비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 때문에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도 없었다. 저축한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여 부를 증진시킬 수도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사적영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생산현장과 사적인 영역에서도 강력한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도시를 연구하였던 남영호는 농촌과 도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농촌의 지역사회는 직접 대면하는 사적인 관계(1차적 관계)가 지배하는 반면, 도시 지역은 덜 사적인 2차적·3차적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 직접 대면해도 국지적인 접촉인 2차적 관계이든 간접적인 관계와 접촉을 기초로 하는 3차적 관계이든, 이러한 관계가 지배하는 도시 생활은 비인격적이며 경제활동에 국한된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2차적·3차적 관계가 도시 생활을 주도하는 이유는, 도시에는 농촌 지역보다 훨씬 더

513) 게오르그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서울: 새물결, 2005), p. 42.

개개인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화되었고 사람 사이의 접촉도 전면적이기보다는 특화된 특정 분야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 생활과 구별되는 도시다움, 즉 도시성의 핵심은 인구 규모나 밀도보다는 궁극적으로 다양성과 혼종성이다.” 514)

위의 정의에 따르면 도시의 삶은 잘 아는 지인들과만 어울리는 삶이 아니다. 고도로 분업화된 도시에서는 낯선 이들과 어울려서 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도시의 익명성은 다른 제도에 의해서 희박해진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영역마저도 동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공동거주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 자의적으로 주거지를 설정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주택을 제공한다. 둘째, 인민반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북한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인민반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공동생활을 지속해야만 한다. 북한은 인민반을 조직하여 이를 주민통제와 노동력 동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민반장이 불시에 반원들의 집안을 단속하여 김부자 초상화와 집안의 청결상태를 점검하거나 생활총화를 실시하기도 하였다.⁵¹⁵⁾ 셋째,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전통문화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민들은 경비아저씨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예를 들어 제사가 끝난 후에 남은 음식을 경비아저씨에게 드리는 일을 흔한 일이었다.⁵¹⁶⁾ 또한 전자식 도어 록이 없던 시절에는 아파트 열쇠를 경비실에 맡겨놓고 찾아가는 일 또한 일상적이었다. 북한에서도 도시 지역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과거부터 살아온 공동체적 양식을 단시간에 지워 버릴 수는 없었다. 북한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서구처럼 익명적인 개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514) 남영호, “사회주의 도시의 “농촌적” 요소들 소련 도시화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슬라브학보』 제 28권 3호 (2013), p.84-88.

515) 알렉산드르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 연구』 37권 1호 (1994), pp.156-158.

516) 아파트 경비원의 일상을 다룬 논픽션 작품에는 제사음식을 받은 경비원들이 다른 경비원들을 초청하여 나눠 먹는 일이 일종의 불문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강춘달, “아파트 파수꾼의 밤과 낮” 『신동아』 2002년 1월호. pp.560-598.

③ 여성과 소비: 북한이 여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전 사회주의 좌파진영에서 유사하게 전개된 것처럼 북한에서도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계급해방 이후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⁵¹⁷⁾ 이것은 베트남과 동일하다.

봉건적 구습에서 해방된 여성이었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임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양육자의 역할이 대체된 것도 아니었다. 전쟁 이전부터 여성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졌다. 이것은 동독, 베트남과 공통된 사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은 “여성로력을 광범히 끌어들이 우리의 로력전선을 보충하며 확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바와 같이 우리의 영웅적조선여성들은 무진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력전선에서도 그들은 남성들만 못지않게 훌륭히 사업하고있으며 위훈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체질과 소질에 맞는 경공업부문에 많은 여성로력을 끌어들이야 할것입니다.”⁵¹⁸⁾라며 여성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과 사회참여는 존중되었지만 남녀 모두를 통틀어서 개인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보편적 시민권 운동으로 발전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특히 동유럽의 사회주의처럼 여성운동의 역사와 권리에 대한 토론이 부재했던 북한에서는 ‘혁명적 노동자’와 ‘혁명적 어머니’라는 여성상이 위로부터 강제되었던 것이다.⁵¹⁹⁾ 동독에서와 같은 성적자기결정권은 아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517) 당시 여맹위원장이었던 박정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여성운동의 발전 동향은 조선민족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 운동의 발전동향에 의존하여왔다. 물론 후진국의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생활상 봉건적 박해는 매우 가혹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간의 역사적 계단에서 조선 여성의 임무도 거기에 있는 것이며 또 사실상 노동여성의 해방이 무산계급해방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과 같이 조선 여성의 자유평등의 행복한 생활은 역시 조선민족의 자유평등의 행복한 생활이 실현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금일의 우리 조선 여성은 이 역사적으로 맡겨진 조선 사람이 된 임무를 다하는데서 자유를 가져올수 있으며 평등을 가져올수 있으며 해방을 가져올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박정애 “8·15해방 이후 첫 3·8 부녀절을 맞으며” 『정로』 1946년3월8일. 김광운, 『북조선 실록 2 1946.01.01.-1946.04.19.』 (서울: 선인, 2018), p.368.

518)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45.

519)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pp.86-87.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여성들의 공식적인 정치참여는 감소하였다. 5차 당 대회에서 선발된 당 중앙위원 117명 가운데 여성은 4명에 불과하였고 55명의 후보위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5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박정애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여성 지도자도 등장하지 못했다. 김일성의 유격대 활동 당시 친교를 맺었던 조선혁명박물관장의 황순희가 가장 서열이 높았으며 그 다음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이었던 김성애였다. 그리고 빨치산 파의 핵심멤버인 김일과 최용건의 부인이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을 정도였다.⁵²⁰⁾

1960년대 후반에도 북한에서는 소비품도 부족하였고 소비 자체가 비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같은 시기 남한에서도 소비 보다는 근검절약이 더 고상한 가치로 간주되었다. 김일성은 1969년 올바른 사회주의 생활문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혼시하였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녀성들이 머리를 더부룩하게 지지고 화장이나 진하게 하고 다니며 집안에 좋은 주단이나 까는 것이 생활 문화를 높이는 것인 줄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문화라는 것은 생활을 소박하게하고 알뜰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것입니다. 무명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입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며 도배와 장판도 깨끗이 하며 토방과 굴뚝도 잘 손질하고 마당에 너절한 것이 없게 하고 울바자도 쳐서 집을 알뜰히 꾸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생활문화입니다.”⁵²¹⁾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 8·3 소비품 생산 증진운동이 실시되었지만 이는 유희자재와 노력을 활용하여 생활필수품을 늘리자는 운동에 불과하였다. 특히 동독에서 일련의 복지정책 및 소비정책이 주민들의 권리에 기초한 형태를 보였다면 북한에서의 소비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는 비대칭적인 일종의 ‘선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⁵²²⁾ 즉 북한에서는 복지와 소비가 주민들의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소비를

520)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합본개정판)』(서울: 돌베개, 2015), pp.990-991.

521)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1969년 2월 7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275.

522) 황규성,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3권 2호 (2016), p.120.

통한 자아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북한지도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반발만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상당히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의 통제가 시작되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적어도 그것은 남의 국가의 통제가 아닌 나의 조국의 통제였다. 특히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였지만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며 진정한 주권자라고 호명되었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은 민주적인 전통의 훼손이었지만 애초에 민주주의를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만일 북한에서 동유럽 정도의 보편적인 종교가 존재하였거나, 근대적 시민으로 살아간 경험이 있었다면 주술적인 프로파간다는 애초에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등장하였다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진지한 반향을 일으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예술가, 종교, 근대적 개인이 모두 약해서 세력을 구성하여 국가와 대립할 수 없었다. 특히 전통적이고 무속적인 세계관은 일반 주민들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김씨 가문의 정치적 야욕이 맞물려서 주술적인 프로파간다까지 사용하는 초스탈린적 독재국가가 등장할 수 있었다.

3. ‘남조선 혁명론’에 기반한 대외전략과 그 한계

1970-1980년대에는 냉전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동독의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변화하는 구조를 포착하고 명민하게 행동하여 ‘모스크바협약’과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냉전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동시에 분단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의 상황과 남북한의 이해관계는 동서독과는 상이하였다. 한국전쟁의 후유증과 안보문제, 경제협력 혹은 경제지원의 비현실성과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데탕트의 해빙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세력균형이 변모하면서 불안정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실시하였다. 즉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구축을 목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에서의 혁명을 일으

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전략은 시기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1980년 후반까지 고수되었다. 이 기간 남북간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통행과 우편,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실망감과 피로도만 증대하였다. 본 절에서는 1970-1980년대 북한의 대외전략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1970년대 북한의 대화 공세

① 7.4 남북공동성명과 그 한계: 닉슨 독트린을 통해 전개된 전 세계적인 데탕트의 흐름은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⁵²³⁾ 하지만 이 변화가 아시아에서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72년 2월 닉슨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던 남북한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야만 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라는 압력을 남한에게 가했다. 박정희 정부는 아시아에서 받을 뼈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강대국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다. 반면 북한은 닉슨 독트린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북한은 국제정세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접촉의 범위를 넓혀갔으며 이후락과 김영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체결할 수 있었다. 남북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 적으로 해결, 무력사용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 적 방법으로 실현,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을 합의하였다.⁵²⁴⁾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적

523) 닉슨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이것이 공산권을 자극하여 전지구적인 불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관련된 논의는 Richard Nixon, “Asia after Viet Nam (Foreign Affairs, October, 1967” Rick Perlstein ed, *Richard Nixon: Speeches, Writings, Document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128-144.

524)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종필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대 원칙이 북한 측이 아니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고안한 것이라고 증명하였다. 이후락이 남한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하였으며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건의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이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공세적인 대화국면을 조성한 것 역시 이후락의 실

인 조치로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동서독의 기본조약처럼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사이의 안보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교류협력 단계로 발전되기 어려웠다. 북한은 남한과 진정으로 협력하기 보다는 닉슨 독트린의 빈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1971년 3월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을 철군시켰던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 국면을 조성하여 철군을 관철시킨다는 북한의 목표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동성명의 대원칙들을 남한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남한은 ‘자주’를 남북한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을 외세로 간주하여 한반도에 제국주의 세력이 물러난 상황을 ‘자주’로 이해하였다. ‘평화’의 원칙을 군사연습 및 비방, 중상 중지로, ‘민족대단결’을 남한 내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⁵²⁵⁾ 이러한 입장 차이는 남북조절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명백해졌다. 남한은 5개의 분과 즉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가운데 사회문화 분과의 우선적인 설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인 문제(무력증강 및 군비 경쟁 중단, 남북 군대의 10만 이하 감축, 미군철수, 외국으로부터의 군수물자 반입금지, 남북한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우선적으로 토의하고 5개 분과 위원회에 대한 일괄 설치를 주장하였다.⁵²⁶⁾ 북한의 요구는 남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앞장에서 분석하였듯이 동서독의 경우 이미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어 있었다. 나토군은 서독에 소련군은 동독에 주둔한 상태였으며, 양측 모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인 대치는 양 진영을 전멸로 몰아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전면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의 주

책이 크다고 보았다. 김종필, “이후락과 남북회담” 『중앙일보』 2015년 7월 1일.

525) 박광득, “7.4 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제 14권 3호 (2014), pp. 24-25.

526) 정해구, “남북대화의 가능조건과 제약조건 분석: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30권 2호 (1998), p.95.

둔으로 인하여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강력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실전 경험을 쌓았으며 보다 발전된 무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에 비하여 약세라고 평가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상호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여야만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7년 이진삼 대위의 북파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등은 평화적으로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좌경맹동 분자의 책동으로 책임을 떠넘긴 김일성의 모르쇠와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과 국군의 현대화와 실전경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군사력이 더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남한사회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특히 당시 북한이 ‘남조선 혁명’ 노선을 고수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도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당시 라인 강의 기적을 통해 선진국으로 재도약한 서독은 동독뿐만 아니라 물론 심지어 소련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동독 측은 교류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독이 제공하는 당근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1970년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인구수는 더 많지만 1970년 1인당 GDP가 고작 279달러에 불과하였던 남한은 같은 기간 1인당 GDP가 342달러였던 북한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없었다. 당시 남한은 중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였고 노동착취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이 정책은 훗날 큰 열매를 거두어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지만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되었던 시점에는 북한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없었다.⁵²⁷⁾ 다만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구권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이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에 형식적으로나마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남한 정부가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남북대화 국면을 유지하다가 자칫하여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527)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 5주년을 기념하여 경제교류를 제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남북한경제협력추진을위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북한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었다. 물론 이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는 분명 성장하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북한에게 더 많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얼마간의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남한도 적극적으로 대화국면을 유지하지 않았다. 당시 남한은 북한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었고 오히려 자칫하다가 남측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이 있었다. 2020년인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남북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가치들을 북한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972년에는 상황이 완전하게 달랐다. 남한은 유신독재와 억압적인 반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반공주의는 단순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의견을 묵살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허울뿐이었기에 남한은 북한에 대한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북한의 강력한 독재체제를 고려한다면 ‘접근을 통한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역으로 남한의 사회 불만 세력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연유로 남북관계의 급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되기 이전인 1972년 5월 29일 박성철 정무원 부총리가 김영주를 대신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박정희-김일성간의 정상회담, 비밀회담을 공개회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여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하였다.⁵²⁸⁾ 이는 평화공세를 통해서 남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 조절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회담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측은 조절위원회가 남북간 정치·군사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 결정하여 그 집행을 조절하는 기구로 하고 별도의 고위급 ‘경제·문화교류 협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남한은 조절위원회가 남북문제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일 뿐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⁵²⁹⁾ 즉 북한은 조절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통합을 모색하는 반면 남한은 이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구로만 인식하였다. 전 지구적인 데탕

528) 김연철,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경기도: 창작과 비평, 2018), p.104.

529) 배광복, 『남북대화 1971-1992: 힘·선택·말의 남북관계 역사』(서울: 아연출판부, 2018), p.182.

트의 흐름은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조직된 남북조절위원회는 1973년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②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남한의 고립전략: 1970년대 초반에 형성된 남북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였다. 1974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비록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대화는 모두 중지되었다. 양국은 또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전략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실시하였다.

북한이 전술을 변화한 이유는 지미 카터 정부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미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미국의 외교 전략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워싱턴 중앙정계와 거리가 있었던 조지아 주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는 다소 변칙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비록 임기 중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모색하였으며 선거기간에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당시 카터정부가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북한의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음. 둘째, 소련과 중국 역시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화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험적인 행동을 제약할 것. 셋째, 미국은 남한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약속할 것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⁵³⁰⁾ 특히 대통령 유세기간에 “미국은 남한에 무려 7백 여 개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나는 남한에 핵무기가 단 한 개라도 배치돼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핵무기 철수까지 주장하였다.⁵³¹⁾

미국의 정책변화는 남한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고 북한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이 카터의 노선은 닉슨정부의 미국이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을 통해 남베트남에서 철수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530) Larry A. Niksch,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d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Vol. 21 No.3 (1981), p.326.

531) 돈 오버도퍼, 이종길 역, 『두개의 한국』(경기도: 길산, 2002), p.144.

북베트남의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선례와 더불어 북한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박정희 정권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즉 ‘통미봉남’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미 1974년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통해서 북미 직접대화의 의지를 표명했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지만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⁵³²⁾ 물론 당시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안의 핵심안은 바로 주한미군철수였다.

북한은 지미 카터가 취임한지 3주 만에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서신을 당시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제리 코헨을 통해 벤스 국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채널의 한계점을 인식한 김일성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가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과 접촉을 시도하였다.⁵³³⁾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1977년 12월 10일 김일성과 호네커의 밀담 내용에는 “김일성은 미군 철수 후 남한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정치 노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사회주의의 길을 택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 날이 올 때까지 북한이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목표는 72-73년 당시의 남북대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박정희 정권과 화해하고 협상을 재개한다면 남조선 내 反박정희 정치세력의 입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⁵³⁴⁾고 기록되어있다. 이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주한미군철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한 후, 남한에서 자발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이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군철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사실상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의 이미지를 보여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집단임을 연출하였다.

532) 이보미,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논문: 2013), pp.68-69.

533) 이와 관련된 내용은 Khue Dieu Do, “Letters and Ping Pong: North Korean Diplomatic Offensive towards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7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published online (2020). 이완범,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3장 참조.

534) 돈 오버도퍼, 이종길 역, 『두개의 한국』(경기도: 길산, 2002), pp.155-159.

여러 가지 돌출행동으로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던 카터 정부였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남한을 제외하고 북한의 양자회담을 수락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3자 회담’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백악관의 참모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들러리로 세울 뿐이며 남한의 국익을 훼손할 의제들을 가지고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이 회담을 반대하였다. 북한 역시 정당성 없는 박정희 독재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3자 회담’을 반대하였다. 게다가 1979년 7월 20일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즈브기뉴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논의를 중지하고 1981년에 재검토한다는 카터의 성명을 대독하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란의 중지부를 찍었다. 주한미군의 철수중지가 북한이 3자 회담을 거부한 주요한 요인이었다.⁵³⁵⁾

만약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3자 회담에 참여하였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해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주한미군의 완전철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감축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권위주의 독재체제인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에 의해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3자 회담을 통해 남한, 북한, 미국 간의 진정한 평화와 신뢰가 형성되고 교류협력이 증진되었다면 탈 냉전기에 북한의 선택지가 많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조선 혁명과 대남적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남한 역시 조금 더 자신의 체제의 자신감을 가졌더라면 북한의 평화공세를 역으로 이용하여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형성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다른 목표와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1970년대 전 지구적인 데탕트의 해빙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2) 1980년대 무원칙적인 대외전략

198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대남적화를 통한 통일 달성이라는 대외전략은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두 가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였다.

535) 이완범,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 p.239.

첫째,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데탕트의 움직임이 약화되었다. 이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KAL기 격추로 인하여 동서진영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NATO군의 ‘유능한 궁수 83 (Able Archer 83)’ 작전으로 인해 신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공세가 전개될 환경은 아니었다. 둘째, 1980년대부터 남한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국력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표상으로는 1970년대부터 남한이 앞서기 시작하였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들어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1년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19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가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였다. 힘의 추가 서방과 남한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지만 북한은 대외전략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① 도발적인 대남전략: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남한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상대인 전두환 대통령은 폭력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 예상과는 달리 유화적인 대북메시지를 보냈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었던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 흥미롭게도 전두환 정부 역시 ‘화전양면’ 전술을 썼다. 1981년 1월 12일 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을 초청하였다.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 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면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536)

이는 남한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난 파격

536) “전두환 대통령 81년 국정연설” 『중앙일보』 1981년 1월 12일.

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장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레이건 대통령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안정화되었다는 데 따른 자신감 때문이었다. 실제로 1981년 2월 개최된 전두환-레이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두환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였다.⁵³⁷⁾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두환 정부는 1982년 2월 1일에는 ‘20개 시범실천사업’ 계획을 밝혀 구체적인 교류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여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하였다.⁵³⁸⁾

이 상황은 북한에게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 가지 전략을 펼쳤다. 첫째, 정당성이 없는 전두환 정부와의 대화를 피하고 이 체제를 흔드는 전략을 펼쳤다. 앞서 언급한 남한의 전향적인 대화제 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고수하였으며 ‘남북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라는 비현실적인 방안을 역으로 제의하여 사실상 전두환 정권의 제안을 물리쳤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사태와 5공화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남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은 기존의 북미간의 ‘양자회담’에서 한 발짝 물러선 ‘3자회담’을 다시 추진하였다. 레이건 정부의 보수적인 성향에 따라 ‘양자회담’이 불

537) 레이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강경접근을 실시하면서 국내적 정당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을 인정하였다. 전임자인 닉슨, 카터와는 달리 한미동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통미봉남’과 위장평화공세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물론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인하여 전두환 정권을 승인하였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한 대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박탈하는 행위였다.

538)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평양 간 도로 연결 ② 이산가족들 간 우편교류 및 상봉 실현 ③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 자유 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발 ④ 해외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주관하고 관문점을 통화하여 쌍방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 ⑤ 자유교역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개방 ⑥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정규방송 자유청취 ⑦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관문점을 통과하여 참가 ⑧ 외국인들에게 관문점을 통과하는 자유로운 왕래 보장 ⑨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 ⑩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근로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 상호 친성 방문 실시 ⑪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⑫ 민족사 공동연구 ⑬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 개최 및 국제경디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 ⑭ 일용생산물 교역으로 쌍방 주민 생활편의 도모 ⑮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⑯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전시회 교환 개최 ⑰ 비무장지대 내 고동경기장 시설 및 친선경기 ⑱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연구 위한 공동학술조사 ⑲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철거 ⑳ 군비통제 조치 협의 및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용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지식사전』(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pp.658-687.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태도를 변화한 것이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3자 회담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레이건 정부의 조지 슐츠 국무부장관도 이 안의 가능성을 은연중에 언급하였지만 남한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이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한 내부의 혼란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개진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근거 중의 하나는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북한은 민주화운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였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 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지난 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즐기치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 높은 매국노, ‘유신’ 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함 경고를 내리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의 파썸 통치 기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썸 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⁵³⁹⁾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전미영이 적확하게 지적하였듯이 북한은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를 전제한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⁵⁴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두환 대통령을 제거한다면 남한 내부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웅산 묘역 테러’를 저지르고 말았다.⁵⁴¹⁾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값 비싼 대가를 치렀다. 소련과 중국의 비호와 미국의 만류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북제재가 시작되었으며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서방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은 완전하게 사라졌다. 이 뿐만 아니라 모험주의적인 행동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밀월을 촉진하였다. 북한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고안하였다. 이에 1984년 남측에 수해물자 제공의사를 밝혔으며, 남한에서 이를 수용하면서부터 대화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539) 김일성,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제 6차대회, 1980년 10월” 돌베개 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pp.386-387.

540) 전미영,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 (2010), p.66.

541)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담론 201』 19권 3호 (2016), p.94.

1984년 제1차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체육회담,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북측의 남북국회회담 제의와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어려운 시기 양측이 교류와 접촉을 늘리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⁵⁴²⁾

또한 당시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영법을 통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분명히 기존과는 다른 노선이었다. 실제로 김정일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 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⁵⁴³⁾ 라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교류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⁵⁴⁴⁾ 하지만 급진적 대외정책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리해보자면 1980년대 전반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전략이 어려워짐에 따라 테러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여 한국 사회를 흔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전략으로 말미암아 한미일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군사독재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출구 전략’으로 대화국면을 재조성했다.

②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수세적 태도와 대남적화 고수: 1980년대 후반

542) 1985년 9월 5일 허담은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하여 김일성 주석의 친서를 건네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85년 10월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54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49-50.

544) 남한도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수도 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권들과의 경제교류가 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이 때문에 예전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던 동구권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였고 이를 위해 1984년 김일성은 동구권을 순방하였다. 북한이 항상 일방적으로 지원과 원조만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1984년 호네커 서기장은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에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화학·광물·금속공학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 동독 측은 북한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여 서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이경석·김경미,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제 34권 3호 (2016), p.172.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은 전반기와는 달리 수세적인 형태를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계획경제의 파열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의 소련과의 밀월관계는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인하여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가 북한에게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중국 역시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대미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반면 남한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착실하게 국력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었다. 특히 남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제도적 민주주의 전환에도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라는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분명 북한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었으며 그들도 힘의 균형추가 명백하게 남한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은 북한에게 기회이기도 하였다. 남한이 제도적인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있었던 목소리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대학가와 재야운동권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6.29 선언을 쟁취한 사회의 에너지가 민족통일과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공식적인 비밀 채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야세력을 자극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했다. 즉 북한은 대남적화전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내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문서로 증명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사실과 증언을 토대로 이 시기 북한의 행동을 추론할 수는 있다. 1989년 1월 24일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평양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주영 회장은 도쿄-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에도착하였으며 북측과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논의하였다. 정주영 회장 방북 당시 북측은 금강산 관광을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박철언 전 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정주영 회장이 “나는 7개년 계획에 미국, 일본, 서독, 영국 자금을 끌어대고 남한 기업인도 포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5년 계획에 피크 때 관광객 연 12만 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더군요. 전금철, 최수길이는 금년 7월

부터 남한 사람의 입북을 허용하고 관광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달려도 통용되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1차로 외금강 호텔 2개소를 신축하고, 삼일포에 1개소, 시중호에 1개소, 내금강에 1개소, 동중호에 1개소, 명사십리에 2개 호텔을 짓자고 했습니다.”⁵⁴⁵⁾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1989년 1월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만약 이 계획안이 잘 성사되었으면 북한은 금강산 지구를 통한 안정적인 외화 확보가 가능하였고 다른 부분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1989년 2월 8일 남북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의정서는 신속하게 이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 혹은 사회주의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일련의 개혁에 동참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남한의 움직임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1989년 1월 29일 ‘한국-헝가리’의 전격적인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이를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⁵⁴⁶⁾ 남한의 영향력이 동구권 사회주의권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989년 3월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익환 목사를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또한 1989년 전대협을 통해서 임수경을 세계청년축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당시 북한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첫째, 재야세력의 집결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노태우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당시 민정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득표율은 매우 낮았다. 게다가 야권의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 여

545) 박철언,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5), pp.57-58.

546) 물론 이 사안들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가령 이정철은 당시 박세직 안전기획부장이 주재하는 북방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주영 회장과 조선아시아무역촉진위원회 최수길과 합의한 의정서를 ‘사문서’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표류하여 결과적으로 9년이나 지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안기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사업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합영법과 같이 제한적인 개방일지 1998년과 같은 과감한 개방일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남한 정부가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환경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정신문화연구』 35권 제 2호 (2012), pp.140-141.

소야대의 정국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당시 사회분위기 역시 독재의 후예인 민정당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 청년들은 정부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임자인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럼 국가기관을 통해 사회를 통제할 수도 없었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화해 정책을 후퇴시키고자 하였다. 남한은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였지만 여기에는 힘의 우위에 따른 자신감도 있었다. 따라서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남측의 대화공세를 체면을 유지하면서 물리쳐야만 했다. 북한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통해 대화공세를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 당시 노태우의 민정당에는 전두환 정부 체제의 강성 보수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가령 당시 육군사관학교 17기 출신인 김용갑 총무처 장관은 사회적 혼란이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초헌법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많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5공 청산과정에서 과거 군부 및 보수인사들과 갈등을 하였기 때문에 민정당 내부의 보수 세력들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반발하였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⁵⁴⁷⁾으로 인해서 민정당 내에서 노태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기에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을 전복하고자 하는 북한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야운동권과 결합하여 노태우 정부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공안정국 형성으로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을 잠시 고착시킬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3당 합당’을 통해 가까스로 정치적 안정화를 이루었다.⁵⁴⁸⁾ 북한은 또한 남한이 동구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

547)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다. 문익환 목사는 허담 비서와 9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총 9가지 사항이 언급되었다. ① 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 재확인 ② 두 개의 조선원칙 반대 ③ 정치군사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접촉 실현 ④ 공존의 원칙에 따른 연방제 추진 ⑤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 ⑥ 교차승인의 거부 ⑦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는 통일위업 실현에 대한 공동염원 표시 ⑧ 범민련 소집제안지지 및 남한 학생들의 제 13차 세계 청년학생 평양 축전 참가지지 ⑨ 논의된 사안을 추후 남북공식대화의 기초로 활용

548) 일반적인 3당 합당을 ‘야합’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택은 3당 합당을 통해서 과도기성격의 노태우 정부가 새로운 보수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구 주류 세력과 결별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변화

을 막지 못했다. 남한에서 대내적으로는 공안정국이 실시되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소련과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접촉면을 늘려나갔다. 정리해보자면 북한은 1980년대 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실리 확보 보다는 대남적화를 통한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체제를 보다 경직시켰던 실책이었다.

1970-1980년대 북한체제의 특징과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물리적 통제 능력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인민반과 같은 사회조직은 잘 작동하였다.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동원능력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김정일의 후계체계, 주술적 프로파간다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자원제공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1970년대 기술수입과 대중동원을 통해 경제는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침체가 더 가속화되었음에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대외관계는 특별히 북한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1970년대는 미국의 개입약화, 1980년대는 남한의 사회운동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이 때문에 진지한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 관계개선, 경제협력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말
물리적통제능력	강	강	강
자원제공능력	중	중 (약화추세)	약
상징적동원능력	최강	최강	최강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미국의 한반도 개입약화/북한의 대화공세/협상을 통한 미군철수	미국의 개입강화/ 대남혁명론 유지	남한의 국력 상승 및 북방정책의 압박/대남혁명론 유지

<표 4-1: 1970-80년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변화>

된 정치적 지형속에서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벗어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강원택,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 11권 1호 (2012), 참조.

제2절 탈냉전시기 북한의 대응

1990년부터 북한에서는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 침체는 문제였지만 이것은 체제의 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제환경은 북한의 강력한 대남공세를 촉진하였으며 국내에서 김일성의 통치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확실히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권들이 붕괴한 것은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불행 중 다행히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시점인 1994년까지는 내부적 모순이 완전히 극대화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여 외부로부터의 파급효과를 차단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중심노선을 수립하고 부분적인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한다는 전략을 펼쳤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이는 일관성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1989년 후반부터 김일성 사망 전까지인 1994년 북한의 대응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개방의 모색과 계획경제 유지의 동시 추진

북한은 경제상황의 악화를 매우 우려하였다. 하지만 동구권 붕괴의 원인을 충분하지 못한 개혁이 아니라 동구권 국가들의 비사회주의적인 정책에서 찾았다. 따라서 수정주의적인 개혁을 반대하면서 기존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명 존재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도부는 새로운 부분적인 개방을 통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매우 핵심적인 선행조건이었다.

1) 위기의 인식과 남북관계개선의 움직임

① 정치경제적 위기의 전개: 1989년 말부터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약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동독은 서독에 통합되었다.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1990년 9월 30일 남한과 수교하였으며 그의 개혁정책은 실패하였다. 소련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사회주의 진영의 수장은 축출되어 후임자인 옐친과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보다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선언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혁노선을 수용하였다. 급기야 1992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가 체결되었다. 또 다른 우방국이었던 베트남은 미국과의 수교를 목표로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1992년 12월에는 남한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첫째, 외교안보 부분에서 공백이 발생하였다. 당시 한국과 소련의 수교과정의 화두는 바로 남한의 경제 지원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⁵⁴⁹⁾ 이에 북한은 1990년 10월 5일자 노동신문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강대국의 위엄과 명예 및 동맹국의 이익과 신뢰를 23억 달러에 팔아 넘겼다”고 맹비난하였다. 북한은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편입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남한의 경제력이 발전함에 따라 군사력도 증대하고 있었으며 정치는 보수 세력의 3당 합당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남한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조선’ 원칙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비로소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사실 남북한 동시가입은 북한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항이었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의 원칙을 강조하였기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두 개의 조선’이라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남한이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549)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전환기의 대전략』(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p.217.

북한은 이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두개의 조선’의 국제적 인정은 사실상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⁵⁵⁰⁾

둘째, 북한은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상실하였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특히 소련은 기존의 우호가격과 물물교환 방식을 경화결제로 변경하였다. 경제학자 박후건은 1993년에 종료되는 제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의 원인으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컸다고 간주하였다.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의 70% 가량을 소련과 동구권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중요한 전략물자인 원유와 코크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물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와 여력도 없었다.⁵⁵¹⁾ 가령 1987년 소련으로부터 약 8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였던 북한은 1990년 41만 톤, 1991년 4만 톤, 1992년 19만 톤만 수입하였다. 중국으로부터 1987년 120만 톤 수입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106.3 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91년은 110만 톤, 1994년에는 83만 톤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⁵⁵²⁾ 만약에 북한의 경제가 건강하였다면 외부로부터의 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침체 중이었던 북한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1980년대 후반에 사실상 ‘미공급기’에 들어섰다고 증언하기도 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②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동력의 모색: 북한에게 남북관계는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 남한은 북한의 정당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북한체제를 압박해오는 위협적인 세력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경제 개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남한과 손을 잡는 것이 불

550) 북한은 1990년도 범민련회의 시점에서도 기존의 대남혁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당시 김일성은 대미관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두개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틀어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아세아와 세계 제패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미국 사람들이 남조선을 비계덩어리처럼 물고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통일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 :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앞에서 한 연설 : 1990년 8월 18일”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147.

551) 박후건, 『북한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문헌들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15), p.137.

552) 김규철,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8), pp.20-22.

가피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남관계의 개선은 북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만 북한은 경제안정화와 사회통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한이 미군과 함께 공세적인 무력시위를 단행할 경우,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남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필요한 작업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 이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실제로 김우중 회장은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 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우중 회장의 대담록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 북한 진출과 관련된 사항을 북한 측과 조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김일성에게 제시하고 설득하였다. 김우중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과의 회담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반면 김정일은 이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남한의 체제보장에 관한 제안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노태우 대통령의 밀사였던 김우중 회장에게 화를 내었다고 한다. 김우중 회장이 별도로 시간을 가져 김정일과 대화를 하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다만 김일성의 강력한 의지로 북측도 기본합의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⁵⁵³⁾

북한은 대남혁명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1989년 초와는 달리 남북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덕분에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을 담은 ‘남북한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다. 당시 북한은 예전과는 달리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 말기 통일원 장관을 지낸 최영철 장관은 “북쪽이 남쪽한테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핵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는 따라왔었어요. 초창기에는 북이 좀 콧대 높게 했는데, 바로 동구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한중국교가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동구라파 다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이 북한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자세였습니다.”⁵⁵⁴⁾ 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553) 신장섭,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경기도: 북스코프, 2014), pp.100-109.

554) 홍민·김수암·조정아·이우태,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서울: 통일연구원, 2017),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1992년 7월 김달현 부총리가 방문하였다. 그는 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① 시베리아-북한-남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 ② 원자력발전소의 공동건설 및 전력 공동사용에 관한 남북한 협의 ③ 남포경공업공단 합작 건설에 대우의 즉각 참여를 승인할 것이었다.⁵⁵⁵⁾ 김우중 회장은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북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인만 있으면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남한 측은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특히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노태우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김달현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과의 대결도 겁내지 않는 차기 대권후보인 김영삼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⁵⁵⁶⁾ 게다가 1992년 9월 제 8차 남북한고위급 회담에서 ‘훈령조작’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이동복 안기부 특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조작하여 협상 팀에 전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인모 노인의 송환 계획도 취소되었고, 이산가족상봉도 중단되었다. 김달현 부총리가 실적을 얻지 못하고 남북회담도 장벽에 부딪히면서 북한 내에서는 강경파들이 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③ 북한의 핵 개발과 북미관계정상화의 좌절: 북한의 핵 개발과정과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 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는 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개하기 보다는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북한의 다른 정책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물론 이는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북한의 자주노선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다. 북한 역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핵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김일성이 1956년 소련에 유학생들을 파견하여 기술을 인수받으려고

p.96.

555)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서울: 창작과 비평, 2015), pp.208-211.

556) 김영삼은 1960년 자신의 친어머니를 북의 무장공비의 총탄에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가 북한에게 적대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민주자유당 내부의 보수 세력도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했다는 증언도 있다.⁵⁵⁷⁾ 하지만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독자적인 방안을 통해서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1980년 미국의 첩보위성이 북한에서 5 메가와트 급 원자로 기초공사 현장을 포착하였다. 이 시설은 1980년대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이보다 10배 더 큰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을 압박하여 북한이 NPT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IAEA는 NPT회원국가와 포괄적인 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IAEA가 잘못된 양식의 서류를 북한에게 송부하였다. 이로 인해 감사시간이 지체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건축하고 있었다.⁵⁵⁸⁾

그럼에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북한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핵무기에 쏟았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남북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 덕분에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양측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1992년 1월 22일 미국의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과 김용순 비서가 뉴욕에서 최초로 회동하였다. 북한 측은 이 접촉을 정례화하길 희망하였지만 아놀드 캔터 차관은 IAEA사찰, 남북상호사찰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북한은 한 발 물러서서 1992년 5월 북한이 50그램의 플루토늄을 과학적인 목적으로 추출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IAEA의 조사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IAEA는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군사시설을 포함한 의심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를 주권침해라고 거부하면서 제 1차 북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힘의 균형 추가 남측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한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잉크도 마르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불거진 셈이었다.

1992년은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양측은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미루었다. 1993년 김영삼 대

557) 마중가, “중국이 보는 북핵: 북한의 생존이 중국 북핵정책의 제 1목표”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558) 조엘 위트·대니얼 폰먼·로버트 갈루치,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서울: 모음북스, 2005), pp.1-15.

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일성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⁵⁵⁹⁾”

김영삼 정부는 실제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회학자 한완상 교수를 통일원 부총리에 임명하여 대화국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남한 역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1993년 3월 11일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다. 남북한기본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1992년에는 예외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2년 10월 제 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남북관계, 상호 핵사찰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대화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 사안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 훈련을 재개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93년 3월 19일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송환하여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였다.⁵⁶⁰⁾ 어쩌면 당시 힘의 우위에서 앞선 김영삼 정부가 당근과 채

559)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전문 출처:<http://15cwnd.pa.go.kr/korean/data/expresident/kys/speech.html> 최종검색일: 2020년 10월 30일.

560) 1993년 이인모 노인의 송환행사는 매우 거국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이인모가 사회주의 신념을 고수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이를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로 표현하였다. 당시 이인모 노인의 송환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선전되었다. 그리고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그의 부인이 직접 남편을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남편과 수령에 대한 절개를 지킨 모범적인 여성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로 연출하였다. 분명 이인모 노인의 송환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위축되어 있었던 북한에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찍을 통해서 국익을 확보하고자하는 전략을 펼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기대했던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북한은 이인모 노인 송환 다음날인 3월 20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한편 이 시기 미국은 힘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완상 부총리는 1993년 4월 피터 타노프 국무부 차관이 방한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일괄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회고하였다.⁵⁶¹⁾ 여하튼 북한과 미국은 1993년 6월 11일 NPT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의 하루 전에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였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상대방의 자주권 존중’, ‘조선의 평화통일지지’ 원칙들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공개된 이후 남한 측은 미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보수성향의 안기부 이동복 특보는 이 성명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비난조의 내용의 문건을 한국과 미국에 배포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 역시 6월 17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성명서를 비판하였다.⁵⁶²⁾ 물론 북한의 의심시설이 IAEA의 사찰을 받는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미국과 대화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에서 앞의 원칙을 준수하며 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압력이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방법에 매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실을 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조미사이에 공동성명도 채택된 조건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리행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⁵⁶³⁾

561)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 적대적 공생의 비극』(서울: 한울, 2013), p.86.

562) 조엘 위트·대니얼 폰먼·로버트 갈루치,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pp.81-82.

563) 김일성, “1994년 신년사”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299.

한국의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임동원 장관은 이 시기 북한은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이를 카드로 삼아 미국과 협상을 실시하여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하였다.⁵⁶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30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 북한은 아직 핵무기 및 미사일 운반능력도 매우 부족하였다.⁵⁶⁵⁾ 당시 미국 측은 장관급회의에서 북핵의 포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즉 ‘일괄적 타결’ 안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사안이 남한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되면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당시 남한정부와 언론은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외교수립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이 남북대화를 격하시킬 것이라고 미국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⁵⁶⁶⁾ 이후로 일련의 위기와 소동이 발생하였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가까스로 전쟁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미결상태로 남았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고, 남한도 북미관계를 잘 조율했다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의 3 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남북교류의 제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남한은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상황에 놓여있었던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세적인 정책이 북한에게 ‘통미봉남’ 이 불가능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는 하였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마냥 긍정적인 입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

564)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p.127.

565) 이 시기 북한의 핵 보유능력이 어느 정도로 발달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재하다. 김영삼 정부 안전기획부장을 지냈던 김덕 부장의 회고에 따르면, 1993년 울쉬 CIA부장의 방한 당시 미국 측은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51%로 추측하였다. 또한 당시 미 국무부와 CIA는 북의 핵 보유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한다. 51대 49라는 이야기는 향후 책임회피를 위한 고도의 외교적 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모르겠다’ 라는 답변과 진배없었다. 홍민, 김수암, 조정아, 이우태,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pp.160-161.

566) 조엘 위트·대니얼 폰먼·로버트 갈루치,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pp.131-132.

다.

2) 체제 고수와 경제노선의 부분적 변화

1990년대 북한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체제의 문제점을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변화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은 여전히 고수되었다.

① 시장경제에 대한 반발과 계획경제의 고수: 김정일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일종의 침탈로 간주하여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 과 <<원조>> 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습니다.” 567)

이 당시에는 남북한기본합의서와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시점이였다. 하지만 분명 관련사항이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개혁은 물론,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왔던 소련의 경제운영 방식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의 경제학자들은 김정일의 교시를 해설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를 강조하였다.

“소유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이미 있던 사회주의적인 집단소유를 해체하여 각이한 형태의 소유들을 내오며,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들에 독자적인 관리권, 처분권 등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국가의 지도, 통제가 없이 자체로 생산, 경영 활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준다는 것을 말한다...<<국가소유>> 뿐 아니라 <<혼합소유>> 들도 모두 개별적 집

56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동경: 제일본인 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구월서방: 1991), p.32-33.

단, 개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거부하는 소유로서 철저히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형태로 된다.⁵⁶⁸⁾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물질만능, 리윤본위의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체계를 <<개혁>>, <<개편>> 하는 데로 나갔다. 이리하여 이전 소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에서는 당의 령도, 국가의 중앙집권계획적 지도자체를 거부하고 기업소의 <<자치제>>, 기업관리의 <<자유화>>, 상품경제와 물질적 자극을 확대강화하는 제도와 질서가 서게되고...결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는 자본주의 경제관리체계로 개편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경제제도가 허물어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되살아나게 되었으며 경제는 파멸에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다.”⁵⁶⁹⁾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개별기업에게 자율성을 허락하는 방편조차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기업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정책은 북한에서도 실시되었던 것이었다. 가령 기업에게 ‘독립채산제’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연합기업소 체제에서도 일부분 승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은 이미 그 한계점을 노출하였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재강조하고 있다. 가령 주형남은 『경제연구』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리윤과 물질적 자극, 지방분권화를 제창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조직자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관철하여왔다...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변함없이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라며 연합기업소 체제 이전의 운영방식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⁷⁰⁾

사실 당의 경제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초반과 같은 민감한 시절에는 더욱 자신

568)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 1호 류계 제 78호, pp.45-47.

569) 박영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문제와 그의 빛나는 해결” 『경제연구』 1994년 제 4호 류계 제 85호, pp.3-4.

570) 주형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1994년 제 2호 류계 제 83호, p.20.

의 생각을 개선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최고지도부에서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업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도 몇몇 새로운 개혁적인 움직임은 있었다. 첫째, 계약적인 요소가 등장하였다. 가령 북한의 경제학자인 안운옥은 개별기업소와 연합기업소가 고질적인 문제인 자재보급, 독립채산제, 경영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공급계약에서 자재의 질에 관한 조건은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이다. 수공급계약당사자들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별히 자재의 질조건을 명백히 규정하게 된다. 계약에서는 자재의 명세와 함께 규격 및 재질을 밝히는 동시에 대용자재를 쓸 때 그리고 국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서는 기술적조건을 밝히게 된다. 자재 공급에서는 바로 약정한 질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계약리행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자재 공급에서 약정한 질조건을 어겼을 때에는 위반자에게 다른 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물질적 제재가 가해지며 그 밖에 해당한 법적 제재도 적용한다...독립채산제실시에서 계약관계가 노는 역할은, 첫째로, 기업소를 독자적인 생산 및 경영 단위로 되게 함으로써 그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571)

안운옥이 주장은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발전한 것이다. 특히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생산자에게 책임감을 지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계약법을 강화시켜 사회주의 경제를 합리화 시키는 방안은 이미 1953년 베를린 봉기 이후 동독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이 방안은 개별적인 계약을 보장하여 기업의 독자성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동독과 북한의 방안은 모두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에서 경제행위를 조율할 수 있는 경제 법안이 발달하지 못했으며 법원이 계약위반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571) 안운옥, “기업관리의 합리화에서 계약관계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1993년 제 1호 류계 제 78호, p.39.

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업소 사이의 분쟁은 당과 기업소 혹은 당과 당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권위가 당 보다 더 높아야 하며, 판결사항이 집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재한 북한에서는 계약의 위반을 심판하기 어렵다.

둘째, 계획지표의 현실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시장의 수용을 단호하게 반대하였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를 여전히 고수하였다.⁵⁷²⁾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재료와 자재공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획경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지표가 대폭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 해의 지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소에서 지니고 있었던 자재수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계획지표’가 아닌 ‘액화지표’의 달성도 인정하였다.⁵⁷³⁾

셋째, 기업소에게 자체적인 무역허가권을 발급하였다. 박후건은 1992년에 즈음하여 연합기업소에게 자체적인 무역허가를 허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무역체계를 수립하여 도행정경제위원회 산하에 무역회사를 두고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팔고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도록 하었다고 보았다.⁵⁷⁴⁾ 이는 1985년 김일성이 연합기업소체제에서 외화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무역성을 통한 일원적 수출구조와는 상충되는 방안이었다. 김일성은 아마도 일련의 위기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의 무역을 지원할 수 없었고, 연합기업소 측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③ 농업중심 노선의 수립: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는 기존의 경제노선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소련

572) 리명서는 국가기구를 통한 가격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치법칙은 가격기구를 통하여 작용한다. 그러므로 계획가격이 지배하는데서는 가치법칙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에 철저히 복종되어 작용한다면 자유가격이 지배하는데서는 가치법칙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조절되며 운동하게 된다. 이리하여 나라의 전반경제생활이 시장경제를 중추로 하여 이루어지게된다.” 리명서, “시장경제리론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3년 제 4호 류계 81호, p.42

573)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형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pp.103-111.

574) 박후건, 『북한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p.127.

과 동구권의 붕괴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완충기를 선포하여 기존의 중공업 중심 노선을 잠시 중단하였다. 이는 전후복구사업때부터 추진하였던 경제 방침을 변경한 것이고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선포하였다.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1989년부터 식량상황이 악화되어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김일성은 1000만 톤의 알곡 생산을 주문하였다.⁵⁷⁵⁾ 사실 이는 매우 옳은 결정처럼 보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한 비현실적인 성장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외부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 시기 어처구니없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만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긴 사업을 편향없이 잘해나가야 합니다...이 경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지도기관으로서 국영농장경영위원회로 할수도 있고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시킬수도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를 농업지도기관이 아니라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시키면 농업 생산에 대한 그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⁵⁷⁶⁾

즉 기존의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협동농장을 완전히 국유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협동농장의 규모를 확대하여 연합기업소의 형태로 재구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실책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김일성은 여러 차례 방중하여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 뿐만 아니라 리펑 총리와 장쩌민 서기장도 방북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1990년 중국의 인민공사가 해체되었다는 사실도 모를 리가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1988년 합작사 개혁으로 인한 생산증대에 대한 정보도 북한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이미 종말을 고한 1993년의 시점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성격을 보다 강

575) 북한측 자료는 1984년 이미 1000만톤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은 떨어진다.

576) 김일성,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534-535.

화하는 방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은 1970년대 후반 협동농장을 강제적으로 통합하고 확장하여 전국적인 대기근을 겪었다. 물론 이미 일정수준의 산업화 기반을 보유했던 동독은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협동농장을 구성하여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었다. 동독의 협동농장(LPG)은 정부의 간섭이 심하지 않은 분권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농민들의 자율적인 재량권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서구로부터 수입된 여러 농기계들이 보급되었고 은행을 통한 대출도 가능했다. 어쨌든 북한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만일 이 기간에 협동농장을 분권화하거나 베트남의 농가계약제, 중국의 포산도호를 도입하였다면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은 1993년에도 여전히 자신의 1964년 ‘사회주의 농촌 테제’⁵⁷⁷⁾를 고수하고자 하였고 이는 북한 체제를 더욱 경직시켰다.

④ 특구개방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기존의 합영법 보다 더 시장적인 방침을 수용하였다.⁵⁷⁸⁾물

577) 김일성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선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지출은 전 사회의 리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농촌기술간부 육성을 통하여 현대적인 농업구조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업생산을 보다 현대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촌경리의 기업화를 위해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을 적용시켰다. 협동농장은 거대한 기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들 역시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자급자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동자들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특히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기술자, 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전반을 관리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근로자』 1964년 5호, pp.6-11.

578) 물론 합영, 합작방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북한 지도부와 경제전문가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합영, 합작은 자체의 대외경제관계특성으로 하여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끌어들이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대외경제관계로 된다. 그러므로 합영, 합작을 잘 하는 문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 경제관계발전의 중요요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들사이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외화원천을 늘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요구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최원철,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년 4호 루계 제 81호, p.20.

론 경제전반의 변화가 아니라 일부 구역을 새롭게 개발 및 개방하는 방안을 실시하였다. 당시 UN 동시 가입에 따라 1991년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 7월 중국의 훈춘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7월 UNDP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를 협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남한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여러 가지 행정적 인프라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계획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⁵⁷⁹⁾

이 시기를 즈음하여 북한은 독자적으로 1991년 12월 정무원결정 제 74호에 따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발표하였다.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을 개방하고 관광, 중계무역, 수출 가공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와의 비즈니스 경험도 부족하고 1970년대 외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에 진출할 기업은 많지 않았다. 당시 김일성도 나진-선봉의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당사자를 질책하였다.

“라진-선봉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잘 꾸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일꾼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 지대 개발사업을 몇해전부터 한다고 말만 하고 질질 끌면서 그 동안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맛있는 떡을 앞에 놓고도 먹을 줄 모릅니다...정무원에서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말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동이 되어 하여야 합니다.”⁵⁸⁰⁾

하지만 김일성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지구는 발전하지 못했다. 1997년 말까지 실제투자는 77개 사업 5,792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유엔개발계획(300만달러)과 개인투자(150만 달러)를 합치더라도 6,242만 달러에 불과하다.⁵⁸¹⁾ 나진-선봉지구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인프라 부

579) 고일동,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의 최근 동향과 재원조달 방안』(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 pp.3-4.

580) 김일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1994년 6월 14일”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541-542.

581) 이점호, 『북한의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19.

족처럼 사업적인 요인이 컸지만 이에 못지않게 적대적인 대미관계 역시 큰 영향을 끼쳤다.⁵⁸²⁾ 이는 북한 측이 개방을 도모한다고 하여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해외투자와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위기의 전개과정 가운데 북한은 자본주의적 혹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타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방향을 명료하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극단의 상황을 타계할 만한 미봉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핵 문제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남한 역시 핵과 남북관계를 연관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남북한비핵화공동합의서’의 진의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지원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북한 역시도 내부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사상통제를 통한 외부영향 차단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 북한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한 나름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보다 사실에 근접한 분석결과가 공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훌륭한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582) 북한 측도 북미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경제특구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김일성대학에서 출간한 투자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시되어있다. “지금 미국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조미관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에 규제된 모든 사항들은 조미관계개선과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서방세계 다른 나라들의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과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주릴라는데 대하여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라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투자하여 활동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한 몫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p.11.

수정주의에 경도되어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결론이었다. 583) 따라서 일련의 위기상황에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불필요한 개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념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 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사상통제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먼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사상도 아니며 제도적인 개혁도 아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우리식’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반 민중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거나 혹은 이들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종석이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실상 기존의 ‘유일체제’를 지칭한다.⁵⁸⁴⁾ 즉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새로운 슬로건일 뿐이며 기존의 ‘유일사상체계’, ‘초스탈린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운 까닭은 외부의 정세에 대응하고 내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혁명적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

583) 김일성은 소련이 붕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쓰딸린이 서거한후 흐루쇼브는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수정주의정책을 실시하여줍니다. 그는 <<개인미신>>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쓰딸린을 헐뜯고 당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혁명성을 무디게 하였습니다. 흐루쇼브 이후시기에도 역시 당사상사업을 잘하지 않았습니다...쏘련에서는 당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당과 국가 활동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가 심하게 나타나다보니 당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앞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쏘련당이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더라면 당안에 혁명의 배신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쏘련이 것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 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93년 12월 8일”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p.273-274.

584) 이종석,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한계: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187.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585)

사실 동구권의 붕괴는 북한에게 안보, 경제 분야를 뛰어넘어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실 북한은 동구권의 국가와 깊은 유대를 맺지는 않았으며 이들 국가의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회적 생활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뿌리를 둔 동반자라는 인식은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1983년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서적을 발표하였다. 이는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던 것, 그리고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출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행보였다. 특히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승계성을 부정하지 않았다.⁵⁸⁶⁾ 따라서 동구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식’이라는 형용사를 더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견고하다는 점을 선전하고자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었다. 사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입장과는 배치되는 슬로건이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전 지구적인 계급혁명을 왜곡하고 억제하는 반동적인 부르주아 사상으로 간주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권에서 금

58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p.16-17.

586)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는 그 개척기에 벌써 맑스의 활동을 통하여 이 귀중한 진리를 확증하였다. 만일 로동계급의 첫 수령인 맑스가 맑스주의를 국제로동계급에게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속에서 헤매었을 것이며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지 못하였을것이다...주체사상은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조선혁명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주체사상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발전풍부화되고 새롭게 제시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pp.4-7.

기시되던 ‘민족주의’ 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는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었다. 김정일의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구별하면서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거나 령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경제대국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깔보고 배척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종주의와 배타적인 민족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제가 ‘야마토 민족’, 독일이 ‘아리아 민족’ 을 강조하여 세계를 지배하였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⁸⁷⁾ 북한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보면 이 사상은 확실히 팽창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둘째,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제로 ‘민족’ 을 다소 괴상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선전하였다. 이 시기 전까지 북한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김일성의 ‘항일 혁명’ 에서 찾았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조선’ 그 자체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단군릉’ 과 실제 단군의 유해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느닷없이 고조선의 ‘대동강 문명론’ 을 주장하였다. 물론 최근의 남한 학계의 연구는 한강문화, 대동강문화, 요하문화가 통합된 최초의 고대국가의 존재가능성의 여부를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⁵⁸⁸⁾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학술논의라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하였다. 가령 북한 측은 단군의 유골을 직접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단군릉에서 나온 남자뼈에 대한 연대측정도 진행되었다. 뼈의 연대는 현대물리학의 첨단기술의 하나인 전자상자성공명법을 적용하여 두 개의 연구기관이 가지고있는 현대적측정기구로 24,회, 30회씩 각각 측정하는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11년전의 것이란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뼈는 다른 아닌 단군의 유골이다. 단군의 유골이 지나간 기간 삭아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수 있는 것은 유리한 지층에 묻혀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⁵⁸⁹⁾ 이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자인 동명성왕의 무덤이 평양근

587)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9), p.3.

588) 신용하, 『고조선문명의 사회사』(경기도: 지식산업사, 2018), p.33

589) 사회과학출판사 력사편집실, “단군릉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력사편집실 편,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p.6-7.

교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당시 동명성왕의 유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1992년에는 왕건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동명성왕의 무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왕건의 무덤인 ‘현릉’은 역사학계에서 수용하는 편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기백과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상당히 공을 들여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신기욱, 브라이언 마이어스, 찰스 암스트롱과 같은 서구권 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근거로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에 앞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평가한다.⁵⁹⁰⁾ 물론 이전에도 민족의 우월성을 종종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전-지구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본격화 된 것이었다. 북한은 ‘세계혁명’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더 이상 선전하지 못하면서 다소 혈연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였다. 사실 이미 다른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북한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것도 부분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의 기원을 김일성과 항일투쟁에서 찾았던 북한이 새로운 정당성을 찾으려고 역사를 왜곡한 것은 그만큼 정치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독자적인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작업이었으며, ‘주체사상’의 하위담론이었다.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올수 있었습니다...우리 인민은 력사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크나큰 영예로 간진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갈 의지와 신심에 넘쳐있습니다.”⁵⁹¹⁾

590)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서울: 창작과 비평, 2009), 브라이언 마이어스, 고명희, 권오열 역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서울: 시그마북스, 2011) 참조.

59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11.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당정책의 요구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592)

일반적으로 북한 문헌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소련, 동구권, 중국의 ‘사업작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안된 단어이다. ‘사대주의’는 미국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남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대국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⁵⁹³⁾ 특히 중국이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내키지 않는 내부의 개혁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표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상이 새로운 사회구조의 통치이념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조선민족’을 강조하여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를 미리 준비해 놓은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운영방식도 도입되는 것을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선전할 수도 있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주체사상’과 사상통제를 기초로 하되 변화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겨놓았다.

2) 수령형상문학과 주체예술의 고수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북한의 문화예술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기존의 노선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예술이론 가운데 핵심은 바로 ‘수령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원칙은 ①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화 ② ‘수령, 당, 대중의 3위 일체’에서 수령의 형상화 ③ 수령의 혁명역사의 업적의 형상화 ④ 수령후

592) *Ibid*, p.20.

593)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지 무엇인가를 수용하거나 배울 것이 있는 국가는 아니었다.

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화(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 지도자로서 품모와 업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⁵⁹⁴⁾

이 이론은 스탈린의 독재가 최절정에 달하고 그의 최측근인 안드레이 즈다노프가 문화사업 전반을 운영하였을 때의 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북한의 ‘수령형상문학’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1970년대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수령형상문학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미 냉전시기부터 주변국에게는 웃음거리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문학을 번역하여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판매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학은 다소 무겁고 노골적인 이데올로기에 익숙하였던 ‘형제의 나라’의 독자들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⁵⁹⁵⁾

그럼에도 북한은 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다. 북한은 예술가들에게 부분적인 자율성을 허락한 것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에 ‘창작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⁵⁹⁶⁾ 북한에서 문학과 조선적 예술의 참담한 결과는 북한의

594)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p.453-453.

595) Andrei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33.

5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서정시는 존재하며,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조국에 대한 사랑 역시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리근지의 <칠보산 기행시초, 벽계수는 흘러가는데>는 조국애와 감성을 잘 연결한 작품이다.

“벽계수는 칠보산 떠나기 아쉬워
담마다 고였다 넘쳤다 흘러가오

가다가 그냥은 못가
여울의 돌을 불안고 맴돌기도 하오

그래도 흐르는 물은 가는 물이어서
기암절벽 안고 쓰다듬으며 가오

생각없는 물도 정든 산천 못떠나
저리도 맴돌며 정만은 두고 가는데

나에게 금수강산을 다 안겨준
조국아 너를 떠나 한신들 내 어찌 살리”

오창은 “북한의 문예창작 방법론: ‘종자이론’의 형성과 발전”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북한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서울: 경진,

이론가 윤기덕과 김정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레닌은 1905년에 자기의 글에서 문학예술은 당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며 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예술의 당성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혁명적문학예술이 당성을 구현하는데서 창조하여야 할 기본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기하지도 밝혀주지도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었다...이렇듯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 창조, 이것은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말할 수 있는 창조분야이며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예술발전과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동지께서 공헌하신 가장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597)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정주의와 양풍은 사촌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정주의를 하면 양풍을 끌어들이고 양풍에 물젖으면 수정주의를 하기 마련이다...이것은 혁명의 배신자들이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썩어빠진 반동적문학예술과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을 마구 끌어들이고 <<자유화>>의 간판밑에 문학예술을 급속히 부르쥬아화, <<서양화>> 하고있는데서도 명백히 찾아볼 수 있다.” 598)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상하좌우로 넓힌다고 하면서 과거 애국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취급하고 실학과 문학이나 <<카프>>문학도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혁명전통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르는 몰상식한 견해이며 혁명전통을 오가잡탕으로 만들고 혁명전통을 이룩한 수령의 업적을 말아먹으려는 반동적인 궤변이다.” 599)

북한에서 문학의 목표와 그 가치는 ‘수령’ 김일성의 형상과 성품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서양적인 것은 모두 ‘양풍’으로 매도되며, 과거 카프의 문학까지 모두 부정하였다.⁶⁰⁰⁾ 그리고 김일성을

2011), p.17.

597)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13, p.491.

598)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53.

599) *Ibid.*, p.60.

신격화하였던 『불멸의 역사』를 계속해서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신격화한 『불멸의 향도』를 새롭게 출판하였다. 이 작품은 개인이 아니라 ‘4.15 문학창작단’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는데 가령 한 작가가 초고를 작성하면 발표 모임 등을 통해 작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작가들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⁶⁰¹⁾

하지만 예술 부분에서 포착되는 변화도 있다. 먼저 김정일의 지시로 조선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주민들이 민요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구의 악기(전자기타, 드럼) 사용을 허락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민족음악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민족음악을 장려한다고 하여 옛날 것을 그대로 되살리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옛날 것을 그대로 되살리면 고티가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현대적 미감을 옹계 살려야 합니다.”⁶⁰²⁾

이 덕분에 현대음악을 담당하는 ‘보천보전자악단’과 민요를 각색을 담당하는 ‘왕재산경음악단’이 조직되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의 기묘한 선전가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왕재산경음악단이 불렀고 리설주와 현송월은 모두 왕재산경음악단 출신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일부 서구의 고전 작품들이 북한에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김정일의 실명으로 ‘양풍’을 비판하였고 수령형상문학을 강조하였음에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서구 작품들도 있었다. 직접 확인된 것은 스탕달의 『적과 흑』은 1991년 문예출판사 『붉은것과 검은 것』 존 밀턴의 『실낙원』과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각각 1992년에 출판되었다. 이는 1967년부터 침체된 세계문학번역이 재개된 것이었다.⁶⁰³⁾ 아마 수백 년 전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혼란

600) 카프의 진보적인 노선은 인정하였지만 이를 ‘혁명전통’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601) 우상렬, “북한 현대문학에서의 ‘수령형상창조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 『한국학』 제 24권 4호 (2001), p.135.

602) 김정일,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1993년 11월 13일” 김정일,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376.

603) 1989년 이수경이 방북하였을 당시 그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매우 부족하

한 상황 속에서 출판이 허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 부문에서 지도자의 우상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9-1994년
물리적통제능력	중 (약화추세) 개혁의 요구 - 계획경제의 유지
자원제공능력	약 (약화추세) 계획경제의 불안정성 - 원자재 수입의 차질 -
상징적동원능력	강 (약화추세)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 및 남한의 대화 공세

<표 4-2: 탈냉전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여 북측이 곤란함을 겪었는데 이 때문에 서구의 고전작품 정도는 인류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재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이후인 2000년과 2001년에는 현대적인 미국작품인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노선은 철저한 문화예술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북한지도부의 체제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제3절 위기의 전사회화와 돌파전략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극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북한 역시 비핵화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부족한 에너지원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 즉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이는 정치 리더십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지만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대체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경제 전반이 마비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체제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은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체제의 운영방식을 상당 부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과 김정은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만을 보았을 때는 북한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통치구조와 사회 모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쇠약해진 상황에서 후임 최고지도자들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들에게 이권을 나누어주면서 공사가 얽힌 통치를 해야만 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비효율적이었는지언정 가동했을 시기 김일성은 자신의 호위그룹인 빨치산파에게 별도의 이권을 배분할 필요가 없었다. 측근들의 특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이들은 지도자를 통해 고급 승용차, 시계, 주택 등을 제공받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없었고 외화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특권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들은 고위 엘리트들에게 공적인 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자생적인 시장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영기업에 일정한 액수를 납입하고 합법적으로 결근하여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간신앙도 다시 등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큰 변화를 경험하

였다. 이 장에서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이 당면하였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된 북한 사회의 일련의 변화는 사회주의를 복원시키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혁명을 야기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분절적이고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태동하였다.

1. 통치구조의 변화

1) 김일성의 사망과 유훈통치

1994년 7월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성인기를 보냈던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한다. 1945년부터 집권하여 아주 강력한 선전활동과 함께 4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던 김일성은 주민들을 철저히 세뇌시킬 수 있었다. 김일성의 죽음과 추모에 관한 김홍익의 소설 『살아 계시다』는 당시 김일성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심리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분녀에게 있어서 우리 수령님은 하늘님이고 해님이었다. 그런데 분녀는 이고 사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머리 위의 해가 떨어질까 봐 우려한 적도 없었다. 현대 바로 그런 하늘, 그런 해가 아무런 예고나 불길한 조짐도 없이 즐지에 무너질 수 없고 떨어 질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여 분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자신에게 내려진 그 청천벽력의 비보를 도대체 믿지 않았을뿐더러 그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불찰로 하여 저 방송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604)

당시 최고지도자의 죽음이 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 섞인 분석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은 이를 체제전환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수령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열기가 가득하였고, 자신들의 부족함

604) 김홍익, “살아계시다” 『북한문학』, p.1139.

으로 말미암아 수령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김일성 추모를 위해 바칠 꽃을 찾기 위해 온 국토를 찾아 해매고 다니기도 하였다. 북한에 가장 비판적인 황장엽의 전 비서의 회고록에서도 이 기간 북한 주민들의 애도는 진심이었고 오히려 김일성이 죽고 나자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⁶⁰⁵⁾ 고난의 행군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에도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으로 인한 성장률 악화가 감지되고 있었으며 당시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하여 완충기를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그 당시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과 식량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그에 대한 ‘그리움의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이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시도하였다. 김윤애에 따르면, 이 정치의 본질은 김일성의 사회정치적 영생강조, 김일성에 대한 그리움과 숭배심, 김일성에게 못다 한 충효를 아버지를 그대로 ‘체현’한 김정일에게 다 하는 것, 세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김일성을 추모하는 정도와 열정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령 이승만의 통치를 경험했던 강령, 연안을 비롯한 미수복지대 주민들, 재일교포 출신들에게 김일성은 엄청난 존재는 아니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던 고위간부들 경우 김일성 근처에서 그의 치부를 잘 알고 있던 탓에 종교적인 숭배심은 거의 없었고 추모의 집합행위에 맹목적으로 가담했을 뿐이었다. 외부의 영향(해외파견, 해외친척)으로 우성화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최고지도자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한다.⁶⁰⁶⁾ 김윤애의 연구를 재해석해 보자면 김일성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숭배의 정도는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실하고 평범한 주민들에게는 분명 큰 충격이었다.

이처럼 김일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정적’인 성격은 매우 약화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적힌 영생탑이 마을에 세워져서 그를 강제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지만

605) 황장엽, 『회고록』(서울: 시대전환, 2010), p.315.

606) 김윤애,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 56집 2호 (2016), p.217.

과거 ‘한울님’ 과 ‘주술적’ 인 메타포를 사용하여 인간을 초월한 지도자로 김일성을 묘사한 것은 그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물론 황당무계한 신격화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일성 사후의 공백을 기회삼아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반발적인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이은 경제적 혼란과 이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적 혹은 사상적 자산이 주민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절대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김정일은 주민의 통치자로 격하되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이 약화되었고 경제사정도 최악인 상황 속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는 사상적 통제를 통한 사회의 통제와 더불어 군과 국가기관, 사회 엘리트, 시장을 고려하여 ‘지배연합’ 을 새롭게 구축하여 국가를 통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김일성과 빨치산 파의 통치 시기보다 국가의 통치력은 약해지고 사회의 반발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던 김정일은 혁명선배를 존대할 것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그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으로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때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며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업적으로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7)

여기서 김정일이 ‘혁명가들’ 이라는 복수형태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김정일은 1980년대부터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되어 활동하였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1인자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공식적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전우였던 빨치산계 원로들과 그 후손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제도는 이완되었더라도 빨치산계의 응집력이 있어야만 체제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607)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2-3.

김일성의 죽음과 유신통치가 시작된 것은 어쩌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힌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94년 7월 핵문제가 한 창 불거진 시점이었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다. 김일성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그는 “나는 며칠전에도 손명원이라는 남조선기업가를 만났고 얼마전에는 김우중도 만났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만 하면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주와 개성 사이의 철길을 한선 더 건설하여 북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상품을 날라다주기만 하여도 거기에서 1년에 4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결국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한해에 15억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흑룡강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 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도로 날라다 주면 거기에서도 한해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608)라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이 남한과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계획경제체제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북한의 계획경제가 와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동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아마 현실적으로 경제발전은 어렵더라도 수십 혹은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그때 만났으면 김일성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국군 포로들 문제라든가, 납북 어부들이라든가, 더 올라가서 6·25 남침까지 전부 사과를 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문제가 합의됐었거든요.” 609)라며 이 시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침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과거의 불행과 갈등에 대한 외교적인 수사를 통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608) 김일성, “뽀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94년 6월 30일”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양: 노선로동당출판사, 1996), pp.470-471.

609) 이호, “김일성과 ‘6.25 남침사과’ 합의까지 뻘었다” 『시사저널』 2016년 12월 10일 1365호.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김영삼-김일성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두 정상 간에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무엇인가 통 큰 결단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 고 당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⁶¹⁰⁾ 또한 당시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두 정상의 7월 27일 남북공동성명안을 도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다고 증언하였다. 경제협력과 군사긴장완화를 구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이었으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명은 2000년 6·15 공동성명과 유사했을 것이라고 보았다.⁶¹¹⁾

당시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북미 수교 및 군사문제 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사망하였고 남한에서 조문파동이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닫히게 되었다. 만약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김일성이 사망했다면 ‘유훈통치’ 속에 남북관계 개선이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세습의 도구로만 활용되었다.

2) 선군정치를 통한 새로운 지배연합의 구축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여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김일성의 정치적 레토릭과 이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충분하였다. 하지만 극소수인 빨치산파로는 국가의 통치가 불가능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통해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는 바로 ‘당(黨)과 군(軍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였다. 과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공식적인 직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었다. 물론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도 있었지만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김정일은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선대와는 다른 자신의 통치이념을 ‘선군정치’라고 명명하였다.⁶¹²⁾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원을 항일투쟁시기로 소급

610) 한승주, 『외교의 길-평화를 향한 여정』(서울: 울림, 2017), p.110

611) 정세현, 『관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경기도: 창작과 비평, 2020), p.239.

612)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

하여 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 혹은 1995년 1월 1일 다박솔 부대 시찰을 통해서 선군정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선군정치의 등장으로 인하여 엘리트집단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였다. 전반적으로 당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 하락하였고 군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은 모두가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 체제가 군이 중심이 되는 군사국가⁶¹³⁾인지 아니면 여전히 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⁶¹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

는 군사를 제일국시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아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데 선군정치의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2003년 1월 29일” 김정일, 『김정일 선집 1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5), p.352.

613)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선군후로’로 군을 하나의 사회계급적 지위로 규정하고, 선군사상, 군인문화등을 통해서 확대재생산 하는 군사국가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군대=당=국가=인민의 일심단결(선군단결)을 강조하면서 군에 의한 사회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당시의 북한이 군사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고유환, “주체사상과 통치담론” 강성운 엮음,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선인, 2010), pp.151-154.

614) 김광수 박사는 “선군정치가 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중시하는 정치이며, 당·군 관계에서 당의 영도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북한은 ‘당적 영도원칙’하의 ‘선군혁명노선’이라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광수,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서울: 선인, 2012), p.206. 또한 이대근은 “선군정치에서 인민군의 가장 활발한 활동이 본래 의미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인민군의 사회경제적 활동이며 이런 역할 확장은 인민군이 당의 군대, 당의 수호자, 항일혁명전통의 계승자라는 인민군의 성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인민군의 전통적 역할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군의 경제활동 역시 기존 대민지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3), p.122. 하지만 인민군대의 경제개입의 범위와 역할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입장도 있다. 북한의 민족대단결지 편집장인 한웅희는 “인민군대는 ‘경제건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생산현장으로 달려갔다. 전기 문제가 제기되자 발전소를 짓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 전기를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을 이탈할 때, 공장을 돌린것도 인민군대였다. 초소를 떠나 농장으로 달려가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난을 해결한 것도, 대규모 토지개간으로 경작지를 넓힌 것도 인민군대의 공로였다. 1990년대 북을 강타한 술한 위기에 심지어 당조직마저 흔들릴 때, 전 사회의 일심단결을 새로이 구축한 힘이 바로 인민군대의 헌신적인 노력, 혁명적 희생정신이었던 것이다”고 군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다. 안영민 “선군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 『민족 21』 통권 제55호 (2005), p.101.

하지만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선군정치가 등장한 사회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흔히 선군정치가 위기 돌파를 위해 등장하였다고 한다. 위기란 경제적인 위기, 민심이반, 국제환경 등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해 당 조직을 개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군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선군정치는 그 용어의 어감이 주는 호전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내적으로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여러 가지 상징적 동원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가까스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회의 반발을 일정수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회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주민들과 민생을 후 순위 놓고 군(軍)을 새로운 ‘지배연합’으로 삼아 위기 극복을 시도하였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김정일 정권이 새로운 협력자로 ‘군’을 선택하였고 이들을 통해 기존의 ‘당’의 권한의 일부를 이관하려고 시도하였다.⁶¹⁵⁾ 원칙적으로 ‘당’과 ‘군’은 모두 최고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군을 앞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모든 주민을 포괄하고 지도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당면한 상황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핵심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충성심과 지지를 통해 사회를 통치한 경험이 있다.⁶¹⁶⁾ 북한의 선군정치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

615) 물론 고난의 행군 이전인 김일성 시대에도 당과 군이 매우 중요한 조직임에는 틀림 없었다. 하지만 양 조직 모두 철저하게 최고지도자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김정일 시대에도 국방위원장의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였지만 군부와 최고엘리트의 이해관계를 과거보다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616) 스탈린의 대숙청시기에 피해를 본 세력들은 볼셰비키 혁명 전후로 당에서 활동한 중진급 인사들이었다. 스탈린은 젊은 간부들을 신규 채용하여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특권을 주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적 파트너로 삼았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노동계급’이 아닌 ‘중산층’과 ‘전문직’을 선택하였다. 대규모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물적·인적 손실을 경험한 상황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뿌리-부르주아로 취급되었던 이 계층을 적극적으로 체제에 포섭하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어 충성심을 고무시켜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저명한 소련연구자인 베라 던함은 이를 ‘빅딜’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Vera S. Dunham, *In Stalin's Time: Middle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0), pp.3-5.

한에서 노동당은 매우 강력한 상징적 위치⁶¹⁷⁾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 혁명의 역사적 로정을 돌이켜 보아도 언제나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이전 소련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무력부터 먼저 창건하시고 그 무력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당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었기 때문에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었으며 당도 빠른 시일안에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으로 창건하고 혁명의 정치적 및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⁶¹⁸⁾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군부에 비하여 ‘당’과 테크노크라트의 경우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김정일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즉 체제가 변화하거나 혹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될 경우에도 당원과 간부들은 그들의 기득권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의 통치와 행정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최고 엘리트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당의 헤게모니도 사라지겠지만 이들에게는 북한이라는 난파선에서 탈출하여 생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다.⁶¹⁹⁾ 반면, 군의 경우 체제 붕괴 시에 가장

617) 정치학자 장달중은 북한에서 당의 위상은 다른 사회주의 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북한 국가권력체제에서 노동당이 누리는 영도적 위상은 북한 국가권력의 구조적 특성은 물론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 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산당이 수행하는 영도적 역할보다 한 차원 높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소련의 공산당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국가기구나 군과 권력 경쟁을 벌여가면서 무침의 역사를 경험한 데 반해, 북한의 노동당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전사회화’ 하는 동시에 ‘수령의 후계체제’를 완성하는 막중한 임무를 실천에 옮기는 전위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장달중,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전” 장달중, 이즈미 하지메 공편, 『김정일 체제의 북한-정치·외교·경제·사상』(서울: 아연출판부, 2004), p.45.

618)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p.293.

619) 물론 이것은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이다. 당시에는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집단이다. 군부 및 억압적 국가 기구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흡수통일 혹은 급변사태 시에 이 조직은 철저히 남한 혹은 미국의 지도하에 해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대부분은 그 기득권의 상실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⁶²⁰⁾ 이것을 지나친 기우라고 간주할 수 있었겠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한 체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군을 내세웠지만 막상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다. 군부에게 준 가장 큰 특혜는 자체적인 기업 운영과 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을 통해서 직접 외화를 벌 수 있게끔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부가 직접 장악하고 있는 핵심적인 군수공장 외의 나머지 기업들은 당과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를 군부에게 관리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및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⁶²¹⁾ 만약 선군정치가 단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면 군에게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해주었으면 충분하였을 것이며 이처럼 당과 내각의 권한을 축소하면서까지 군부에게 경제적인 이권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수예산은 이미 예전부터 내각에서 분리된 제 2 경제위원회를 통해 조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군대와 당에게 일정 부분 독자성과 이권을 허락하여 새롭게 지배연합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계획경제가 사실상 파탄 난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는 예전처럼 기업을 운영할 수도 없으며 측근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가장 중요한 기관

어 핵심당원들을 물질적으로 유인할 수는 없었다. 후술하겠지만 현재 북한은 고위 간부들과 군부의 경제적인 이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충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620) 다른 조직에 비해 군의 규율상태가 더 좋았던 것도 부분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협동농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군을 농사 현장에 파견하였다. 김정일은 “올해 농사작황이 좋은 것은 인민군대가 농사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농사는 인민군대가 동원되어 지은셈입니다. 인민군대가 아니었다면 올해농사를 망칠뻔하였습니다. 인민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에 인민군대가 농촌에 동원되어 농사일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군민관계도 더 좋아졌는데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라고 군의 역할을 칭찬하였다. 김정일,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9월 10일”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p.360.

621) 한 예로 1995년 11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에 군대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고난의 행군기간동안 전력, 석탄, 철강, 수송 농업 등 산업부문에 군대를 투입해 생산정상화를 시도하였다. 김진환, “김일성의 선로후군과 김정일의 선군후로: 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통권 87호 (2010), pp.67-68.

산업은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와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서 관리하되 군부와 당의 엘리트들에게 사업체 운영 혹은 무역을 허가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⁶²²⁾

둘째,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군부의 이탈과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소련은 조선인민군을 창설할 때에 이미 정치장교제도를 도입하였고⁶²³⁾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군을 당의 확고한 통제하에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였을 당시 군대가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김창환은 “당의 령도를 거부한 소련군대는 소련 공산당과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붕괴를 눈앞에 보면서도 막지 못하고말았다. 이것은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가져온 비극적 결과였다. 이 한심한 사태를 두고 《미국의 소리》 방송까지도 1991년 8월 19일 사변후 소련군의 비정치화, 중립화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라고 보도하였다.”⁶²⁴⁾면서 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함을 강

622) 이것은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통치방법이다. 이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는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였지만 아직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을 시기,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채서씨가 장성택의 조카 장현철에게 비밀리에 16만 불을 지원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을 북한으로 들여와 포대갈이를 하여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남측에 수출하려고 하였던 장현철은 안기부의 작전으로 인하여 농산품을 모두 몰수당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장현철은 중국공안에게 체포당하고 말았다. 장현철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6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김정희를 통해서 당으로부터 달러를 받을 수도 있었으며, 김정일이 직접 중국 측에 부탁하여 장현철 씨를 석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장현철씨와 장성택 일가는 매우 큰 망신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박채서 씨가 자금을 대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는 북한의 고위층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잘 분석해 보면 1990년 중반 북한의 최고 엘리트도 별도로 달러를 마련할 수 없었으며 달러는 당의 공식기구가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당과 군 소속의 ‘워크(무역허가권)’를 지닌 많은 외화벌이 기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수익의 일부를 당에게 상납하고 있는 분권화된 구조로 변화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과 군부의 고위직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군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김정일이 원했던 사항은 아니었지만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623) 이것은 아마 소련의 특수한 역사적인 경험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마노프 왕조는 세계 제 1차 대전 이전에 약 140만, 전쟁 중에 약 310만 명을 동원하였다. 물론 당시 독일군 보다는 무기 및 전쟁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매우 막강한 대규모 조직이었다. 1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러서 군대의 조직이 매우 약화된 시점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였고 군대는 이에 반발하여 카렌스키와 볼셰비키를 진압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때에 군대에 파견된 볼셰비키 당원의 능수능란한 선전으로 병사들을 동요시켰고 이미 지치고 구체제에 마음이 떠난 군인들을 이탈시켜 군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조하였다. 동 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통해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의 동독군의 와해와 불복종에 대한 보고가 당 지도부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며 선군정치는 이에 대한 북한식 대응이었다. 계획경제의 실패와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본격화되어 군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군을 우대하였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하게 군의 지도부의 이권만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침을 실시하였다. 식량과 물자는 군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분배되었으며 향후 직업선택 시 가산점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군민일치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김정일이 자주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셋째, 선군정치를 통해서 주체사상을 일정 수준 대체하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치적 비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란츠 사먼의 분류를 적용해보자면, 주체사상을 집단과 개인에게 의식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순수 이데올로기로, 선군정치를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행동의 합리적인 실현을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⁶²⁵⁾ 따라서 주체사상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선군사상을 주입시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를 정당화시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체사상이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당시 ‘주체사상’은 사회에 의해 재해석되었으며, 심지어 저항 이데올로기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경제난이 심해져 배급이 중단되고, 당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각자도생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불

624) 김창환, “당의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과학 연구기사』 2015년 12월 21일.

625) 사먼은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는 비록 상이하지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순수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실천 이데올로기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에 실천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순수 이데올로기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23.

만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였다. 이들은 감정적 불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재를 역설적으로 ‘주체사상’에서 찾기도 하였다.⁶²⁶⁾

기존의 외세로부터 자립적인 의미의 ‘주체’는 당과 지도자로부터 자립적인 ‘주체’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공식적으로 외세의 개입에 대항하는 의미로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변화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주체’를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재해석했다. 이를 의식한 북한지도부는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주체’는 매우 제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연호는 주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외교의 자주노선을 묘사할 때만 사용하고 있으며 대내 선전의 경우 이 용어의 사용을 조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지도부의 입장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유일한 ‘주체’인 최고 영도자의 지도하에서만 ‘주체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북한 지도부는 임꺽정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주제곡을 부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북한당국은 “구천에 사무쳤네. 백성들 원한소리, 피눈물 고이였네 억울한 이 세상!”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주제곡 『나서라 의형제』가 고난의 행군 당시 민심을 동요시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보수언론을 통해 국내에 보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의해 본 결과, 북한 당국의 검열은 사실에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자면 선군정치로 인해 독재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모두 최고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절대적인 위치를 보장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을 통한 통치와 군부를 전면에 내세운 통치 모두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군이 정권의 최전면에 등장하여 활동한다고 해서

626) 서재진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체사상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이제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은 의식성, 창발성,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획득하고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울: 박영사, 2006), p.356.

이것을 단순하게 제 3세계 국가의 군부독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선군정치를 독자적이고 새로운 정치체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초스탈린체제의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⁶²⁷⁾

2. 계획경제의 와해와 시장의 태동

1) 경제상황의 악화와 국영부문의 변화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에게 “역사는 늦은 자를 심판한다!” 라고 충고했던 것처럼, 북한도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김석진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GNP의 40%를 상실하였다. 이 가운데 무역충격에 의한 감소를 10%, 농업생산 감소분을 5-7% 로 집계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20% 가량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퇴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⁶²⁸⁾ 이러한 파국이 발생한 이유는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도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이다. 1995년 김정일은 어떠한 종류의 경제개혁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자체를 ‘반동적’ 이라고 규정하여 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묵살시켜버렸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은 사회주의에 관한 선행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경제건설 일면에 매달림으로써 경제건설자체도 침체에 빠뜨렸으며 구경은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사업을 집어던지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방법을 끌어들이어 사람들속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황금만능의 부

627) 태영호 공사는 김일성 사후 북한은 봉건사회에서 노예사회로 퇴행했다고 보았다. 그는 김일성 시대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였고 개인의 창의력이 권장되었던 시기라고 보았다. 하지만 김정일의 체제의 북한은 훨씬 경직되었으며 독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분명 최고지도부를 위시한 노동당의 윗선의 분위기는 태영호 공사의 증언과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독재정치는 독재자 개인의 성격보다는 그들이 당면한 사회적 상황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과량, 2018), p.515.

628)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르쥬아사상을 퍼뜨렸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떠드는 반동적부르쥬아선전에 동조하고 <<소유의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반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통째로 파괴하여버렸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이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사회주의를 외곡하고 그 우월성을 마비시키며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반사회주의적, 반혁명적 책동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629)

이미 당의 최고지도부가 개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경제연구』는 개혁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반개혁적이라기보다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개혁을 거부한다고 하여 고장난 사회주의 체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공장의 가동률이 약 20%까지로 하락하였다.⁶³⁰⁾

최고지도부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뒤늦게 농업부문에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20-25명으로 구성되었던 분조를 7-8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가족과 친척이 한 분조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을 희생하고 개인의 인센티브를 고취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정은미의 연구에 따르면, 협동농장의 토지를 분할하였을 뿐 사회주의적인 경영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은 여전히 제한되었다. 또한 1996년만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업자재를 조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⁶³¹⁾ 이 시기 북한의 정책은 생산물계약제의 공식화를 선언하였던 베트남의 1982년 5차 당 대회만큼 개인의 인센티브를 보장하지 못했다. 물론 소규모 분조관리제를 1980년대 후반에 실시하였다면 제도가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

62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6-7.

630) 신상미, “김정은 시대 공장가동률 50% 전후...북 303개 기업조사결과 발표” 『오마이뉴스』 2019년 12월 14일.

631)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p.258-260.

유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기상황 속에서 실시된 어정쩡한 정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없었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대학에서의 비공개연설에서 “오늘날 식량 문제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데는 정무원을 비롯한 행정, 경제기관 일꾼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당 일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쪽으로 가면서 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 있더라. 다른 지방에 가봐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오가는 사람들로 넘치고 역전과 열차칸에도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라며 계획경제가 마비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⁶³²⁾ 이처럼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93년 중공업 노선을 수정하게 하였던 위기는 농업부문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생존을 위협받았던 주민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다른 방식 즉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2) 자생적 시장의 태동: 이탈자의 시장

시장화는 ‘자생적 시장화’와 ‘국가기관의 시장화’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계획의 영역과 시장이 공존하는 기이한 형태의 구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먼저 자생적 시장화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자생적 시장화는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국가가 임금과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여 직장에 출근하여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원래 소규모 농민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협동농장의 추가생산물과 돼기밭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 전에도 허락되었던 합법적인 시장 활동이었다.⁶³³⁾

632) “식량난에 공화국 무정부상태 - 김정일 작년 12월 비공식연설 요지” 『중앙일보』 1997년 3월 20일.

633) 주민들의 생필품을 비롯한 여러 소비품을 모두 국가에서 공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시장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허락하였다. 따라서 1958년 폐쇄되었던 농민시장이 1964년에 재등장하였다. 주성하에 따르면, 김일성은 1969년 농민시장을 인정하였으며 지도층 역시 ‘국가가 모든 소비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동시에 공산화가 완전히 실현되면 농민시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의 존재를 인정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으므로 시장이 역시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시장은 고난의 행군의 시작과 동시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고난의 행군 초기 국가가 배급을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제도의 권위가 단번에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도 이 위기가 일시적이라고 간주하였을 뿐 북한사회 구조가 통째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다. 고난의 행군 초기 북한주민들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만일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령 한 광산노동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량으로 도저히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사적인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자르고 그곳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결근하지 않고 출퇴근 전후로 산으로 가서 직접농산물을 재배하였다.⁶³⁴⁾ 특히 인민반과 같은 사회통제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돌출적인 행동을 자제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기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나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근무지에서 합법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계획경제가 와해되어 자재, 설비,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에 출근하여서도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다. 물론 임금과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소에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8.3 노동자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생산 활동과 상업 활동을 벌이거나 사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도배와 장판을 잘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임시고용 또한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다.

계획경제의 와해는 시장을 확장시켰다. 시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스스로 생산한 상품,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부대용품이 주로 거래되었다. 특히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제를

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국내 시장은 자본가가 없는 시장으로서 상품 시장으로만 남아 있다. 이 시장에서는 가치 법칙도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한다. 이 시장은 인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사회주의 국가 활동에 의해 의식적으로 이용된다.” 며 이를 인정하였다.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서울: 북돋음, 2018), pp.34-35.

634) Sandra Fahy, *Marching Through Suffering: Loss and Survival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47.

덜 받는 전업주부들이 개인적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였다. 대개 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솜씨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원단을 구매하여 의류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거나 미용사가 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시장 활동에 참여한 모든 8.3 노동자들이 항상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장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조차 배제되는 형국이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초기의 시장화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음식장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익 창출에 눈이 멀어 불량식품을 판매하여 음식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콩에 돌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페니실린 캡슐 안에 밀가루를 넣기도 하며 기침에 좋다는 오미자와 비슷한 빨간 열매를 판매하였다.⁶³⁵⁾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기관을 통한 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게오르그 짐멜이 “돈은 한편으로 그 무한한 유연성과 분할 가능성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적 의존성을 가능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통해서 인간 관계로부터 인격적 요소가 제거되는 데 기여한다.”⁶³⁶⁾라고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는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이는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킨다. 북한 당국도 이 점을 인식하여 비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단속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장마당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장마당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여 사회를 안정화하는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수준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장마당에 시장관리소를 설치하여 상행위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의 설치도 허용하였다.

흥미롭게도 고난의 행군시기에 본격화된 시장화가 곧 바로 서구의 이윤 추구적인 인간형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김종균과 정진아의 연구에서 한 장사꾼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탈북자는 그녀의 심경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점점 살기 힘드니까 시장은 확장됐어. 그러니까

635)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52호 (2009), pp.165-166.

636)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돈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3), p.510.

우리 생각이 그렇게 ‘네가 너는 떡을 팔고 나는 만약 소금을 판다하면, 너도 나를 착취하고 너 여기에 20원에 지금 10원짜리를 내다 팔고, 너는 떡을 쌀을 사서 했을 때는 5원짜리를, 떡을 만들어서 팔면 10원 받잖아. 너는 내 소금을 사고, 떡을 또 내가 사먹고, 너도 착취하고 나도 착취한다.’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는 게 착취당하는 바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⁶³⁷⁾

탈북자의 구술이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위해 위의 구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은 10원짜리 떡을 20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본다. 자신 역시 소금을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흥미롭게도 구술자는 이를 비도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구술자가 언급한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직접 유통해서 판매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원가에 교통비, 자신의 시간과 인건비, 수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시점에서는 원가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비도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구술자는 ‘상호이익’ 이 아니라 ‘상호착취’ 라는 용어로 수익을 표현하였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상인을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착취를 행하는 집단으로 교육한 것에 따른 반응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보다 본격화되고 계획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양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한 ‘돈주’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시장 활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의 성분(핵심, 동요, 적대) 위주의 사회적 위계질서가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시장은 그동안 적대계급으로 간주되었던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 어차피 성분으로 말미암아 국영기관에서 승진이 어려운 사람들을 벗어나게끔 해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시장’ 은 가내수공업품이거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소비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혁신을 일으키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⁶³⁸⁾ 하지만 상인들의 일부는 다음에 살

637) 김중균, 정진아 엮,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서울: 박이정, 2012), p.370.

638) 북한은 거래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판매대의 면적에 따라

퍼블 국가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기계화를 통한 제조업의 단계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3) 국가기관의 시장화

자생적 시장화는 체제 이탈자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기관의 시장화란 ‘체제 이탈자’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한다. 국가기관의 시장화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기관과 시장이 병존 및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계획영역과 시장의 기묘한 동거는 사회주의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었다. 국가기관의 시장화 현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고용, 원료조달, 생산을 하여 중앙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을 제공하고 추가 수입을 저축하거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⁶³⁹⁾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별기업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여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⁶⁴⁰⁾ 북한의 한 국영 의류공장의 경영방식을

사용료인 ‘장세’를 부과한 것이기에 시장 전체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가 시장 활동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액수 또한 너무 적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36여개의 장마당이 운영 중이며 북한정부의 장마당 징세 액수를 5천680만 달러로 추산하였다. 2016년 통일연구원은 징세규모를 최대 6,945만 달러로 집계하였다. Victor Cha, Lisa Collins,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2018년 8월 26일. 출처: <https://beyondparallel.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north-korea/>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차문석, “공식시장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통일연구원,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54.

639) 박형중은 북한경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영기업은 형식상 계획의 지배받지만 이미 계획원칙(계획 지시 하달과 함께 생산 원천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물을 국가가 일괄 구매 및 처분)은 깨져 있으며, 단지 일방적인 국가납부금 납부의 측면에서만 계획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은 형식상 ‘공식 부문’이지만 실질상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공식’ 업무를 충족한다.” 라는 의견처럼 공식부분과 비공식부분이 얽혀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최대석·장인숙 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pp.57-58.

640) 기업은 원래 생산 활동 이외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다. 예컨대 북한당국은 1998년 청진에 위치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소, 청진철도공장 등지에서도 협동농장의 미경작지를 분여하여 ‘감자를 심어서 자급자족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197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도 나타난 동일한 현상이다. 사실 제철, 탄광, 철도와 같은 중공업분야의 공장은 노동 분업의 원칙에 따라 기업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 공장은 경쟁력 있는 의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원단이 필요하지만 상부기관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작동했던 시절처럼 원자재를 조달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의류공장의 지배인과 관리자들은 장마당 상인이나 ‘돈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단을 구입하여 생산을 한다. 생산된 의복을 장마당, 수출업자, 평양의 백화점 등지에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 혹은 생산품의 일부분을 국가에 직접 지불한다.

일부 국영기업(주로 중앙당과 군부에 소속된)에게 무역허가권인 ‘와크’를 발급하여 해외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과 최고지도자에게 필요한 외화를 직접적으로 벌어들여 오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국영기업이 개인과 비공식적인 계약을 맺어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개인이 회사의 이름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이게도 한다. 농업부문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부문에 비해 8.3 노동자와 같은 이탈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의 이탈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 황해남도 서해안 지방의 협동농장원들은 ‘수산조’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가동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외화벌이들과 연계하여 확보한 어패류들을 시장에 판매하여 올린 수익을 협동농장과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⁶⁴¹⁾

둘째, 개인이 국영부문의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경우 국가 및 국영부문에 고용되어있으면서 국가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형태는 개인의 경제활동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의 물품을 몰래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협동농장의 농산물을 훔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문에도 식량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부 공장원의 노동력을 돌려 농업에 배치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없으며 그 기간 동안 공업생산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후로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권 3호 (2005), p.81.

641) 김소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조달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제 19권 10호 (2017), p.41.

게 다루어졌다. 북한은 국가재산 약탈자들의 일부를 공개처형하여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장과 결탁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일부 기계업자들이 사출기, 인조고기 기계, 신발 기계, 못 기계, 용접 기계 등을 발명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영기업이 개인사업자의 주문과 의뢰를 받아서 직접 기계를 제작하기도 한다. 공장의 지배인과 작업반은 불법행위에 대한 상부의 감사를 대비하여 ‘전력’만 사용하였고 수익을 통해 배급에 기여했다는 문건을 미리 작성해 놓기도 하였다.⁶⁴²⁾

이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는 주성하 기자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양의 인기 있는 미용실인 창광원의 이발권의 국정가격은 800원이다. 시장 환율이 1달러에 8,000 원 가량 하니 실제 비용은 미화 10센트 한국 원화로는 120원정도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미용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손님의 수는 하루에 12명이다. 손님의 머리손질 시간을 40분으로 잡아 12명*40분=480분으로 8시간의 노동시간을 맞춘 것이다. 문제는 이 이발권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긴 줄을 서야하며 아침 7시 이후 부터는 이발권을 구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⁶⁴³⁾ 미용사들은 12명의 손님의 머리를 손질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국영부문에 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은 매우 적기 때문에, 자신의 할당량을 완수한 이후 추가적으로 손님을 받는다. 실제로 고객 1명의 머리를 자르는데 드는 시간은 40분 보다 훨씬 적은 15분 정도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도 가능하다. 즉 13번째 손님부터는 현금 10,000 원 정도의 시장가격을 받는데 이는 고스란히 미용사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3시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부문에서 근무하고 5시간은 자본주의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⁶⁴⁴⁾ 그렇다고 미용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국가가 바리깡, 가위 등과 같은 미용도구, 거울 등을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용사는 개인자금을 일정부분 투입하여 미용실을 운영해야만 한다. 사실상 국가(혹은 미용사가 속한 상부 봉사소)에게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

642)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pp.188-190.

643) 코르나이가 지적한 ‘부족의 경제’ 는 이 영역에서 그대로 등장한다. 손님이 이발권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줄을 서야 한다. 가격은 비싸지 않고 거의 공짜에 가깝지만 이발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

644)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p.352.

고 운영허가권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⁵⁾

다만 북한에서 태동한 시장을 성급하게 ‘자본주의’ 혹은 ‘시장 사회주의’ 등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 및 법률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도이머이 이후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 활동을 보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활동을 보조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이 인위적인 개입을 통하여 시장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건강한 시장경제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집단이 정치적인 요구를 하였던 서구의 부르주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장이 주민들의 생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의 최고지도부가 핵심집단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사회를 ‘방기(abandonment)’ 하는 전략 안에서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3. 고난의 행군의 후유증과 민간신앙의 활성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을 지탱하였던 핵심적인 기둥들은 무너졌다. 아버이 수령은 죽었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회주의 비전은 동구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산산조각 났다. 국가가 쇠퇴한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적 영역’은 과연 존재라도 하였을까? 경제구조는 변화하였다. 물론 경제활동은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는 사회 활동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었다. 단순히 주민들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고난의 행군부터 본격화된 ‘민간신앙’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망자에 대한 추모 및 공포의 감정은 북한의 체제전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등

645)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동된 시장이 국가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병연과 양문수의 집계에 따르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부 시설들은 국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80%가 시장 활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이 국영기관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활동하는 비율도 50%를 넘었으며, 무역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각각 40%와 20%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125.

장한 개인화된 종교행위는 동독의 교회처럼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시도가 무가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1)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에 만연된 죽음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주민들은 생계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근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 죄책감, 공포 역시 강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고 다만 추정만 할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시기의 사망자를 100만 혹은 300만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추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2010년 대한민국 통계청은 이 기간 사망자를(초과사망) 33만 6천명으로 출생손실은 9만 9천명으로 집계하였다.⁶⁴⁶⁾ 인구사회학자인 박경숙은 북한의 1993년과 2008년의 센서스를 분석하여 59만 명의 사망자 29만 명의 출생감소를 합산하여 인구 순손실을 88만 명으로 집계하였다.⁶⁴⁷⁾ 비록 추산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근이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기근에 의한 죽음은 다른 죽음에 비해 훨씬 고통이 크다. 보통 영양실조가 지속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목숨을 잃는다. 일반적인 재해(홍수, 화재, 추락사)는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발생한다. 하지만 기근에 의한 사망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또한 죽음의 형식 또한 다르다. 가령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인들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아사(餓死)의 경우 연령, 성별,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경제력이 없는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한다.

박경숙과 산드라 파이의 연구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은 북한 사회의 면모에 대한 서술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646)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1933-2055 북한인구추계: 보도자료”, p.12.

647)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p.225.

“96년도 사망자가 많아서 사람을 막 잡아먹고 사람고기 팔고 사람잡고 이럴 때가 95, 96, 97년도 그랬어요...그런데 96년도 그때는 정말 역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서 살아야 되요. 그리고 앞에도 죽고 시체 올라와서 자고, 시체가 올라와서 자고, 시체 썩은 내가 나도 겨울이니까” 648)

“1997년 겨울 나는 평양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건물 앞에 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굶어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추운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담당지역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알겠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응대할 수 있냐?’ 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되묻더군요. 그래서 ‘이 지역 책임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만해도 수십 명이 죽어 시신을 수습해야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알려주신 주소대로 찾아가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649)

이 시기 북한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하지만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이 시기 망자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김종군, 정진아 팀에서 인터뷰 한 한영숙(가명), 이성숙(가명)씨는 그들이 목격한 죽음과 장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아니 내가 탈북할 때, 그때만 해도 관이 없는 집이 있다 했어요. 너무 사람이 죽으니까 미쳐 그 나무를 어떻게 관을, 아니 그 관 짜는 사람도 먹어야 관을 짜고, 산에 가서 나무해오는 사람도 먹어야 관을, 나무해올 거 아니야...고저 깨끗이 옷 입혀서 뭐 저 이렇게 담요 같은 데에 뭉그러서 고저 다 묻는다고 그러더라구. 기래 북한에는 고저 그거보고 직파라 그래요. 직접 파종했다. 직파. 심었다. 관도 없이” 650)

“여러 구를 한 구데다(구덩이에다), 한 곳에다 매장하지 뭐, 그거 무슨

648) *Ibid*, p.249.

649) Sandra Fahy, *Marching Through Suffering: Loss and Survival in North Korea*, p.109.

650) 김종군, 정진아 엮,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서울: 박이정, 2012), p.138.

주인 있구, 그게 무슨인간이구, 그래서 인권 때문에 지금 떠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니까 인간이란게 썩은 강아지보다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시체처리가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그거 깎다가 (가져다가) 막 던져 여서 가득한데... 다음에” 651)

이처럼 고난의 행군시기 주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시신을 목격하였음은 물론이고 급증하는 사망자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룰 수 없었다.

2) 민간신앙의 재활성화

① 음성적인 민속신앙: 북한에서 기독교⁶⁵²⁾와 불교⁶⁵³⁾는 사회주의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그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하였다. 천도교는 민족종교로 간주되어 종교 활동을 보장받았으나 이들 역시 과거의 세를 유지하지는 못했다.⁶⁵⁴⁾ 무신론적이고 근대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김일성은 무속을 매우 낙후된 봉건의 잔재로 간주하여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탄압하였다.⁶⁵⁵⁾ 그럼에도 북한 역시 과거의 관념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애

651) *Ibid*, p.370.

652) 1945년 북한지역에는 약 3,000개의 교회와 30만 신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입각한 반종교정책(예컨대 주일소집령)을 통해 예배출석을 방해하고, 물리적인 공포심을 준 결과 1949년에 기독교인의 수는 20만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약 10만 여명의 기독교인이 남았던 것으로 사료되나, 1958년 성분조사사업이 본격화되어 종교인의 박해가 극에 달하면서 기독교는 북한사회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개인적인 수준으로만 남게 되었다.

653) 불교는 국가의 전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탄압을 받았다. 1950년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약 37만 5,438명의 불교 신도가 있었으나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신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전쟁 가운데 많은 사찰들이 파괴되었고 불교신도 역시 기본적으로 반동분자로 간주하여 그 세가 더욱더 약해졌다. 1965년 급기야 북조선불교도연맹을 해체하였다. 김주원, “북한의 종교-조선불교도 연맹”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3월 26일.

654) 1986년에는 천도교창립기념일인 천일절 의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으며, 1994년 12월에는 단군릉에서 단군제를 실시하였다. 북측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천도교 신자 수는 1만 3천 500명, 청우당 당원 수는 1만4000명이다. 이는 해방이후 전체 인구 900여만 명 가운데 169여만 명 약 18.7%에 육박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그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6』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325.

655) 김일성은 전통적인 무속을 타파해야할 봉건의 잔재라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속에서 점을 치고 굿을 하며 ‘사주팔자’를 보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신행위는 녀성들과 로인들속에서 많이 나타나며 청년들속에서도 더러 나타난

를 먹었으며, 완전히 뿌리 뽑지도 못했다.⁶⁵⁶⁾ 북한에서도 무당은 음지에서 존재하였으며 주로 점쟁이라고 불린다. 남한에서 점쟁이는 간단한 점만 볼 수 있을 뿐이며 ‘굿’은 무당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례이다. 최준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신내림’, ‘실패한 신내림’, ‘신병’, ‘스승과 제자의 전승’, ‘큰무당’, ‘조상신’, ‘동자’ 등은 발견된다. 다만 ‘신령체계’ ‘무가(巫歌)’와 ‘굿’ 등은 북한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⁶⁵⁷⁾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점을 보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민간신앙의 재활성화: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인류학적인 용어로는 ‘토착종교’ 혹은 ‘민간신앙’, 북한 말로는 ‘미신’이 폭증하였다. 태영호 의원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점쟁이가 많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으며⁶⁵⁸⁾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미디어는 물론 한국의 주류 언론과 외국의 여

다고 합니다. 미신행위는 오랜 역사적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인습으로 굳어진 것만큼 강압적 방법으로 없앨수 없습니다. 미신을 타파하려면 사람들이 미신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미신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몽 각성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신행위의 허황성과 해독성을 해설한 여러 가지 교양자료와 소책자들을 많이 출판하여야 하겠습니까. 미신행위를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라면 다른 나라의 도서라도 번역하여 출판 보급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신을 믿고 미신행위에 빠지게 되면 모든 사물현상과 사람의 운명을 신의 조화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 맙니다.” 김일성,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을 강화하자: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내각 문화선전성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월 8일” 김일성, 『김일성전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25-26.

656) 1978년 김정일의 지휘로 제작된 연극 『성황당』은 예외적으로 무속을 주제로 하였다. 식민지시기 복순이를 군수의 첩으로 보내서 면장자리와 성황밭 옆의 터를 얻고자 하는 구장과 지주의 모략을 똑똑한 머슴 돌쇠의 지략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의 연출방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종교적인 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연극은 기독교, 불교, 무속을 모두 다 희화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종교는 바로 무속을 상징하는 성황신과 성황당이였다. 이미 기독교와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약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과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였다. 하지만 딸을 걱정하는 복순이 어머니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무당이였다. 클라이맥스에서 돌쇠의 지혜로 종교의 허망함을 깨달은 복순이 어머니가 성황당을 때려 부수고 자유롭고 계몽된 존재로 변모하며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북한은 무속을 종교로 간주하여 탄압하기 보다는 비과학적이고 뒤떨어진 봉건의 잔재라고 간주하였다. 이는 북베트남에서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657) 최준, “북녘의 무당들: 어느 탈북 무녀(巫女)의 이야기” 『한국문화연구』 21권 (2011), pp.179-183.

658) 태영호, “北서 미신은 5대 범죄 중 하나이지만 간부층 아내들까지 여전히 부적 써요” 『조선일보』 2019년 11월 23일.

러 미디어도 이러한 사항을 보도하였다.⁶⁵⁹⁾ ‘무속’ 혹은 ‘미신’의 등장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는 분명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 죽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특히 주민들의 기본적인 ‘죽음관’과 얼마나 불일치하였을까? 잠시 전통적인 죽음관을 살펴보자면 남북한 모두에서도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원 없이 맞이하는 선종(善終)’이 ‘좋은 죽음’이라는 의식이 존재하였다.⁶⁶⁰⁾ 비록 무신론적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죽음’이라는 이슈를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 역시 전통적인 좋은 죽음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인식도 존재하였다. 인간은 정신을 의미하는 ‘혼’과 육체를 지칭하는 ‘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 인간의 한 부분이었던 ‘혼’이 사후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문다는 인식이 있었다.

“귀신은 죽은 이의 혼령이 승천하지 못하고 이승을 해매는 존재를 이른다. 이들은 삶도 죽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이승을 떠도는 원귀(冤鬼), 원령(怨靈)으로 인간에게 해를 주는 존재이다. 죽은 이의 넋이 원귀가 되는 것은 한 때문이다. 한(恨)이란 마음이란 글자(心)와 뿌리를 의미하는 글자(艮)가 합쳐져 된 것이다. 즉 한은 마음을 풀지 못하고 맺힌 것을 이른다. 한 맺힌 죽음이란 원통하게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요절 혹은 객사를 하거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거나 어린 자식 혹은 불구 자식을 두고 죽거나 살아생전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는 등 한마디로 비정상적으로 죽는 경우를 말한다”⁶⁶¹⁾

이러한 죽음관은 전통적인 의례에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유교의 기제사는 덕을 베푸는 조상들이 등장한다. 주로 ‘좋은 죽음’을 맞이한 고인(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들을 기념하는 의례이며 철저하게

659) 『자유아시아방송』, “점집” 2020년 2월 5일. 이영종, “미신 믿지 말고 노동당 믿어라” 『시사저널』 2016년 10월 31일 1411호.

660) 권복규,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 16권 3호 (2013), p.164.

661)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서울: 두산동아, 2005), p.47.

남성 중심으로 진행된다. 반면 무속의 ‘조상거리’에서는 한을 품은 조상(장가 못가고 죽은 남편의 큰 형님, 중풍을 맞고 불행한 삶을 산 시동생, 시집 못 가고 죽은 시누이 등)이 등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의 친정조상들도 등장한다. 한을 품은 조상들은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을 초래하는데 흥미롭게도 증조부와 고조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개 2대조 안의 조상이 등장한다.⁶⁶²⁾ 즉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접촉이 있었던 조상들이 ‘한’을 품고 귀신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은 어긋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창출되는 존재이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원죄를 유도하였으며, 창조주의 원칙을 파괴하며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초월적인 존재로 ‘사탄’을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 발생한 죽음은 ‘선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을 품은 죽음에 가깝다. 게다가 사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제대로 된 추모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북한사회에 공유되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귀신’들을 등장시켰다. 베트남에서도 한 인간이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죽음(chết nhà)’, 비극적인 죽음인 ‘객사(chết đường)’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 권헌익은 베트남 전쟁과정의 비정상적이고 억울한 죽음이 ‘귀신’ 혹은 ‘유령’을 불렀으며 이 초월적인 존재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불만과 억울함에 귀 기울이면서 원한을 해소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적영역에서 적으로 간주되었던 망자들도 영적세계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져 그 존엄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 ‘미군’, ‘알제리 프랑스인’의 유령도 등장한다.

“ ‘객사’ 라는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은 영혼들을 내세의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산 자들 측에서 그들의 비참한 존재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 역사의 수감자 측에서는 불만의 강도와 양이 증가한다...산 자들이 타자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이러한 윤리적 책임감을 의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할 때 불만족이라는 축적의 경제는 기억이라는 분배의 도덕성에 굴복하게 된다. 망자들의 불만스러운 기억은 오직

662) 임돈희,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탓: 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 비교” 『한국민속학』 제 21권 (1988), pp.143-146.

산 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공유될 때에만 그 트라우마적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663)

하지만 베트남과 북한의 사례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와 남겨진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베트남의 경우 망자들은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살해되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살해자와 살해당한 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남겨진 사람들 역시 같은 피해자이며 원통한 죽음에 개입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잔인한 살해 현장을 증언하고 시신의 수습을 힘쓰며 중단된 추모의례를 복원하여 망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아있는 자’는 망자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사(餓死)는 장기간 진행된다. 음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식량을 빌리려고 했을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나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 또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친지들의 간곡한 요청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례의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전의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했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 일종의 죄책감과 더불어 ‘귀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상문(喪門)’이 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⁶⁶⁴⁾ ‘상문’은 남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상문’을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이라고 정의한다. 상문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말하거나 ‘상문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그러한 죽음의 부정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문각시 상문도령’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죽음의 부정이 의인화된 존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상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은 달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넋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⁶⁶⁵⁾ 고난의

663) Heonik Kwon, 박충환, 이창호, 홍석준 역,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부산: 산지나, 2016), p.261.

664) 주성하, “이제부터 귀신이 무서우면 평양에 물어보세요” 2009년 12월 28일. 출처: <https://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eed=250&#l1id=302213&bid=123&p=911&m=view>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행군시절 광범위하게 퍼진 기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전통적 관념이 재호명된 것이다.

하지만 ‘귀신’의 해원(解冤)의 방식은 통일적이지 못하다.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바닥에 뿌려 굶주린 귀신들을 달랜다고 한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 무속인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조상신을 ‘초혼招魂’하여 ‘접신接神’할 때에는 무당이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몸이 갑작스럽게 추워진다고 한다. 그리고 총살당한 조상들에 빙의할 경우에는 머리가 갑자기 깨진 것처럼 아프다고 한다.⁶⁶⁶⁾

고난의 행군이 초래한 공포는 무속인들의 독특한 ‘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과거의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사회적 행위이다. 비사회주의적인 민간신앙은 일정 부분 주민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있겠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주술이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뒤르캠의 고전적인 논의와도 합치한다.⁶⁶⁷⁾

665) ‘상문’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출처: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318>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666) “북한에서 온 무당이 말하는 한국귀신 vs 북한귀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Ep0VugZ7Ys> 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30일.

667) “이른바 종교적 믿음체계들은 항상 어떤 특정집단과 공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 집단은 자신과 굳게 결속되어 있는 의례에 집착하며 그 실행을 공언한다. 이러한 믿음 체계들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집단의 산물이며 집단의 통일성을 형성한다...하지만 주술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물론 주술적 믿음체계에도 몇 가지 일반적인 성격이 있기는 하다.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 민중의 넓은 계층 속에 확산되어 있고, 이른바 종교처럼 주술을 충실하게 믿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술적 신앙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며, 공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시키지 못한다. 주술은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 에밀 뒤르캠, 민혜숙·노치준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서울: 한길사, 2020), pp.182-184.

	1994-1998년 중 (약화추세)
물리적통제능력	계획경제의 약화 -- 군부를 통한 유지 -
자원제공능력	최약 생존의 기로 ---
상징적동원능력	중 (약화추세) 체제불만축적 -- 대항이데올로기의 부재 +
대외영향 및 대외전략	제네바 협약을 통한 외부개입 차단/ 경제지원 확보 실패

<표 4-3: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소결

1970년대 북한은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일성의 독재체제의 강도는 스탈린체제 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는 것을 공표하였으며 아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세습시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7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침체가 진행되었다. 외채를 통해 선진기술을 수입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외채가 늘어날 뿐이었다. 이에 전통적인 동원운동을 통해 당면한 과제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반면 국제구조는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닉슨 독트린이 진행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지미 카터의 등장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체결이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대화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하지 못했으며 한미관계까지 요동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남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수립되고 한미관계가 복원되면서 북한은 일련의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북한은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남한 주민들의 봉기가 가능할 것으로 오판하고 아웅산 테러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과 연합기업소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발전을 모색하였지만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

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적인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당혹감을 느꼈다. 비록 정치구조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동구권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이 증가하였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실추된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제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우호가격제가 폐지되어 핵심적인 원료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북한의 급격한 추락이 체제전환과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사상과 경제 부분에서의 일련의 분권화 및 자유화 조치가 체제 붕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미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적 비대칭성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물론 북한의 체제고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남한 보수 세력의 경직적인 태도, 북한 붕괴가능성에 대한 오관, 미국의 다소 관망적인 태도는 북한의 유연한 변화와 한반도의 탈냉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였다. 오랫동안 공식적인 후계자로 활동하였던 김정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일성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선군정치를 통해서 군을 앞세우면서 통치구조의 균열을 성공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여 남한과 미국의 공세적인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즉 예전만큼 일사분란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독재체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 경제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수십만의 아사자들이 발생하였다.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존 기업을 통한 주민통제(임금, 승진, 사상교육)는 약화되었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와 정당성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대항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또한 민간신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주술’의 개인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V. 결론

1. 비교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세 사회주의 국가의 변동과 전환과정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놓고 여기에 영향을 준 대외관계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독, 베트남, 북한이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고수의 경로로 가게 된 원인과 과정을 ‘국가-사회’의 동학으로 포착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능력을 ‘물리적 통제능력’, ‘자원 제공능력’, ‘상징적 동원능력’으로 세부화 하였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물리적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구는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이다. 냉전시기에는 억압적 국가기구(경찰과 군대)의 폭력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관은 특정 행동을 제약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주민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유도할 수는 없었다. 사회주의 정당은 국영기업과 공장을 통해 물질적,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여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며 통제한다. ‘자원 제공능력’은 공산당이 계획경제의 합리적 운영, 외부의 원조 혹은 부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지칭한다. ‘상징적 동원능력’은 그동안 공식적인 영역의 분석을 선호하는 정치학자들에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당 규약 및 결의안은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만 살펴볼 경우 ‘상징적 동원능력’의 변화는 잘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정책, 예술계 인사들의 활동과 종교영역을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란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에 흡수되지 않는 자발적인 영역으로 개념화하였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와 갈등 양상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세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동독: 체제전환 경로

① 물리적 통제능력: 동독의 물리적 통제능력은 높게 유지되었다.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1960년대 초반부터 분권화에 기반을 둔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독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분권화 정책에 대한 소련의 반발과 소련 내부에서 코시긴 개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러한 동독의 정책은 환영받지 못했다. 게다가 울브리히트 서기장의 완고한 태도로 말미암아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임 호네커 서기장은 경제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민간 기업들이 국유화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콤비나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동독의 콤비나트는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독은 슈타지를 통한 대규모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7 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있었다. 1989년까지 동독의 물리적 통제능력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② 자원 제공능력: 동독의 자원제공능력은 서구권에 비하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에서는 가장 풍요롭고 복지제도도 잘 갖추어진 국가였다. 1989년 동독의 GDP는 \$9,679였는데, 이는 베트남의 1985년 \$239 (세계은행 추산), 1989년 북한의 \$650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수치이다 (물론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독은 1970년대 서독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자원 제공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징적 동원능력’의 감소를 용인해야만 했다. 동독지도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내부의 급진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서독과의 ‘빅딜’을 실시하였다.

동독은 서독의 지원과 외채를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발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큰 포부가 있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보증, 우호적으로 제공된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동독은 1970년대 기계 설비를 서구권에 수출할 수 있었으며 예나에 위치한 칼 자이스(Carl Zeiss)는 세계적인 수준의 광학장비들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었다. 서독을 통해 유입된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직된 사회주의 제도만으로는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 호네커 서기장은 1971년 8차 당 대회에서 ‘사회경제통합’ 정책을 발표하여 복지증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예산과 서독으로부터 유입된 수입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제도를 수립하였다. 이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동독의 일반 주민들은 매우 강력한 ‘소비자 정체성(Consumer identity)’을 지니고 있었고 서독을 항상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국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다. 1989년 국가재정이 완전하게 파탄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동독지도부는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의 부재와 점증하는 국가부채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③ 상징적 동원능력: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즈다노프주의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강력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비록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하여 ‘비터펠트 노선’이 당의 공식적인 문화 정책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예술사조가 허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련의 탈스탈린화의 영향과 동독내부 예술가들의 조심스러운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사조는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과 1975년 헬싱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작가들은 당의 노선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으며 일부 예술가들은 동독의 암울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지만 스탈린시대처럼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록 음악, 나이트클럽, 패션쇼와 같은 다양한 하위문화가 공존하였고 서독과 서구권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비과학적인 심령 공포영화는 수입이 제한되었지만, 그 외의 할리우드 영화가 동독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동독의 교회는 서독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힘을 비축하였고 다양한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동독 사회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약화시켰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집결하여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다. 동독의 약화된 상징적 동원능력이 체제변동을 유발한 핵심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2) 베트남: 체제개혁의 경로

① 물리적 통제능력: 베트남의 경우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청사진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건설했던 체제는 매우 허약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근대적 중앙집권체제 수립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사용된 중화기는 자국의 산업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베트남은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 밀집된 산업단지를 건설 및 운영하지 못했다.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은 기존의 농업사회를 근대적 중앙집권체제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순탄하게 이루지 못했다. 1978년 남부의 국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영부문의 생산율과 고용율은 모두 높지 않았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 합작사에 속해 있었지만 당시 주민들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제하지도 못했으며 생산성도 매우 낮았다.

② 자원 제공능력: 1975년도에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은 향후 국가 운영 방식을 놓고 내부적인 토론을 벌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기존의 합작사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남부에서도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합작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상공업의 경우 북부와 남부의 상이한 경제운영 방식을 급작스럽게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관계 정상화를 제안하면서, 당 지도부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물자를 지원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국가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었다. 이에 경제 지원계획을 구체화한 닉슨 대통령의 편지를 근거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였다. 1977년 4월 18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대외개방을 준비하였다. 이 법안의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하지만 미국 측이 구체적인 원조계획을 제시하고 공표하기를 거부하면서 관계정상화는 불발되었다. 미국과의 협상이 틀어지자 베트남은 대규모 원조를 약속하는 소

련을 선택하였다. 이에 1978년 3월 남부의 급진적인 국유화 조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 공식적으로 소련과의 친선협력을 체결하였다. 즉 시장이 아닌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비효율적인 합작사로 인해 기근이 발생하였으며, 식량을 운반할 운송 수단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남부의 국유화 조치의 후유증으로 상공업 부문의 생산성도 급락하였다.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당내 개혁파 인사들은 보수파를 설득하여 정책변화를 이끌었다. 이 덕분에 1980년대부터 보다 분권화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등장할 수 있었다. 비록 부분적인 개혁은 경제를 악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당내 개혁파들은 보다 과감한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감한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서 ‘자원 제공능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통제능력’과 ‘상징적 동원능력’을 약화시켜야만 했지만, 경제발전을 통해 얻은 정당성으로 공산당의 일당지배는 유지할 수 있었다.

③ 상징적 동원능력: 사회주의 베트남의 상징적동원능력 역시 강력하지 않았다. 1956년 ‘년반-자이팜’ 사건과 미국과의 전쟁 중에 전시문화수립 과정에서 즈다노프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과거처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베트남 작가들과 개혁적인 관료들의 조심스러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으며 소련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유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유입되었다. 이 덕분에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 영화, 문학, 예술이 등장할 수 있었다.

물론 갈등도 존재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남부의 일부 종교집단이 무신론적 사상에 근거하여 종교를 탄압하였던 국가와 마찰을 빚었다. 주로 남부에 위치한 가톨릭, 불교, 카오다이교, 호아하오 불교 등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가와 대립하였다. 개인화된 베트남의 민간신앙에 비해 이들 종교집단은 훨씬 더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종교 활동에 관련된 것이었기에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통해서 전-사회

적인 연대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6차 당 대회에서 임명된 개혁적인 신임 서기장 응우옌 반 린의 정책 덕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화, 예술, 언론의 자유가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동구권 사회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은 새로운 통치이념을 모색해야만 했다. 비록 1991년 7차 당 대회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고수하였지만 호치민의 사상을 실용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실상 이를 새로운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3) 북한: 체제고수의 경로

① 물리적 통제능력: 북한은 1960년대 경제 부문에 당의 개입과 통제를 위해 고안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분화’를 통해 강력한 물리적 통제능력을 구축하였다. 다만 북한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산업화와 분업의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동독의 콤비나트와 유사한 ‘연합기업소’ 제도를 등장시켰다.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일부 경제부문의 관료들의 제안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의 보장을 시도하였지만 김일성과 당 관료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여파는 북한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1993년 말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협동농장을 해체하여 개인들에게 경작권을 나누어주는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영농장을 건설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 시작된 사유화가 산업부문까지 번져 당의 전반적인 물리적 통제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경제의 이완이 계속되고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예외적으로 군을 동원하여 농업과 생산시설의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재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통치방식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억압적 국가능력은 동독과 베트남에 비해 훨씬 강했다. 가령 동독은 슈타지를 통한 감시체제를 수립하였으나 사회주의적 근대성, 법치 전통에 제약을 받아 테러를 벌이지는 못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은 남부의 반발을 의식하여 군과 경찰을 배치하였지만 당시 강력한 감시체제를 세우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은 군

대조직과 별도의 주민통제 기관까지 동원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 통제능력의 약화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② 자원 제공능력: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부터 정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 지도부는 이를 우려하여 1970년대 초 서구권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북한은 경제침체를 과거의 대중동원과 사상교육으로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는 단기간의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1984년 합영법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지만, 과거의 부채 상환 불이행 문제와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 관리제도의 고수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위기 속에서 북한은 ‘물리적 통제능력’과 ‘상징적 동원능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였다. 북한에서는 동독과는 달리 ‘소비자 정체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자원 제공능력’을 과감하게 희생하더라도 체제는 유지될 수 있었다.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까닭은 물론 강력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의지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환경 역시 북한의 선택지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 1970년대 전 지구적인 테탕트가 진행되던 시절 북한은 남한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당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남한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동독처럼 서독과 손을 잡아 ‘자원 제공능력’을 증가시킬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힘의 우세에 있었던 북한이 과감한 평화공세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지미 카터의 군비축소 노선과 맞물려 있었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매우 큰 안보적 위기를 겪었다. 게다가 이 시점에는 남한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부재했다. 오히려 북한의 선전에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역전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남한이라는 존재가 북한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원 제공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이를 위해 다른 두 능력을 희생할 경우 체제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핵 문제, 김일성의 사망, 북한붕괴론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빠진 남한의 소극적인 태도 등은 북한의 개혁 의지를 더욱 약화시켰다.

③ 상징적 동원능력: 1970년대 북한에서는 초스탈린적인 정치문화가 확립되었다. 김일성을 절대화하였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선포되었고 후계자인 김정일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리얼리즘 보다 경직된 ‘주체예술론’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심지어 김일성에 대한 주술적 프로파간다까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수령의 절대적인 위치와 그의 탁월함에 대한 선전은 스탈린 독재의 절정기보다 강력했다. 반면 국가의 정책에 대한 예술가 혹은 사회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탈냉전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획기적인 상징을 새롭게 등관시켰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하며 추상적이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슬로건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령 향후 남한과의 협력이 타진될 경우 이 변화를 ‘민족’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우리식 사회주의’로 정당화 할 가능성도 있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는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혼통치’는 김정일의 취약한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으며 위기의 시점에 북한의 사상동원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매우 강력한 상징동원이 실시되었고 민주적인 전통도 빈약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사회주의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이 매우 부족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예전처럼 강력한 상징적 동원을 실시할 수는 없다. 과거 북한의 구호였던 ‘주체’는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비사회주의적인 민간신앙 즉 과거의 ‘무속’이 폭증하였다. 혼란한 사회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점을 치거나, 굿을 하여 악귀를 물리치는 행위가 등장하였지만 사회적 사상을 담지하고

있지 못한 종교 활동만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2. 비교를 통한 이해의 확장

‘국가-사회’ 관계 동학의 접근을 통해서 사회주의 붕괴와 전환에 대한 경제중심적인 접근, 기존의 전체주의와 시민사회론,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유교적 문화결정론, 고르바초프 결정론을 보완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전환’은 경제적 요인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세 국가 가운데 경제상황이 양호하였던 즉 ‘자원 제공능력’이 가장 높았던 동독은 붕괴하였다. 스탈린체제를 제대로 수립하지도 운영하지 못했던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은 시장을 수용하는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반면 아시아 신생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도시화와 산업화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북한은 ‘자원 제공능력’이 매우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그들의 경직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덕분에 현재까지도 계획경제를 통한 사회통제와 시장경제가 기이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이 체제전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변동과 전환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촉발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일종의 ‘억견(doxa)’과 ‘신화’를 반박하고 보완하였다.

둘째, 기존의 전체주의 이론과 시민사회 중심의 접근방식을 발전시켰다. 1950년대 중반 고안된 전체주의 이론은 나치즘, 스탈린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포착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체주의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⁶⁶⁸⁾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었다. 반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 접근은 전체주의 체제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사회의 독자성이 전체주의 체제의 균열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⁶⁹⁾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1980년대 후

668)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 국가와 독자적인 사회영역의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반 ‘거대한 전환’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짙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와 ‘사회’의 전면적인 충돌이 1989년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내부갈등이 특정 시점에 폭발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 갈등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반면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충돌 양상은 약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물리적인 억제력과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저항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동독의 슈타지의 감시능력과 도청능력은 베트남과 북한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슈타지의 활동 역시 사회의 규범에 일정수준 제약을 받아 불법으로 도청을 했을지언정 북한에서와 같은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테러를 자행하지 않았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해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유교문화결정론’과 ‘북한특수성론’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응우옌 각 비엔, 안드레 이 쉰베르크는 마르크스주의와 유교의 조합을 베트남 사회주의의 특수성으로 간주하였다. 주민들은 공산주의 간부가 되는 것을 마치 과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은 간부들에게 봉건시대의 학자와 관료와 같은 인격수양과 같은 도덕적인 덕목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호치민은 혁명가와 동시에 청빈, 절약, 도덕, 겸손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북한의 특수성을 유교에서 찾는 지적인 시도도 있었다. 북한에서 지도자를 향한 유교적 충효의 강조를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온건하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브루스 커밍스와 같이 북한을 스탈린체제가 아닌 ‘성리학적 왕국’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연구자도 있었다.⁶⁷⁰⁾ 하지만 동일한 유교적 전통과 관습을 공유하였던 이 두 사회주의 국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추상적인 ‘유교문화’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능력과 대외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넷째, 냉전의 종식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촉진하였던 고르바초프 효과의 다양성을 조명하였다. 동독과 동유럽권 전역에서는 점진적으로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시민사회에 고르바초프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⁶⁷¹⁾ 소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독일 주민들은 주권을

669) Giovanni Sartori, “Totalitarianism, mode mania and learning from error”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5 Issue 1 (1993), p.17.

670)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 2001), p.589.

671)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Archie Brown, *The Gorbachev Factor* (Oxford:

요구하는 대규모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페레스트로리카와 글라스노스트를 거부하는 호네커 서기장과 사회주의 통합당과 충돌하였으며 승리를 쟁취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이 동독처럼 사회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당시 베트남공산당 내부의 보수파는 연이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경제전문가들을 조언을 받았던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보수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는 도이머이 노선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소련 및 동구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기에 고르바초프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다섯째, 분단구조가 동독과 북한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동독은 서독을 통해서 물질적인 자원과 서구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독을 통해 상승된 ‘자원 제공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동독의 개혁을 저지시키고 병합하였다. 동독에서는 과거 호네커 서기장의 노선에 반기를 들었던 드레스덴의 존경받는 서기장 한스 모드로가 집권하였다. 그는 서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동독체제를 구출하고자 하였지만 헬무트 콜 수상은 이들의 개혁을 지원하지 않고 ‘독일통일을 위한 10개 조항’을 발표하여 통일을 유도하였다. 당시 민주적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목소리는 통일의 목소리로 변화되었다. 1990년 3월 총선에서 콜 수상이 지원하였던 연합정당인 ‘독일을 위한 동맹’이 승리하여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독일에서는 나토군과 소련군의 주둔과 핵무기 배치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 구조에서 교류협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한반도에서는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었다. 남한은 주한미군을 축소하려는 닉슨 독트린과 심지어 철수를 주장하는 카터의 아시아 정책을 우려하였다.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시키기 위하여 평화공세를 실시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룩한 경제 성과와 강력하게 고취된 사회주의 사상을 기초로 분단질서를 주도하였다. 당시 남한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북한을 압도하지 못했으며 민주주의라는 소프트파워도 부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재하였다. 따라서 북한에게 경제적 유인책과 민주주의 본보기를 보여 북한주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역량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대화공세와 데탕트의 영향으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70년대 남북한 관계는 동서독관계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

반면 탈 냉전기에는 힘의 균형추가 남한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통한 경제력,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은 밀접해지고 강화되었다. 반면 북한은 후방의 지원군을 사실상 잃었으며 경제상황도 심각하였다. 북한은 ‘남측의 손을 잡고 개혁개방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사상 동원, 사회통제, 핵개발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였다. 북한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성공한 남한이라는 존재가 체제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상징적 동원능력’마저도 고갈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최종선택은 북한의 몫이었지만 이 시기 남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탈냉전기의 전-지구적인 전환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세부 사항들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추후 연구를 통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향후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논의에 이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강성윤 역. 2010.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선인.
- 고봉준. 1999. “1960-1970년대 북한문학의 흐름”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1』 서울: 청동거울.
- 고일동. 1999.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의 최근 동향과 재원조달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고재길. 2012.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김희권 외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기독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국가편찬위원회. 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서울: 두산동아.
- 김광수. 2012.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서울: 선인.
- 김광운. 2018. 『북조선 실록 2 1946.01.01.-1946.04.19.』 서울: 선인.
- 김규철. 2018. 『북한의 석유 교역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누리 외. 2006.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병연·양문수. 2012.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연철. 2018.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경기도: 창작과 비평.
- 김영훈·전형진·문순철. 2001.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식. 1989.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중근·정진아 역. 2012.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서울: 박이정.
- 김홍익. 1994. “살아계시다”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역. 2007. 『북한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남성욱. 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서울: 한울아카데미.
- 노태우. 2011. 『노태우 회고록: 전환기의 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 류 신. 2011. 『장벽 위의 음유시인 볼프 비어만: 독일 분단사의 상징 볼프 비어만의 삶과 문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원규. 2019.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예의 시사점”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 박철언. 2005.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 박형중. 2015.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최대석·장인숙 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 사회 균열』 서울: 선인.
- 박후건. 2015. 『북한경제의 재구성: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 로』 서울: 선인.
- 방인혁. 2009.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마르크시즘·주체사상·NL·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서울: 소나무.
- 배광복. 2018. 『남북대화 1971-1992: 힘·선택·말의 남북관계 역사』 서울: 아연출판부. 북한예술종합출판사. 김동규 엮음. 1996. 『김정일 전설집』 서울: 백수사.
- 서재진. 2006.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 신기욱.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작과 비평.
- 신용하. 2018. 『고조선문명의 사회사』 경기도: 지식산업사.
- 신장섭. 2014.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경기도: 북스코프.
-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신지호. 2000.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정책연구원.
-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 2007. 『북한문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오창은. 2011. “북한의 문예창작 방법론: ‘종자이론’의 형성과 발전”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 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북한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 경기도: 경진.
- 이기수. 1989. “北韓의 舍營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北韓法律行政論叢 第 7 輯』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대근. 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동명. 2007. “북한 기업의 작업조직”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북명. 1947. “노동일가”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 『북한문학』 2007.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완범. 2017.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은정. 2016. “정책문서를 통해 본 화폐통합과 독일통일”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5: 화폐통합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이종석. 1995.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한계: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임동원. 2015.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서울: 창작과 비평.
- 임혁백. 1994.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
- 장달중. 2004.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전” 장달중·이즈미 하지메 공편 『김정일 체제의 북한-정치·외교·경제·사상』 서울: 아연출판부.
- 정상돈·김진두·이강규. 2012. 『동독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정상진. 2005.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서울: 지식산업사.
- 정세현. 2020.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 경기도: 창작과 비평.

- 정재훈·박수지. 2017. 『동독 사회보장제도 : 역사와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태형·김민정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주성하. 2018.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서울: 북돋음.
- 차문석·김지형. 2008. 『북한의 공장 및 노동실태 분석』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차문석. 2016. “공식시장의 시장관리체계와 장세 수입” 통일연구원.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태영호. 2018.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남북관계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2016』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피종호. 2016. 『동독영화: 생성과 붕괴, 그리고 영향사』 서울: 사곰.
- 하정열. 1996.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독일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서울: 팔복원.
- 한승주. 2017. 『외교의 길-평화를 향한 여정』 서울: 올림.
- 한완상. 2013. 『한반도는 아프다: 적대적 공생의 비극』 서울: 한울.
- 한홍구. 2009. 『특강-한홍구의 한국 현대사이야기』 서울: 한겨레출판사..
- 홍민·김수암·조정아·이우태. 201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서울: 통일연구원.
- 홍성걸·임경희. 2002. 『북한 수산업 실태와 남북협력사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철야. 1948. “개선” 신형기·오성호·이선미 엮. 『북한문학』 2007. 서울: 문학과지성사.
- 황장엽. 2008. 『인간중심철학 원론』 서울: 시대정신.
- 황장엽. 2010. 『회고록』 서울: 시대전환.

<국내논문>

- 강원택.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 강호제. 2007. 『북한의 기술혁신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북한 과학원의 현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복규. 2013.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 16권 3호.
- 김석진. 2002.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9. “1950-60년대 북한 문예미디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大東文化研究』 제 108집.
- 김소영. 2017.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조달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제 19권 10호.
- 김수암. 2009.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의의와 특징” 『평화연구』 제 17권 1호.
- 김윤애. 2016.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 『국제정치논총』 제 56집 제 2호.

- 김진호. 2009. “1969-74년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CSCE” 『평화연구』 제 17권 제1호.
- 김진환. 2010. “김일성의 선로후군과 김정일의 선군후로:북한 호전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통권 87호.
- 나카가와 마사히코. 2003. “북한 연합기업소의 형성”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3호.
- 남영호. 2013. “사회주의 도시의 “농촌적” 요소들 소련 도시화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슬라브학보』 제 28권 3호.
- 바그너 라이너. 2013. “교회, 동독 전환의 시발점이었나? 북한을 위한 함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워크숍 발표문』.
- 박광득. 2014. “7.4 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제 14권 3호.
- 박광작. 2003. “동독 ‘신경제체제’ (1963-1971)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의 비교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제 5권 3호.
- 박희진. 2010. “베트남, 화폐개혁 이듬해 도이모이 채택…북한은?” 『통일한국』 통권 제 313호.
- 배개화. 2011. “문학의 희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4권.
- 배양수. 2006. “혁명영화에서 상업영화로:베트남 영화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 50권.
- 사지원. 2010. “구동독의 시민환경운동” 『독일언어문학』 제 50집.
- 안영민. 2005. “선군정치 없었다면 이라크 꼴 났을 것” 『민족 21』.
- 양문수. 2015.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전망” 『통일정책연구』 제 24권 2호.
- 양문수. 2003.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 6권 1호 (2003).
- 오성호. 2003. “조기천의 『백두산』 과 북한 서사시의 형성” 『상허학보』 제 11집.
- 우상렬. 2001. “북한 현대문학에서의 ‘수령형상창조문학’ 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 『한국학』 제 24권 4호.
- 우평균. 2008. “CSCE참여국의 전략적 이익과 협상 경과:소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3권 제 2호.
- 이강우. 2010.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2호.
- 이경석·김경미. 2016. “냉전기 북한-동독의 외교관계(1953-1989): 협력과 갈등” 『유럽연구』 제 34권 3호.
- 이동기. 2008.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 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호.
- 이동기. 2009.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2호.
- 이보미. 2013.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이상숙. 2016. “1980년대 초 외교 환경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담론201』 제19권 3호.
- 이석기. 2003.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형태의 변화: 생존주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우영. 2003. “1970년대 북한의 문화” 『현대북한연구』 제 6권 1호.
- 이점호. 2014. 『북한의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철. 2012.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정신문화연구』 35권 제 2호.
- 이주철. 2015.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투자” 『史叢』 85권.
- 이진희. 2007. 『북한의 조조합영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희. 2014.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경제의 재고찰”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3호.
- 임돈희. 1988.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탓: 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 비교” 『한국민속학』 21권.
- 장인숙. 2011.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 15권 제 1호.
- 전미영. 2010.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 13권 3호.
- 정근식·김윤애·임수진. 2017.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 7권 제 1호.
- 정연호. 2002.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추이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 4권 7호.
- 정은미. 2007.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미. 2007. “북한의 시대별 농업생산구조 분석: 적지적작의 원칙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10권 3호.
- 정은이. 2009.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52호.
- 정성장. 2000.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1집 제 2호.
- 정영철. 2003.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6권 1호.
- 정해구. 1998. “남북대화의 가능조건과 제약조건 분석: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 30권 2호.
- 제빈 알렉산드르.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 연구』 37권 1호.
- 조우찬. 2017. “1967년 북한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현대정치연구』 제10권 1호.

- 주은우. 2016. “점령초기 쇼와 천황의 시각적 변신-맥아더 방문과 ‘인간선언’, 그리고 사진” 『사회와 역사』 112호.
- 최준. 2011. “북녘의 무당들: 어느 탈북 무녀(巫女)의 이야기” 『한국문화연구』 21권.
- 최봉대·구갑우. 2005.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8권 3호.
- 한정미. 2004. “북한의 설화 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제 15호.
- 황규성. 2016.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3권 2호.

<번역서>

- 가우크, 요아킴. 손규태 역. 2018.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회고록: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증언하다』 경기도: 한울.
- 고르바초프, 미하일. 하용출 역. 1988. 『페레스트로이카』 광주:사계절.
- 고르바초프, 미하일. 이기동 역. 2013. 『선택』 서울: 프리뷰.
- 권현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2016.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부산: 산지니.
- 그라스, 귄터. 1990. “조국을 모르는 어떤 녀석의 짧은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 비평.
- 노브 알렉. 대안체제연구회 역. 2001.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백의.
- 뒤르켐, 에밀. 민혜숙·노치준 역. 2020.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한길사.
- 볼프, 크리스타. 1989. “전환의 언어: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의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 비평.
- 랑글레, 필립·파익 타인 뎀. 윤대영 역. 2017. 『베트남현대사: 통일에서 신공산주의로 1975-2001』 경기도: 진인진.
- 레비츠키, 스티븐·지블랫, 대니얼. 박세연 역.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울: 어크로스.
- 레닌, 블라드미르. 김영철 역. 1988. 『국가와 혁명』 서울:논장.
- 레싱, 고트홀드. 윤도중 역. 2019. 『현자 나탄』 서울: 지만지드라마.
- 뤼디거, 그로츠 요아힘. 서정일 역. 2000. 『문학이 남긴 유토피아의 흔적 - 40년 동독의 문학과 정치』 서울: 예림기획.
- 마르크스, 칼·엔겔스, 프리드리히. 강유원 역. 2008. 『공산당 선언』 서울: 이론과 실천.
- 마이애스, 브라이언. 고명희·권오열 역. 2011.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서울: 시그마북스.
- 바, 에곤. 박경서·오영옥 역. 2014.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 서울: 북로그컴퍼니.
- 바이메, 폰 클라우스. 이규영 역. 2000.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마크, 데니스·그레스, 데이빗. 서지원 역. 2004. 『도이치현대사3』 서울: 비봉출판사.
- 베버, 막스. 박성환 역. 2009. 『경제와 사회』 서울: 나남.

- 브란트, 빌리. 정경섭 역. 1990. 『빌리브란트-동방정책과 독일의 재통합』 서울: 하늘땅.
- 빌프리트, 에틀·위르겐, 잉거·디터, 발터. 1990. “동독에서의 경제개혁에 관한 근본사상” 모르겐슈테른 K. 외. 신현준 편역.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서울: 중원문화.
- 스마이저, 윌리엄. 김남섭 역. 2019. 『알타에서 베를린까지: 독일은 어떻게 분단되고 통일되었는가』 서울: 동녘.
- 스칼라피노, 로버트·이정식. 한홍구 역. 2015.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합본개정판)』 서울: 돌베개.
- 쉐보르스키, 아담. 임혁백·윤성학 역. 1997. 『민주주의와 시장』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아렌트, 한나. 이진우·박미애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 오버도퍼, 돈. 이종길 역. 2002. 『두개의 한국』 경기도: 길산.
- 위트, 조엘·폰먼, 대니얼·갈루치, 로버트. 김태현 역. 2005.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끝의 북미협상』 서울: 모음북스
- 젤리코, 필립·라이스, 콘돌리자. 김태현·유복근 역. 2008.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치국경세술연구』 서울: 모음북스.
-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 역. 2013. 『돈의 철학』 서울: 도서출판 길.
-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 외 역.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 코카, 위르겐. 김학이 역. 1999. 『독일의 통일과 위기』 서울: 아르케.
- 커밍스, 브루스. 김동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
- 콜, 헬무트. 김주일 역. 1998.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냄.
- 텔치, 호르스트. 윤여덕 역. 2007. 『329일 독일 통일의 기적을 만든 결정적 순간들』 서울: 한독산학협동단지.
- 플렌츠도르프, 울리히. 강명구 역. 2009. 『젊은W의 새로운 슬픔』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퀴러, 크리스치안. 최용준 역. 2015.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 교회에서 일어난 뜨거웠던 무혈혁명』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하인, 크리스토퍼. 1990. “한 늙은 남자와 거리: 베를린 알렉산더광장에서의 연설” 프리데만 슈피커 외. 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 비평.
- 하임, 슈테판. 1989. “11월 4일 시위에서의 연설: 베를린 알렉산더광장” 프리데만 슈피커·임정택 공편. 『논쟁-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서울: 창작과 비평.
- 하임, 슈테판. 김충남 역. 2015. 『6월의 5일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호, 아인 타이. 최하나 역. 2010. 『섬 위의 여자』 인천: 인천문화재단.
- 홀레브뉴크, 올레크 V. 유나영 역. 2017.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서울: 삼인.

<북한자료>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9.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공업에서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근로자』 1964년 5호.
- 김일성. 1949. “미신행위를 없애기 위한 계몽사업을 강화하자: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내각 문화선전성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월 8일” 김일성. 1994. 『김일성전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53.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김일성. 1980.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58.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 사법, 검찰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4월 29일” 김일성. 1981.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67.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 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 1983.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68.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일성. 1970.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69a.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1969년 2월 7일” 김일성. 1983.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69b.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김일성. 1970.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2.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1996.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4.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2월 13일” 김일성. 1996.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5.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1월 19일” 김일성. 1996.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1. 『조국통일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3.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93년 12월 8일” 김일성. 199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4a. “1994년 신년사” 김일성. 199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4b.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1994년 6월 14일” 김일성. 1996.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4c. “뻔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94년 6월 30일” 김일성. 1996.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일성. 1994d.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 김일성. 1996.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4e. 『세기와 더불어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5.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정설·엄병섭. 1992. 『봉이 김선달 전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일. 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 김정일. 1991.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동경:재일본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구월서방.
- 김정일. 1989.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5.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3. “민족음악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1993년 11월 13일” 김정일. 1998.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정일. 1997.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2000.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정일. 2003.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2005.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창환. 2015.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연구기사』 2015년 12월 21일.
- 박영근. 199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문제와 그의 빛나는 해결” 『경제연구』 류계 제 85호.
- 박정애. 1946. “8·15해방 이후 첫 3·8 부녀절을 맞으며” 『정로』.
- 안윤옥. 1993. “기업관리의 합리화에서 계약관계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류계 제78호.
- 리명서. 1993. “시장경제리론의 반동성” 『경제연구』 류계 81호.
- 전성일. 1993.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류계 제 78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당력사연구소. 1991.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1994. “단군릉발굴보고”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주형남. 1994.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 담보” 『경제연구』 류계 제 83호.
- 최덕신. 1988.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이시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원철. 1993.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류계 제 81호.
- 최학수. 1983. 『압록강: 불멸의 력사 총서』 평양: 4.15문학창작단.
- 윤기덕. 1991. 『수령형상문학』 평양:문예출판사.
- 허정숙. 1983.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되새기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영문 단행본>

- Abbott, Andrew. 2004. *Methods of Discovery* New York & London: Norton & Company.
- Ash, Timothy Garton. 1994.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Books.
- Beresford, Melanie and Phong, Dang. 2000.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Trade and Aid in the Demise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Betts, Paul. 2008. “Building Socialism at Home: The Case of East German Interiors” In Pence Katherine and Betts Paul eds. *Socialist Modern: East German Everyday Culture and Politic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lyth, Mark, Oddny Helgadóttir, and William Kring. 2016. “Ideas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Fioretos, Orfeo, Tulia G.Falleti, and Adam Sheingate, ed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Nice Richard 역.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Archie. 1996. *The Gorbachev Fact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Archie. 2014. *The Myth of the Strong Leader: Political Leadership in the Modern Age* London: Basic Books.
- Brown, Archie. 2020. *The Human Factor: Gorbachev, Reagan, and Thatcher and the End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ciagli, Federica. 2008. “The GDR in the early CSCE process” In Andreas Wenger ed. *Origins of the European Security System: The Helsinki process revisited, 1965-75* New York: Routledge.
- Castells, Manuel and Emma Kiselyova. 1995.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A View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ilds David. 1989. “The SED Faces the Challenges of Ostpolitik and Glasnost” In David Childs ed. *East Germany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 Clapham, Christopher. 2004. “The Global-Local Politics of State Decay” In Robert

-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le, Gareth. 2004. *Between State Capitalism and Globalisation: The Collapse of the East German Economy* Bern: Peter Lang.
- Dale, Gareth. 2007. *The East German Revolution of 1989*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ang, Phong and Melanie Beresford. 1998. *Authority Relations and Economic Decision-Making in Vietnam: An Historical Perspective* Copenhagen: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
- Denney, Stephen. 1990. "The Catholic Church in Vietnam" In Pedro Ramet ed. *Catholicism and Politics in Communist Societ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ennis, Mike and Jonathan Grix. 2012. *Sport under Communism: Behind the East German 'Miracle'*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 Dimitrov, Martin K. ed. 2013.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jilas, Milovan. 1962. *Conversation with Stalin*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and Company.
- Dunham, Vera S. 1990. *In Stalin's Time: Middleclass Value in Soviet Fi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Eisman, April. 2018. *Bernhard Heisig and his Fight for Modern Art in East Germany* Rochester and New York: Camden House.
- Ekiert, Grzegorz. 1996. *The State Against Society: Political Crises and Their Aftermath in East Central Europ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lliott, David W.P. 2012. *Changing Worlds: Vietnam's Transition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hy, Sandra. 2015. *Marching Through Suffering: Loss and Survival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nemore, Mark. 2007. *Sex, Thugs and Rock 'N' Roll: Teenage Rebels in Cold-War East Germany*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Fforde, Adam and Stefan De Vylder. 1996.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Friedrich, Carl and Zbigniew Brzezinski. 1965.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ulbrook, Mary. 2005. "Nationalism in the Second German Unification" In Speirs Ronald and Breuilly John eds. *Germany's Two Unifications: Anticipations, Experiences, Responses* London: Palgrave Macmillan.
- Fuller, Linda. 1999. *Where Was the Working Class? Revolution in Eastern Germany*

-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addis, John Lewis. 2006. *The Cold War: A New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 GDR Academy of Sciences. 1989. *Information GDR: The Comprehensive and Authoritative Reference Sourc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xford: Pergamon Pres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ieseke, Jens. 2014. *The History of the Stasi: East Germany's Secret Police, 1945-1990*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 Goodbody Axel, Dennis Tate and Ian Wallace. 1995. "The Failed Socialist Experiment: Culture in the GDR" Burns Rob ed. *Germa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eder, Peter. 1999. *The East German leadership 1946-1973: Conflict and Crisi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rieder, Peter. 2012.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rsch, Donna. 2007. *Revenge of the Domestic: Women, the family, and communism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aly, Dana. 2006. "Poetry, politics and war: Representations of the American war in Vietnamese poetry" In Andrew Hammond ed. *Cold War Literature: Writing The Global Conflict* London: Routledge.
- Herzog, Dagmar. 2008. "East Germany's Sexual Evolution" In Katerine Pence and Paul Betts eds. *Socialist Modern: East German Everyday Culture and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y, Van Luong. 2010. *Tradition, Revolution, and Market Economy in a North Vietnamese Village, 1925-200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Ingram, Susan and Katrina Sark. 2011. *Berliner Chic* Bristol and Chicago: Intellect.
- Jampol, Justinian. 2014. *Beyond the Wall: Art and artifacts from the GDR* Cologne: Taschen.
- Jaraush, Konrad and Grasnsov Volker eds. 1994.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1993* Providence and Oxford: Berghahn Books.
- Jarausch, Konrad. 1994. *The Rush to German 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rkvliet, Benedict. 2005.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hanh, Tran. 1993. *The Ethnic Chines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Singapore: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rnai, Janos. 2008. "Socialism and the Market: Conceptual Clarification" In Janos Kornai and Yingyi Qian eds. *Market and Socialism: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of China and Vietna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ornai, Janos and Rose-Ackerman Susan. 2004. *Building a Trustworthy State in Post-Socialist Trans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ott, Sandrine. 2014. *Communism Day-to-Day: State Enterprises in East German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urihara, Hirohide. 1992. "Changes in the Literary Policy of the Vietnamese Workers' Party 1956-1958" In T. Shiraishi and M. Furata eds. *Indochina in the 1940s and 1950s* Ithaca and New York: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Kwon, Heonik. 2010.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ndsman, Mark. 2005. *Dictatorship and Demand: The Politics of Consumerism in East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ge, Matthew. 2013. *Comparative Historical Methods* London & Washington DC: Sage.
- Lankov, Andrei. 2005.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avigne, Marie. 1999.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inz, Juan and Alfred Stephe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darász, Jeannette Z. 2003. *Conflict and Compromise in East Germany, 1971-1989: A Precarious Stabil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larney, Shaun Kingsley. 2002. *Culture, Ritual and Revolution in Vietna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igdal, Joel S. 1988.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gdal, Joel S. 2001.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drow, Hans. 2014. *Perestroika and Germany: The Truth Behind the Myths* London: Marx Memorial Library.
- Müller, Jan-Werner. 2000.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Naughton, Barry. 1996. "Distinctive Features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In McMillan John, and Barry Naughton eds.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growth of market institu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guyen, van Canh. 1983. *Vietnam under Communism 1975-1982*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 Nixon, Richard. 2008. "Asia after Viet Nam (Foreign Affairs, October, 1967)" In Rick

- Perlstein ed. *Richard Nixon: Speeches, Writings, Document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lsen, Mari. 1997. *Solidarity and National Revolution: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ese Communists 1954-1960* (Oslo: Institutt for Forsvarsstudier, 1997).
- Ostermann, F. Christian and Malcolm Byrne eds. 2001. *Uprising in East Germany 1953: The Cold War, the German Question, and the First Major Upheaval Behind the Iron Curtain* Budapest: Central European Press.
- Pfaff, Steven. 2006. *Exit-Voice Dynamics and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Revolution of 1989*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Pham, Minh Hac. 2005. "Concept and Contents of 'Doi Moi' Policy and Process of Vietnamese Reform" In KINU ed. *Korea-Vietnam International Conference Report: Economic and Social Reform of Vietnam and its Lessons for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Philpsen, Dirk 1993. *We were the people: Voices from East Germany's Revolutionary Autumn of 1989*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Porter, Gareth. 1993.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oss, Corey. 2000. *Constructing Socialism at the Grass-Roots: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1945-1965* (London: Macmillan Press, 2000).
- Saikal, Amin. 2010. "Islamism,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rotte, M.E. 2001. *Dealing with the devil: East Germany Detente, and Ostpolitik, 1969-1973* Chapel Hill &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Saxonberg, Steven. 2013. *Transitions and Non-Transitions from Communism: Regime Survival in China, Cuba, North Korea, and Vietn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ffler, Ute. 2010 *Chic im Osten. Mode in der DDR* Leipzig: Buchverlag für die Frau.
- Schaeffer, Berend. 2010. *The East Germans State and the Catholic Church 1945-1989* New York and London: Berghahn Books.
- Schulzinger, Robert D. 2008. *A Time for Peace: The Legacy of the Vietnam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rmann, Franz. 1966.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ott, James. 1998.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ervice, Robert. 2015. *The End of The Cold War 1985-1991* New York: Public Affairs.
- Sheehan, Neil. 1991. *After the War Was Over* New York: Random House.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er, Andre. 2010. *The Plans that failed: An economic history of the GD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Stitzel, Judd. 2005. *Fashioning Socialism: Clothing, Politics, and Consumer Culture in East Germany* Oxford and New York: Berg.
- Stoecker, Sally W. 1989. *Clients and Commitments: Soviet-Vietnamese Relations, 1978-1988* California: The Rand Cooperation.
- Tan Teng Lang. 1985. *Economic Debates in Vietnam: Issu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75-8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aylor, Frederick. 2007. *The Berlin Wall: A World Divided, 1961-1989* New York: Harper Perennial.
- Thai, Duy. 2008. "From 'Contracting' to 'Autonomous Farming Households' " In Dao Xuan Samd and Vu Quoc Tuan eds, *Renovation in Vietnam: Recollection and Contemplation* Hanoi: Knowledge Publishing House.
- Than, Mya. 1993. "Vietnam's External Trade, 1975-91: A survey in the Southeast Asian Context" In Than Mya L.H Tan Joseph eds. *Vietnam's Dilemmas and Options: The Challenge of Economic Transition in the 1990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hayer, Carlyle A. 1988. "The Regularization of Politics: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1951-1986" In Marr David G. and Christine White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Thelen, Kathleen and James Mahoney. 2015.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n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eds. *Advances i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as, Merrylin. 2009. "'Aggression in Felt Slippers': Normalisation and the Ideological Struggle in the Context of Detente and Ostpolitik" In Mary Fulbrook ed. *Power and Society in the GDR 1961-1979: The Normalisation of Rule?*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990-1992* Oxford: Blackwell.
-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 The Press. 1991. *The Pulse of Europe: A Survey of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Attitudes* Washington, D.C: Times Mirror Center for The People & The Press.
- Tompkins, David G. 2013. "Instrumentalizing Entertainment and Education: Early Cold-War Music Festivals in East Germany and Poland" In Giustino Cathleen,

- Catherine J. Plum and Vari Alexander eds. *Socialist Escapes: Breaking Away from Ideology and Everyday Routine in Eastern Europe, 1945-1989*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 Townsend, Peter.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Middlesex and New York: Penguin Books.
- Tsvetov, Anton. 2018. "Vietnam-Russian Relations: Glorious Past, Uncertain Future" In Le Hong Hiep and Anton Tsvetov eds. *Vietnam's Foreign Policy under Doi Moi*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u, Tuong. 2017 *Vietnam's Communist Revolution: The Power and Limits of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 Nhan Tri. 1990.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on Eschen, Penny M. 2006. *Satchmo Blows Up the World Jazz Ambassadors Play the Cold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on Richthofen, Esther. 2009. *Bringing culture to the masses: control, compromise and participation in the GDR*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Walder, Andrew.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ppler, Kirstin. 2007. "The Limits of Politicization of the schools in the GDR: The Catholic Eichsfeld region and the protestant Erzgebirge-A Comparison" In Peperkamp Esther and Malgorzata Raftar eds. *Religion and the Secular in Eastern Germany 1945 to the Present* Leiden and Boston: Brill.
- Westad, Odd Arne.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cke, Peter. 1996. "Pop Music in the GDR between Conformity and Resistance" in Margy Garber and Roger Woods eds. *Changing Identities in East Germany: Selected Papers from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New Hampshire Symposia* Lanham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Zatlin, Jonathan. 2007. *The Currency of Socialism: Money and Political Culture in East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문논문>

- Allinson, Mark. 2012. "More form Less: Ideological Gambling with the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Honecker's GDR" *Central European History* 45.
- Anonymous author. 2013. "The Bitterfeld Way: Taking Stock Thoughts on the Fifth German Art Exhibition in Dresedn" *Art in Translation* Vol. 5 Issue 1.
- Arrow, Kenneth J. 1991. "Transition from Socialism" *Estudios Economicos* Vol. 6 No. 1

(11).

- Ash, Timothy Garton. 1983. "Swords into ploughshares: The unofficial 'peace movement' and the Churches in East Germany" *Religion in Communist Lands* 11:3.
- Bergson, Abram. 1987.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 Betts, Paul. 2009. "Private property and public culture: A forgotten chapter of East European communist life" *Histoire@Politique* Vol. 7 No. 1.
- Betts, Paul. 2012. "Socialism, Social Rights,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East Germany" *Humanity* Vol. 3 No. 3.
- Boi Tran Huynh. 2005. "Vietnamese Aesthetics From 1925 Onwards" University of Sydney: Ph.D. Dissertation.
- Clare, Trần Thị Liên. 2013. "Communist State and Religious Policy in Vietnam: A Historical Perspective"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5.
- Conway, John S. 1994. "The "Stasi" and the Churches: Between Coercion and Compromise in East German: Protestantism, 1949-1989" *Journal of Church and State* 36.
- Do Dieu Khue. 2019. "Was the "China Factor" Working? :US Policies Towards Vietna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Late 1970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Do Khue Dieu. 2020. "Letters and Ping Pong: North Korean Diplomatic Offensive towards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7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published online.
- Goeckel, Robert. 1984. "The Luther Anniversary in East Germany" *World Politics* Vol. 37 No. 1.
- Goeschen, Ulrike. 2009. "From Socialist Realism to Art in Socialism: The Reception of Modernism as an Instigat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Art in the GDR" *Third Text* Vol. 23 Issue 1.
- Gouldner, Alvin W. 1977-1978. "Stalinism: A study of internal colonialism" *Telos* No. 34.
- Graf, Maximilian. 2020. "Before Strauss: The East German Struggle to Avoid Bankruptcy During the Debt Crisis Revisite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2:4.
- Grzymala-Busse, Anna. 2012. "Why Comparative Politics Should Take Religion (More) Seriously" *Th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5.
- Hankiss, Elemer. 1988. "The "Second Society" : Is there an Alternative Social Model Emerging in Contemporary Hungary?" *Social Research*, Vol. 55. No. 1-2.
- Harsch, Donna. 1997. "Society, the State, and Abortion in East Germany, 1950-1972"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2 No. 1.
- Hertle, Hans-Hermann. 2001. "The Fall of the Wall: The Unintended Self-Dissolution of

- East Germany's Ruling Regim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12/13.
- Hillman, Arye L. 1994.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n Overview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
- Horten, Gerd. 2016. "The Impact of Hollywood Film Imports in East Germany and the Cultural Surrender of the GDR Film Control in the 1970s and 1980s" *German History*, Volume 34.
- Jones, Merrill E. 1993. "Origins of the East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German Studies Review* Vol. 16 No. 2.
- Kerkvliet, Benedict. 1995. "Village-State Relations in Vietnam: The Effect of Everyday Politics on Decollectiviz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4. No. 2.
- Lange, Oskar. 1936.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Part On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 No. 1.
- Levitsky, Steven and Murillo Maria Victoria. 2009. "Variation in Institutional Strength" *Th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2.
- Manfred, Melzer. 1981. "Combine Formation in the GDR" *Soviet Studies* Vol. 33. No. 1.
- Mastanduno, Michael, David A. Lake, and John Ikenberry. 1989. "Toward a Realist Theory of State 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No. 4.
- Navrozov, P., E. Plotnikov, and Michel Vale. 1985. "Soviet-Vietnamese Friendship- a Factor of Peace and Construction" *Soviet and Eastern European Foreign Trade* Vol. 21 No. 1/2/3.
- Ned, Richardson-Little. 2010. "Between Dictatorship and Dissent: Ideology, Legitimacy, and Human Rights in East Germany, 1945-1990" *Bulletin of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56.
- Niksch, Larry A. 1981.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d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Vol. 21 No. 3.
- Nguyen, Tuan Ngoc. 2004. "Socialist Realism in Vietnamese Literatu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Victori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Offe, Claus. 1992. "Prosperity, Nation, Republic: Aspects of the Unique German Journey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German Politics & Society* No. 22.
- Ouchi, William. 1980.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5 No. 1.
- Pingali, Prabhu L and Vo-Tong Xuan 1992. "Vietnam: Decollectivization and Rice Productivity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0 No. 4.
- Porter, Gareth. 1990. "The Politics of 'Renovation' in Vietnam" *Problems of Communism* 39. No. 3.
- Rato, Montira. 2003. "Peasants and the countryside in Post-1975 Vietnamese Literature" University of London: Ph.D. Dissertation.

- Rato, Montira. 2007. "The Decline of Socialist Realism In Post-1975 Vietnamese Literature" *Manusya: Journal of Humanities* Vol. 10 Issue 2.
- Russell, Heng Hiang Khng. 1993. "Leadership in Vietnam: Pressures for Reform and Their Limit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5 No. 1.
- Sartori, Giovanni. 1993. "Totalitarianism, mode mania and learning from error"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5 Issue 1.
-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ers. 1980.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2 No. 2.
- Silvia, Stephen. 1993. "Left behi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Eastern Germany" *West European Politics* 16:2.
- Singh, Hari. 1997. "Vietnam and ASEAN: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2.
- Slater, Dan. 2009. "Revolutions, Crackdowns, and Quiescence: Communal Elites and Democratic Mobilization in South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5 No. 1.
- Sophie, Quinn-Judge. 2006. "Vietnam's Bumpy Road to Reform" *Current History* Vol. 105 Issue 692.
- Stahnke, Arthur. 1987. "Kombinate as the Key Structural Element in the GDR Intensification Proces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20 Issue 1.
- Szalontai, Balazs. 2005.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in North Vietnam, 1955-56" *Cold War History* Vol. 5 Issue 4.
- Szalontai, Balazs. 2008. "The Diplomacy of Economics Reform in Vietnam: The Genesis of Doi Moi, 1986-1989" 『아시아연구』 제 51권 2호.
- Thayer, Carlyle A. 1992. "The Challenges facing Vietnamese Communism" *Southeast Asian Affairs* 1992.
- Trung Dinh Dang. 2010. "Post-1975 Land Reform in Southern Vietnam: How Local Actions and Responses Affected National Land Policy"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5 Issue 3.
- Veenis, Milena. 2011. "Cola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 Fantasies on Western Consumption" *Enterprise and Society* Vol. 12 No. 3.
- Vu, Tuong. 2010. "Van Kien Dang Toan Tap: The Regime's Gamble and Researcher's Gains"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5 Issue 2.
- White, Christine. 1985. "Agricultural Planning, Pricing Policy and Co-operative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 13 No. 1.

<베트남어 문헌 및 베트남 공산당 공식영문자료>

- Đặng Phong. 2009. *Phá rào trong kinh tế vào đêm trước Đổi mới* Hanoi: Nhà xuất bản Tri thức.
- Đcsvn. [1975] 2004.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214-CT/TW, ngày 15 tháng 1 năm 1975 Về việc thực hiện nếp sống mới trong việc cưới, việc tang, ngày giỗ, ngày hội” In Đcsvn. *VKĐTT Tập 36, 1975*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5] 2004. “Báo Cáo: Của bộ chính trị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24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In Đcsvn. *VKĐTT TẬP 36 1975*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6] 2004. “Thông trị của ban bí thư Số 335-TT/TW, ngày 7 tháng 7 năm 1976 Về việc mở rộng quy mô hợp tác xã sản xuất nông nghiệp “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6] 2004. “NGHỊ QUYẾT CỦA BỘ CHÍNH TRỊ Số 254-NQ/TW, ngày 15 tháng 7 năm 1976 Về những công tác trước mắt ở miền Nam”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6] 2004.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235-CT/TW, ngày 20 tháng 9 năm 1976” In Đcsvn. *VKĐTT Tập 37 1976*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8] 2005.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35-CT/TW, ngày 25 tháng 3 năm 1978” In Đcsvn. *VKĐTT Tập 39 1978*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8] 2005. “Điện của ban bí thư Số 15, ngày 17 tháng 4 năm 1978 Về công tác cung ứng lương thực, thực phẩm cho Thủ đô Hà Nội” In Đcsvn. *VKĐTT Tập 39 1978*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79] 2005. “Báo cáo của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khoá IV)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sáu Về tình hình và nhiệm vụ, phương hướng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hàng tiêu dùng và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háng 8 năm 1979” In Đcsvn. *VKĐTT Tập 40 1979*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1] 2005. “Chỉ thị của ban bí thư Số 100-CT/TW, ngày 13 tháng 1 năm 1981 Cải tiến công tác khoán, mở rộng “khoán sản phẩm đến nhóm lao động và người lao động” trong hợp tác xã nông nghiệp” In Đcsvn. *VKĐTT Tập 42 1981*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2] 2005. “Số 41-NQ/TW, ngày 28 tháng 12 năm 1981 Về phương hướng, nhiệm vụ kinh tế - xã hội năm 1982” In Đcsvn, *VKĐTT Tập 42 1981*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2] 2005. “Thông trị của ban bí thư Số 04-TT/TW, ngày 10 tháng 6 năm 1982 Về việc tiến hành sơ kết công tác xây dựng huyện và tăng cường cấp huyện 1982” In Đcsvn. *VKĐTT Tập 43 1982*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3] 2006. “Nghị quyết số 13 - NQ/TW ngày 24/06/1983, Hội nghị lần thứ tư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oá V) về những vấn đề cấp bách về tư tưởng và tổ chức bảo đảm thực hiện thắng lợi những nhiệm vụ kinh tế và xã hội trước

- mất” In Đcsvn. *VKĐTT Tập 44 1983*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8] 2006. “Nghị quyết của bộ chính trị Số 10-NQ/TW: Về đổi mới quản lý kinh tế nông nghiệp”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8] 2006. “CHỈ THỊ CỦA BỘ CHÍNH TRỊ:Số: 47-CT/TW ngày 31 tháng 08 năm 1988 Về việc giải quyết một số vấn đề cấp bách về ruộng đất”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Đcsvn. [1988] 2006. “Báo Cáo Tại hội nghị lần thứ sáu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iểm điểm hai năm thực hiện Nghị quyết Đại Hội 6, và phương hướng nhiệm vụ ba năm tới” In Đcsvn. *VKĐTT Tập 49 1988-1989* Hà Nội: Nhà Xuất Bản Chính Trị Quốc Gia.
- Hồ Chí Minh. 1956. “Kèm theo luật về chế độ báo chí” 문서번호: Số 282/SL.
- Hội đồng Bộ trưởng, 1987. “Quyết định 217/HĐBT Ban hành các chính sách đổi mới kế hoạch hoá và hạch toán kinh doanh xã hội chủ nghĩa đối với xí nghiệp quốc doanh” 문서번호: Số: 217-HĐBT.
- Hội đồng Chính phủ. 1977. “Nghị quyết: Về một chính sách đối với tôn giáo” 문서번호: Số 297-CP
- Hội đồng Chính phủ. 1981. “Của hội đồng chính phủ SỐ 25 - CP NGÀY 21-1-1981:Về một số chủ trương và biện pháp nhằm phát huy quyền chủ động sản xuất kinh doanh và quyền tự chủ về tài chính của các xí nghiệp quốc doanh” 문서번호: SỐ 25 - CP.
- Huy Đức. 2012. *Bên thắng cuộc - Quyển I:Giải phóng* Saigon: Osin Book.
- Huy Đức. 2012. *Bên thắng cuộc - Quyển II: Quyền binh* Saigon: Osin Book.
- Phạm Văn Đồng. 1977. “Ban hành Điều lệ về đầu tư của nước ngoài ở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문서번호: Số : 115-CP.
- Tổng Cục Thống Kê. 2004. *Số Liệu Thống Kê Việt Nam Thế Kỳ XX, Tập 2* Hanoi: Nhà Xuất Bản Thống Kê.
-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77. *4th National Congress Document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80. *50 years of activit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1. *Political Program for National Construction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Socialism (Amended, developed in 2011)* Hanoi: National Political Publishing House.
-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15.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86] 2015. “Political Report of the 5th Central Committee to the Congress” In CPV,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 (1930-2015): *A selection of documents from eleven Party Congresse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86] 2015. "The 6th Party Congress, 1986" In CPV,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30-2015): A selection of documents from eleven Party Congresse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91] 2015. "To continue taking the cause of renovation forward along the socialist path: Report of the 6th Central Committee on the documents of the 7th Congress" In CPV, *85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30-2015): A selection of documents from eleven Party Congresse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Dang Thai Mai. 1968.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Vietnamese Studies* No. 17.
- Dao The Tuan. 1987.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in Vietnam" In Communist Party of Vietnam ed. *Vietnam in face of today's socio-economic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Hoang Nguyen. 1989.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Some Reflections" *Vietnamese Studies* No.94.
- Le Duan. 1965. "Socialist Industrialization the common cause of the entire people" In Le Duan, *On the Socialist Revolution Vol. II*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Le Duan. 1980. *On the Right to Collective Mastery*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Le Duan. 1994. "Towards a Large-scale Socialist Agriculture" In Le Duan *Selected Writings (1960-1975)*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Nguyễn Khắc Viên, Phan Quang and Nguyễn Ngọc Oanh. 1967.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policy" *Vietnamese Studies* No. 13.
- Nguyen Khac Vien. 1978. "An Uneasy But Irreversible Development 1975-1979" *Vietnamese Studies* No.58.
- Nguyen Khac Vien. 1989. "Unwavering Orientation" *Vietnamese Studies* No. 94.
- Nguyen Van Linh. 1989. *Answers by General Secretary of the CPVCC Nguyen Van Linh*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Nguyen Van Linh. 1989. "Let Writers and artists actively contribute to renovation" *Vietnamese Studies* New Series No. 21(91).
- Nguyễn Xuân Lai. 1967. "The family economy of cooperative farms" *Vietnamese Studies* No. 13.
- Nguyen Xuan Lai. 1968. "The Economy of the D.R.V. Facing the Trial of War" *Vietnamese Studies* No. 17.
- Nguyen Xuan Oanh. 1989. "The Beginning of a Challenge" *Vietnamese Studies* No. 94.
- Pham Van Dong. 1981. "Our Homeland, Our people, Our Cause and the Artist" In Pham Van Dong ed. *Some Cultural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Pham Van Dong. 1983. "Building a new managerial mechanism" In Pham Van Dong, *On the Problem of the State*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Pham Van Dong. 1983. "Raising the efficient of the state apparatus" In Pham Van Dong, ed. *On the Problem of the State*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Truong Chinh. 1987. "Consolidate the socialist relations of production, develop the forces of production and make our capital city strong, prosperous and beautiful" In *Vietnam in face of today's socio-economic problems*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Vo Nguyen Giap. 1994. "The world has still been changing, but the Ho Chi Minh's thought will live for ever" In Vo Nguyen Giap ed. *Vo Nguyen Giap Selected Writing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 Vu Huy Bang. 1967. "The purchase of farm products by the state and the price problem" *Vietnamese Studies* No. 13.

<정부기관자료>

- BAreh, B 136/201 69,221-14223 Sta 8 Bd. 3. -Vorlage des MDg Duisberg an den Chef des Bundeskanzleramtes,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Rudolf Seiters, 6. November 1989. Kopien: St Bende, GL 22. 통일부. 2016. 『독일통일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Bundesarchiv, BArch/B 136/21664. 통일부. 2016. 『독일통일총서: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Report: The East German Financial System" 문서번호: CIA/RR ER 66-28, December, 1966.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pecial Report: The Buddhists in South Vietnam" 문서번호: CIA-RDP79-00927A004100030002-4.
- Kunstabibliothek, Staatliche Museen zu Berlin
-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December 05, 1960 Record of Conversation from Premier Zhou Enlai's Reception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Economics and Trade Delegation led by Vice Premier Nguyen Duy Trinh" 문서번호: PRC FMA 106-00602-01, 1-10.
-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January 30, 1990 Memorandum of Conversation Foreign Ministers Alois Mock (Austria) and Oskar Fischer (GDR), Vienna" 문서번호: ÖStA, AdR, BMAA, IIPol 1990, GZ. 43.18.01/11-II.3/90.
- Department of Commerce, U.S.A. "Development of Socialist Culture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Translations from *Kommunist* No. 10 July 1969.

<미디어 자료>

국내언론

- 김석우. 2018년 1월 22일. “베트남, 한국에게 왜 특별한가?” 『팬앤마이크』.
- 김종필. 2015년 7월 1일. “이후락과 남북회담” 『중앙일보』.
- 김주원. 2019년 3월 26일. “북한의 종교-조선불교도 연맹” 『자유아시아방송』.
- 마중가. 2017년 10월호. “중국이 보는 북핵: 북한의 생존이 중국 북핵정책의 제 1목표” 『월간조선』.
- 신상미. 2019년 12월 14일. “김정은 시대 공장가동률 50% 전후..북 303개 기업조사결과 발표” 『오마이뉴스』.
- 이영중. 2016년 10월 31일. “미신 믿지말고 노동당 믿어라” 『시사저널』.
- 이호. 2015년 12월 10일. “김일성과 ‘6.25 남침사과’ 합의까지 됐다” 『시사저널』.
- 태영호. 2019년 11월 23일. “北서 미신은 5대 범죄 중 하나이지만 간부층 아내들까지 여전히 부적셔요” 『조선일보』.
- “전두환 대통령 81년 국정연설” 1981년 1월 12일. 『중앙일보』.
- “식량난에 공화국 무정부상태 - 김정일 작년 12월 비공식연설 요지” 1997년 3월 20일. 『중앙일보』.

노이에스 도이칠린드 (Neues Deutschland)

- “Bill Haley und die NATO” *Neues Deutschland*. 1958년 10월 29일.
- “Die Beratungen des 5. Plenums Grundlage für die Durchführung der ökonomischen Politik im Planjahr 1964: Aus dem Schlußwort von Dr. Erich Apel, Kandidat des Politbüros, zum ersten Tagesordnungspunkt” *Neues Deutschland*. 1964년 2월 12일.
- “Bericht des Zentralkomitees an den VIII. Parteita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Neues Deutschland*. 1971년 6월 15일.
- “DDR wird die solidarische Hilfe für Vietnam konsequent fortsetzen” *Neues Deutschland*. 1975년 10월 16일.
- “Festliche Wiedereröffnung der rekonstruierten Wartburg” *Neues Deutschland*. 1983년 4월 2일.
- “Zur Lage der Volkswirtschaft der DDR” *Neues Deutschland*. 1990년 1월 11일.
- “Eine Regierung der Koalition, eines neu verstandenen kreativen Bündnisses” *Neues Deutschland*. 1989년 11월 18/19일.
- “Gorbatschow: Wir begrüßen, was in der DDR geschieht” *Neues Deutschland*. 1989년 11월 18/19일.
- “Diese Regierung wird eine Regierung des Volkes und der Arbeit sein” *Neues Deutschland*. 1989년 11월 18/19일.
- “CSSR-Aktion 1968 aus heutiger Sicht nicht mehr zu akzeptieren” *Neues Deutschland*. 1989년 12월 1일.

“Wenn wir alle für die neue Partei streiten, wird sie stark bleiben!” *Neues Deutschland* 1989년 12월 9일.

기타 외신

Ash Lucy. “The Rape of Berlin” *BBC* 2015년 5월 1일.

Bulter Victoria. “Communism versus Buddhism in Vietnam” *UPI* 1981년 11월 17일.

Dieckmann Christoph. “Eine feste Burg” *Zeit Online* 2013년 3월 14일.

“East Germany finally embraces Luther” *New York Times* 1983년 5월 8일.

“East German Rock Fans, Police Clash” *Washington Post* 1987년 6월 9일.

“East Germans storm KaDeWe after Berlin Wall falls” *Deutsche Welle* 2019년 11월 7일.

“How East Germany influenced design” *Deutsche Welle* 2016년 4월 12일.

“Rocker Udo Lindenberg: A nightmare for East German authorities” *Deutsche Welle* 2019년 10월 3일.

인터넷 자료

강춘달. “아파트 파수꾼의 밤과 낮” 『신동아』 2002년 1월호. 출처: <https://shindonga.donga.com/Library/3/05/13/101480/3>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전문. <http://15c wd.pa.go.kr/korean/data/expresident/kys/speech.html>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1933-2055 북한인구추계: 보도자료” 출처: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061&pageNo=233&rowNum=10&amSeq=&sTarget=&sTxt=

“북한에서 온 무당이 말하는 한국귀신 vs 북한귀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Ep0VugZ7Ys>

주성하. “이제부터 귀신이 무서우면 평양에 물어보세요” 2009년 12월 28일. 출처: <https://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eed=250&#l lid=302213&bid=123&p=911&m=view>

“Activist” Adolf Hennecke (1948),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출처: http://ghdi.ghi-dc.org/sub_image.cfm?image_id=1027

“Fire the speech writers: An East German’s perspective on President Park’s Dresden Speech” *38 North* 2014년 4월 3일 출처: <https://www.38north.org/2014/04/rfrank040314/>

“Gerhard Schürer: Staatsverschuldung der DDR”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zePv rBjIVXk>

John D. Howard. “The Rocky Road to Reconciliation” *History Net*. June, 2018. 출처: <https://www.historynet.com/rocky-road-reconciliation.htm>

“Lược sử các Triển lãm Mỹ thuật Toàn quốc Việt Nam” Mỹ thuật Nhiếp ảnh số tháng” 2015년 6월호. 출처: <http://ape.gov.vn/luoc-su-cac-trien-lam-my-thuat-toan-quoc-viet-nam-d743.th#>

- “Lương Xuân Đoàn Biography” Vietnam The Art of War 출처: <https://vietnamheartofwar.com/1952/08/11/luong-xuan-doan-biography/>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5 years of innovation (1986-2000)” 출처: <http://www.mpi.gov.vn/en/Pages/lshtpt.aspx?idTin=1846>
- Mittag, Günter. *Um jeden Preis. Im Spannungsfeld zweier Systeme* 출처: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print_document.cfm?document_id=955
- Nguyen, Huong. 2017년 12월 17일. “30 years of foreign investment policy improvement” *Vietnam Investment Review* 출처: <https://www.vir.com.vn/30-years-of-foreign-investment-policy-improvement-54504.html>
- Quang Phong, Quang Viet and H.C. *Viet Nam Cultural Window* No.29. – August 2000. 출처: <https://www.vietnamartist.com/vietnamese-modern-paintings-the-pioneers/>
- Richardson-Little, Ned. 2018년 12월 7일.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East Germany: Socialist Appropriation and Dissident Contestation, 1948-1989” 출처: <https://zeitgeschichte-online.de/them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east-germany>
- Roppelt Tanja. 2014년 11월 11일. “Special Exhibit: Jeans in Former East Germany at the Levi Strauss Museum” 출처: <https://levistrauss.com/unzipped-blog/2014/11/11/special-exhibit-jeans-in-former-east-germany-at-the-levi-strauss-museum/>
- Smow. “Bauhaus in East Germany: The Formalism Debate” 출처: <https://www.smow.com/blog/2016/12/bauhaus-in-east-germany-the-formalism-debate/>
- Trần Độ. 2012. Trần Độ tác phẩm, tập II, Hà Nội: Nxb Hội Nhà Văn. 출처: <http://trandotacpham.blogspot.com/2019/01/phan-au-xay-dung-nen-van-hoa-moi-xa-hoi.html#more>
- Cha, Victor and Collins, Lisa. 2018년 8월 26일. “The Markets: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출처: <https://beyondparallel.csis.org/markets-private-economy-capitalism-north-korea>
- Vũ Bảo. “근래의 결혼 (Sáp cưới)” 출처: <https://gacsach.com/doc-online/118003/sap-cuoi-phan-i-chuong-1-2.html>
- Walter Ulbricht Biography 출처: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resource/cold-war-history/walter-ulbricht>
- Xuân Linh. 2015년 6월 22일. “Thời 'cời trời' của Bí thư TP.HCM Nguyễn Văn Linh” Vietnamnet 출처: <https://vietnamnet.vn/vn/thoi-su/thoi-coi-troi-cua-bi-thu-tp-hcm-nguyen-van-linh-245381.html>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ist Transition in East
Germany, Vietnam and North Korea since 1970s: By
Focusing on the Dynamics of ‘State–Society’ relation**

NOH, HYUNJONG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East Germany, Vietnam, and North Korea’s transition process and its causes. Many social scientists, politicians, and journalists have regarded these countries as the same type of political system. In fact, not only was Marxism-Leninism the ruling ideology, but their economic institutions were also similar. Although these countries shared many similarities, they went on different paths.

Just like other Eastern European socialist states, East Germany was collapsed by the civil revolution. On the contrary, although the socialist party’s monopolistic rule is maintained in Vietnam, its society enjoys profound freedom and autonomy. North Korea, however, managed to sustain an unprecedentedly long dictatorship throughout a third-generation power succession. Marxism and Leninism were the guiding principles of North Korea, but several domestic factors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rise of a robust dictatorship. Therefore, this dissertation comparatively explores the factors that drove these socialist countries to take different paths. This dissertation’s central thesis is that the difference in the dynamics of the “state-society” relation led them in different directions. Thus, this research attempts to verify this thesis by using historical evidence.

The term “state” in a socialist system refers to massive state apparatuses that are ruled by the socialist party. The socialist state’s

capacity can be specified as “physical control capacity (i.e., controlling people via a centrally planned economy),” “resource supply capacity (i.e., providing substantial resources),” and “symbolic mobilization capacity (i.e., legitimizing socialist vision and collective norms).” The term “society” is conceptualized as “all the sphere of voluntary, which can preserve their interests, conviction, and values without the state’s interference.”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can influence “state–society” relations, are also examined in this dissertation.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is research use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t analyzes historical events and seeks causality by comparing various factors. This research mainly utilizes secondary sources, but primary sources are also used.

In East Germany, SED initiated a new economic policy in 1971, along with Honecker’s inauguration. The previous, decentralized NES had halted, and re-nationalization was implemented. As a result,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physical control capacity” were reinforced. Simultaneously, however, East Germany launched the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o bolster social welfare. This policy framework was maintained until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East Germany attempted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middle of the global détente era. Through the virtue of the Basic Treaty, 1972, East Germany obtained economic support from West Germany. Also, they accessed the Western market, so trade was available. Due to increased resource supply capacity, East Germany was the most prosperous country in the Eastern Bloc. Besides, the socialist party earned legitimacy from its people. East Germany, in return, had to allow the decrease of “symbolic mobilization capacity.” The cultural and religious policy had eased; thus, artists could enjoy a modicum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hurch received a substantial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its Western counterpart, and it became the asylum for the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movements. Artists, the clergy, and people weakened rigid Marxism–Leninism by imagining a new

alternative society. The SED recognized the negative consequence of improving inter-German relations. However, they believed that as long as the stationing of the Soviet Army on East Germany's soil was maintained, it might prevent a radical transformation. Unlike their expectations, the social sphere had been expanded and combined with Gorbachev's effect, and a massive social protest finally occurred. This event brought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and led to the transition via national unification.

Unified Vietnam had planned to build its new country using the Stalinist blueprint. However, it failed to establish a centralized modern state, which is a precondition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Although almost every Vietnamese person enlisted in cooperative farms, this system could not control people in a socialist manner, and productivity was also very low. Moreover, the state-owned enterprise had a small number of employees.

CPV did not initiate full-blown nationalization by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regions. CPV even contrived alternative ways by enacting Foreign Investment Law, as the U.S. proposed diplomatic normalization. In this period, Vietnam rationally sought a way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being ideologically driven. However, the normalization process ruptured due to the war reparations issue. In this circumstance, CPV chose the Soviet Union as its co-partner and improved a mutual relationship. CPV accepted the socialist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 March 1978, the radical socialist transformation started in Southern Vietnam.

However, rapid nationalization, along with the impractical expansion of a collective farm in 1975, led to a dramatic decrease in economic productivity. Soviet aid could not stabilize the economic situation, and famine occurred around 1978. To solve the confronted problem, CPV managed to adjust its policy line by allowing for peasants' and the company's autonomy. The reform group's (i.e., those who proposed the decentralized policy) influences were increased by Gorbachev's

inauguration and the death of strict conservative communist leader Le Duan. As a result, the Doi Moi policy was finally introduced through the 6th Party Congress in 1986.

In terms of the cultural sphere, new artistic trends were allowed,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ocialist realism. Moreover, Vietnamese artists and pro-reform officials suggested new cultural guidelines. The Soviet Union introduced an individualistic artistic trend, and it bolstered the position of artists. On the contrary, the social sphere's opposition was not powerful. Southern Catholics, Caodaism, Hoa Hao Buddhism, and Buddhist groups confronted the socialist state by demanding religious freedom. However, their request was limited in religious interests and did not associate the value of freedom and democracy. Also, national-level social solidarity against the state was not formed. As the oppositional force was not strong, CPV chose to improve resource supply capacity by accepting the market-oriented economic policy. It helped to renew CPV's legitimacy, and political monopoly could be maintained.

North Korea established a robust socialist state in the 1970s. Kim Jeong-il officially appeared in the political realm as the powerful successor, and Juche ideology became the official guiding principle. Unlike Vietnam and other Asian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reached a primary level of industrialization in the Stalinist way. Although in the 1970s, many problems appeared within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North Korea attempted to solve this issue through "ideological mobilization." Furthermore, North Korea they pushed the 'dialogue offensive' by taking initiative when the U.S.'s political support had diminished in this region. However, many unsolved problems had accumulated in the 1970s. North Korea tried to introduce a new economic policy via the Joint Venture Act, but it was unsuccessful. The 1970s institutional framework continued until the early 1990s.

When the Eastern Socialist bloc began to fall from 1989 onward, North Korea encountered a threat. In response, it contrives a new

ideology: the “Supremacy of Chosen People,” and “Socialism of Our style,” to maintain symbolic mobilization capacit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wanted to sustain physical control capacity by discarding the demand for reform. However, it could not prevent the economy’s precipitous decline, so resource supply capacity had reduced.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promotes Three Important Policies, which emphasize agriculture, trade, and light industry. Nevertheless, economic reform was not launched. Although North Korea sought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is idea was not fulfilled due to the nuclear issue and the sudden death of Kim Il-Seong.

North Korea’s centrally planned economy was almost stopped during the “Arduous March.” Nevertheless, it did not execute the reform but preserved its “physical control capacity” via the “Military First policy.” Military officials received priority while the state completely abandoned people due to depleted resource supply capacity. North Korean people and state-owned enterprises had to muddle through by engaging the informal market economy. At that time, many people had a vengeance against the socialist state, but no national-level protest had occurred. The reason is that people could not find any alternative discourse, and North Korea’s social control system was strictly maintained. North Korea could survive, but it experienced loosening control, non-socialist economic activity, and culture. In summary, this research proves that the different dynamics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led these socialist countries in different directions.

Keywords: North Korea, East Germany, Vietnam, socialist transitio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socialism.

Student Number: 2014-21183